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OECD Korea Policy Centre

한국어 번역의 품질 및 원문과의 일치 여부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의 책임 하에 있습니다.
원문과 한국어판 간에 차이가 존재할 시에는 오직 원문의 내용만이 유효합니다.

이 보고서는 OECD 사무총장의 책임아래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의견과 주장들은 OECD 및 OECD회원국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와 지도들에는 영토적 지배권·상태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으며, 영토·도시 및 지역의 명칭·경계 및 국경에 관한 편견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본 한국어판은 파리에 있는 OECD본부와의 계약에 의해 발간되었으며, 저작권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본 출판물의 원본은 영어와 불어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습니다:
Government at a Glance 2015/Panorama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2015

© OECD 2015

All rights reserved

본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자료는 이스라엘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되었습니다. OECD가 이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견도 없음을 밝혀둡니다.

OECD 발간물의 정정은 온라인에서(www.oecd.org/publishing/corrigenda)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경제위기 이후에도 OECD 국가들은 계속해서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출대비 가치를 높이는 큰 개혁들을 수행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5』에 제시된 지표들은 국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명백한 증거들과 우수 사례들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전체 생산사슬에 관한 지표, 즉(재정적, 인적) 자원, 관행과 절차, 그리고 성과와 결과에 대한 핵심적인 경향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도 제공하고 있다. 서론 장은 이 출판물에 제시된 데이터를 통해 도출된 일반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15년 판은 포용적 성장과 더 강한 포용사회를 육성하는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보고서는 Rolf Adler와 Edwin Lau의 지휘 아래 OECD 공공 거버넌스와 국토개발부서(GOV)의 Zsuzanna Lonti가 이끌었다. 이 작업은 GOV의 주요 업무로서, 모든 수준의 정부가 공공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략적이며 증거에 기초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도전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에게 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출판물의 초안은 Santiago González, Guillaume Lafortune, Alessandro Lupi, Daniel Sanchez-Serra가 작성되었다. 주요한 초안 의견들은 Luiz De Mello, Edwin Lau, Stéphane Jacobzone, Julio Bacio Terracino, Lisa Von Trapp, Paloma Baena Olabe(제1장 “더 강한 포용사회를 위한 포용정부”); Luiz De Mello(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Daniel Gerson, Tatyana Teplova와 Pinar Guven(제3장 “공공 고용”); Andrew Davies와 Andrea Urhammer(제4장 “정부기관”); Ronnie Downes, Ian Hawkesworth, Lisa Von Trapp, Camilla Vammalle과 Ihssane Loudiyi(제5장 “예산 관행과 절차”); Daniel Gerson, Christoph Demkke와 Alice Lazzati(제6장 “인적자원관리”); Janos Bertok, Julio Bacio Terracino, Maria-Emma Cantera, Jovana Blagotic, Yukihiro Hamada, Minjoo Son(제7장 “공공부문 진실성”); Céline Kaufmann, Christiane Arndt, Faisal Naru, Daniel Trnka, Manuel Flores Romero, Rebecca Schultz(제8장 “규제 거버넌스”); Janos Bertok, Julio Bacio Terracino, Paulo Magina, Maria-Emma Cantera, Minjoo Son(제9장 “공공 조달”); Barbara Ubaldi, Arthur Mickoleit와 Ryan Androsoff(제10장 “디지털 정부”); Tatyana Teplova와 Pinar Guven(제12장 “대시민서비스”)으로부터 받았다. 우리는 출판을 위한 서류 준비에 도움을 준 Kate Lancaster, Katherine Kraig-Ernandes, Lia Beyeler 그리고 Laura Boutin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 출판물은 광범위한 자료들과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출판물은 OECD 공공행정위원회와 『한눈에 보는 정부』 운영그룹(자세한 내용은 부록 F 참조), OECD 통계위원회, 공공고용·관리 작업반, 고위 예산공무원 작업반, OECD 이해충돌에 관한 전문가

그룹, 고위 디지털정부 공무원 작업반(e-리더), 공공 조달에 관한 선도적 전문가 작업반, 혁신과 개방정부에 관한 전문가 그룹, 영토지표 작업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또한 Peter Van de Ven, Jennifer Ribarsky, Catherine La Rosa-Elkaimrhk Isabelle Ynesta(OECD 통계국), Michael Hewetson과 Oliver Petzold(조세정책센터), Gaetan Lafortune(OECD 고용·노동·사회국), Corine Heckmann, Soumaya Maghnoij, Ignacio Marin, Joris Ranching, Katarzyna Kubacka, Julie Bélanger, Sophie Vayssettes(OECD 교육국), Yvan Guillemette와 Sylvie Toly(OECD 경제국), Messaoud Hammouya(국제노동기구, 제네바, 스위스), Zoltan Mikolas(컨설턴트) 등에게서도 귀중한 자문을 받았다.

목차

머리말	3
요약	11
일러두기	15
도입	19
제1장. 더 강한 포용사회를 위한 포용정부	24
서론	25
포용적 공공부문을 향하여: 성별과 연령의 중요성	26
포용적 정책결정과정	30
포용적 정책과 그 결과	38
결론	47
참고문헌	47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52
일반정부 재정수지	56
일반정부 순저축	54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59
일반정부 총채무	62
일반정부의 순자산	65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채무	68
일반정부 수입	71
일반정부 수입구조	74
정부 수준별 수입구조	77
일반정부 지출	80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COFOG)	83
경제적 거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	86
정부수준별 지출구조	89
정부 투자지출	92
일반정부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95
제3장. 공공 고용	98
공공부문 고용	99
공공부문 여성고용	102
여성의 정치참여	105
제4장. 정부기관	108
OECD 국가 정부센터의 주요 제도적 특징	109
정부센터의 역할	112
정부센터 영향력의 정도	115

제5장. 예산 관행과 절차.....	118
특집: 의료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119
성과주의 예산과 최고감사기구.....	122
투자 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	125
제6장. 인적자원관리	128
특집: 2008년 이후 보수 개혁.....	129
특집: 2008년 이후 중앙정부 고용 개혁.....	132
제7장. 공공부문 진실성.....	135
이익 충돌의 관리: 공직임용이전과 퇴직 이후	136
재산공개.....	139
로비의 투명성과 진실성.....	142
내부고발자 보호	145
제8장. 규제 거버넌스.....	148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세계적 동향.....	149
이해관계자 참여.....	152
규제영향분석.....	155
규제사후평가.....	158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161
제9장. 공공 조달.....	164
공공 조달 규모	165
전략적 공공 조달.....	168
전자 조달	172
중앙 조달 기관.....	175
제10장. 디지털 정부	178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179
디지털 정부 성과	182
정부자료 공개.....	185
개인과 기업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189
제11장. 핵심 정부 성과	192
정부 신뢰.....	193
소득 재분배.....	196
법치	199
공공부문 효율성	202
공공부문 비용효과성.....	206
제12장. 대시민서비스.....	210
OECD의 대시민서비스 체계.....	211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213

의료에 대한 금전적/지역적 접근성	216
교육 접근성	219
사법제도와 법령정보 접근성.....	222
의료체계의 환자욕구 대응성	226
학교의 학생 욕구 대응성.....	231
사법제도의 시민 욕구 대응성.....	235
의료서비스와 질과 환자 안전.....	239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형평성	243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246
부록 A. 2008년 국민계정체계의 시행	249
부록 B. 정부수입총계 방식	251
부록 C. COFOG 함수를 활용한 정부 기능분류.....	252
부록 D. 이익충돌 공개에 관한 상세 자료	254
부록 E.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개방적이고, 유용하며, 재사용 가능한 정부데이터.....	257
부록 F. 운영위원회 구성	260
용어해설.....	261

OECD 보고서들은 아래 열거된 사이트에 있다.

http://twitter.com/OECD_Pubs

<http://www.facebook.com/OECDPublications>

<http://www.linkedin.com/groups/OECD-Publications-4645871>

<http://www.youtube.com/oecdlibrary>

<http://www.oecd.org/oecdirect/>

이 책은...

이 보고서에 있는 그림과 표의 아래 부분에 있는 StatLink를 찾아보시오. Excel®의 스프레드시트에 맞도록 내려 받기를 하려면, 인터넷 창에서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주소를 타이핑하거나, 전자서적의 링크부분을 클릭하십시오.

공공정책을 위한 중요한 시기의 거버넌스

이번 『한눈에 보는 정부』 네 번째 판은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도전과 고통스런 상충효과와 씨름하는 시기에 OECD 회원국과 핵심 파트너 국가들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제공한다. 야심 찬 목표들과는 대조적으로 경제회복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취약하다. 개혁과 여타 핵심 프로그램들은 제한된 공공투자를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는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장기적 도전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불평등 심화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경제의 잠재력 회복 또한 움매여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도 임무수행을 어렵게 만든다.

각국의 정부는 위기를 뒤로하고,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정은 정책결과를 더 효과적이고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정부가 투명성과 참여를 조성하고 정책의 분배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정책과 규제 모두 공익을 도모하도록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강화할 때 가능해진다. 정부자료 공개는 적극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가능케 하여 포용성을 강화시킨다. 정부자료공개는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자료를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창출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참여는 포용적 성장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기술 자체만으론 시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OECD 공공데이터공개 지수(OURdata Index)는 많은 국가들이 공공자료를 더 구하기 쉽게 만드는데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제공되는 자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참여확대 정책을 보다 더 접근하기 쉽고, 선별적이고, 적절하며, 흥미롭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출판물은 시민과 기업이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기득권에 사로잡힌 정책과 규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 정부는 내부고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고, 사적 이해관계 공개의무 범위를 사법부는 물론 세무 및 세관 공무원, 조달 관련자, 그리고 재정 당국 등 (부패) “위험이 높은” 이들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주제들과 여러 다른 사항들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지표들에 반영되어 있다. 이를 통해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evidence-based decision making)이 가능해지고, 정부는 자국의 실천과 정책 성과들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버넌스 지표의 범위를 넓히고 분석의 적시성을 제고하며, 이를 다양한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게 되면,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더 좋은 거버넌스 및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포용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 결정자, 시민, 그리고 연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Angel Gurría

요약

OECD 국가들의 회복은 진행 중이고, 경제성장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실업률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생산성 증가는 더디지만 재정 건실화는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소득 분배 및 다른 항목들의 불평등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더 강력하고 포괄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많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정책일지라도, 특수이익집단에 의해 공공정책결정이 “포획”되는 것을 막고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촉진하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없다면, 기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5』에 제시된 지표들은 고용, 정책결정 과정, 그리고 정책 결과의 관점에서 포용적인 정부가 어떤 것인지 밝혀 줄 것이다.

중요한 발견들

OECD 회원국들의 전반적 재정수지가 향상되고 있다.

- OECD 회원국들의 예산 수지는 4.2p.p. 향상되었다. 2009년 GDP 기준 8.4%의 적자에서 2013년 GDP 적자는 4.2%가 되었다.
- 2013년에 OECD회원국들의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는 잠재 GDP (potential GDP) 대비 평균 3.5%에 달하였다. 이는 2009년과 비교해 볼 때, 3.6p.p. 개선된 것이다.
- 재정건실화 노력 덕분에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대다수 OECD국가들의 순저축율(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은 향상되었다. 여기에는 매우 높은 마이너스 순저축율을 보이는 그리스,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포함된다.
- 2013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부채수준은 GDP의 109.3%에 달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체코,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의 부채가 감소하였고, 가장 높은 부채 증가를 보인 국가들은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였다.

2009년부터 정부투자(government investment)는 현저하게 낮아졌다.

- 정부투자는 2009년과 2013년 사이에 GDP 기준으로 0.8p.p. 감소하였고, OECD 회원국들 총 지출 기준으로는 평균 1.4 p.p.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평균적으로 정부투자 비율이 GDP 대비 3.3%였으며, 총 지출 대비로는 7.8%였다.

- 2013년 지방정부들(sub-central governments)은 전체 정부투자의 60%를 소비하였다. 그러나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70% 이상의 정부투자가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되었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야 고용이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OECD 회원국 대부분의 중앙정부는 지출감소를 위해 고용과 보수(remuneration) 개혁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왔다.
- 고용 개혁을 위하여 다양한 수단이 사용되었다. 퇴직 공무원 자리를 비워두거나 일부만 채우기, 신규채용 동결, 아웃소싱, 고위 공직자 보수 삭감, 임금동결을 통한 보수 조정 등이 활용되었다. 대체로 개혁은 인지할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과 작업강도를 증가시켰다.
- 개혁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 대비 공공분야 고용(중앙정부에만 한정하지 않은) 규모는 2013년 19%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규제 정책에 있어 이해관계자 개입은 광범위하지만 후반기에 발생한다.

- 『2012 OECD 규제관행과 정책에 대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ractices and Policies)』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정부규제에 “범정부적(whole-of-government)” 접근을 취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공식적인 규제요건을 도입하였고, 규제 관행과 질의 개선 그리고 OECD 협의회의 권고사항을 따르는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마다 규제효과를 평가하고, 사후적으로 비용편익과 규제 간 상충효과 및 상승효과를 평가하는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 규칙 제정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제고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정부는 종종 입법초안이 정부에 제시되는 후반 과정에 이르러서야 시민,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자문을 구한다. 이들이 더 나은 규제 집행과 성과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인 피드백을 요구 받는 경우는 드물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고 가능한 해법을 모색하는 초기 단계에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공공청렴(Public integrity) 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허점들이 남아있다.

- OECD 회원국들은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퇴직 이후와는 달리 공직에 임용되기 전 고용(예들 들어, 민간 부문 고용인이었거나 로비스트)에 대해서는 대체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공직자에게 사익(이해충돌)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강화되었다. 그렇지만 사법부와 세무공무원, 세관원, 조달 요원, 재정

당국을 포함한 “위험이 있는” 영역의 관계자들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비해 공개 정도가 낮다.

-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기득권에 의한 부당 외압은, 정부의 자문그룹 내 균형을 잃은 이익 대표 그리고 규제기관과 피규제자 간의 인사이동(즉, “회전문 인사”)과 같은 허점으로 인해, 지속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
- 2009년 이래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적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효과적인 보호는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국가들은 정부자료공개를 좋은 관행으로 시행하고 있다.

- 정부자료공개는 새로운 세대의 시민, 기업, 공무원들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 투명성을 증가시킬 수 있게 해 준다.
- 새로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 Index)에 따르면 한국,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스페인이 자료공개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료를 공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공공자료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범위는 다양하다(특히 행정부 내부에서).

정부 세제혜택 시스템은 시장 소득불평등 증가를 완화시켰지만 비소득(non-income inequalities) 불평등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

- 정부보조와 이전지출은 증가하는 시장 불평등 효과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2011년에 OECD 회원국들의 소득재분배는 지니계수를 16p.p. 이상 감소시켰다.
-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지출 삭감으로 인하여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직접 지불하는 비용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저소득층 이용에 금전적 장벽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취약층(저소득층, 이민자, 장애인, 청년 등)에 초점을 맞춘 시민중심 서비스 전달,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더 포용적인 서비스와 결과물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일러두기

『한눈에 보는 정부 2015』에 포함된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다음에 소개하는 수 많은 지표들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사항들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지표 제시를 위한 기본형태는 2 페이지로 하였다. 첫 페이지에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는 본문을 담고 OECD 회원국들에서 관찰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의 출처를 소개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분이 그 뒤를 잇는다. 첫 페이지의 마지막은 자료가 나오게 된 맥락을 보여주는 유용한 배경 문헌들의 목록인 ‘더 읽어볼 것들’ 부분이다. 두 번째 페이지는 자료들을 보여준다. 이 숫자들은 현재의 수준을 나타내고, 가능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장(章)에는 이 보고서의 주요 용어들이 정리되어 있다.

국가계정체계자료의 통상연도(calendar year)와 회계연도(fiscal year)

특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OECD 국가계정자료는 통상연도에 근거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의 회계연도는 호주의 경우 7월 1일부터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이고, 뉴질랜드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이다. 일본의 경우, 특정한 하위영역에 대한 자료와 COFOG(정부의 기능별 분류)에 의한 정부지출은 회계연도에 근거한 것이다.

국가계정체계(SNA)에 근거한 자료는 2015년 5월 8일자로 OECD 국가계정통계자료와 유로스타트 재정통계(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자료에서 나온 것이다.

분석대상 국가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34개 모든 OECD 회원국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통계 자료들은 이스라엘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에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견도 없음을 밝혀둔다.

추가된 비회원 국가들인 콜롬비아, 라트비아, 러시아(OECD 신규 가입 진행 중)*와 다른 주요 국가들(즉,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 그리고 OECD의 공공행정위원회 참가자 지위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일부 지표들에 대해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OECD 회원이 아닌 국가들의 자료는 표와 그림의 마지막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 러시아에 관해서는 2014년 3월 12일 현재 OECD 이사회가 “러시아의 OECD 가입 승인을 당분간 연기하였다.” (www.oecd.org/newsroom/statement-by-the-oecd-regarding-the-status-of-the-accession-process-with-russia-and-cooperation-with-ukraine.htm).

국가코드(국제표준화코드)

OECD 회원국			
호주	AUS	포르투갈	PRT
오스트리아	AUT	슬로바키아	SVK
벨기에	BEL	슬로베니아	SVN
캐나다	CAN	스페인	ESP
칠레	CHL	스웨덴	SWE
체코	CZE	스위스	CHE
덴마크	DNK	터키	TUR
에스토니아	EST	영국	GBR
핀란드	FIN	미국	USA
프랑스	FRA		
독일	DEU	OECD 가입이 진행중인 국가*	
그리스	GRC	콜롬비아	COL
헝가리	HUN	라트비아	LVA
아이슬란드	ISL	러시아	RUS
아일랜드	IRL		
이스라엘	ISR	기타 주요국가	
이탈리아	ITA	브라질	BRA
일본	JPN	중국	CHN
한국	KOR	인도	
룩셈부르크	LUX	인도네시아	IND
멕시코	MEX	남아공	IDN
네덜란드	NLD		ZAF
뉴질랜드	NZL	기타 OECD 공공행정위원회 참가국	
노르웨이	NOR	우크라이나	UKR
폴란드	POL		

OECD 국가 평균 및 합계

평균

표와 본문에 나와있는 OECD 평균값은 회원국들의 비가중 산술평균과/또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가중평균이 제시되었다. 비회원국들의 자료는 평균값 계산에는 넣지 않았다. 설명(notes)에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해당 자료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국가가 표시되어 있다. 따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본문에서는 OECD 가중평균을 사용하였다.

2개의 OECD 평균이 지표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OECD 평균은 비가중 산술평균을 의미한다.

숫자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연도에 관한 정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들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한 평균값이다. 예를 들면, 2009년도의 OECD 평균값은 비록 특정국가가 그 당시에 OECD 회원국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2009년 현재 모든 OECD 회원국들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을 포함한 것이다.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자료의 경우, OECD 회원국들(대부분 비유럽 OECD 회원국들)이 2014년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값은 2013년까지 산출되었다.

합계

OECD 합계는 일반적으로 표에서 나타나는데, 사용가능한 해당자료에 대한 OECD 회원국들의 개별 자료들을 합한 것이다. 합계에는 OECD 비회원국 자료들은 포함하지 않았다.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OECD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설명에서 언급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자료보완

일부 지표들은 국가특정 자료(country-specific data)를 추가적으로 보여주는 온라인상의 표와 그림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입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지표의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분에 설명을 달았다. 또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StatLinks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이트에서 독자들은 보고서에 자료로 쓰인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StatLinks는 표 또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표시해 두었으며, 웹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해도 된다. 이 보고서의 전자서적 판에서는 직접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보완자료들도 온라인으로(www.oecd.org/gov/govatag glance.htm) 이용할 수 있다.

- OECD 평균과 비교한 각 국가별 정보요록(Country fact sheets)
- OECD.Stat를 통한 정량적 지표 선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한눈에 보는 정부 통계자료와 웹 전용 정부 설문조사를 위한 정성적 자료 출판물
- 각 회원국들의 정치·행정적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배경 정보를 담고 있는 각 국의 맥락적 설명

1인당 자료

몇 가지 지표들은(예: 정부지출, 정부세입, 정부부채) 1인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한 인구추정치는 “국민계정체계(SNA)”상의 거주자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외교관 및 군인, 공부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치료중인 환자도 포함된다. 1년의 규칙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 하는 자국민은 자신의 나라에 포함되는 반면,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기간으로 그 나라에서 휴가를 즐기는 외국인 방문자는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은 특정한 한 개인이 어떤 국가에서는 피고용인으로서 생산을 통해 그 국가의 GDP에 기여하면서,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서 임금이 다른 국가의 총 국민소득(gross national income)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구매력평가(PPPs)는 각 국가들 간의 가격수준의 차이를 제거하고 각기 서로 다른 나라들의 구매력을 동일하게 만드는 환율이다. 구매력평가로 변환되면, 국가별 지출은 사실상 동일한 가격으로 표현된다. 이는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가 동일한 비용으로 표시됨을 의미하며,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량의 차이만을 나타내주는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현재 및 과거의 구매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한다.

- 2007년, 2009년, 2013년: 모든 유럽국가들의 구매력 평가는 Eurostat에 의해 제공된 1년 단위

의 비교평가 결과물들이다.

- 2008년과 2011년: 모든 OECD 회원국들과 러시아의 구매력 평가는 3년 단위로 OECD와 Eurostat가 공동으로 산출한 결과물이다.
- 2014년: 모든 국가들의 구매력 평가는 예비 OECD 추정치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칠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칠레의 자료는 OECD 추정치이며, 2011년 기준 결과의 도입으로 수정되었다.
- OECD의 구매력 평가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www.oecd.org/std/prices-ppp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다.

복합 지표

이 보고서는 이해관계, 정부자료공개 등과 같은 한정된 영역들에서 몇 가지 기술적 경기종합지수(composite indexes)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경기종합지수들은 불연속적이며 질적 정보들을 요약하는 실용적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경기종합지수들은 『복합지표구성을 위한 안내서(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Nardo et al, 2008)』에서 밝힌 단계들을 밟아서 만들어졌다.

이해관계와 정부자료공개 종합지수들을 구성하는 변수와 가중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D 와 부록 E 에서 각각 알아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복합지표들은 회원국들의 협조로 개발되고 이론과 실재에 기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그들간의 상대적 가중치들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기호와 약자

- .. 값이 없거나, 활용할 수 없음
- x 적용 불가능(다른 언급이 없다면)
- p.p. 퍼센티지 포인트
- UWA 비가중 평균
- WA 가중 평균
- PPP 구매력평가
- EUR 유로화
- USD 미국달러

도입

『한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의 주요한 목적은 OECD 회원국과 그 외 국가들의 정부활동과 그 결과물들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비교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은 다른 정부의 성과를 비교응용(benchmarking)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신들의 발전과 국제적 발전의 발자취를 추적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으며, 자국의 공공정책결정의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의 지표들은 공공 거버넌스의 많은 분야에서 측정 기준이 되고 있다. 이 보고서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에 덧붙여, 이번 제3판은 OECD 회원국들의 공공행정에 관한 더 완벽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지표들과 추가적인 자료출처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5에 새로운 것은?

다른 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2015년 『한눈에 보는 정부』도 모든 판에 반복되는 핵심 장들과 새로운 특징들을 혼합하여 제공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의 핵심 부분들은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제3장: 공공 고용, 제7장: 공공부문 통합성, 제9장: 공공 조달, 제11장: 핵심 정부 성과(이전 판에서는 “전략적 거버넌스”)이다. 핵심 장들에 더해서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새롭고 강화된 특징을 보여준다.

- 올해 새로 추가된 제 4장, “정부기관”은 전략적 예측을 보장하고, 공공정책 개혁과 집행에 대해 범정부적 접근을 취하는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정부 중심부(centres of government)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에 따라 정부센터는 총리실, 재무부나 국가재정위원회가 해당한다. 이 장은 2013년에 OECD 정부센터의 고위관리네트워크 대표들에게 실시된 설문조사 답변에 기초한 것이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정부센터에 대한 최초의 국가횡단적인 경험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정부센터들의 주요 기능과 정책 도구들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부센터의 성과와 발전을 위해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식기반이 제공되었다.
-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제8장은 완전히 새로운 장은 아니지만 2009년에 마지막으로 출간된 후 갱신되지 않았다. 이 분야에 관한 최근 사항들이 이 장에 기술되어 있다. 이번 판에서 규제에 관한 장은 규제주기에 관한 지표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개입과 사후평가(*ex post* evaluation)를 포함한 규제 제정 과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2014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설문조사(2014 Survey on Regulatory Policy)’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국가들이 규제과정에서 투명성과 참여를 포함한 개방정부 원칙을 고수하기로 동의한 ‘2012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협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 기반을 둔 것이다.

- “대시민서비스”에 관한 제12장은 2013년에 특집이었던 주제인데, 이번에 더 보강하여 대시민 서비스와 관련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광범위한 측정치를 제공하고 있다. OECD의 보건부, 교육부 및 다른 OECD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이번 해에는 보건, 교육, 사법의 세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장은 대시민서비스의 접근도, 대응성 그리고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고화되고 구조화된 틀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었다.
- 새로운 장과 보완된 장에 더하여 이번 출판물은 공공재정에서 순자산과 총부채, 인적자원관리 분야에서 예산제약이 인적자원관리에 미치는 영향, 예산 분야에서 보건의료예산과 비용편익 분석, 그리고 디지털 정부에서 정부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새로운 공공데이터개방지수: OURdata Index: **O**pen, **U**seful, **R**eusable Government Data)와 같은 새로운 지표들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의 정의

공공 재정에 관한 자료들은 국가계정체계(SNA)에서 말하는 "일반정부"의 개념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일반정부는 중앙, 주, 그리고 지역 수준의 부처, 기관, 사무소와 비영리기관 그리고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와 그 이하 정부(주나 지방)의 수익과 지출에 관한 자료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기금에 관한 자료도 제공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고용에 관한 자료는 일반정부는 물론 공공소유의 은행, 항만과 공항 등과 같은 공기업들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 관행과 과정에 관한 자료들은 중앙정부 수준에서만 다루었다.

체계와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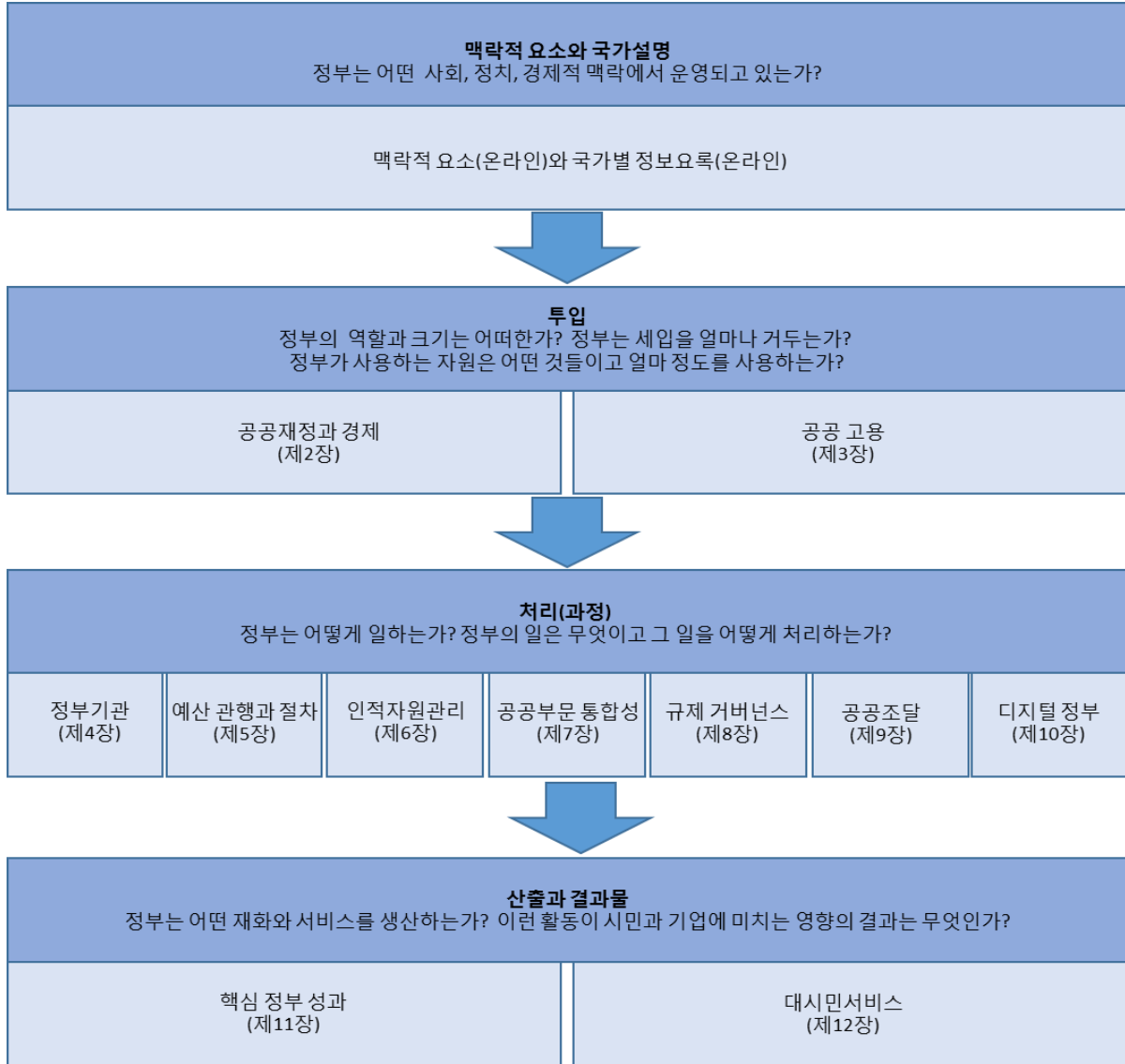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정부』는 34개 OECD 회원국들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콜롬비아, 라트비아, 러시아와 같은 가입 진행 중인 국가들의 이용 가능한 자료들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자료도 포함하고 있다. 어떤 지표들은 OECD 공공행정위원회의 참가 국가(예: 우크라이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구조에서 현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한눈에 보는 정부』 제3판은 투입, 처리과정, 산출과 결과물 지표들뿐만 아니라 맥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림 0.1은 『한눈에 보는 정부』에 관한 개념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맥락

맥락적 요인(온라인)은 각 OECD 회원국들의 정치적 및 행정적 구조의 핵심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맥락적 정보는 국가들 간 주요 정부기관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기준을 세우기 위한 비교점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온라인 상의 국가별 정보요록(Country fact sheets)은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들이 어떻게 OECD 회원국들과 가입 진행중인 국가들의 공공분야 개혁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국가별 설명을 제공한다.

그림 0.1.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를 위한 개념틀



투입

투입은 생산기능 및 혼합 방식에 있어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자원을 말하며 이는 노동과 자본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입에 관한 내용은 "공공 재정과 경제", 정부지출, 생산비용, 고용에 관한 지표들이 포함된 "공공 고용"에 관한 장, "중앙정부의 역할과 특징"에 관한 장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차이를 통해서, 공공재화를 생산하고 시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어 정부 간 능력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처리과정

'처리과정'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공공관리의 관행과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임무를 완수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행정의 수단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처리과정은 법치, 책임성, 공정성, 정부활동의 개방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공분야의 개혁은 대체로 처리과정의 개선을 지향하고, 이는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이번 판에서는 정부기관(중앙정부), 예산관행과 절차, 긴축시기의 인적자원관리, 공공분야 통합성(이해관계 관리, 로비규칙과 절차, 공무원 재산공개), 규제 거버넌스, 공공조달, 디지털정부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산출과 성과

산출(outputs)과 결과물(outcomes) 사이의 경계는 모호할 수 있다. 산출은 정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량을 의미하고, 결과물은 민간과 기업에 대한 정책과 관행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물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과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산출은 보통 복지, 보건, 교육 혜택 등의 관점에서 보는 시민에 대한 공공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출물들은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받으며, 집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같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5』에서는 산출과 결과물에 관한 평가가 두 개의 장에서 등장한다.

- 핵심정부성과에 관한 장은 시민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부패에 대한 인식, 법규, 소득재분배, 산출에 기초한 공공분야 효율성 및 결과물에 기초한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과 같은 범정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 대민서비스에 관한 장은 공공부문 활동의 산출과 결과물을 평가하는 분야별 접근방법(sectoral approach)을 따랐다. OECD 회원국들과 협력 하에 다른 OECD 부서들과 수평적으로 개발되어 통합된 체계에 기초하는 이 장은 접근성, 대응성(responsiveness), 질의 관점에서 대민서비스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판은 보건, 교육, 재판제도의 세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향후과제

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를 발간하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폭넓은 견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The World Justice Project, 사법효율성 유럽 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갤럽

(Gallup) 그리고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를 포함한 다른 조직들과 긴밀히 협력하였고, 자료수집의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이 보고서에 담긴 국가자료들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해졌다.

『한눈에 보는 정부』 작성 팀은 이 발간물의 후속 판으로 다음에 열거하는 분야의 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 공공기관과 그 특징에 대한 정보
- 전략적(연령, 성별, 학력 등) 인적관리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부문 인력의 특징에 관한 자료수집의 개선과 확장
- 공공부문 보상에 관한 자료 수집 반복
- 개방정부 관행과 행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와 시민 관여에 관한 새로운 자료 수집
- 사법효율성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의 설문조사를 이용한 모든 OECD 회원국들의 재판제도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자료 수집

지역 및 국가 중심 『한눈에 보는 정부』

2014년에 처음으로 『한눈에 보는 정부』 지역 판이 발간되었다. 『한눈에 보는 정부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2014: 혁신적 공공재정 관리를 향하여』는 이 지역의 가장 적절한 정책동향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국가에 초점을 맞춘 판 『한눈에 보는 정부 - 헝가리』가 2015년 5월에 발간되었는데 헝가리 공공분야 개혁의 핵심 측면들과 인접 국가들과 비교가 주요한 내용이다. 더 많은 『한눈에 보는 정부』 지역 및 국가 중심 판이 2015년 후반 및 2016년에 출간될 것이다.

이제 온라인으로 공공 거버넌스에 관한 모든 자료와 지표들을 볼 수 있다!

올해 또 하나의 새로운 특징은 OECD 공공 거버넌스 부서가 수집한 이전 판을 포함한 『한눈에 보는 정부』를 위한 자료들과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여러 자료들이 OECD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를 위하여 이 출판물에 제시된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독자들은 개념설명, 자료출처, 기법 등에 관해서 『한눈에 보는 정부』 및 온라인을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공분야 투입, 처리과정, 산출 및 결과물에 관한 정량적 지표들과 정성적 지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료가 발간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될 것이다.

제1장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부

서론

포용적 성장은 공정한 사회뿐만 아니라 강한 경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발생할 때 경제성장은 저해되고 정부와 국민 간의 관계는 압박을 받게 된다. 국가는 성장의 혜택을 모든 사회계층과 공유하면서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공공부문 자체의 포용성, 정책결정과정의 포용성, 그리고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결과물의 포용성 증진에 일익을 담당할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첫째, 우리는 경제의 주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이 그 사회를 대변하는지, “포용적 사용자”를 지향해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수반할 것인지를 질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눈에 보는 정부』의 자료는 전체적인 공공부문 노동인구에서 여성의 권익이 매우 잘 보호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공공부문에 여전히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하고 있어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위한 자리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들은 자료의 미비도 보여준다. 소수 민족과 종교적 소수자, 장애인, 이민자 또는 원주민으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가 없는데, 이는 이들 중 얼마나 OECD 회원국들의 공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제비교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둘째,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포용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정부기관들이 불평등을 생산하는 권력에 대항하여야 한다. 최근 30년 간 OECD 회원국들은 형평성 혹은 공정성은 보류한 채 정부를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가장 중요한 지도원리로 여겨왔다. 포용적 공공정책과 관행을 추구하는 데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포용성은 효과성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공정책에 대한 포용적 접근에서 있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서로 다른 사회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이 고려되기 시작한다. 또한 포용적 정부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와 폭넓은 대중들이 더 폭넓게 정책결정, 규제, 서비스전달에 관여하게 한다. 시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책의 영향력을 고려함으로써 개방정부는 공공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공공서비스를 더 친근하고 사용자 위주로 만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하게,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 검증은 공공정책이 폭넓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 전반에 걸친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적 성과를 향상시킴으로써 기대수명 및 다른 핵심 보건 지표들의 차이를 감소시키고, 표적 세금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의 감소를 달성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교육, 의료, 사법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리적 접근에 반영된 포용성은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사회복지 수준을 형성하게 한다.

포용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부 성과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통적인 요인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이러한 접근에 대한 가

설은, 정책결정에 있어 포용적인 접근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우리 사회를 위한 더 지속가능한 경제적 모델이 될 거라는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은 더 개방적이 되었고, 성차별은 감소하는 등 많은 영역에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 장은 『한눈에 보는 정부』의 다양한 버전으로부터 선별한 자료를 인용하여 예비 개요를 제공하고 토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더 잘 조직화될 수 있는지를 시간을 두고 되돌아 보면, 기본적 정부 성과 평가 방법과 성과 측정 지표들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반드시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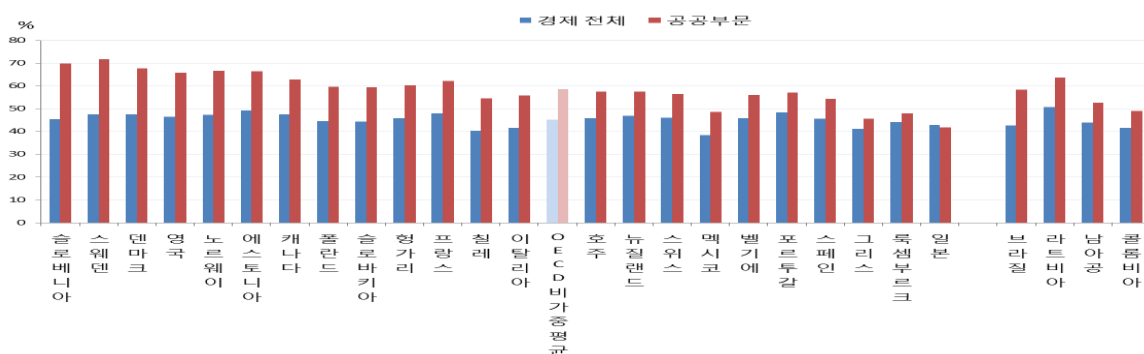
포용적 공공부문을 향하여: 성별과 연령의 중요성

정부는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 열망, 경험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OECD, 2011b; OECD, 2014f).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OECD 회원국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정성, 평등, 정의, 사회적 결속력과 같은 기본적 가치를 보장하는 공공부문 고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OECD, 2008b).

정책 분야 혹은 영역에 따라, 대표성이 높은 공공행정이 이전에 간과 되었던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 관점들에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행정에 있어 어느 계층이 대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고(Pitts and Wise, 2010), 이제 여성, 인종, 민족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빈곤층, 노령인구, 장애인, 원주민 같은 다양한 부류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모든 계층들 중 국제비교자료는 주로 공공부문의 여성들에 관한 것이다. 여성은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노동력에서 잘 대변되고 있지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전히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공공부문 노동력 중 평균 59%가 여성이다(그림 1.1).

그림 1.1. 공공부문 및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여성 비중 (2013년)



설명: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터키, 미국은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뉴질랜드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FTEs)으로 표현된 것임. 호주, 그리스, 헝가리, 그리고 슬로베니아 경우는 2012년 자료임. 덴마크, 룩셈부르크 그리고 뉴질랜드는 2011년 자료를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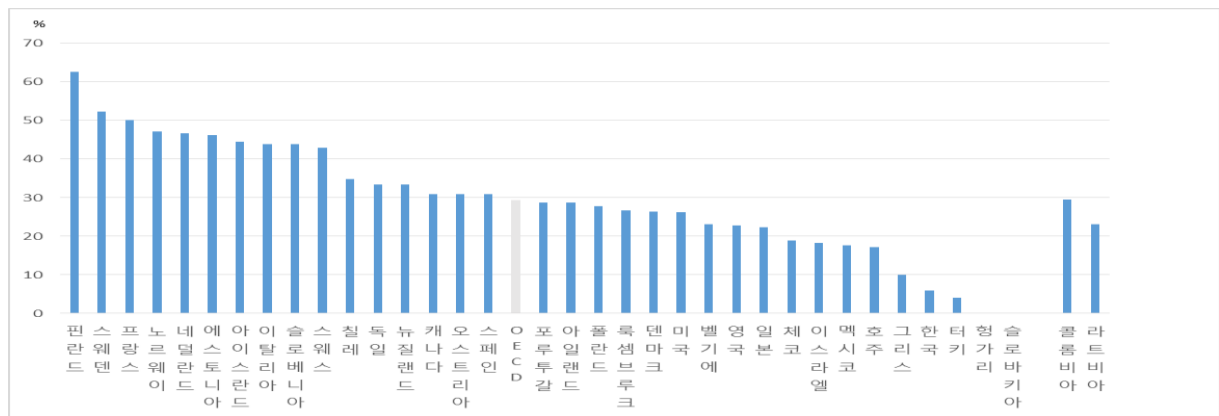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간호사나 교사 같은 많은 공공부문 직업영역에서는 여성이 우세하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더 탄력적인 근무조건을 제시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들 간에도 공공부문 여성의 대표성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스웨덴, 슬로베니아, 덴마크에서 여성은 공공부문 노동력의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멕시코, 룩셈부르크, 그리스, 일본의 공공부문 노동력 여성 비율은 50% 이하이다. 이는 국가별로 공공부문의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전체 경제에 비하여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그림 1.1). 일본은 전체 경제보다 공공부문의 여성 비중이 더 낮은 유일한 OECD 국가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고위직에서의 성별 불균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제한한다. OECD(2013a)에 따르면 2010년에 OECD 회원국들의 중앙정부 고위관리 중 29% 만이 여성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2010년에 1심과 2심 법원 재판장의 29%만이 여성으로 채워졌다(OECD, 2013a). 이러한 성별 불균형은 정치 분야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평균적으로, 장관직의 26.9%가 여성이었다(그림1.2). OECD 회원국들 사이의 여성장관 비율은 다양하다. 스웨덴과 핀란드 정부에서만 여성의 비율이 동등하다. 여성과 남성의 장관직 비율 격차가 가장 큰 국가들은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스, 터키로 여성장관의 비율이 10% 이하로 나타났다.

그림 1.2. 여성장관 비중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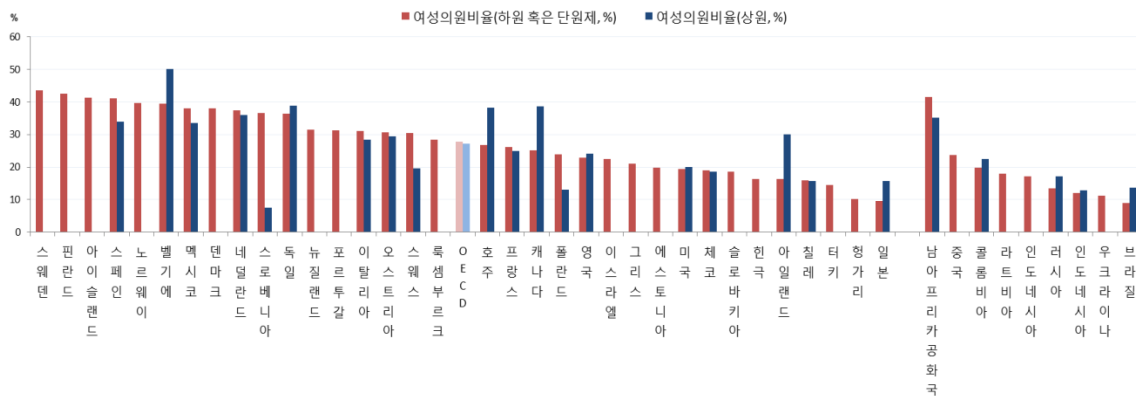
설명: 여성 장관, 차관, 대통령을 모두 포함한 숫자임(단, 부통령과 공공기관장은 포함하지 않음).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2015), "Women in Politics".

OECD 회원국들의 의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기 위해 국회 구성원을 선출하였지만, 2014년도 국회들은 성별 평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OECD 회원국들의 상원 및 하원에서 평균적으로 30% 이하의 의석만이

여성으로 채워졌다(그림 3.1). 성별 균형에 가장 근접한 곳은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의 하원과 오스트리아, 캐나다, 벨기에의 상원이다.

그림 1.3. 여성 의원 비중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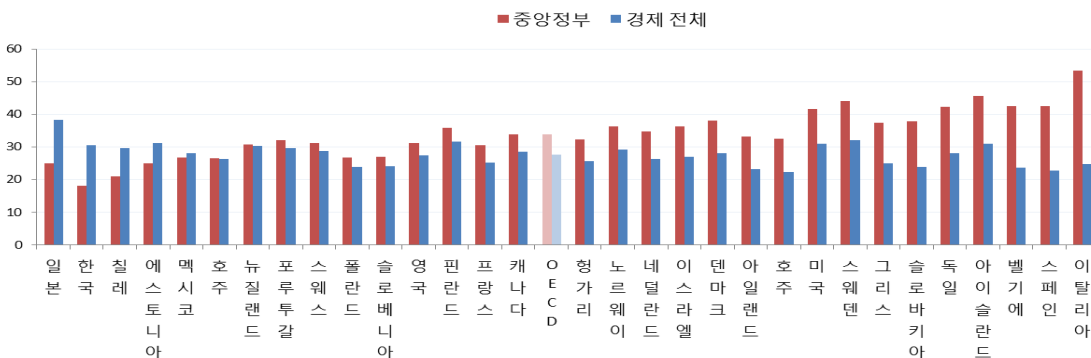
설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상원 내 여성의원 비율에는 54석의 영구직만 포함되어 있고, 매년 다르게 선임되는 36석의 임시직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음. 미국의 경우 투표로 선출하는 모든 의회의 자료를 포함한 것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2015), "Women in Politics".

<http://dx.doi.org/10.1787/888933247973>

각국의 정부들은 또한 현재 OECD 국가들이 직면한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노령사회의 수요변화는 의료서비스와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의 고용 증가를 낳고 있다. 게다가 정부인력 자체가 노령화되고 있다. 이전 결과(OECD, 2009a)에 따르면 중앙정부 인력은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9년 기준, 중앙정부 인력의 33.9% 정도가 평균 50세 이상이었다. 이것은 전체 경제에서 노령인력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6.2p.p. 높은 것이다(그림 1.4). OECD 회원국들의 중앙정부 인력의 노령인구 비율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일본, 한국, 에스토니아, 멕시코는 전체 경제에 비해 중앙정부 인력의 노령인력 비율이 낮다. 반면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는 전체 경제에 비해 중앙정부의 노령 인력의 차가 18p.p.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림 1.4. 중앙정부 및 경제 전체에서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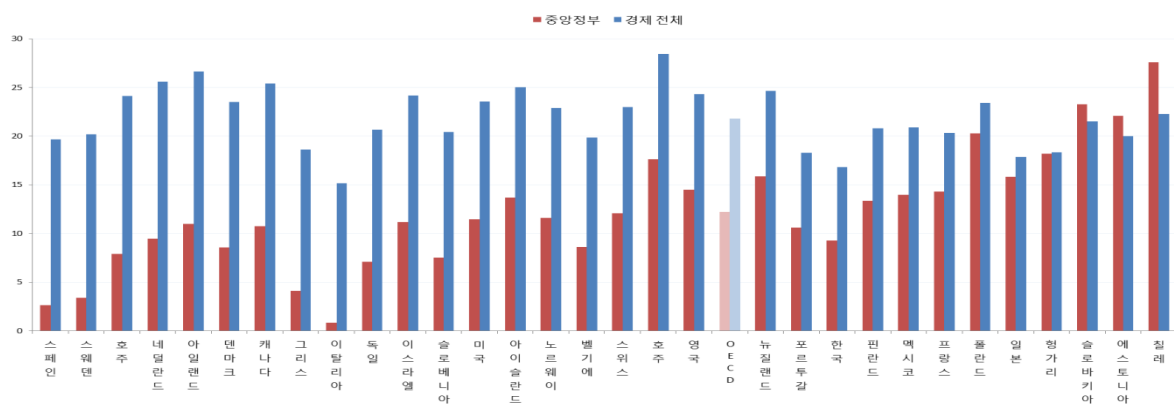
설명: 체코, 터키, 룩셈부르크는 데이터상의 문제로 기재하지 않음

출처: OECD (2010), *2010 OECD Survey on Strategic HRM in Central/Federal Government*, OECD, Paris;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스페인 자료는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음.

<http://dx.doi.org/10.1787/888933247983>

인구의 노령화는 정부의 도전과제이지만 동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중앙정부 인력의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인력을 정부에 투입할 기회를 갖게 된다. 여러 OECD 국가에서 전체 경제에 비해 중앙정부 인력의 젊은층 비율이 낮다. 평균적으로 2009년에 중앙정부 인력 중 30세 이하는 12.2%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에서의 비율보다 9.6p.p. 낮은 것이다(그림 1.5).

그림 1.5. 중앙정부 및 경제 전체에서 30세 이하 근로자 비율 (2009년)



설명: 체코, 터키, 룩셈부르크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부재로 제외됨

출처: OECD (2010), *2010 OECD Survey on Strategic HRM in Central/Federal Government*, OECD, Paris; and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스페인 자료는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음.

<http://dx.doi.org/10.1787/888933247995>

정부 노동력의 다양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OECD 국가들이 취약계층과 소수자 그룹의 고용을 촉진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10월 영국은 '평등법(Equality Act)'을 시행하였는데 직원 2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인력 구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고용, 평등한 급여, 탄력적인 업무, 개발에 있어 다양성을 다루는 정책과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을 공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2006년 노르웨이 정부가 평등을 촉진하고 성별, 인종, 성적체성, 장애, 연령에 관한 차별과 맞서기 위해 '양성평등과 차별반대 옴부즈맨(Gender Equality and Anti-Discrimination Ombudsman)' 제도를 확립하였다. 캐나다에서는 2005년 '공공서비스 고용법(Public Service Employment Act)'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여성, 장애인, 원주민, 소수인종과 같은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 인력에서 소수자 그룹이 잘 대변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증거는 제한적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다양성과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간혹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민족, 인종, 종교와 같은 민감한 범주에 대한 자료 수집이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자료뿐만 아니라 인구조사와 공식 설문조사는 민감한 개인 자료의 주요 정보원이다. 그러나 이 조차도 신뢰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Simon, 2007).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노동력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소수민족 집단이 공공인력에 있어 다소 지위가 낮음을 밝혀냈다. 2010년 기준, 공공부문 인력 중 흑인, 아시아인 및 다른 소수민족 그룹은 8.8%로 민간부문의 9.7%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Local Government Group, 2010). 국제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공부문 인력 구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면, 각국에서 공공부문의 포용성을 되돌아보는 데 핵심적인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포용적 정책결정 과정

왜 포용적 과정이 적절한가?

투입을 산출과 결과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정부과정(government process)과 정부기관을 통하여 발생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 측정된 공공관리와 거버넌스 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상 근무방식과 공공정책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반영하고 있다. 어떻게 자원을 연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산출과 결과물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처리과정은 결과물의 포용성뿐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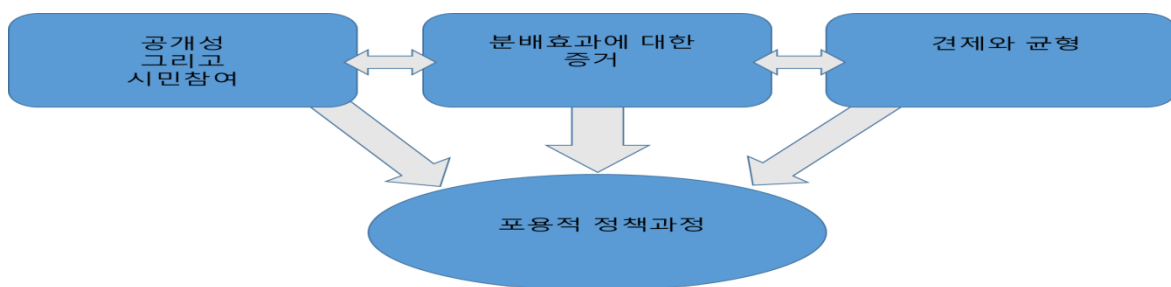
정책 결정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 사회 각 층의 요구사항과 열망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결정과정에 이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포용적 정책과정이 중요하다. 포용적 성장의 영향만큼이나 복잡한 포용적 과정의 영향은 분명 단순하거나 예측가능하지 않지만, 포용적 과정은 정책주기를 거치며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정부기관이 포용적 결과물을 지지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도와준다. 강력한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식적이고 개방적인 것에 반해 비공식적이고 종종 불법적인 과정(즉, 부패)이 지배하는 것을 막는 데에도 유용하다.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정당성과 효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시민들은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시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은 간과될 수 있는 요구사항, 해법, 영향력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종합하면, 포용적 과정은 정책결정 전과정에 걸쳐 다양한 사회 계층의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의 차별적인 영향력, 그리고 이들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효과를 다루는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포용적 과정을 실제로 작동시키는가?

포용적 정책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통합시키는 정책을 보장하는 포용적 과정, 증거, 구조에 달려있다. 이는 정부의 의도와 조치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표현할 방법을 제시하는 공공 투명성, 개방성, 참여 기제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포

용적 정책결정과정은 정책결정이 궁극적으로 분배에 미칠 결과에 관한 정보와 결정과정에 있어 이러한 정보를 수집, 교환, 반영시키는 기관의 구조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부당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투명성을 신장시키는 행정적 통제 수단과 독립기관 등을 통해 더 균형 잡히고 더 책임 있는 정부활동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더 강한 포용성을 위한 처리과정, 증거, 구조는 포용적 정책결정 요소들을 위한 방안을 강화시키면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그림 1.6). 다음 부분에서는 다른 『한눈에 보는 정부』 판에서 제공된 해당 증거들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된 각 구조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6 포용적 정책결정과정을 향하여



개방성과 참여

많은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은 '투명성, 책임성, 시민참여'라는 개방정부(open government)의 원칙에 의해 공공부문 개혁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몇 가지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방법들은 지방의 참여예산과 같은 혁신적인 공공 거버넌스 과정부터 실시간 상호작용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더 많은 개방성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정부가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동의 그리고 잘 맞추어진 서비스전달 경로의 개발, 양방향 참여,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오늘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충분조건이라기 보다는 필요조건이다. 포용적 정책과정의 완전한 혜택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 사이의 상승효과를 확인하고, 정책 설계와 집행 단계에서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조직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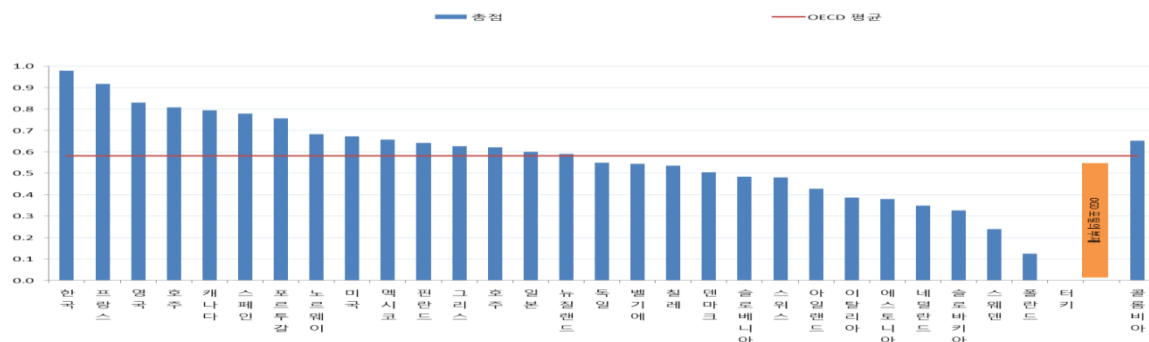
정보에 대한 접근에서 '개방적이고, 유용하고, 재사용 가능한(Open, Useful, Reusable)' 자료로

포용적 과정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한다.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은 공공부문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법적 권리 체계를 만들도록 이끌었다. 이 법의 범위와 깊이는 국가마다

다양하고 집행 방법도 다르지만, 2011년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FOI 법을 제정하였다. 개방 정부의 부상과 함께 정부의 수동적인 정보의 보급(주로 요구에 의한, 예: FOI)에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의 변화를 목도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사람에 의해 널리 분석되고 대규모로 재사용될 수 있는 공공자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이 그러하다. 이는 공공가치(더 나은 서비스, 투명성, 책임감)와 사적 가치(새로운 사업분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공공자료를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공간자료를 사용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확산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공동가치 추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 포용성이 강화되는 예는 정부자료공개(OGD)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부자료공개는 자료의 재사용과 투명성 향상을 통한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 기업들, 시민사회 조직들에게 권한을 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OURdata Index)는 각국의 중앙 정부자료개방 포털(그림 1.7 및 개방자료에 대한 2쪽 자료 참조)에 초점을 맞추어 유용성, 접근성, 자료 재사용에 기초한 'G8 자료개방 헌장' 시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이 헌장을 따르고, 특히 유용성과 자료에 대한 접근에 있어 시행이 잘 되고 있지만, 정부가 행정 안팎으로 구체적인 행사, 장려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자료의 재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범위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발전속도를 고려하여, 몇몇 국가들은 이미 중앙정부 자료개방 프로그램과 포털을 대상으로 중요한 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년 내로 지표가 개선될 수 있다.

그림 1.7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정부 데이터의 공개성·유용성·활용성 (2014년)



출처: 2014 OECD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http://dx.doi.org/10.1787/8889332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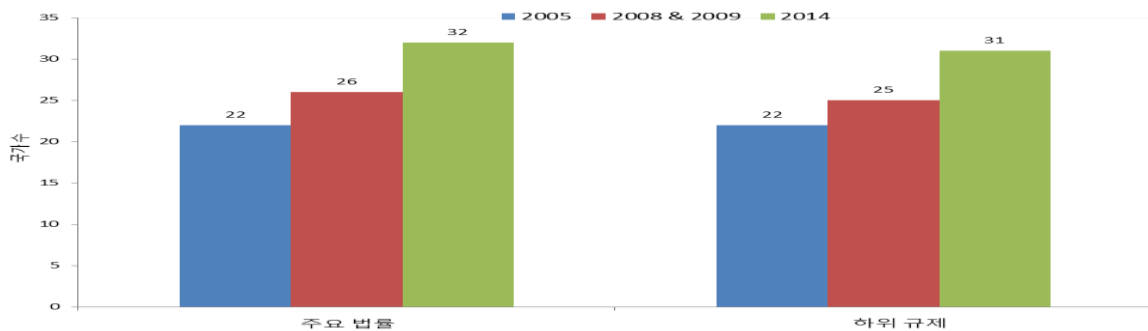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토의에서 양방향 협업으로

의미있는 시민 참여(engagement)는 포용적 정책결정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다. 참여는 자신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토의와 더불어 협업과 숙의를 통해 시민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통합시키게 된다. 전반적으로 참여의 증가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시민들의 기대와 정부의 대응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데 기여하고 더 나은 공공정책을 만들게 해준다.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개발해야 하며, 정부와 시민 참여 둘 다를 위한 효과적인 지침과 장려책이 필요하다.

규제정책 같은 특정 부분에서는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전히 공공참여의 초기 단계에 있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권고사항'은 정부들이 "제공받는 정보의 질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협의과정에서 [...] 규제결정과정 동안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를" (OECD, 2012b) 권고하고 있다. OECD 규제지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OECD 회원국들이 주요법률 및 하위규제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킨다. 그림 1.8은 신규 규제 입안 시 협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들의 경향을 보여준다. 2014년 두세 개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주요법률 및 하위규제에 이러한 협의를 포함시켰다.

그림 1.8 신규 규제 입안 시 규제대상자와 협의를 의무화한 국가 수 (2005년, 2008-09년, 2014년)



설명: 34개국의 의회자료를 기초로 작성함.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5년에는 OECD 회원국가가 아니었으므로 2005년도 서베이에는 포함되지 않음

출처: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dicators Survey 2005 and 2008/09*,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Indicators-RMS.htm;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forthcoming) based on the preliminary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http://dx.doi.org/10.1787/888933248009>

여전히 도전과제는 남아있다. 심지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의무적일 때도, 일반 대중과의 협의가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설문조사에서 35개국 중 11개 국가가 의견을 듣기 위해 '항상 또는 자주' 온라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응답하였고, 18개 국가는 이 방법을 '가끔'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2쪽 자료 참조). 단순히 공공 협의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거리, 시간, 언어, 접근성 같은 추가적인 장벽들이 시민참여 효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참여에 대한 접근성과 매력, 표적성과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

많은 OECD 회원국들에서 협의과정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s)을 통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정책결정에 있어 시민참여 정도를 증가시켰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정부 웹사이트에 규제 입안을 게재하거나 소셜미디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위키기반(wiki-based) 도구 같은 더 혁신적인 수단을 시도해 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참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게다가 이해관계자들은 규제 거버넌스 주기에서 마지막 전달단계, 즉 집행과 모니터링 단계에는 거의 개입하지 못한다(근간 OECD 규제 정책 전망 참조). 참여 방법이 변화하고 있지만 과정의 속성은 디지털 이전 시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정보통신기술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참여도를 향상시키는 충분조건은 아니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조정하고 통합시키지 못한다(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2쪽 자료 참조).

정부에 의한 소셜미디어 활용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셜미디어가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만 효과적인 측정과 벤치마킹을 위한 틀은 부족하다. 이러한 점은 정부기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든다(정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2쪽 자료 참조). '디지털 정부 전략에 관한 OECD 권고사항(The OECD Recommendation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에서는 정부기관의 수용력과 디지털 정부 "생태계" 개발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책결정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 공공, 민간,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OECD, 2014a 참조).

의사결정을 위해 분배효과에 관한 증거 생산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기제는 공공정책이 낳을 수 있는 분배효과에 대한 증거로부터 혜택을 얻기도 하고 증거에 기여하기도 한다. 증거는 의사결정자들이 정책의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고 조정하게 해 줌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관련 정보를 생산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CBA)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규제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규제영향분석(RIA)을 포함한다(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2쪽 정보 참조). 적절하게 설계된다면 이러한 방법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여러 다른 정책옵션의 분배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보다 최근에는 정부가 새로운 측정수단을 통해 환경영향(EIA), 빈곤영향(PIA), 성별(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의 관점에서 분배의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투자 기회를 고려해볼 때 OECD 회원국들은 비용편익분석이 투자 프로젝트의 장점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캐나다 같은 많은 국가들이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넘어서 비용편익분석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보호, 기술개발 및 혁신, 과학연구와 문화, 레저와 같은 영역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웨덴 같은 국가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큰 규모의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제

한되어 있다. 기술적인 문제는 모든 국가에 걸쳐 유사하기 때문에, 기존 증거들은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을 다른 프로젝트와 정책에 확장시키려는 국가에게 이용 가능하다.

투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의 핵심 방법론 체계는 일반적으로 잘 개발되어 있는 것과 달리, 특정 부분은 아직 개발이 덜 되어 있다. 특히 위험분석(risk analysis)은 영국, 스웨덴,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캐나다에서 몇몇 정량적 이해관계자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다양한 집단에 걸친 프로젝트 결과물의 분배와 같은 부분은 영국에서만 개발되어 있다. 지역분배 분석(regional distribution analysis)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매우 드물게 실행되고 있다. 더 많은 그리고 더 나은 비용편익분석 정보를 생산하고 분배 분석의 활용을 일반화시키면 정책이나 프로젝트의 포용성 효과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Box 1.1.).

규제분야에서 OECD 회원국들은 규제영향분석(RIA)을 통해 규제의 분배효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집단인 하위그룹과 불평등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정부, 기업체, 커뮤니티 같은 대규모 집단에 초점을 맞춘다. 몇몇 OECD 회원국은 사회적 약자들, 성평등, 빈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영향력을 모니터링 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방법론적 이슈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요한 도전과제들은 관련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측정하며, 정성적 영향력을 수량화하고 부처 내의 기술과 자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 모델과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그룹이나 다른 영역에의 영향평가 방법론의 적용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협의회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서 추구하는 비례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평가도구 또는 영향평가 기준의 사용은 구체적인 영역(사회적, 환경적)에서의 규제효과가 특정 기준에 도달하게 될 때 가속화 될 것이다.

Box 1.1. 영국의 비용편익분석(CBA) 이용

비용편익분석(CBA)은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오래된 지적 전통이다.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든지 개입의 비용보다 전체적인 혜택이 더 클 때 프로젝트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혜택이란 사람들의 복지(효용) 증진을 말하는 것이며, 여러 정책 속에서의 선택과 관련된 상충관계가 명백히 구분된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예산제약 하에 투자를 선택하는 프로젝트 평가에 강한 국가이다. '녹서(Green Book)'는 어떻게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참고자료이다. 현재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든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의무적으로 '녹서'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체계를 따라야 한다. 규제, 지출, 공유재산과 관련된 모든 제안서는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녹서'의 특이한 점은 경직된 과정을 따르도록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공공투자와 다른 사회경제적 제안서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적 방법론에 대한 일반

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제시한다. 지시사항들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지출 부서에 대한 재무부의 도덕적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지침에 가깝다.

'녹서'의 최신판에 있는 평가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평가 받는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의하라.
- 관련 조치를 달성하기 위한 후보 목록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최종후보 명단을 작성하라.
- 최종후보 명단에 대한 결정을 위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CBA) 또는 비용효과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을 적용하라.
- 선택된 대안으로 해법을 개발하고 집행함.
- 제안서 준비과정에서 나온 컨설팅에 주의를 기울임.
- 정책학습 도구로서 사후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함.

모든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재균형 정책과정:

성인지예산(gender-responsive budgeting)의 예

정책결정과정에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켜야 하는 이유는 여성, 소수민족, 이민자 같은 특정집단에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문화적 패턴으로부터 기인한다. 이러한 계층들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왔고 그 결과 편향된 정책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패턴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균형 잡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지예산(GRB)은 예산과정의 모든 단계에 성별적 관점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성인지예산(GRB)의 개념은 예산할당이 양성평등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OECD는 2011년에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성인지예산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OECD, 2013a 참조), 10개 국가만이 성인지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지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기존 과정과 생산되는 정보의 유형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 성인지예산의 첫 단계에서는 핵심 이해관계자의 수용력과 민감도를 구축해야 하며, 인지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소통경로로서 시민사회의 개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정책 집행과 연관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정책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치 마련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더 나아가 정부는 예산안의 성별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서비스 요구별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 없이는 예산이 책정되는 서비스에 대한 여성의 요구를 비교하기가 어렵고, 예산안의 중립성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는 정부단체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절차를 동반해야 한다. 종합하면, 성인지예산은 다양한 계층별로 대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식의 향상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성과관리의 기여

정부 성과 체계에 포용성 목표를 통합시키게 되면, 자원 할당과 집행결정이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예산과 성과관리가 시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 정치적으로 합의된 핵심 국가 지표와 공조되어야 한다. 강화된 성과관리 체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니터링과 협조가 요구된다. 중앙예산기관 또는 정부센터가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성과정보는 투명성과 공적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주요수단이다. 정부에 의한 적절한 보고 관행에 더하여, 전통적으로 중요한 재정책임과 준수감시(compliance checks)를 실시 하던 최고감사기구(SAIs)는 성과감사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성과주의 예산과 최고감사기구에 관한 2쪽 자료 참조). 최고감사기구(SAIs)가 이러한 도전을 시작함으로써 인해 분배 영향력을 포함한 주요 성과목표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견제와 균형을 통한 포용적 정책결정의 확립

정당성을 위해서 강력한 견제와 균형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 파악으로부터 정확한 평가까지를 위해서도 정책결정의 포용성은 중요하다. 견제와 균형은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독립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투입을 제공하며, 부당한 영향력과 부패의 위험을 억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두에게 동등하게 규제를 가하게 되는 포용적 거버넌스를 뒷받침한다. 어떻게 견제와 균형의 효과적인 구조와 절차를 마련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기능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기관들과 메카니즘들이 강화되고 상호 보완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도전과제이다.

투명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독립기관들의 역할

독립기관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투명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는데, 생산성 위원회 또는 독립적인 재정기관(IFIs)과 같은 조직들도 포함된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기관들은 정책옵션 별 예산효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 견해를 제공하고 대중들의 토론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OECD, 2013a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은 정부조치 결과에 관한 일반 대중과 관련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인식을 증가시킨다.

공공 투명성과 책임

의사결정과정을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이 기득권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힘있는 소수의 접근과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정책과정을 포용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사회의 불평등이 증가하여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되면, 기득권층에 유리한 정책들이 설계 및 집행될 것이고 자원은 더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

OECD 회원국들도 공공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정책 포획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위험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정책 포획의 범위를 보여주었다. 이해충돌 관리, 로비관행에서의 청렴성과 투명성 강화, 균형 잡힌 정치자금을 통해서 이러한 포획을 피할 수 있다. OECD는 정책결정과정의 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왔고, “더 나은 정책결정 체계”를 개발하여 개인 및 기관 수준에서 정책포획의 위험을 완화시키고 있다.

포획과 부패에 대한 개인의 저항은 결정권자에 의한 사익 공개, 공개 후속조치,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을 포함한 이익충돌 관리를 통해 강화된다. ‘OECD 이익충돌 관리를 위한 지침(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OECD, 2003)은 공무원들이 이익충돌을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핵심 원칙을 세웠다. 이 원칙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투명성을 지지하고, 개인적 책임을 추구하고 부당한 영향력과 정책 포획에 대항하는 조직적 문화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자문그룹의 불균형적인 대표성과 “회전문” 현상 같은 새로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득권층은 정당과 선거운동본부에 로비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해서 OECD는 2010년부터 ‘로비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관한 권고사항’을 적용하였고 이는 로비와 관련된 부패와 부당한 영향력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로비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 투명성을 추구하기 위한 규제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치자금은 여전히 문젯거리이다. 정치에 있어 금전은 양날의 칼이다. 돈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한 요소이고 간접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해주며 민주적 경쟁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정당과 선거운동자금이 적합하게 규제되지 않는다면 돈은 부당한 영향력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OECD는 연관된 위험영역을 파악하고1) 정책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과 선거운동 자금조달 시 공평한 경쟁의 장, 투명성, 그리고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2) ‘재정민주주의 체계(Framework on Financing Democracy)’를 개발하였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청렴 문화를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방안과 함께, 위 시책들을 결합하면 정책결정과정에서 포획의 위험성이 억제되고 포용적 정책결정과 포용적 성장의 탄탄한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

포용적 정책과 결과

맥락

포용적 과정은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지만 포용적인 정책결과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결과물의 포용성이 생활수준뿐 아니라 복지에도 영향을 주는 다각적인 개념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어떤 집단에서는 전체 시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정부의 능력을 방해하면서 특정집단이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 소득과 비소득 불평등은 배제와 불평등의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악화된다. 예를 들어 빈곤가정에서 태어난 학생은 고등교육 접근성과 성과에 영향을 받고, 결과적으로 소득과 고용상태, 기대수명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Box 1.2). 실제로 최근 조사결과는 소득과 비소득 불평등이 경제활동, 사회적 결속력, 민주주의의 작동과 정치적 공평성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Cingano, 2014; OECD, 2015c; OECD, 2015d).

Box 1.2. 불평등의 누적적 성격

소득수준, 학력, 고용가능성, 건강상태는 모두 연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정으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높은 실업률(또는 불안정한 고용상태), 높은 스트레스, 더 많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불평등을 증가시킨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계층들 간 가장 눈에 띄는 불평등은 기대수명에 관한 것이다. 15개 OECD 회원국을 살펴본 결과 30세 기준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6년 더 길다(그림 1.9).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며 시민들의 복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림 1.9. 고학력자가 수입이 더 높고,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30세의 성별 및 교육수준별 기대수명의 차이 (2012년)



설명: 위 그림은 30세 기준 고등교육 이상 고학력자와 중등교육 이하 저학력자 간의 남은 기대수명의 차이를 도식화 한 것임. 네덜란드는 2011년 자료임.

출처: Eurostat Database, 이스라엘, 멕시코, 네덜란드의 자료는 OECD Health statistics 를 통해 획득하여 보충함.

<http://dx.doi.org/10.1787/888933248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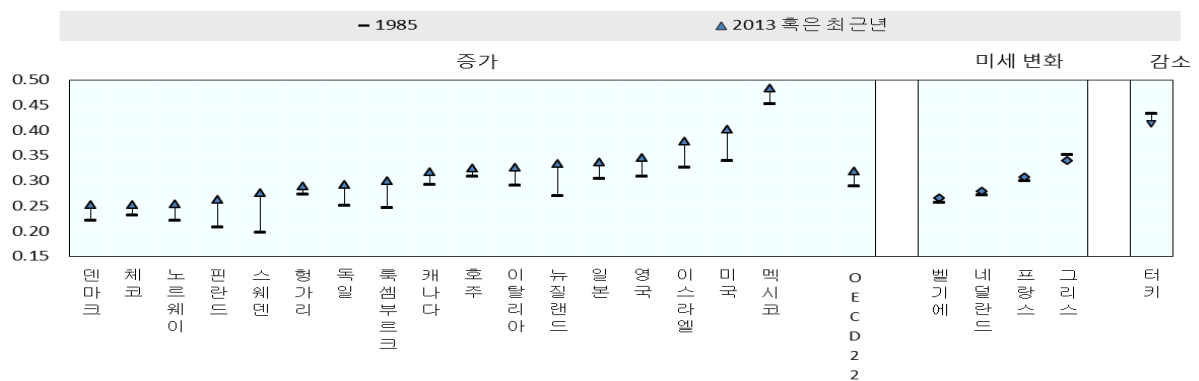
1980년대 이래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상위 1%를 포함시키면 더욱 그렇다(Box 1.3). 최근 금융위기 동안에도 최상위 소득그룹은 최하

위소득층에 비해 평균적으로 소득이 증가하였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교육서비스 전달에 있어 접근성과 평등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Box 1.3. OECD 회원국들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중단기 경향

대침체(Great Recession) 이후 소득불평등은 19세기 이후 겪어 보지 못한 단계에 이르렀다. 선진국에서 소득불평등은 최근 전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니계수는 OECD 평균 1980년대 중반 0.29에서 2013년 기준 0.32로 상승했고, 이는 가능한 가장 높은 불평등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다(그림 1.10) (OECD, 2015c). 이러한 상승은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였던 북유럽 국가들도 포함된다. 1980년대에 이미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였던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영국에서도 불평등은 증가하였다.

그림 1.10. 대다수의 OECD국가에서 1985년과 2013년 사이에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



설명: 불평등의 미세한 변화는 1.5 p.p. 미만의 변화 시 적용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 2015, www.oecd.org/social/income-distribution-database.htm.

<http://dx.doi.org/10.1787/888933248026>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상위소득(1%, 10%, 20%)과 하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OECD 연구는 세전소득 1% 고소득층의 점유율이 지난 30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OECD, 2015d). 또한 2010년 전체 인구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최하빈곤층 소득의 9.5배와 같은데, 이는 25년 전의 7배에 비해 커진 것이며(OECD, 2011a; OECD2015d), 19세기와 유사한 수준이다(Piketty, 2014).

최근의 금융 및 경제위기 동안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평균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상위 10% 소득규모의 사람들은 하위 10%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감소율이 적었다(제11장: 핵심 정부 성과 - 소득 재분배 참조).

소득격차와 최상위 부유층으로의 소득 및 부의 집중은 정치적 공정성과 정치적 과정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 부의 집중은 부자와 대기업에 의한 정책포획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는 선거 결

과, 입법우선권, 유리한 규제 등을 만들어 내는 더 큰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뜻한다(Glaeser, Scheinkman, and Schleifer, 2002; You and Khagram, 2005). 또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갈 때 사람들은 정치에 환멸을 느끼게 됨으로써 선거 참여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부유층의 권력은 더 증가하게 된다(Reich, 2013b). Louis Brandeis(전 미국대법관)는 “[...] 우리는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 (Dilliard, 1941)는 말을 남겼다.

불평등의 증가는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주고, 실제로 부정부패에 대한 위험과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 하락을 가져 올 위험이 있다. 소득불평등 증가와 교육, 보건 같은 핵심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은 대중들의 불만족을 확대시키고, 정치적 의견의 양극화를 조성하며,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OECD, 2015d).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부정행위(Mauro, 1998)나 세금회피에 대한 죄책감을 감소시키게 된다(Oswiak, 2003; Uslaner, 2003). ‘세계 가치관 조사(World Values Survey)’와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른 부패 측정의 증거를 사용하여 You와 Khagram(2005)은 불평등이 선진국에서 인식된 부패와 실제 부패에 동일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주의의 작동에 영향을 끼치듯이, 증가일로인 불평등은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Box 1.4). 정부는 특히 소득재분배와 현물 이전(in-kind transfers)과 같은 방법을 통해 불평등 증가를 방지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정책 옵션 간의 상충관계와 상승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Box 1.4. 경제성장에 끼치는 불평등의 영향 탐구

몇몇 연구들은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선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최근의 OECD 연구는 지니계수가 1 포인트 감소되면 이후 5년 간 GDP의 0.8p.p.(또는 연간 0.15 p.p.)가 누적 성장된다고 추정했다(Cingano, 2014). 이 연구는 또한 소득분배에서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를 통해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이 경제적 성과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생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이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국내 수요, 생산성(저소득층 인적자본에 대한 낮은 투자)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Cingano, 2014; OECD, 2015c).

특히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더 많은 소득재분배와 이전지출(transfer payments)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의해 수행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OECD 국가들에서 재분배와 경제 성장 간의 상충관계는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Ostry et al., 2014). 반면, 더 많은 재분배는 경제 성장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불평등 감소를 통해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세와 이전(transfers) 만을 점유하고 있는 재분배 측정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보건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현물지급에 따른 재분배 효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더 강화하게 된다.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

정부는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 감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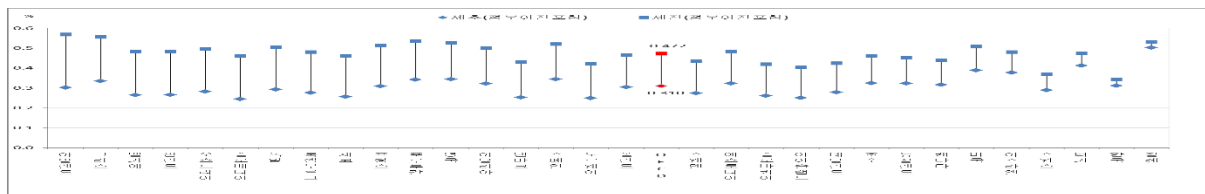
1. 세금과 이전소득 정책(실업보험, 사회부조, 임금보조금, 가족급여, 연금, 세금공제 등)
2. 고용정책과 임금협상과정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
3. 공적으로 전달되는 현물급여와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전달되는 교육, 보건 및 다른 중요한 서비스 지출
4. 경제적 기회 접근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규제수단들
5. 더 넓게는 법치를 강화하고, 특혜 또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포용적 정책개발 과정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보장하는 것(포용적 정책결정 과정 부분 참조).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세금과 이전소득 만으로는 불평등이 감소되기는 어렵다. 효율적인 정책 설계 및 집행과 결합된 고용, 교육, 의료 정책 공공서비스와 같은 더 넓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Reich, 2008; 2013; Piketty, 2014; OECD, 2008a; 2012; 2015d). 다양한 정책수단 간의 상충관계, 상승효과, 상호보완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한 조세 및 소득이전 시스템 설계

정부는 세금과 소득이전 정책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 할 수 있다. 적합하게 설계되었을 때 공적연금이전과 소득세, 사회보험부담금은 시장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그림 1.11).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 효과는 세금과 소득이전 전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 2011년에 칠레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세금과 소득이전을 통해서 상당한 시장 소득불평등 감소를 이룰 수 있었다(그러나 한국에서 세금과 소득이전의 시장 소득불평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다). 세금과 소득이전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인해 가장 큰 감소를 보인 국가들은 아일랜드(26 p.p.)와 그리스(22 p.p.)로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로부터 혹독한 영향을 받았다.

그림 1.11. 조세와 정부이전 전후 소득 불평등의 차이 (2011년)



설명: 벨기에는 2010년 자료를 사용함. 호주와 네덜란드의 경우 2012년 자료를 사용함.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258>

그러나 1980년대와 비교할 때 OECD 회원국들의 세금과 소득이전 시스템에 있어 시장 소득 불평등은 증가한 반면 재분배는 감소하였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후반까지 시장 소득불평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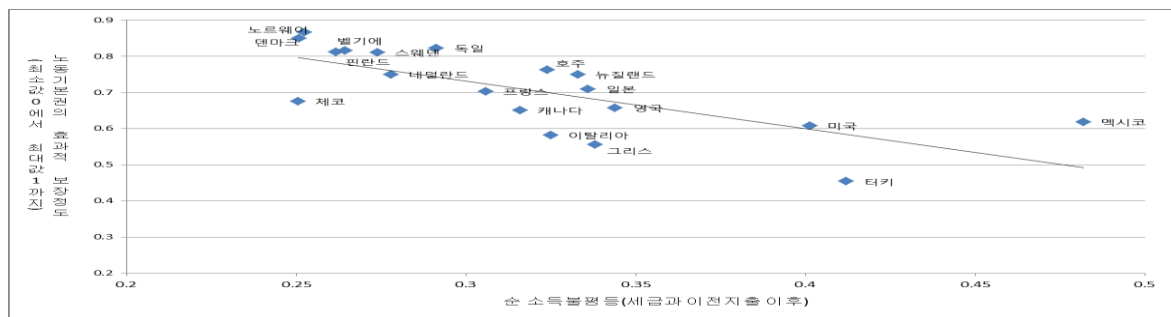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이 더 많은 재분배 재정정책을 통해 균형을 맞추지는 않았다. 시장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가계 소득불평등에 대한 세금과 이전 지출의 안정화 효과는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감소하였다. 게다가, 어떤 국가들에서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율이 점점 낮아진 바람에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데 소득세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OECD, 2012a). 실업률의 변화와 수급대상자 범위에 대한 개혁 또한 일부 OECD 국가들에서 순소득 불평등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협정의 역할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시장 소득불평등 감소와 세금 재분배 및 소득이전 정책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일부 증거들은 지난 수십 년 간 노동조합의 권력과 그 영향력 상실이 세전 및 세후 소득불평등 증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ich, 2013b). 그 결과 사용자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금상승에 대해 크게 압박을 받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포함한 노동권 보호는 법치의 기본이며, 이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와 OECD 소득분배자료를 통해보면, 노동조합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는 국가들에서 소득불평등이 낮게 보고됨을 알 수 있다(그림 1.12). 법원 판결과 노동법은 역사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상 및 충돌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정부 조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림 1.12. 증거 찾기...노동권 보호가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가?

효과적인 노동권 보호(종합지수)와 순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



설명: 노동기본권의 효과적 보장 정도는 2014년 법률지수(the Rule of Law Index) 를 사용함. 순소득불평등은 2013년 순 지니계수를 사용함.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8039>

고용정책과 높은 최저임금은 불평등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상충효과와 상승효과를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정책결정자들에 있어 주요 도전과제는 대표성이 낮은 계층의 고용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이다(OECD, 2011a). 정부는 이민자들, 사회경제적 취약층,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을 장려할 수 있다. 게다가, 여성들이 일과 가정에 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모든 구성원이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핵심이 된다. 또한, 이전 부분에서 논의되었듯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불평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OECD, 2015d). 저소득층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그러나 상충효과에 대해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 정책의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사람들이 실직을 할 수 있고, 비공식 부문이 커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증거를 보면 일부 국가들에서 높은 최저임금이 근로소득 격차를 좁히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OECD, 201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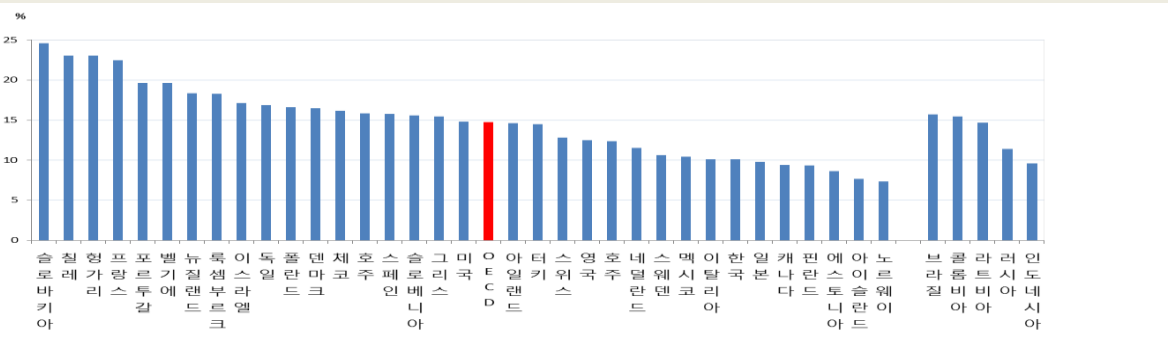
인적자원 투자와 교육기회 균등보장

특히 취약층에 대한 교육과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경제적 배경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동료학생들에 비하여 고등교육을 마칠 확률이 낮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Box 1.5).

**Box 1.5.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과 격차는
고등교육과 노동시장 진입에 영향을 준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초등 및 중등 학교에서 학생의 성취에 달려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은 학교에서 학생의 성취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변수이다. 평균적으로 OECD 회원국들에 걸쳐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 변량의 15% 정도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OECD, 2014b) (제12장: 대시민서비스) (그림 1.13). 게다가 부모가 저학력자인 취약가정의 자녀들은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고등교육을 받기 어렵다. 만약 교육시스템이 취약계층의 학생들에게 동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림 1.13. PISA 수학 점수의 분산이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는 비율 (2012년)



출처: OECD (2014), PISA,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revised edi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9591>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고등교육 접근도와 장래 수입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난 50년 동안 교육에 대한 접근도가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2013년 기준 고등교육기관 학생들의 50%이상은 최소한 부모 중 한 명이 고등교육을 받았다. 반면 부모가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10%만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교육 수준과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의 고용상태와 수입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고학력 가정에서의 성장과 연관된 임금프리미엄이 20%를 넘는다(OECD, 2010a).

OECD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고학력자일수록 수입이 더 많고, 일생 동안 실직할 가능성이 더 적으며, 더 건강하고, 타인을 더 신뢰하며,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OECD, 2015d). 따라서 유아기 교육에 대한 접근도 향상, 교수자원(instructional resources)의 공평한 분배 보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진의 질 향상,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도 향상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더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긴축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육관련 지출을 상당히 축소시켰다. 이는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쟁하고 번영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및 지역적 접근성 보장

금전적, 지리적 제약 없이 모든 인구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게 되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 모든 OECD-EU 회원국에서, 금전적 장벽 때문에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다. 정부는 금전적 장벽을 낮춤으로써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필요에 근

거해 제공되는 정부지원 의료서비스와 대조적으로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사람들의 지불능력에 달려있다.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 이론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들에게 부담이 옮겨가게 된다. 즉,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 가정이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들은 평균 가계소비의 3%를 의료비로 사용하였다(제12장: 대시민서비스 참조).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 경제위기 이후 정부보조가 감소하고, 가계의 직접부담이 증가하였다.

또한 의료진의 경우 충분한 인력이 지역마다 잘 분포되어 있어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올라간다. OECD 회원국들에서 의사 밀도는 일관되게 도시지역에서 더 높다. 이는 수술과 같은 특화 서비스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들이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많은 OECD 국가에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으로 의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해 오고 있다. 병원 설립을 돕기 위한 일회성 보조금¹⁾ 그리고 소득보장이나 보너스지급과 같은 반복적 자금 지급²⁾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가 이에 해당한다(OECD, 2013b).

더 큰 영향력을 위한 규제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접근 조성

노동시장, 생산물시장, 교육, 의료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제정책은 정부가 동등한 경제적 기회를 조성하고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해 취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2008년 금융 및 경제위기는, 인센티브가 적절히 작동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서, 잘 작동하는 규제정책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규제체계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규제가 소수인종이나 성소수자들에게 유리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인종차별 및 성차별 완화에 상당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OECD, 2014f). 게다가 규제정책은 생산물시장에서의 규제완화¹⁾와 이전소득(social transfer) 조정²⁾, 임금 결정방식 변경³⁾, 노동자의 협상력 변화⁴⁾ 등을 통해 소득분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양한 규제들을 서로 연계시키고 분배효과를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포용적인 성장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핵심이다.

Box 1.6. 수 년 간의 개선 이후, 2010-2013년에는 EU국가의 저소득층에서 자가보고된 의료서비스 미충족이 증가하였다

대침체기간 동안 여러 OECD 국가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접근성이 낮아졌다.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국가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의약품에 대한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있다. 따라서 가계의 직접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발생하고, 직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특히 가처분소득에서 높은 비율을 의료에 소비해야 하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2013년 모든 유럽 국가에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보고되었다(그림 1.14). 헝가리, 이탈

리아, 헝가리에서 특히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족의 원인은 비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EU 국가들 평균, 2013년에 저소득층은 비해 금전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보고하는 확률이 고소득층에 8배로 나타났다.

그림 1.14. 평균적으로 EU국가의 저소득층은 금전적 사유로 보살핌 욕구가 미충족 되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8배 높음



출처: EU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8049>

OECD 회원국들의 보건 시스템은 보건 서비스와 재화의 보장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병원방문과 의사진료 부분에서는 정부 보조가 높고, 약국, 치과, 안과(안경)에 대해서는 직접부담이 높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자에 대한 서비스와 재화가 불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

법치 강화와 효과적인 정책집행 보장

분배효과를 고려한 포용적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세에 대한 순응기제와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고소득에 대한 소득세율과 자본세율을 높여도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결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는 것은 정부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사회를 더 잘 대표하도록 정부 인력을 구성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증거에 기반을 둔, 건설적인 대화와 시민들의 참여, 투명성 향상과 책임을 추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책 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과 의사결정의 분배효과가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평가되도록 보장함으로써 포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는 특정 결과물에 대한 주어진 정책의 효과를 별개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서는 정책

에 대한 다각적인 영향력과 상충효과, 상승효과를 측정하는 보다 통합적인 “범정부적” 접근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이 환경, 보건,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높은 공중보건 지출은 고용과 소득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는 높은 세수를 의미하고 따라서 더 적은 물적소비를 의미한다. 게다가 이러한 분배효과에 대한 평가의 강조는 평균보다는 분배점수(즉, 중위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중위 가계소득과 세 가지 복지차원(실업, 가계소득, 기대수명)에 초점을 맞춘 OECD 다차원 생활수준의 공개도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OECD, 2014).

사용 가능한 전략과 도구에 대한 증거는 불완전하고, 정부조치와 포용적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시민 신뢰를 재구축하고 정책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개선하고 이러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은 기대수명과 학업적 성취 같은 결과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또한, 노동시장 접근과 참여를 강화하고 성별 격차를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기회와 사회이동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포용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사항들이 해당 분야에서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결과물이지만, 성장과 복지의 전반적인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영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정부는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면서 이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Bibliography

- Cingano, F. (2014), “Trends in Income Inequality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3, OECD, <http://dx.doi.org/10.1787/5jxrjncwvx6j-en>.
- Dilliard, I. (1941), “Mr. Justice Brandeis, Great American; Press Opinion and Public Appraisal”, *The Modern View Press*, Saint Louis, Missouri.
- Florio, M., S. Gastaldo and I. Loudiyi (2015), “The Use of Cost-Benefit Analysis for Capital Investment Planning in OECD Countries”, *Journal on Budgeting*, OECD, Paris, forthcoming.
- Galor, O. and J. Zeira (1988), “Income Distribution and Investment in Human Capital: Macroeconomics Implication”, *Working Paper*, No. 197, Department of Economics, Hebrew University.
- Galor, O., and J. Zeira (1993), “Income Distribution and Macro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60, 3552.
- Glaeser, E.L., J. Scheinkman and A. Shleifer. (2003), “The Injustice of Inequality,”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50:199-222.
- Local Government Group (2010), *Local Government Demographics*, Produced by Local

- Government Association Analysis and Research.
- Mauro, P. (1997), "Why Worry About Corruption?", *Economic Issues*, No.°6,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https://www.imf.org/EXTERNAL/PUBS/FT/ISSUES6/issue6.pdf>.
- Mauro, P. (1998), "Corruption: Causes, Consequences, and Agenda for Further Research," *Journal of Finance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1-14 March.
- OECD (200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www.oecd.org/gov/ethics.
- OECD (2005),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dicators Survey*,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2059593.pdf.
- OECD (2007),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Report on Implementation*, OECD, Paris, www.oecd.org/corruption/ethics/39691164.pdf.
- OECD (2008a),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44197-en>.
- OECD (2008b), *The State of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47990-en>.
- OECD (2009a), *Government at a Glance 2009*,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75061-en>.
- OECD (2009b),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dicators Survey*, OECD, Paris, <http://www.oecd.org/gov/regulatory-policy/47829549.pdf>.
- OECD (2010a), *PISA 2009 Results: Overcoming Social Background: Equity in Learning Opportunities and Outcomes (Volume II)*,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1504-en>.
- OECD (2010b), *PISA 2009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Student Performance in Reading, Mathematics and Science (Volume I)*, PISA,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91450-en>.
- OECD (2011a),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19536-en>.
- OECD (2011b),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 OECD (2012a),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ile Boosting Economic Growth: Can It Be Done?", in OECD,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growth-2012-47-en>.
- OECD (2012b),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aris.
- OECD (2013a),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3-en.
- OECD (2013b),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

health_glance-2013-en.

OECD (2013c),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OECD (2014a),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Digital Governance Strategies, OECD, Paris.

OECD (2014b),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Indicator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OECD (2014c),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15-en>.

OECD (2014d),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Indicators-RMS.htm.

OECD (2014e), "Top Incomes and Taxation in OECD Countries: Was the Crisis a Game Changer?", OECD, Paris, www.oecd.org/social/OECD2014-FocusOnTopIncomes.pdf.

OECD (2014f), *Women, Government an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Fostering Diversity for Inclusive Growth*,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0745-en>.

OECD (2015a),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OECD, Paris (forthcoming).

OECD (2015b), "Promoting Inclusive Growth Through Better Regulation: The Role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GOV/RPC(2015)4, OECD, Paris.

OECD (2015c);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5120-en>.

OECD (2015d), *All on Board: Making Inclusive Growth Happe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8512-en>.

Ostry, J.D., A. Berg and C.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Research Department, *Staff discussion note*.

Owsiak, S. (2003), "The Ethics of Tax Collection", *Finance and Common Good*, 13/14: 65-77.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Pitts, D.W. and L.R. Wise (2010), "Workforce Diversity in the New Millennium: Prospects for Research",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Vol. 30, No. 1, pp. 44-69.

Reich, R. (2013a), *Aftershock: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Vintage, New York.

Reich, R. (2013b), *Beyond Outrage: What has Gone Wrong with Our Economy and Our Democracy, and How to Fix It*, (Expanded Edition), Vintage, New York.

Reich, R. (2015), *Saving Capitalism: For the Many Not the Few*, Knopf, New York.

Simon, P. (2007), "'Ethnic' Statistics and Data Protection in the Council of Europe Countries", *Study Report*, European Commission against Racism and Intolerance, Strasbourg.

Stiglitz, J.E. (2012), *The Price of Inequality: How Today's Divided Society Endangers Our Future*, W.W. Norton & Company, New York.

Uslaner, E.M.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Uslaner, E.M. (2003), "Trust and Civic Engagement in East and West", in G. Bedescu and E.M. Uslaner (eds.), *Social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Democracy*, Routledge, London.

Uslaner, E.M. (2008), *Corruption, Inequality and the Rule of Law: The Bulging Pocket Makes the Easy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World Justice Project (2014), *The Rule of Law Index 2014*,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You, J.S. and S. Khagram (2005), "A Comparative Study of Inequality and Corrup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0 (February), pp. 136-157.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일반정부 재정수지

일반정부 순저축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일반정부 총부채

일반정부의 순자산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일반정부 수입

일반정부 수입구조

정부수준별 수입구조

일반정부 지출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COFOG)

경제적 거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

정부수준별 지출구조

정부 투자지출

일반정부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일반정부 재정수지

정부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돈을 지출하고, 세금 징수 또는 채무를 통해 정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얻는다. 재정수지는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이다. 한 해 동안 정부의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가 발생한다. 반대로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 적자가 된다. 연이은 적자는 부채수준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만 한다.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이자지불 이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가 부채 없이 부채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3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4.2%에 달하였다. 가장 큰 적자를 보인 국가들은 슬로베니아(14.6%), 그리스(12.3%), 일본(8.5%)이었고, 슬로베니아 (4.9%)와 그리스(3.5%)의 경우 2014년에 적자가 크게 감소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은행시스템 자본출자가 주로 2013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면에, 2013년 6개 OECD 국가들이 흑자를 냈다. 노르웨이(11.3%), 한국(1.3%), 룩셈부르크(0.9%)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들 중 절반이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다. 덴마크(1.2%), 에스토니아(0.6%) 역시 적자에서 흑자로 이동하였다.

2013년 평균 적자는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2009년의 8.4%보다 4.2p.p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7년 평균 적자 1.5%와 비교하면 현재 상태는 여전히 위기 이전과 차이가 있다. 게다가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슬로베니아(8.4 p.p.), 스웨덴 및 스위스(둘 다 0.7 p.p.), 이들 3개국의 재정수지는 악화되었다.

평균적으로, 2013년 OECD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 대비 1.3%였다. 그러나 국가별로 이 수치는 상당히 다양하다. 노르웨이(12%), 한국(3.1%), 아이슬란드(3.0%), 독일(2.2%), 헝가리(2.1%)는 높은 흑자를 보였다. 반대로, 슬로베니아(12%), 그리스(8.3%), 일본(6.4%)의 경우 기초수지적자가 5% 이상이었다.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절반 정도의 OECD 국가들에서 기초수지적자가 일어났고, 이는 정부지출을 위해 국채발행에 의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스(0.4%)와 에스토니아(0.7%) 두 국가들은 2013년 기초수지적자에서 2014년 흑자로 돌아섰다. 연속적인 기초수지적자는 중기적 관점에서 공공재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공적 부채가 큰 국가들에게 기초수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부채수준을 안정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충분조건은 못된다. 하지만, 국가채무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자지불은 적자의 결과이며, 공적부채 규모와 관련된다. 2013년 OECD 평균 이자지불액은 국내총생산의 2.9%에 달했다. 그러나 그 범위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약 5%에서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의 0.5% 이하까지 다양하다. 이자지불 수준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보를 구할 수 있는 OECD 국가들의 경우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눈에 띄는 점은 슬로베니아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1 p.p.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자지불이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압박을 받게 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자료는 OECD 국가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가 회계를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 최신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정부의 순대출(+) 또는 순차입(-)이라 일컫는 재정수지는,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서 계산된다. 수입은 조세,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보조금과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지출은 중간소비, 인건비, 보조금, 재산소득(이자지불 포함), 사회보장지출, 기타 경상지출(주로 경상이전), 그리고 기타 자본지출(자본이전과 투자)로 구성된다. 기초수지는 일반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을 제외한 재정 수지이다.

국내 총생산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표준화된 측정치이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a),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OECD (2014b),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4-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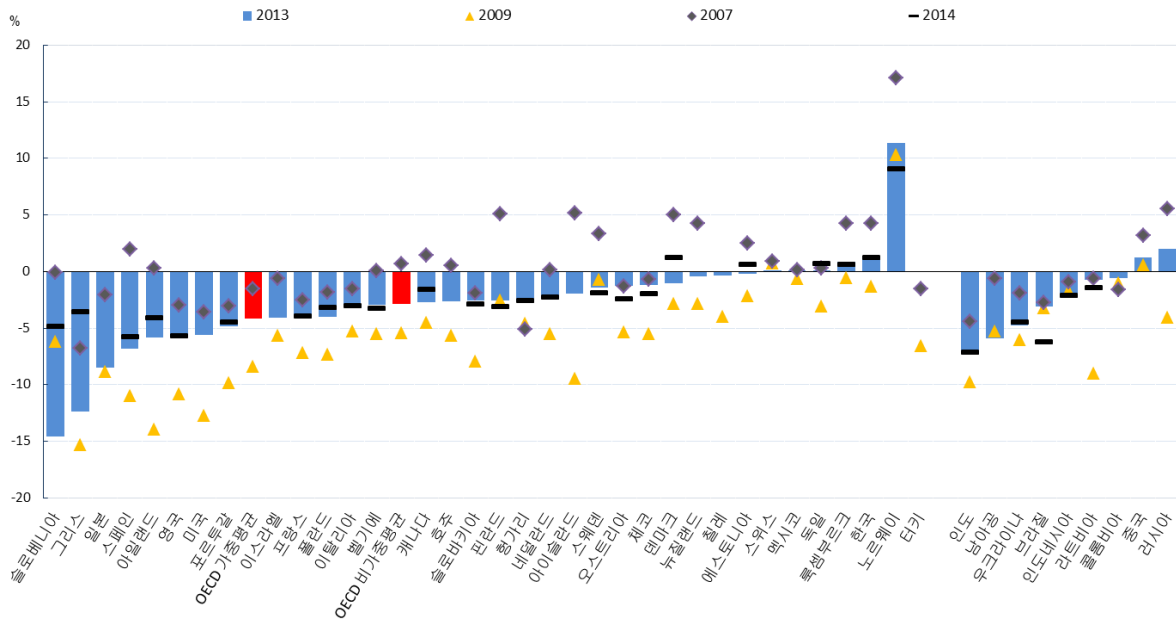
콜롬비아와 러시아의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2.1: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2.2: 칠레와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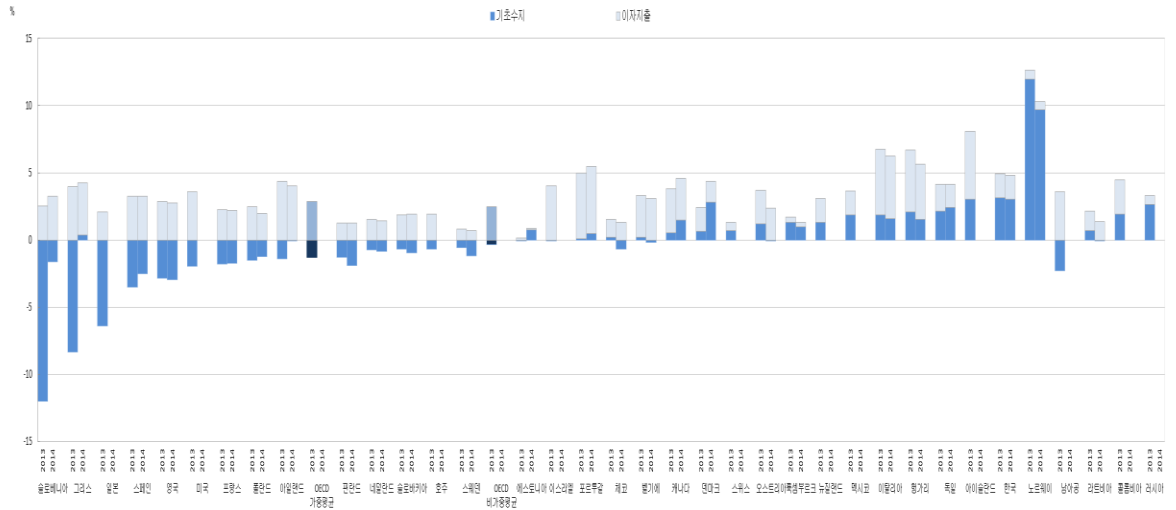
2.1.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2007년, 2009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기타 주요 경제국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058>

2.2. GDP 대비 일반정부 기초수지와 이자 지출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065>

일반정부 순저축

일반정부 순저축은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를 말한다. 즉, 자본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로, 투자지출 또는 자본이전(예를 들면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이전지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일반적으로 정부 순저축은 보통 “황금률(Golden Rule)”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즉, 경기순환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정부 경상수입이 경상지출을 커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재정적자(negative savings, 부의 저축)는 지속 불가능한 정부재정 상태를 의미한다.

2013년 OECD 회원국들의 순저축 평균은 국내총생산의 -3.3%이다. 그러나 일본의 -7.2%부터 노르웨이의 12.6%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순저축은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가 극심했던 2009년 평균 -6.3%에 비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2007년 평균과 격차가 있다. 2009년에서 2014년 사이 자료입수가 가능한 OECD 회원국들 중 순저축이 악화된 국가들은 노르웨이(1.4 p.p.), 한국(0.9 p.p.), 스웨덴(0.8 p.p.), 핀란드(0.7 p.p.)이다. 그러나 한국과 노르웨이의 경우 국내총생산 대비 각각 4.0%와 10.6%로 수지흑자를 보였다.

순대출/순차입과 순저축의 차이는 자본지출의 규모와 동일하다. 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멕시코에서처럼 대규모 투자프로그램 때문이거나 슬로베니아와 그리스에서와 같은 자본이전 유출의 경우이다. 6개 OECD 국가들, 즉 한국, 룩셈부르크, 독일, 멕시코, 노르웨이, 스위스는 2013년 자본지출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이루었다. 사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2014년에 이들 국가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덴마크와 에스토니아도 같은 상황이었다.

2013년 OECD 평균 적자(순대출/순차입)는 순저축보다 0.9 p.p. 높았다. 순대출/순차입과 순저축의 차이에 있어 가장 큰 마이너스를 보인 국가들은 슬로베니아(11.5 p.p.)와 그리스(8.5 p.p.)였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격차가 큰 주요 이유는 순자본이전(net capital transfers)(국내총생산의 10%)이다. 2013년 후반 슬로베니아 정부는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과 국채 투입을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실천했다. 그리스의 경우도 비슷한 유형을 보였는데, 부분적으로는, 그리스 금융안정펀드(Hellenic Financial Stability Fund)의 자본화와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설립되어 그리스 은행시스템 유지에 기여했다. 2014년 이 두 국가의 상황이 크게 변화된 것은 대부분 2013년에 이루어진 조정으로 인한 것이다. 순대출/순차입과 순저축의 차이가 슬로베니아의 경우 -2.4 p.p., 그리스의 경우 +0.9 p.p.가 되었고, 그리스의 경우 2014년 국내총생산 대비 1.2%에 달하는 순자본이전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향상되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가 회계를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정부 순저축은 경상수입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것이다. 총저축의 경우, 경상지출에서 감가상각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다. 총저축에 순자본이전(net capital transfers) (즉: 마이너스로 지불된 자본이전)을 더하고 정부출자를 빼면(즉: 총자본형성과 인수에서 비생산 비금융 자산을 제외) 순대출/순차입의 재정수지와 같아진다. (정부재정수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이 지표에 관한 "방법론 및 정의" 부분 참조). 이 점에 있어서, 순대출/순차입은 자본지출 이후의 재정적 상황을 반영한다. 순대출 또는 정부흑자는 정부가 다른 부문에 재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이지만, 순차입 또는 정부적자는 정부가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지출의 일부를 위하여 다른 부문으로부터 재원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순대출/순차입과 비교하면, 순저축은 임시적인 대규모 자본이전으로 인한 한 번의 왜곡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긴축프로그램을 시행하거나 적자가 증가할 때 정부출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피할 수 있게 한다. 그림 2.5 "국내총생산 대비 순자본이전"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090>.

더 읽어볼 것

OECD (2014a),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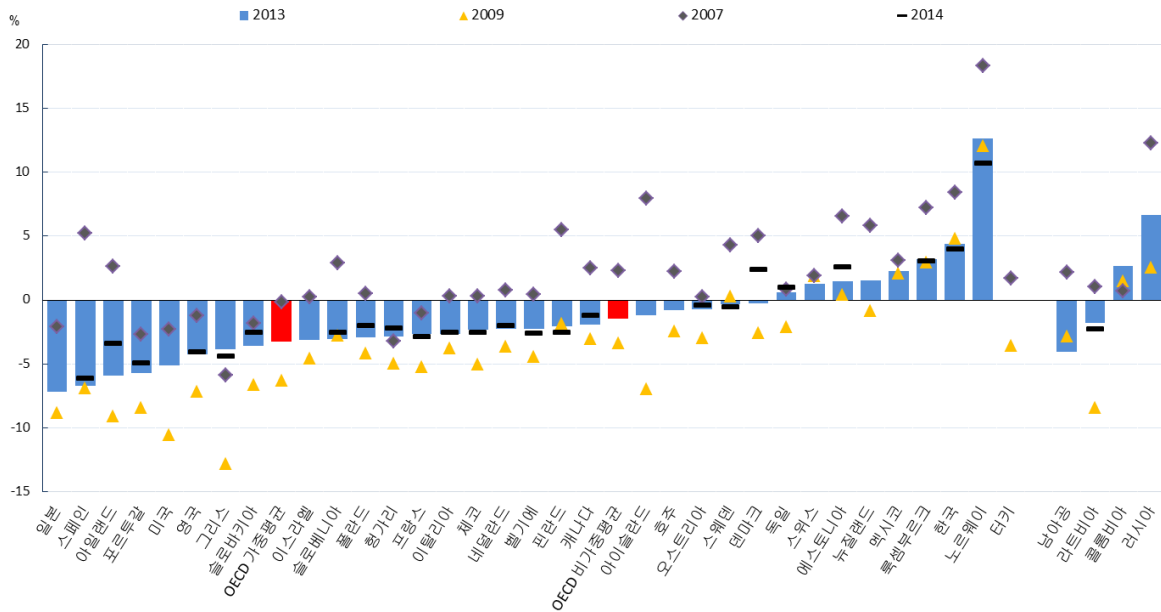
2.3과 2.4: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콜롬비아와 러시아의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2.3: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2.4: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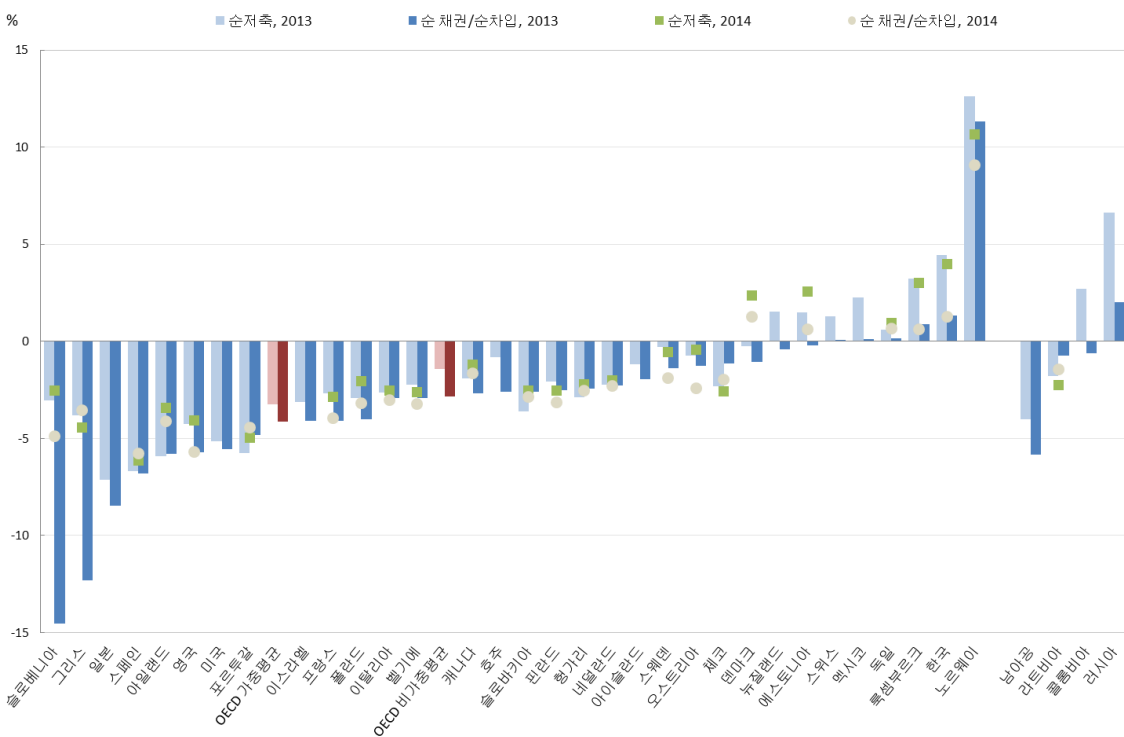
2.3. GDP 대비 일반정부 순저축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077>

2.4. 일반정부 순저축 대 순채권/채무의 GDP 대비 백분율(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082>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구조적 또는 근본적 재정수지는 경기순환과 일회성 사건의 영향을 통제된 후의 정부수입과 지출의 차이이다. 이 지표는 일정 기간에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확장적인지, 중립적인지, 제한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경향을 정확히 포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정부수입과 지출은 경제적 상황에 크게 민감하다. 예를 들어, 경기침체기 동안에는 순환적으로 인해 수입은 감소하고, 동시에 높은 실업률로 인해 실업수당 지출이 높아져 공공지출이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에 발생하는 변동 제거를 통해서 공공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는 재정정책의 기본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2013년 구조적 재정수지는 OECD 국가들의 잠재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3.5% 적자였고, 2014년에는 이 수치가 3.1%로 감소하였다. 사용 가능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일본(-7.2%), 영국(-5.8%), 미국(-4.2%)은 가장 높은 순환적 조정적자(cyclically adjusted deficits)를 보였다. 반대로 5개의 OECD 국가들, 룩셈부르크(2.1%), 에스토니아(1.9%), 뉴질랜드(1.5%), 그리스(1.3%), 덴마크(1.1%)는 잠재국내총생산의 1% 이상의 구조적 흑자를 냈다. 그리스의 경우 수년 간 지속된 구조적 적자에서 2013년에 구조적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그리스는 6년 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재정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앞으로 구조적 개혁을 지속하고 부채 수준을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성장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OECD 2014).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구조적 적자는 0.2 p.p. 증가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수지는 이 시기 동안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평균 적자는 0.4 p.p. 감소하였고, 2009년 경제위기의 결과로 잠재국내총생산의 7.1%에 달했던 적자에 비하면 크게 회복된 것이기는 하지만, 2007에서 2013년 사이에는 0.6 p.p.가 증가하였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구조적 재정상황은 아이슬란드(11.5 p.p.), 스페인(9.7 p.p.), 미국(5.6 p.p.), 뉴질랜드(5.4 p.p.), 호주(5.2 p.p.), 아일랜드(5.1 p.p.), 그리고 그리스(5.0 p.p.)에서 가장 악화되었다.

근본적인 재정수지와 순대출/순차입(재정수지)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는 2013년 잠재국내총생산 대비 3.5%의 근본수지 흑자를 보고했다. 반면,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 대비 12.3% 적자였다. 이 두 지표의 차이는 경기순환적 요인(cyclical components)과 은행부문에 쓴 규제금융자금 같은 단발성 요소로 인한 것이다(일반정부 재정수지와 일반정부 순저축에 관한 지표 참조).

OECD 국가들에 대한 잠재국내총생산 대비 구조적 수지는 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평균 2.7%와 2.3%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성장이 강화되고 재정건전화 지속됨에 따라, 회복을 방해하는 일시적 순환장애가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 구조적으로 조정된 적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OECD, 2014).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Economic Outlook*, No. 97 (database)에서 발췌되었다.

구조적 재정수지 또는 기초수지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보고된 재정수지로 산출격차(output gap)에 의해 측정된 경기순환 상태와 단발성 재정활동의 두 가지 요소로 조정되었다. 산출 격차는 실질국내총생산과 잠재국내총생산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다. 잠재국내총생산은 국내총생산의 추정치로 경제가 완전히 가동될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잠재 국내총생산은 직접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추정치는 오차범위가 클 수 있다. 단발성 요인은 순자본 이전 경향에서 편차뿐 아니라 예외적이고 불규칙한 재정거래도 포함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5), *OECD Economic Outlook*. Vol. 2015/1 (Preliminary vers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eco_outlook-v2015-1-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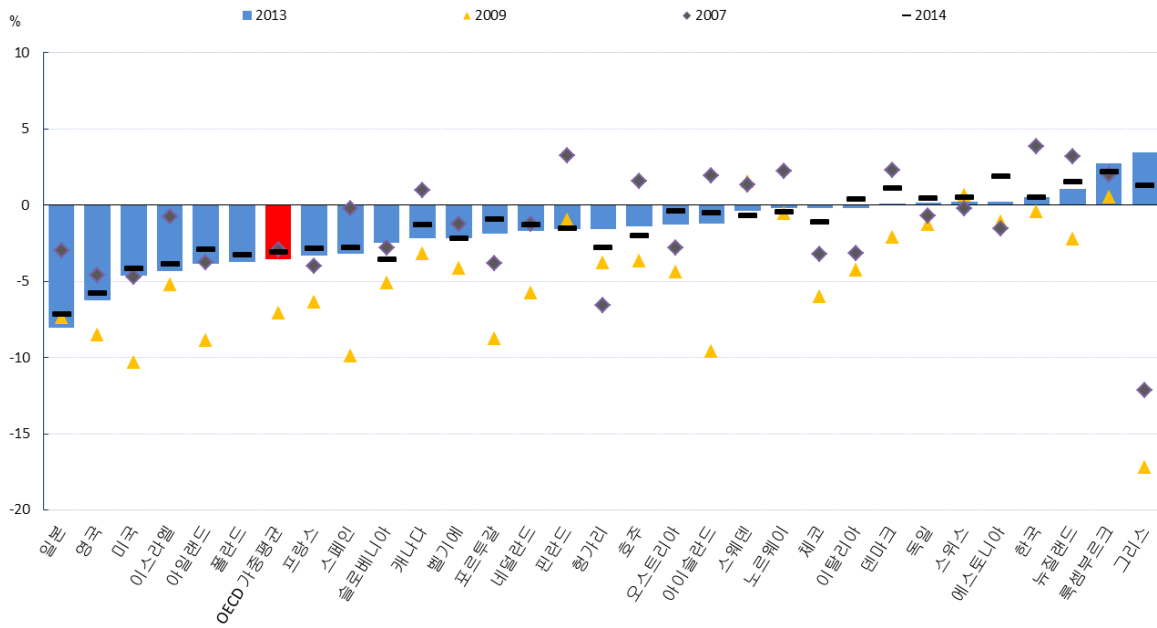
Data for Chile, Mexico, the Slovak Republic and Turkey are not available. OECD unweighted average is not presented.

칠레, 멕시코, 슬로바키아,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OECD 비가중평균은 제시되지 않았다.

Information on data for Israel: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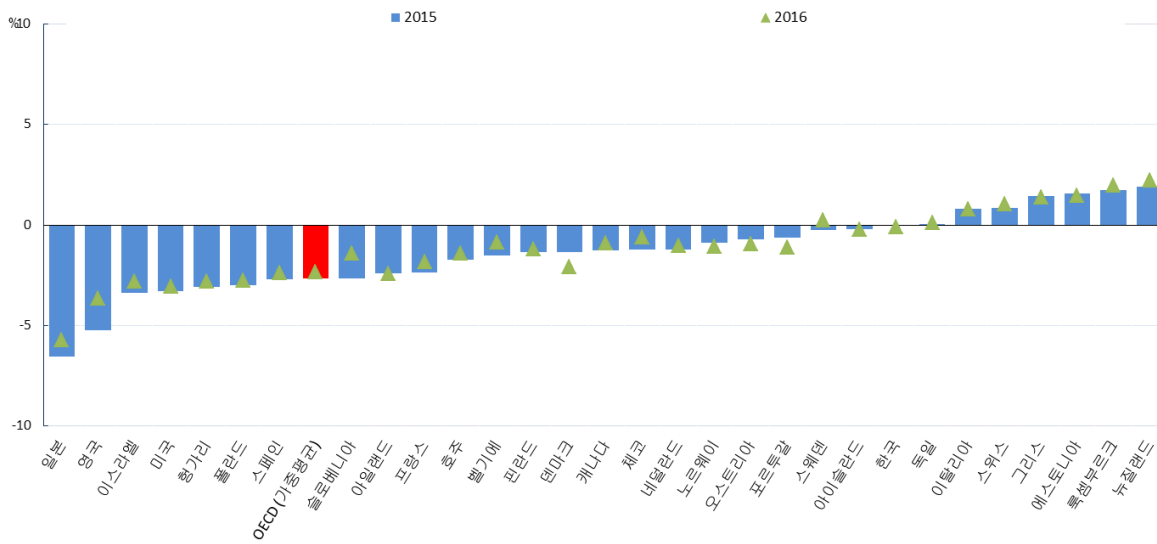
2.6. 잠재 GDP 대비 일반정부의 구조적 수지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97 (Preliminary version), May 2015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09>

2.7. GDP 대비 일반정부의 구조적 수지 추계 (2015년, 2016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97 (Preliminary version), May 2015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16>

일반정부 총채무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발생할 경우 채무가 누적된다. 금융위기의 결과로, 많은 OECD 국가들이 부양책과 금융기관 지원을 위한 개입을 통해서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따라서 공채(public debt)를 발행하게 되었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세금징수 역시 감소되어 공공재정에 압력을 더하고 있다. 2013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채무수준은 국내총생산의 109.3%에 달하였다. 2007년과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채무는 34.7 p.p. 증가하였다.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를 제외하고 일반정부 채무가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들은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이다. 이 국가들은 금융위기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EU 구제금융프로그램 대상국들이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체코,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에서는 채무가 감소하였다. 반면, 슬로베니아,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에는 가장 높은 채무 증가율을 보였다. 2007년과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일인당 실질적 정부채무의 연간 평균증가율은 6.7%로 2013년 평균은 42,863 USD(PPP, 구매력기준)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일인당 채무는 86,682 USD PPP인 일본부터 3,491 USD PPP인 에스토니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일본 국가채무의 대부분은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발행에 기여하고 있다.

공채수단은 여러 종류가 있다. 가장 흔한 것은 금융기관이나 채무증서에 의해 허용되는 대여금으로 정부로부터 발행된 채권이다. OECD 국가들의 채무증서는 2013년 평균 전체 채무의 77%에 해당한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약90%이고, 에스토니아는 11%로 그 범위는 다양하다. 반면, 대부분의 채무가 대여금인 국가들은 그리스(74.6%)와 에스토니아(63.5%)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시스템과 유로스타트 정부금융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채무(debt)는 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며, 포함되거나 제외된 금융수단의 종류에 따라 식별되는 부채(liabilities)의 하위집합으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채무는 미래의 주어진 시점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자 및 원금지불을 해야 하는 모든 부채로 정의된다. 모든 채무수단은 부채이지만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같은 일부 부채는 채무가 아니다.

채무는 일반정부의 금융대차대조표에 사용/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부채범주를 합산해서 얻는다. 통화 및 예금, 채무증서, 대출, 보험, 연금과 표준화된 보증, 기타 외상매입금, 특별한 출권(special drawing rights)이 있다. 마지막 두 경우는 그림 2.10에서 기타 부채에 포함되었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채무수단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채무증서에 한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부채 처리는 국가들마다 다양하여 국제비교가 어렵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적립형 공무원연금제도만이 부채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2008년 국민계정체계는 적립형이든 비적립형이든, 종업원연금제도 부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연금에 대해 각 국가들은 비적립부채를 기록하는데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유럽형 버전인 ESA 2010 역시 이를 따르고 있다(적립형인지와 관계없이 연금부채와 관련 재정흐름을 나타내는 새로운 보조표가 추가될 것이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 같은 일부 OECD 국가들(IMF *Economic Outlook*로부터 자료를 얻은 다른 국가들을 포함하여)은 적립형 또는 비적립형이든 관계없이 고용관련 연금부채를 정부 채무데이터에 기록한다. 이러한 국가들(OECD 비회원국은 제외)은 조정된 정부채무비율을 비적립형 연금부채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여기서 정부채무는 정부 자산 가치에 의해 조정되지 않은 총량기준이다.

국민계정체계가 사용하는 채무의 정의는 유럽연합의 재정상황 평가에 사용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근거한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일인당 정부채무 계산에 대한 정보는 정부수입지표 부분의 “방법론 및 개념정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2.11 “일인당 실질정부부채 연평균 증가율, 2007-13, 2009-13 및 2009-14”, 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150>.

그림 설명

뉴질랜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한국, 스위스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2.8: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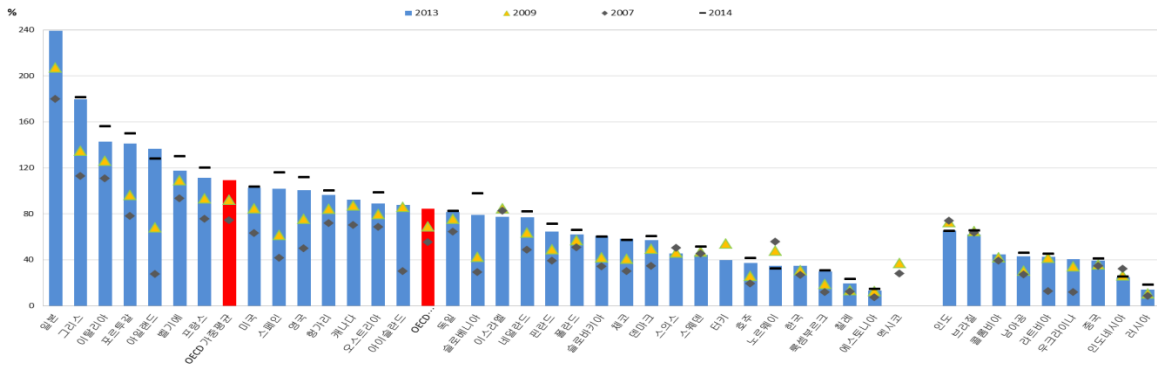
2.8, 2.9: 멕시코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2.10: 멕시코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의 자료는 비적립 연금부채를 위해 조정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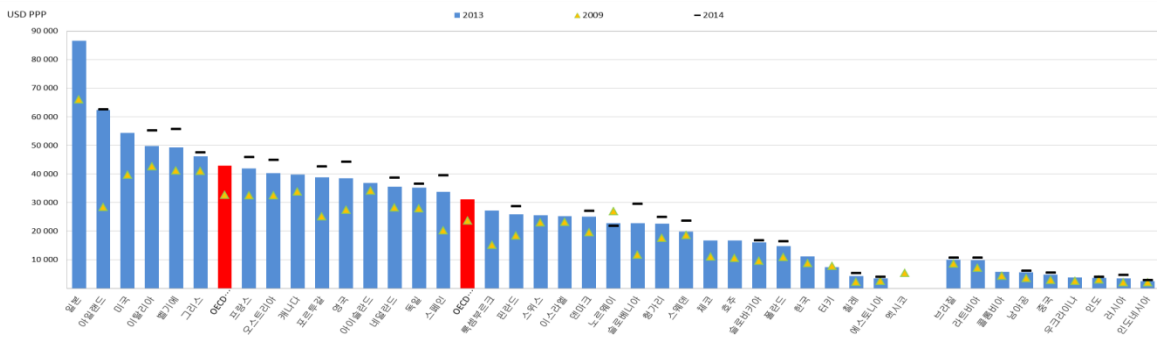
2.8.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다른 주요 국가들 및 러시아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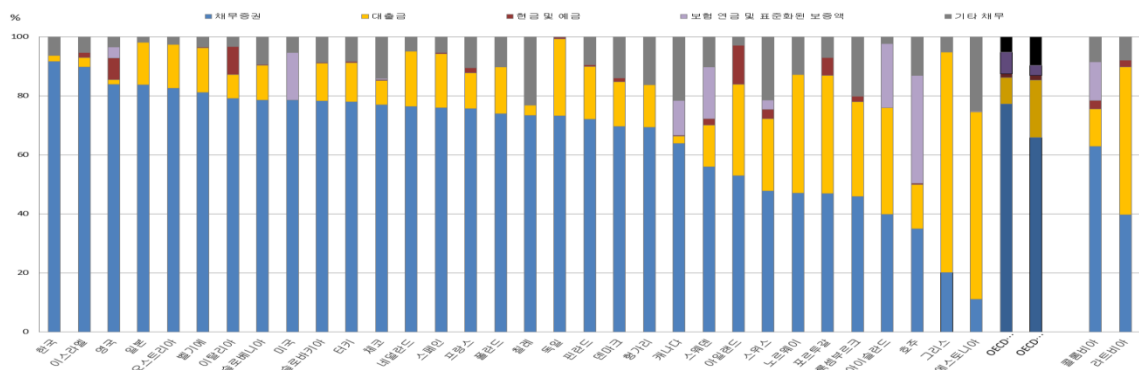
2.9. 1인당 일반정부 채무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다른 주요 국가들 및 러시아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34>

2.10. 금융수단별 정부채무 구조 (2013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45>

일반정부의 순자산

정부의 금융자산과 부채 간의 차이(순자산 또는 넓은 의미로는 정부순부채)를 분석하면 정부의 재정적 의무지출 감당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 자산은 추가자금과 정부가 사용 가능한 소득을 반영하고, 부채는 정부에 의해 축적되는 채무를 반영한다. 따라서 정부 순자산의 증가는 재정건전성의 강화를 의미한다. 반대로 정부 채무의 축적으로 순자산이 악화될 수 있다.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정부는 증자에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2013년 OECD 국가들은 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65.3%의 마이너스 순자산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마이너스 수준(2007년의 38.1%)의 두 배에 가까운데, 이는 경제위기가 정부의 적자와 채무에 끼친 영향을 반영한다.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는 국내총생산보다 큰 마이너스 순자산을 기록하였다. OECD 회원국들 중 8개국만이 플러스 순자산을 나타냈다. 플러스 순자산을 기록한 국가들 중 노르웨이는 국내총생산의 2배에 달하는 가장 높은 순자산을 나타냈다. 2014년 포르투갈과 벨기에 같은 국가들 역시 국내총생산을 넘어서는 마이너스 순자산을 기록했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가장 많은 순자산 감소를 보인 국가들은 아일랜드(84.4 p.p.), 스페인(51.5 p.p.), 아이슬란드(47.8 p.p.)인데,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은행을 살리기 위해 개입한 결과 나타난 재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포르투갈과 미국 같은 다른 OECD 국가들도 동일한 시기에 순자산 하락을 보였다. 이는 자산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경기부양패키지로 인한 부채 증가 때문이었다. OECD 국가들 중 에스토니아(3.8 p.p.), 노르웨이(66.9 p.p.), 스웨덴(8.7 p.p.), 스위스(1.4 p.p.), 4개 국가만이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도 이 경향이 유지되었다.

평균적으로 순자산은 2013년 일인당 -25,504 USD PPP를 나타냈다(2009년보다 약 7,000 USD 낮다). 일본은 -44,610 USD, 미국은 -41,734 USD이고, 노르웨이는 134,075 USD로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추가적으로, 모든 OECD 회원국들 중 4분의 1 미만의 국가들(에스토니아, 그리스, 한국, 스웨덴, 터키, 노르웨이)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일인당 정부 순자산 증가를 보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가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가 회계를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 최신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일반정부의 순자산은 금융자산에서 미상환부채 총가치를 뺀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기관부문의 금융대차대조표에 사용/적용 가능한 금융자산과 채무를 화폐용 금, 특별인출권(SDRs), 통화와 예금, 채무증서, 대출금, 자기자본 및 투자 기금주식, 보험, 연금, 표준화된 보증계획 (standardized guarantee schemes), 파생금융상품과 스톡옵션, 그리고 기타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으로 정의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주식과 부채는 시장가격으로 평가되었다(그러나 채무증서의 경우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칠레, 일본,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자료는 연결금융자산과 부채에 기초한 것이다.

이 지표는 정부 순부채 측정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총부채의 정의와 유사하게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금융자산을 뺀 것으로 제한될 수 있다(이 개념은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및 이용에 관한 지침에 정의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의 비적립부채를 (부채로) 기록하게 되면 일반정부 순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제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그리고 미국 같은 일부 OECD 국가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정부 총부채와 유사한 조정된 순자산이 계산되었다.

일인당 순자산 계산을 위한 정보는 정부수입지표 부분의 "방법론 및 개념정의"를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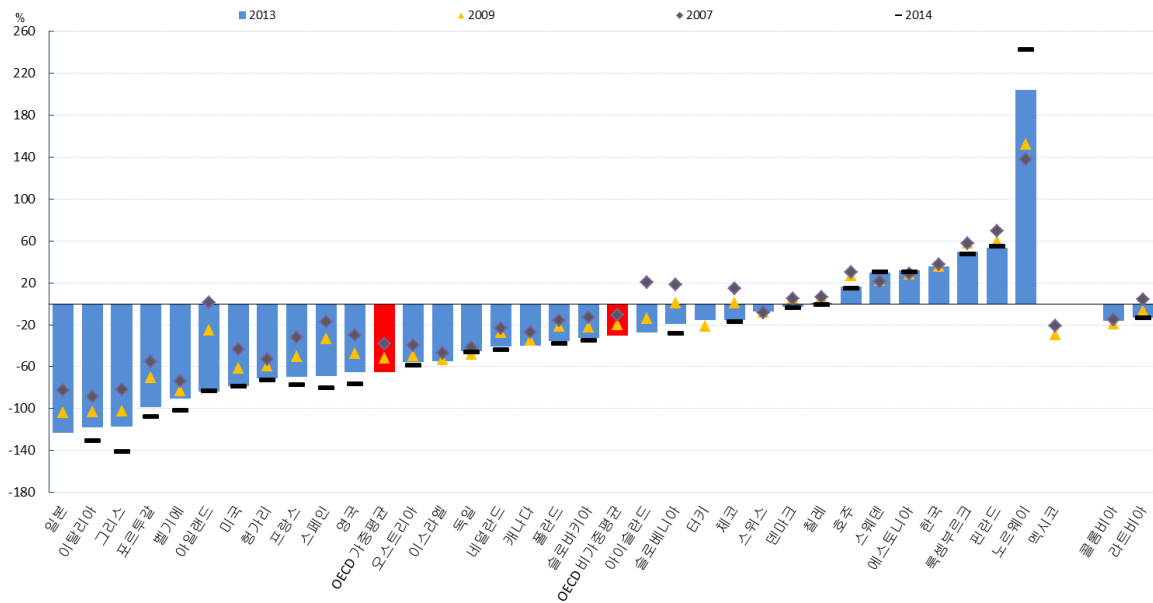
그림 설명

뉴질랜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스위스의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칠레,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료는 개별재무보고에 기초한 것이다.

2.12: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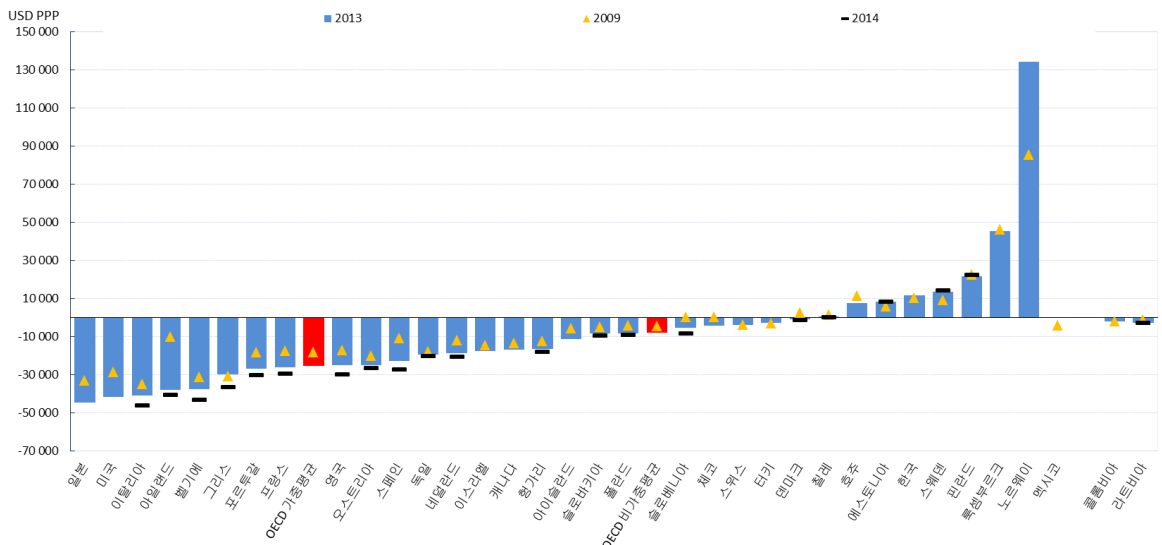
2.12. GDP 대비 일반정부의 재무적 순가치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63>

2.13. 1인당 일반정부의 재무적 순가치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72>

정부수준별 재정수지와 채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특정 정부의 재정수지는 지출과 수입이 맞아 떨어질 때 균형을 이룬다.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상황(플러스 재정수지)을 흑자라고 부른다. 반면, 마이너스 재정수지는 적자라고 한다. 정치적·행정적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재정수지는 모든 정부 수준에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하위정부의 재정자치권(fiscal sovereignty)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연방국가에서 주정부는 채무계약과 세금부과에 대한 높은 자율성을 가진다. 일반정부 채무(모든 정부 수준에 걸쳐)는 다수의 하위정부에 의한 작은 채무변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빌린 빚으로 인해 발생한 하위정부의 부채는 하위정부의 채무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위정부는 엄격한 재정준칙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위정부의 채무 발생능력은 종종 제한적이다.

2013년 중앙정부는 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3.5%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겪었다. 이는 일반정부의 평균 적자(4.2%)보다 0.7p.p. 낮은 것이다. 그리스와 슬로베니아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가장 큰 적자를 보인 OECD 국가들이다(국내총생산의 약 15%). 반면, 노르웨이, 칠레, 뉴질랜드는 흑자를 나타냈다(각각 국내총생산의 12%, 2%, 0.02%). 2014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캐나다 같은 국가들도 역시 흑자를 경험하였다. 스페인,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연방국가들(또는 준연방국가)에서 2013년 4분의 1 이상의 일반정부 재정수지가 주정부에 의해 주도된 것이었다.

평균적으로 2013년 하위정부 채무는 국내총생산의 20.7%를 차지한다. 캐나다(55.9%), 일본(37.3%), 독일(29.8%), 스페인(29.3%), 스위스(22.3%), 미국(22.2%), 6개의 OECD 회원국들은 OECD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였다. 추가로, 2013년과 2014년 하위정부 수준의 채무수준은 평균적으로 연방국가에서 더 높았고 때로 주정부 채무는 연방정부 채무보다 더 높았다(예: 캐나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정부 수준에 따른 채무구조는 전체 채무 대비 하위정부 채무가 평균 6.2 p.p.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미국(13.7 p.p.), 에스토니아(11.8 p.p.), 아이슬란드(10.9 p.p.), 덴마크(8.9 p.p.), 영국(8.3 p.p.) 그리고 아일랜드(7.1 p.p.)의 하위정부 채무비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채무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위정부 채무가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 채무 증가에 비해 하위정부 수준의 채무가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와 유로스타트 정부금융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

용은 부록 A 참조).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에 따르면,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주 정부는 연방제도를 가진 9개 OECD 국가에만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그리고 미국이다.

재정수지는, 일반정부의 순대출(+) 또는 순차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빼서 계산된다. 채무에 관한 추가적 정보는 정부 총채무 지표 부분의 "방법론 및 개념정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Vammalle, C. and C. Hulbert (2013), "Sub-national Finances and Fiscal Consolidation: Walking on Thin Ice", *OECD Regional Development Working Papers*, 2013/02, OECD, <http://dx.doi.org/10.1787/5k49m8cqkcf3-en>.

그림 설명

호주와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 지방정부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일본 일반정부의 62위 정부자료는 회계연도를 참고.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이 중앙정부에 포함된다.

2.15, 2.16: 칠레와 뉴질랜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한국과 스위스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일본, 한국, 스위스, 미국은 비연결 자료를 기초로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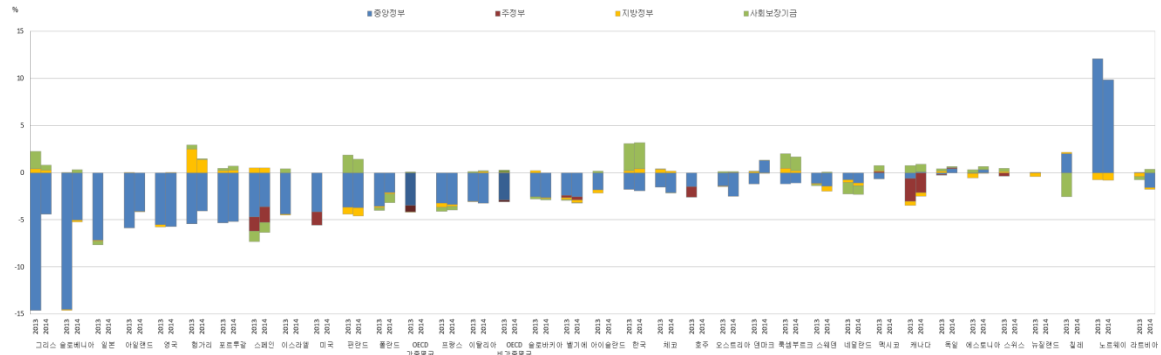
2.14: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칠레의 자료는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콜롬비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아일랜드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이 중앙정부에 포함된다.

2.15: 멕시코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16: 일반정부의 하위단위까지 연결되어 산출된 데이터이다. 그러나, 일반정부 수준에서 정부 수준 간의 흐름이 포함되었다. 멕시코와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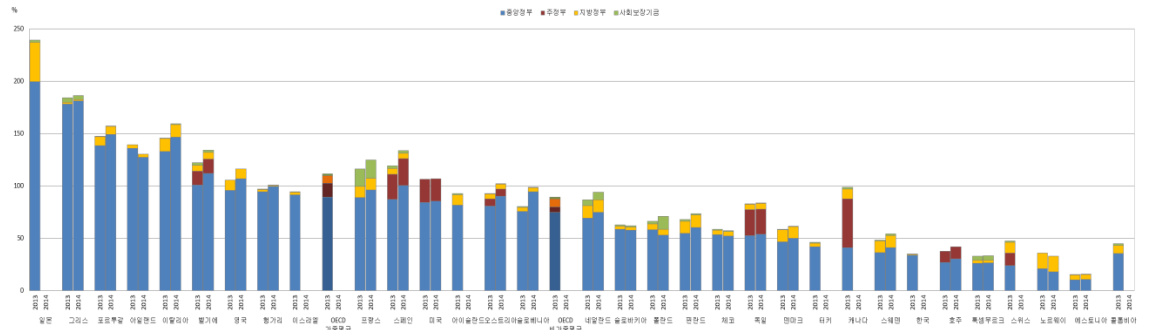
2.14. GDP 대비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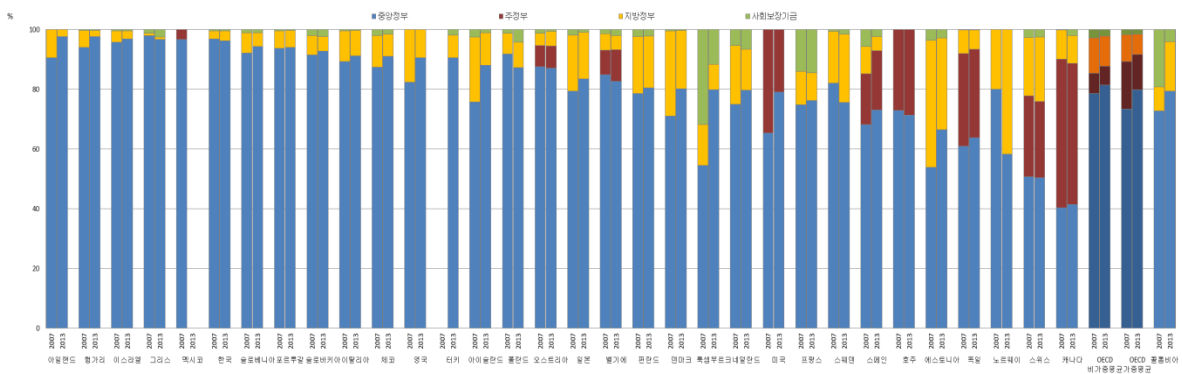
2.15. GDP 대비 총 정부채무의 정부 수준별 분포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190>

2.16. 총 정부채무의 정부 수준별 분포 (2007년, 2013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01>

일반정부 수입

정부가 거둔 수입은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재분배하는 역할을 위해 사용된다.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세금과 사회적 기여금이다. 정부수입의 규모는 경기순환과 연관된 경제 변동과 관계가 있다. 또한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의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연금을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 민간업자가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얼마를 징수할 지, 어떤 수단(예: 세금 또는 사회적 기여금)을 사용할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특정 기간에 추가적인 수입이 요구될 때 채무를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은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013년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 수입은 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37.7%를 나타냈는데, 이는 위기 이전의 수치와 유사하다(2007년 37.5%). 그러나 2007년과 2009년 사이 평균 수입은 국내총생산의 36.0%로 1.4p.p. 하락하였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세계금융 및 경제위기 시기의 경제성장 부진에 의한 것이다. 2013년 국가별 수입 규모는 매우 다양하다. 한편,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의 일반정부 수입은 국내총생산의 50% 이상이었다. 호주, 일본, 스위스, 영국,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3분의 1 정도였고, 멕시코는 4분의 1 이하였다. 최근의 일부 사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2013에서 2014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정부수입이 상당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 덴마크는 가장 높은 수입 증가를 보였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복구되고, 내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었다(OECD 2014a).

정부수입 규모를 비교하는 다른 방법은 국민 일인당 징수된 정부 수입을 비교하는 것이다. 2013년 OECD 국가들은 일인당 평균 16,851 USD PPP를 징수하였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노르웨이였다(각각 40,295 USD PPP, 36,431 USD PPP). 룩셈부르크의 경우, 거주민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경을 넘어와 일하는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노르웨이의 경우, 징수 비율은 석유수입에 기인하기도 한다. 반면, 대체로 약한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는 동유럽의 일인당 정부수입은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회원국들의 실질 일인당 정부수입은 평균적으로 연간 0.13% 상승하였다. 그렇지만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정보가 사용 가능한 OECD 회원국들의 실질 일인당 정부수입은 연간 2.4%로 상승폭이 커졌다. 그 이후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예: 2009-2014년). 반면, 2009년에서 2014년 사이를 보면 증가세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OECD에 가입 진행 중인 국가들과 그 외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의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일인당 정부수입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이 수치들은 세계 금융 및 경제위기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OECD 국가의 징세능력에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OECD 외 국가들의 경향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수입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 (NA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었다. 수입은 사회적 기여금을 제외한 조세, 보조금과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국내총생산(GDP)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 의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표준화된 측정치이다.

일인당 정부 수입은 총 수입을 OECD/Eurostat 구매력 평가를 활용해 2011년 USD 가치로 전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IMF 경제전망'을 자료원천으로 삼는 국가들의 경우 내재 구매력 전환 비율이 적용되었다. PPP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가A의 화폐 1 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국가B의 화폐단위를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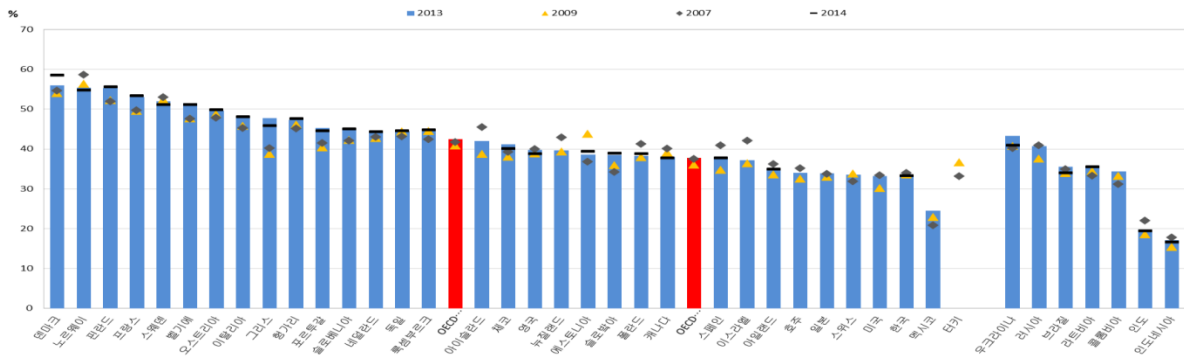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콜롬비아와 러시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했다.

2.17, 2.18: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2.19: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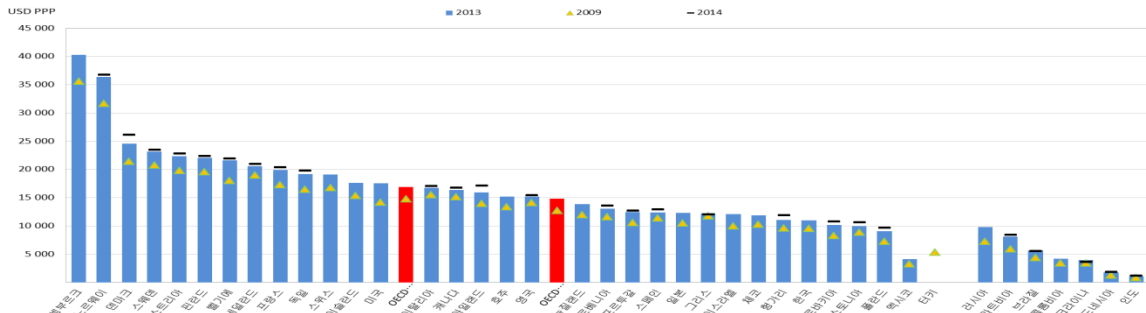
2.17. GDP 대비 일반정부 세입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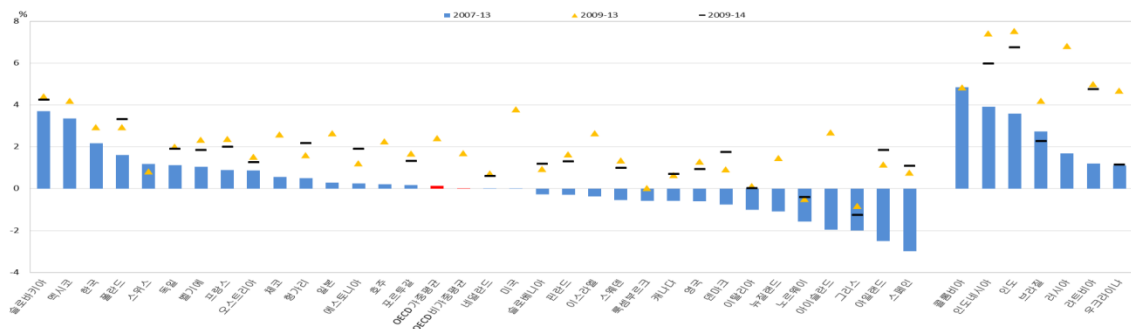
2.18. 1인당 일반정부 세입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21>

2.19. 1인당 정부세입의 연평균 증가율 (2007-13년, 2009년-13년, 2009-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37>

일반정부 수입 구조

2013년 OECD 국가들의 정부 수입에서 가장 큰 비율(평균 58.5%)을 차지한 것은 세금이었다. 약 4분의 1이 순 사회적 기여금(사회보험료)을 통해 징수되었고, 나머지는 보조금과 다른 수입이었다. OECD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지출에 재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와 호주는 상대적으로 세금에 더 의존한다(총수입의 80% 이상). 반면,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순 사회적 기여금(37% 이상)에 더 의존하였다. 그리고, 멕시코와 노르웨이는 보조금과 기타 수입이 총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두 국가의 경우 거의 석유자원에 의한 수입과 관련이 있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정부수입 구조는 평균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세금 비중이 2.1 p.p. 감소하였지만 순 사회적 기여금(1.2 p.p.)과 보조금(0.9 p.p.)의 증가로 균형이 유지되었다. 조세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슬로바키아(7.3 p.p.)와 슬로베니아(6.7 p.p.)였다. 순 사회적 기여금은 일본(5.7 p.p.)과 한국(4.5 p.p.)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수입 이외의 보조금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헝가리(6.6 p.p.)와 슬로바키아(6.2 p.p.)이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자료가 있는 OECD 국가들에서 수입 구조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그리스이다. 그리스의 세금과 순 사회적 기여금은 각각 3.5 p.p., 1.4 p.p.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4.8 p.p. 감소하였다.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실제로 OECD 정부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에서 세제수입 측정에 이 방식을 사용한다("방법론 및 개념정의" 참조). 2012년 평균적(비가중)으로 OECD 국가들에서 세제수입의 3분의 1(사회적 기여금을 포함해서)은 소득과 이윤에 대한 세금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세제수입의 다른 3분의 1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4분의 1 이상은 사회보장기여금으로부터,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형태의 세금으로부터 발생하였다.

2007년과 2012년 사이 세제수입구조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OECD 회원국 전반에 걸쳐 변화가 있었다면 이는 소득세 및 수익세가 평균 2.3 p.p.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의 세제수입의 가장 큰 부분(55% 이상)은 소득세와 수익세였다. 반면, 헝가리에서 세금의 43.7%는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되었다(2007년 이래 6 p.p. 증가함). 영국,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세가 높았다(10% 이상).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수입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정부수입은 조세(예: 소비, 소득, 부,

재산, 자본에 대한 세금), 순 사회적 기여금(예: 연금, 건강, 사회보장기여금, “순”은 사회보험 서비스 이용료를 제외한 것을 의미), 보조금(예: 외국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그리고 기타 수입(예: 매각, 수수료, 자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합계는 하위항목들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다(부록 A 참조). 그림 2.21에 제시된 자료는 OECD 정부수입통계로부터 나온 것이다. OECD 정부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와 국민계정체계(SNA)에 사용된 조세소득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조세는 정부가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순 사회적 기여금은 사회적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에 지불하는 실질적인 지불 또는 귀속 지불을 의미한다. 이런 보험료는 강제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는 적립형일 수도 있고 비적립형일 수도 있다. OECD 정부수입통계는 의무가입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조세로 취급한다. 반면에 국민계정체계는 이를 순 사회적 기여금으로 본다. 왜냐하면 급여가 항상 보험료 납부액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 급여는 보험료에 상응하여 책정되기 때문이다. 그림 2.22 “정부 수입 구조의 변화, 2009-2013(또는 2014)”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264>.

더 읽어볼 것

OECD (2014), *Revenue Statistics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v_stats-2014-en-f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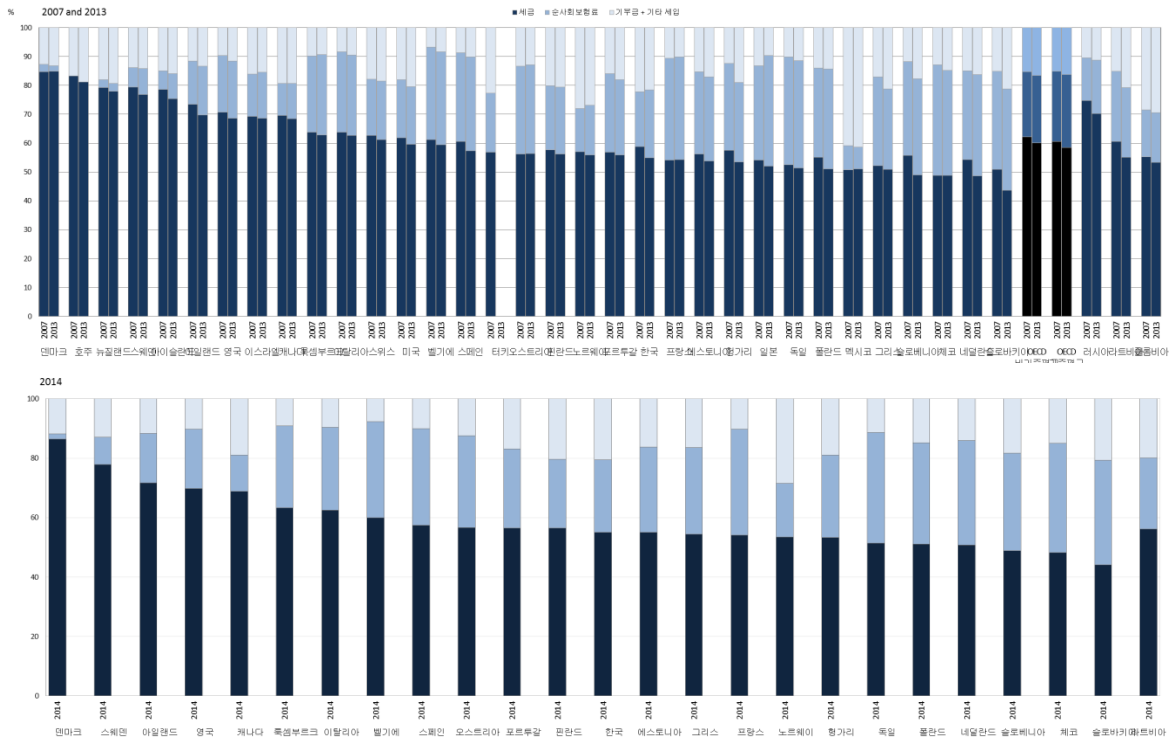
그림 설명

2.20: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014년 비유럽 OECD 국가들(캐나다와 한국 제외)과 아이슬란드, 터키, 스위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콜롬비아와 러시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호주는 사회적 기여금을 통해 정부수입을 징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2.21: OECD 회원국 중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경우 총 조세는 유럽연합을 위해 부과된 관세를 포함하고 있다. 모든 OECD 국가들의 사용 가능한 자료는 2012년이 마지막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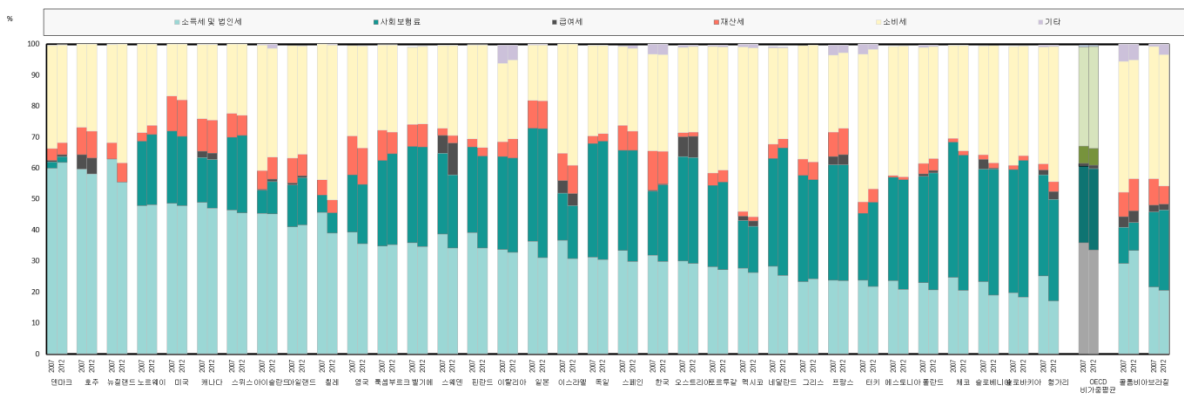
2.20. 일반정부의 세입 구조 (2007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44>

2.21. 총세입 대비 세목별 수입 구조 (백분율 분포, 2007년, 2012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14)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53>

정부 수준별 수입구조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는 수입구조가 다른데, 이는 조세징수 및 사회적 기여금 징수 능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하위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재정적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정부수준별 수입이전 규모는 재정적 상호의존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위정부수입은 자체세금과 공유세금을 포함하는데, 공유세금은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이 없다. 지방세 기반, 세율, 감면에 대한 하위정부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은 자체 수입원을 만드는 권한을 축소시키게 된다. 잠재적으로는 맞춤형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도 감소시키게 된다.

평균적으로 2013년 중앙정부가 일반정부 수입의 가장 큰 부분(50.6%)을 징수하였다. 주정부(18.6%), 지방정부(12.2%)가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사회보장기금(18.6%)을 통해서 징수되었다. 그러나, 수준별 정부 수입구조는 OECD 국가 별로 다양하다. 아일랜드,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경우 일반정부 수입의 85%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해 징수되었다. 반면, 폴란드, 한국,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독일, 일본의 중앙정부는 50.6%(OECD 회원국들의 평균과 같음) 미만을 징수하였다. 덴마크와 슬로베니아 중앙정부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일반정부 수입 대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들 중 2013년 하위정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보인 국가들은 캐나다(43.6%), 미국(42.5%), 호주(38.0%)이다. 이들은 연방국가로 주정부가 전체 수입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편, 스웨덴, 한국, 일본에서는 전체 수입에서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각각 34.6%, 33.9%, 33.8%).

2013년 OECD 회원국들은 주로 세금을 통해 중앙정부 예산의 재원을 마련했다. 스위스의 91.3%부터 노르웨이의 53.9%로 그 범위는 다양하다. 반면, 하위정부의 재원은 대부분 정부간 보조금(intergovernmental grants)과 기타 수입이다. 독일, 캐나다, 스위스, 미국 같은 연방국가들의 경우는 주정부 수입의 대부분이 조세수입을 통해서 얻어진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수입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국민계정체계에 나온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었다. 주정부는 연방제를 운영하는 9개 국가에서만 적용되는데, 이들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미국이다. 2.23과 2.25의 자료(온라인에 있음)는 정부 총수입에서 하위영역 각각의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각기 다른 수준 정부 사이의 이전을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단계의 수입 구조에 관한 자료는 정부 수준별 이전을 포함한 것이다. 표 2.25 "정부 수준 별 정부수입 분포의 변화 2009-2013(또는 2014)", 그림 2.26, 그림 2.27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입구조"는 각각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298>, <http://dx.doi.org/10.1787/888933248307>, <http://dx.doi.org/10.1787/888933248315>)

정부수입은 조세(예: 소비, 소득, 부, 재산, 자본에 대한 세금), 순 사회적 기여금(예: 연금, 의료보장, 사회보장기여금. "순"은 사회보험 서비스 이용료를 제외한 것을 의미), 보조금, 그리고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보조금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다른 일반정부 단위로부터 올 수 있다. 기타 수입은 매각, 수수료, 자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이들 통계자료는 OECD 국민계정(National Accounts)에서 직접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위 항목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이다(부록 A 참조).

더 읽어볼 것

OECD (2013),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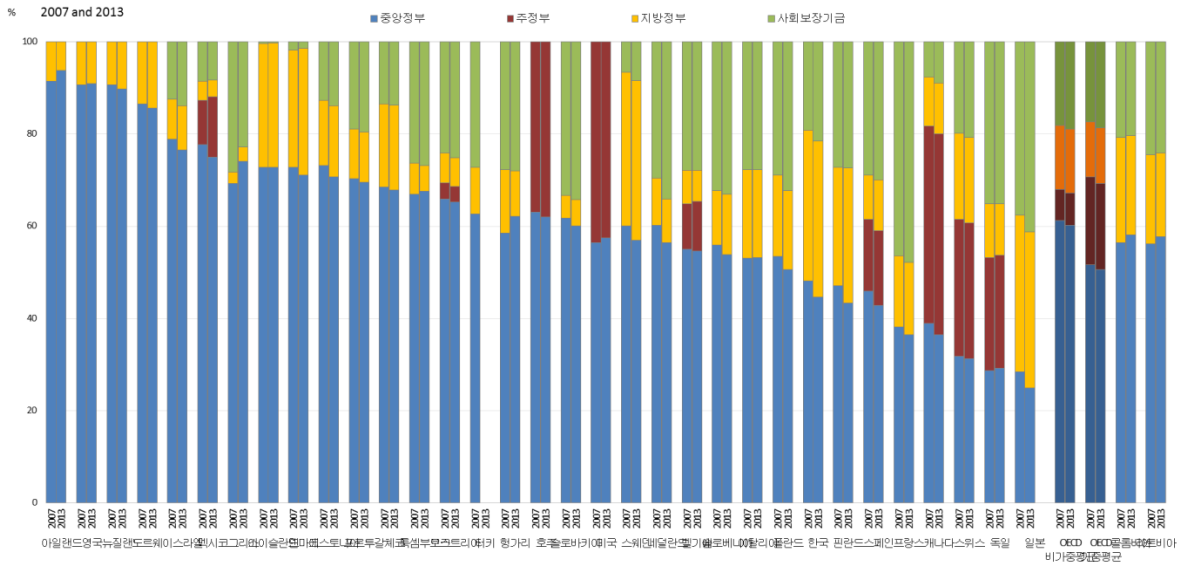
그림 설명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는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다. 호주와 콜롬비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2.23: 2014년 비유럽 OECD 국가들(캐나다와 한국 제외)과 아이슬란드, 터키, 스위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수준별 이전은 제외되었다(호주, 한국, 일본, 터키는 제외). 호주와 미국은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포함되었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이 중앙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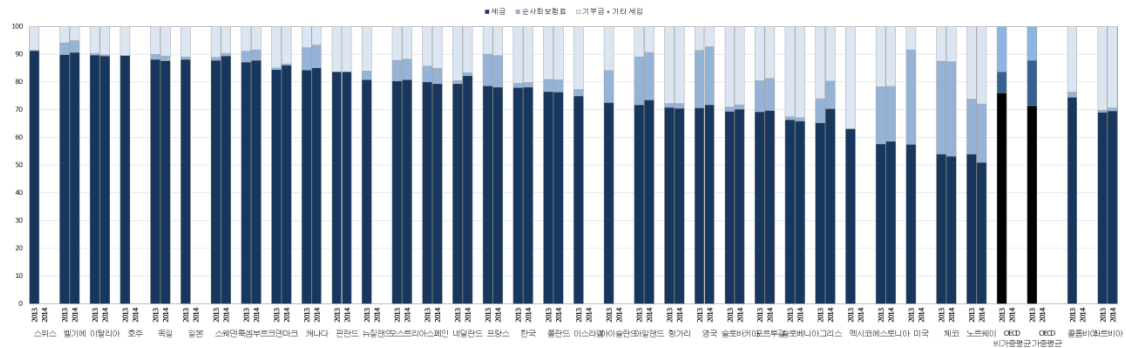
2.23.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의 세입분포 (2007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79>

2.24. 중앙정부 세입구조 (2013년과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282>

일반정부 지출

공공 지출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민간과 기업에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과,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덧붙여, 정부에 의해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총액은 공공부분 규모에 대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정부지출이 보통 정부수입보다 유연하지 않지만, 경기순환과 관련된 경제개발에 민감하고, 과거와 현재의 정치적 결정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통해 자원을 이전할 수 있다. 또는 특정 부문이나 계층에 대한 세율을 낮춤으로써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2013년 OECD 국가의 평균 정부지출은 국내총생산의 41.9%이다. 그리스(60.1%), 슬로베니아(59.7%), 핀란드(57.8%)가 지출이 가장 많은 반면, 한국(31.8%)과 멕시코(24.4%)는 가장 적었다.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정부지출은 평균 5.4 p.p.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세계금융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 때문이다. 정부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에스토니아(11.7 p.p.)와 아일랜드(11.6 p.p.)인 반면, 이스라엘은 미미하지만 감소하였다(0.6 p.p.).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전반적인 경향이 변화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지출은 평균 2.5 p.p.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국내총생산 증가에 비하여 지출이 둔화되었기 때문이다(어떤 경우는 감소함). 금융 및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2008년에 주로 부양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출을 감축하였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에스토니아(7.3 p.p.)와 아일랜드(6.9 p.p.)이다. 이 시기에 10개의 OECD 국가들에서는 정부지출이 증가하였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슬로베니아(11.2 p.p.), 그리스(6.0 p.p.), 핀란드(3 p.p.)이다. 슬로베니아의 경우는 잘 발달한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선호와, 그리고 지출에 대한 취약한 관리가 결합된 결과이다. 그리스의 증가는 지출증가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2009년 이래 정부지출증가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것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경우 전자산업과 임업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악화되었고,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결과다.

OECD 국가들 중 사용 가능한 2014년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그리스(10.7 p.p.)와 슬로베니아(9.9 p.p.)의 정부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은행시스템에 지출한 단발성 구제금융이 2013년에 잡혔기 때문이다. 핀란드(58.7%), 프랑스(57.3%), 덴마크(57.2%)가 2014년 국내총생산 대비 가장 높은 지출을 보였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일인당 정부지출은 2013년 인구당 16,491 USD PPP를 나타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룩셈부르크의 39,518 USD PPP에서 멕시코의 4,128 USD PPP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9배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2007년-2013년, 2009년-2013년 두 시기 동안 3.4%의 안정적인 연간성장률을 경험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일인당 정부지출은 연간 1.2%의 비율로 증가하였지만,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연간 0.2% 감소하였다. 미미한 증가로 돌아선 호주(0.1%)와 노르웨이

(0.01%)를 제외하고는 2009년-2014년 동안에도 자료가 사용 가능한 국가들에서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분석에 사용된 세 시기 동안 연간성장률이 마이너스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지출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국민계정체계의 용어를 활용하여, 일반 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되었다. 지출은 중간소비, 인건비, 보조금, 자산소득(이자지불 포함), 사회보장지출, 기타 경상지출(주로 경상이전), 그리고 자본지출(자본이전과 투자)로 구성된다.

국내총생산(GDP)은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의 표준화된 측정치이다. 일인당 정부지출은 총 정부지출을 OECD/Eurostat 구매력 평가를 활용해 USD가치로 전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IMF 경제전망'을 자료의 원천으로 삼는 국가들의 경우 내재구매력평가 환산율이 적용되었다(Implied PPP conversion rate는 IMF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1USD 당 국가 화폐를 말한다). 구매력 평가(PPP)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국가A의 화폐 1단위로 살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양을 살 수 있는 국가B의 화폐단위를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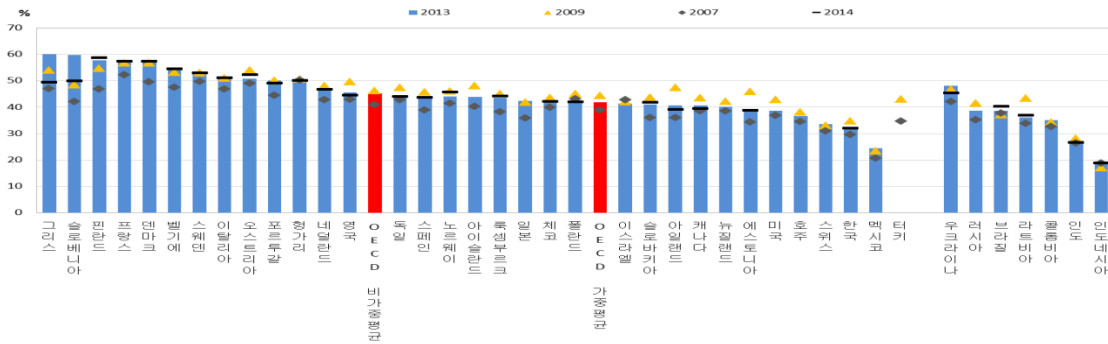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러시아와 콜롬비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2.28, 2.29: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2.30: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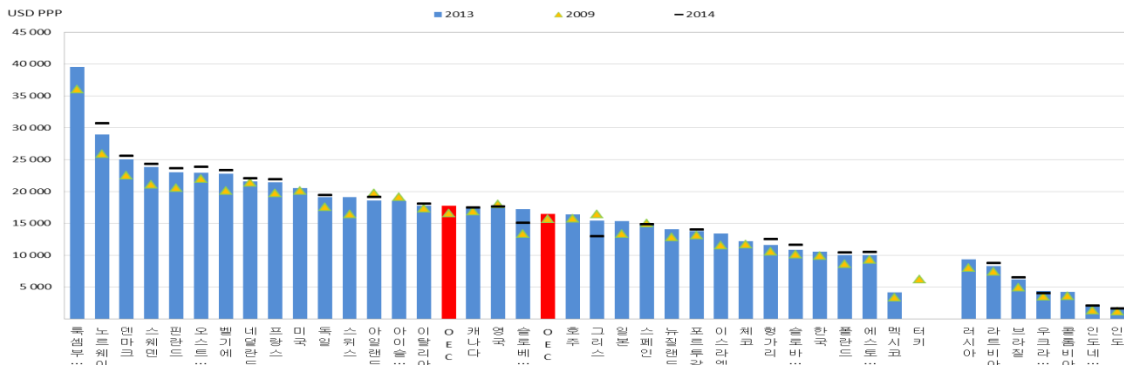
2.28.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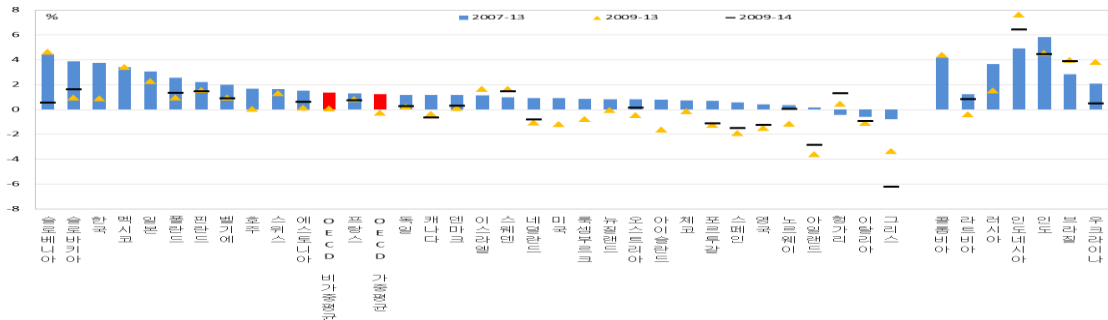
2.29. 1인당 일반정부 지출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335>

2.30. 1인당 실질정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2007-2013년, 2009-13년, 2009-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는 the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15)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341>

정부기능분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COFOG)

기능분류에 따른 정부지출의 내역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우선순위와 도전과제를 알 수 있다. 높은 부채부담, 증가하는 높은 실업률, 인구고령화의 영향이 정부지출 구조에 반영된다. 또한 에너지, 인프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지역수준의 협약(OECD-EU 같은)에 의한 공통의 목표도 정부지출 구조에 반영된다.

2013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에 가장 많이 지출하였다. 평균적으로 정부지출의 3분의 1 가까이가 사회적 보호에 사용되었다. 특히 북유럽지역 국가들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와 이탈리아에서 사회보장 지출은 총 정부지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보장 지출의 절반 이상(55%)이 연금에 사용되었고, 12%는 질병급여/장애인급여, 10%는 가족수당/아동수당, 8%는 실업급여에 사용되었다. 그 비율은 다양하지만(특히 실업급여 비중), 많은 OECD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유사한 사회보장 지출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의료, 일반 공공서비스(채무변제 포함),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정부 지출의 중요한 부분으로, 2013년 각각 평균 10%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분야(9.5%)에 대한 지출 역시 중요하다. 그리스는 25%, 덴마크, 이스라엘, 포르투갈, 영국은 7% 이하로 국가별 비율은 다양하다.

2013년 OECD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국방(5.5%), 공공질서 및 치안(4.4%), 주택 및 지역편의시설(1.5%), 오락 문화 및 종교(1.5%), 환경보호(1.2%)에는 적게 지출하였다.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국방에 대한 지출은 이스라엘(14.4%)과 미국(9.8%)은 10% 선인 반면,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는 약 1% 정도이다.

2007년과 2013년 사이 사회적 보호와 의료에 대한 총 정부지출이 증가하였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한 국가에서 특히 사회적 보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커졌다(스페인, 아일랜드, 포르투갈, 이탈리아). 같은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의 의료에 대한 지출은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0.8 p.p.). 이는 어느 정도는 네덜란드(+1.9 p.p.)와 미국(+ 1.5 p.p.)의 의료 지출 비중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사회적 보호와 의료 지출이 감소한 소수의 국가들은 그리스와 슬로베니아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분야(둘 다 14 p.p. 이상) 지원과 특정 계층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에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사회적 보호와 의료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였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교육(-0.8 p.p.), 일반 공공서비스(-0.6 p.p.), 국방(-0.5 p.p.) 같은 다른 분야의 지출이 감소하게 되었다. 2013년 정보가 사용 가능한 29개 OECD 국가들 중 17개국이 2007년과 비교하여 교육에 대한 지출 비중을 낮추었다.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슬로베니아(-3.2 p.p.)와 아이슬란드(-2.3 p.p.)이다. 일반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곳은 그리스이다(-7.8 p.p.). 이는 주로 그리스 정부의 채무조정과 협상의 결과로 매년 빚내서 마련한 정부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출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정부지출에 대한 자료는 정부기능분류(COFOG)에 따라 세분화되었는데, 이는 정부지출을 10개의 기능, 즉 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와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편의시설, 보건, 여가·문화·종교, 교육, 사회보장으로 분류한다. 이들 각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부록 C를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COFOG II 수준의 우선 기능별 정부구조는 그림 2.33(일반 공공서비스), 그림 2.34(공공질서와 안전), 그림 2.35(경제분야), 그림 2.36(보건), 그림 2.37(교육), 그림 2.38(사회보장)에 표기되어있으며 각각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370>,
<http://dx.doi.org/10.1787/888933248384>, <http://dx.doi.org/10.1787/888933248399>,
<http://dx.doi.org/10.1787/888933248407>, <http://dx.doi.org/10.1787/888933248412>,
<http://dx.doi.org/10.1787/888933248422>.

표 설명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아이슬란드는 2013년 대신 2012년 자료를 사용했다. 경제분야에 대한 2013년 스페인 자료는 은행에 대한 4,897 백만 EUR의 자금지원을 포함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2.31 기능별 일반정부 지출 구조 (2013년)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택과 지역 편의시설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적 보호
호주	12.9	3.9	4.7	11.1	2.9	1.7	18.8	2.0	14.4	27.7
오스트리아	14.2	1.2	2.6	11.1	1.0	0.7	15.6	1.9	9.8	41.9
벨기에	15.5	1.7	3.4	12.2	1.8	0.6	14.6	2.4	11.8	36.1
체코	11.1	1.8	4.2	14.3	2.5	2.0	17.4	2.7	12.3	31.7
덴마크	13.6	2.3	1.8	6.3	0.7	0.5	15.3	3.2	12.3	43.9
에스토니아	10.3	4.7	4.9	12.5	1.7	1.4	13.0	5.4	15.4	30.7
핀란드	14.4	2.6	2.4	8.2	0.4	0.7	14.5	2.5	11.2	43.1
프랑스	11.9	3.1	2.9	8.7	1.8	2.4	14.2	2.6	9.6	42.9
독일	14.3	2.4	3.5	7.5	1.3	0.9	15.8	1.9	9.7	42.6
그리스	16.3	3.6	3.1	25.5	1.4	0.5	8.6	1.1	7.6	32.4
헝가리	20.9	1.0	4.2	13.7	1.8	1.6	10.4	3.7	9.5	33.3
아이슬란드	19.2	0.0	3.1	10.4	1.3	2.4	16.3	6.9	16.9	23.6
아일랜드	16.5	1.0	3.9	7.5	1.6	1.6	17.4	1.8	10.2	38.6
이스라엘	13.5	14.4	3.9	6.8	1.5	1.1	12.2	3.7	16.3	26.6
이탈리아	17.5	2.3	3.8	8.2	1.8	1.4	14.1	1.4	8.0	41.3
일본	10.6	2.1	3.1	10.3	2.8	1.8	17.5	0.9	8.5	42.4
한국	17.1	7.8	4.0	16.8	2.4	3.0	12.1	2.2	16.3	18.4
룩셈부르크	11.5	0.8	2.3	9.5	2.6	1.6	11.9	2.6	12.7	44.4
네덜란드	11.0	2.5	4.2	8.2	3.2	1.1	17.7	3.4	11.8	36.7
노르웨이	9.7	3.1	2.3	10.6	1.9	1.6	17.0	3.1	11.1	39.7
폴란드	13.5	3.9	5.3	9.6	1.8	1.7	10.9	2.5	12.5	38.3
포르투갈	17.9	2.1	4.4	6.7	0.8	1.4	13.3	2.0	13.5	37.8
슬로바키아	13.4	3.1	8.0	7.9	2.2	1.7	18.3	3.1	12.2	30.1
슬로베니아	11.3	1.6	3.6	24.2	1.2	1.2	11.6	3.0	10.9	31.4
스페인	15.5	2.1	4.5	10.0	1.9	1.0	13.6	2.6	9.1	39.7
스웨덴	14.6	2.8	2.6	8.1	0.6	1.4	13.1	2.0	12.4	42.3
스위스	11.7	3.0	4.9	12.3	2.2	0.6	6.5	2.5	17.8	38.6
영국	12.5	5.0	4.8	6.8	1.8	1.5	16.7	1.7	12.0	37.2
미국	14.3	9.8	5.6	9.2	0.0	1.5	22.3	0.7	16.0	20.7
OECD 가중평균	13.8	5.5	4.4	9.5	1.2	1.5	17.7	1.5	12.5	32.4
OECD 비가중평균	14.0	3.3	3.9	10.8	1.7	1.4	14.5	2.6	12.1	35.7
라트비아	13.2	2.4	5.2	13.0	1.8	3.3	10.0	4.2	15.7	31.2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호주는 호주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350>

2.32. 기능별 일반정부 지출구조의 변화 (2007년-2013년)

	일반공공서비스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 편의	보건	휴양, 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호주	2.3	-0.4	-0.4	-0.9	0.7	-0.6	-0.1	-0.4	0.1	-0.2
오스트리아	-1.2	-0.3	-0.1	-0.9	0.1	-0.1	0.3	-0.3	0.2	2.2
벨기에	-2.6	-0.4	0.0	0.9	0.6	-0.2	0.6	-0.1	0.2	1.2
체코	0.4	-0.9	-0.6	-1.7	0.1	-0.4	1.0	-0.2	0.6	1.9
덴마크	0.1	-0.5	0.0	0.4	-0.3	-0.2	-0.2	-0.2	0.3	0.7
에스토니아	0.5	1.0	-1.3	-0.7	-0.8	-0.4	0.3	-0.6	-1.8	3.8
핀란드	0.2	-0.3	-0.2	-1.1	-0.2	0.0	0.3	0.3	-1.2	2.2
프랑스	-1.8	-0.2	0.1	0.5	0.1	0.2	-0.1	0.1	-0.5	1.5
독일	0.1	0.2	0.0	0.2	0.1	-1.0	1.0	0.0	0.6	-1.3
그리스	-7.8	-2.3	-0.1	15.9	-0.3	0.0	-4.2	-0.2	0.3	-1.3
헝가리	1.8	-1.6	0.2	0.7	0.6	-0.4	0.4	0.8	-1.5	-1.1
아이슬란드	6.0	-0.1	-0.4	-3.4	-0.2	1.3	-2.4	-2.0	-2.3	3.4
아일랜드	6.8	-0.2	-0.5	-3.8	-1.2	-4.0	-1.3	-0.3	-2.1	6.4
이스라엘	-3.7	-2.2	0.3	0.7	0.2	-0.3	0.7	0.5	2.2	1.6
이탈리아	-0.8	-0.1	-0.1	-0.7	0.1	0.0	-0.2	-0.4	-1.6	3.9
일본	-1.7	-0.2	-0.4	0.6	-0.5	-0.4	1.0	-0.1	-0.9	2.5
한국	-0.5	-0.1	-0.1	-3.4	-0.6	-0.7	1.6	-0.1	0.7	3.3
룩셈부르크	-0.5	0.2	0.0	-1.5	0.1	0.1	-0.2	-0.7	0.6	1.9
네덜란드	-1.9	-0.5	-0.1	-1.7	-0.4	0.2	1.9	-0.1	-0.2	3.0
노르웨이	-4.5	-0.7	0.2	1.5	0.5	0.2	0.2	0.2	-0.6	3.0
폴란드	0.8	-0.6	0.1	-1.2	0.3	-0.9	0.5	-0.1	-0.8	1.7
포르투갈	2.6	-0.6	0.5	-2.9	-0.5	-0.4	-2.5	-0.3	-0.9	5.0
슬로바키아	2.2	-1.9	1.2	-4.1	0.5	-0.4	0.5	1.0	0.4	0.6
슬로베니아	-1.8	-1.6	-0.4	14.8	-0.5	-0.2	-2.3	0.1	-3.2	-4.9
스페인	2.9	-0.4	-0.3	-3.3	-0.7	-1.3	-1.0	-1.5	-1.2	6.7
스웨덴	-0.8	-0.3	0.0	0.3	-0.1	0.0	0.3	0.0	-0.3	1.0
스위스	-1.1	0.0	0.1	-0.6	0.6	-0.1	0.4	0.1	0.4	0.2
영국	1.8	-0.2	-0.9	-0.3	-0.3	-1.0	0.9	-0.5	-1.8	2.4
미국	-0.9	-0.9	-0.3	-0.6	0.0	-0.3	1.5	-0.1	-1.1	2.6
OECD 가중평균	-0.6	-0.5	-0.2	-0.3	-0.1	-0.4	0.8	-0.2	-0.8	2.3
OECD 비가중평균	-0.1	-0.6	-0.1	0.1	-0.1	-0.4	0.0	-0.2	-0.5	1.9
라트비아	1.7	-1.7	-2.1	-1.0	-0.8	-0.3	-2.0	-0.8	-0.8	7.8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호주는 호주 통계청에서 공개하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로부터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369>

경제적 거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

정부지출은 생산관련 지출을 넘어선다. 정부예산 관점에서 총자본형성, 사회적 급여 지급, 공공채무에 의한 이자 지급, 보조금 같은 경제적 거래는 총 정부지출을 결정하는데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래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수요를 촉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더 잘 알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일반정부의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적 급여이며, 그 다음이 인건비이다. 2013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이 두 항목에 총 정부지출의 62.8%를 할당하였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총 지출의 39.8%를 사회적 급여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러나, 국가 별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멕시코, 캐나다, 한국의 사회적 급여는 OECD 평균보다 14 p.p.에서 30 p.p. 낮다. 독일은 OECD 평균보다 13.7 p.p. 높은 비율을 사회적 급여에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OECD 국가들은 총 지출의 22.9%를 인건비에 사용하였다. 인건비는 평균적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OECD 국가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멕시코에서는 인건비가 전체 지출의 40%에 달하며 14.9 p.p.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아이슬란드는 전체 지출에서 32% 이상을 인건비에 사용하며 이는 OECD 평균보다 9.3 p.p. 높다. 중간소비는 경제적 거래에서 세 번째를 차지하는데 총 정부지출의 14.8%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지출이 전체 지출의 9.6%이고, 자산소득(대부분 이자지급)이 6.9%다. 나머지 6%는 기타 지출과 보조금에 해당한다.

2007년과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일반정부지출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경제적 거래는 사회보장지출이다(3.1 p.p.). 이는 OECD 국가들이 실업률 증가 같은 경제위기와 연관된 사회현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곳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이다(각각 7.4 p.p.와 7.1 p.p.). 그렇지만 같은 기간에 감소가 일어난 국가도 있다. 슬로베니아, 그리스, 헝가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각각 -5.8 p.p., -1.7 p.p., -1.5 p.p.).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2014년 기간만 본다면 그리스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사회보장지출이 7.8 p.p. 증가한 것이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에 OECD 국가들의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감소하였다(-1.4 p.p.). 전통적으로, 정부는 임금이나 직원 수를 조정하여 인건비를 줄여 왔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향에도 불구하고, 7개의 OECD 국가들, 즉 노르웨이(1.8 p.p.), 이스라엘(0.8 p.p.), 슬로바키아(0.7 p.p.), 독일과 캐나다(둘 다 0.3 p.p.), 그리고 에스토니아와 스위스(0.3 p.p. 이하)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였다. 인건비와 유사하게, OECD 국가들의 전체 지출에서 자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다(-1.3 p.p.). 이 시기에 아일랜드와 체코에서 자본지출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각각 -10.6 p.p., -4.9 p.p.),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각각 -9.0 p.p., -4.2 p.p.).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출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정부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거래를 포함한다. 중간소비, 인건비, 보조금, 자산소득(이자지불 포함), 사회보장지출(현물 사회적 이전지출 이외의 사회적 급여와 시장 생산자를 통해 가계에 제공되는 현물 사회적 이전), 기타 경상지출(주로 경상이전이지만, 다른 생산에 대한 세금, 소득과 부에 대한 세금 등과 같은 미미한 지출과, 그리고 연금수령액의 변화도 포함됨.), 자본지출(자본이전, 자본투자). 정부수준의 모든 이러한 거래는 연결 기준으로 기록된다(예: 정부 수준 간의 거래가 계산된다.) 그림 2.40 "경제적 거래에 의한 일반정부지출 구조의 변화, 2007-2014"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447>.

더 읽어 볼 것

OECD (2014a),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4*,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na_glance-2014-en.

OECD (2014b), *OECD Factbook 2014: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4-en>.

그림 설명

호주, 칠레, 터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콜롬비아, 러시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2.39. 경제적 거래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구조 (2013년, 2014년, 2007-13년간 변화)

	중간소비지출			인건비			보조금			재산소득 (이자 포함)			사회적 급부			기타 경성지출			자본지출		
	2013	2014	2007-13 변화	2013	2014	2007-13 변화	2013	2014	2007-13 변화	2013	2014	2007-13 변화	2013	2014	2007-13 변화	2013	2014	2007-13 변화	2013	2014	2007-13 변화
오스트리아	12.8	12.4	0.7	20.9	20.2	-0.3	2.8	2.8	-0.3	4.9	4.5	-1.5	45.2	44.6	2.5	6.5	6.2	0.7	7.0	9.3	-1.9
벨기에	7.3	7.3	-0.3	22.9	23.0	-1.0	5.4	5.3	0.7	5.7	5.7	-2.3	46.2	46.5	1.4	5.0	4.8	0.5	7.6	7.4	0.9
캐나다	23.3	23.6	1.2	29.8	30.1	0.3	2.9	2.8	0.1	8.0	7.9	-2.5	22.9	23.2	0.8	2.9	2.9	0.1	10.2	9.5	0.1
체코	12.1	11.7	-1.8	17.2	17.0	-0.4	6.4	6.5	2.3	3.2	3.2	0.5	45.5	44.8	3.4	5.2	5.0	0.8	10.5	11.8	-4.9
덴마크	16.5	16.5	0.4	29.4	29.5	-1.5	3.8	3.9	0.0	3.0	2.7	-0.2	33.9	33.8	0.9	6.3	6.2	-0.3	6.9	7.4	0.8
에스토니아	17.0	17.3	0.2	27.6	28.5	0.2	1.9	1.1	-0.6	0.4	0.3	-0.1	32.2	32.6	3.8	5.2	4.7	0.5	15.7	15.4	-3.8
핀란드	20.1	20.1	1.1	25.0	24.4	-1.9	2.3	2.3	-0.3	2.2	2.2	-0.8	37.6	38.4	2.2	5.2	5.1	0.1	7.6	7.6	-0.3
프랑스	9.1	8.9	0.2	22.6	22.7	-1.1	3.0	3.9	0.4	4.0	3.8	-1.0	45.1	45.5	1.5	7.0	6.8	0.5	9.1	8.5	-0.4
독일	10.6	10.6	1.6	17.5	17.6	0.3	2.0	2.1	-0.3	4.5	4.0	-1.7	53.5	54.3	-0.7	5.0	4.9	1.0	6.9	6.6	-0.2
그리스	7.6	9.0	-6.5	20.0	24.3	-3.2	2.0	2.1	1.8	6.6	7.9	-3.1	35.0	42.8	-1.7	2.9	3.9	-0.8	25.9	10.1	13.5
헝가리	15.0	15.7	2.4	20.4	21.1	-2.5	2.7	2.6	-0.1	9.2	8.2	1.1	34.5	32.0	-1.5	6.7	7.1	1.2	11.6	13.3	-0.7
아이슬란드	25.5	..	0.0	32.3	..	-2.7	3.9	..	-0.3	11.4	..	5.3	16.0	..	2.4	4.3	..	0.1	6.5	..	-4.8
아일랜드	11.5	12.0	-2.2	26.2	25.7	-1.9	2.3	2.4	-0.2	10.8	10.4	8.0	40.2	39.4	7.4	4.0	3.5	-0.4	4.9	6.5	-10.6
이스라엘	24.9	..	-0.4	25.3	..	0.8	2.0	..	0.2	9.7	..	-3.0	17.3	..	0.8	12.1	..	0.4	8.6	..	1.2
이탈리아	11.0	10.9	0.6	20.1	19.8	-1.7	3.3	3.5	0.9	9.5	9.1	-0.7	44.3	45.0	3.5	4.7	4.5	0.0	7.1	7.1	-2.6
일본	10.1	..	-0.3	14.1	..	-3.1	1.5	..	0.0	5.1	..	-0.4	53.9	..	3.4	3.5	..	0.2	11.8	..	0.2
한국	14.2	13.7	-0.4	21.0	21.1	-2.1	0.9	0.9	-0.3	5.6	5.5	-1.0	25.6	26.8	4.6	12.3	12.7	2.3	20.5	19.3	-3.1
룩셈부르크	8.6	8.4	0.6	18.9	19.1	-0.4	3.9	4.3	-0.5	1.0	0.8	0.3	48.4	48.3	1.1	8.2	8.3	0.9	11.0	10.8	-2.1
멕시코	12.2	..	0.0	37.6	..	-1.4	4.5	..	0.7	7.3	..	-0.4	9.3	..	1.7	11.1	..	2.6	18.1	..	-3.3
네덜란드	13.9	13.5	-0.7	19.8	19.7	-0.4	2.6	2.5	-0.4	3.3	3.1	-1.4	48.2	47.9	4.6	4.3	4.9	-0.5	8.0	8.4	-1.2
뉴질랜드	16.0	..	-0.2	23.5	..	-0.2	0.9	..	0.1	4.4	..	0.2	36.9	..	0.7	6.8	..	0.3	11.4	..	-0.9
노르웨이	13.6	13.5	0.2	30.9	30.5	1.8	4.3	4.2	0.1	1.5	1.4	-4.7	34.6	34.5	1.4	5.3	5.7	0.4	9.9	10.3	0.7
폴란드	13.9	14.4	0.0	24.4	24.4	0.2	1.6	1.4	-0.6	5.9	4.7	0.8	38.5	38.9	1.5	5.5	5.2	-0.1	10.1	11.0	-1.9
포르투갈	11.5	12.0	-0.7	24.8	24.2	-4.6	1.2	1.4	-0.5	9.8	10.1	3.2	40.7	40.2	4.4	5.9	5.5	0.4	6.1	6.6	-2.1
슬로바키아	12.7	13.0	-0.8	20.6	20.9	0.7	2.6	2.3	-0.6	4.6	4.6	0.8	46.1	45.7	1.4	4.5	4.0	-0.1	8.8	9.4	-1.5
슬로베니아	11.4	13.4	-1.8	21.0	23.2	-3.6	1.8	1.7	-1.9	4.2	6.5	1.3	32.2	37.0	-5.8	4.7	4.3	-0.2	24.7	13.8	11.9
스페인	12.0	12.0	-0.9	24.6	24.8	-0.9	2.2	2.4	-0.6	7.4	7.5	3.3	42.7	43.1	7.1	4.0	3.8	-0.1	7.0	6.5	-8.1
스웨덴	15.9	16.0	0.3	23.7	23.9	-1.1	3.1	3.3	0.3	1.8	1.7	-1.7	33.4	33.0	0.7	13.1	13.1	1.1	8.9	9.0	0.4
스위스	12.9	..	0.3	22.3	..	0.0	10.3	..	-0.6	1.9	..	-1.7	33.5	..	-0.4	6.6	..	1.7	12.5	..	0.6
영국	25.3	25.5	0.1	21.4	21.4	-3.4	1.2	1.3	-0.3	6.3	6.2	1.2	32.2	32.3	3.3	6.2	5.7	-0.3	7.4	7.7	-0.6
미국	17.5	..	-0.8	25.8	..	-1.4	0.9	..	-0.1	9.3	..	-0.4	36.8	..	4.9	0.7	..	-0.1	8.9	..	-2.1
OECD 가중평균	14.8	..	-0.3	22.9	..	-1.4	2.0	..	0.0	6.9	..	-0.5	39.8	..	3.1	4.0	..	0.3	9.6	..	-1.3
OECD 비가중평균	14.4	..	-0.2	23.6	..	-1.2	2.9	..	0.0	5.6	..	-0.1	36.9	..	2.0	6.0	..	0.4	10.7	..	-0.9
콜롬비아	15.0	..	-0.9	22.3	..	-0.4	0.4	..	0.1	7.3	..	-3.5	33.2	..	2.0	10.9	..	1.0	10.9	..	1.7
라트비아	17.0	16.8	1.0	25.5	25.4	-3.9	1.6	1.8	-0.6	4.0	3.7	3.0	31.2	30.0	8.3	7.5	9.4	-1.9	13.2	12.8	-5.9
러시아	20.6	..	-0.7	28.1	..	3.4	1.5	..	-0.5	1.6	..	0.3	29.6	..	5.5	5.9	..	-0.5	12.7	..	-7.4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435>

정부 수준별 지출구조

전통적으로 정부는 공공재화와 서비스(교육, 의료) 공급 및 소득재분배(사회보장, 보조금)의 책임이 있다. 서로 다른 수준의 정부들이 이러한 임무를 분담된다. 하위정부는 정부지출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실, 하위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별 요구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유리하고, 공공 서비스 제공에 더 적합한 위치에 있다.

2013년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지출이 일반정부 지출의 42.8%를 차지하였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37.8%를 차지했으며, 사회보장기금이 나머지 19.4%를 차지했다. 그러나 재정분권화의 수준은 국가별로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는 지출 책임에도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단 일국가)의 경우 2013년 중앙정부가 총 지출의 90.4%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91.2%였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9.4 p.p.가 증가했다. 반면, 벨기에, 캐나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멕시코(연방 또는 준 연방국가)의 공공지출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보다 사회적 보호(연금, 실업급여), 일반공공서비스(행정부, 입법부, 공공부채거래), 국방에 상대적으로 예산의 더 많은 부분을 지출한다. OECD 회원국 절반에서 중앙정부 지출예산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벨기에와 스페인의 중앙정부는 예산의 60% 이상을 일반 공공서비스에 할당하고 있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여러 국가들에서 하위정부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다. 노르웨이(2.4 p.p.), 캐나다(2.0 p.p.), 스위스(1.5 p.p.), 핀란드(1.1 p.p.)에서 가장 큰 증가를 기록하였다. 반면, 경제위기 동안 강한 재정적 압박을 받은 유럽국가들, 즉 슬로베니아(9.0 p.p.), 아일랜드(8.5 p.p.), 헝가리(7.2 p.p.), 그리스(4.3 p.p.)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정부지출에서 중앙정부 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출에 대한 자료는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와 유로스 타트 정부금융통계시스템을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정부지출은 중간소비, 인건비, 보조금, 자산소득(이자지불 포함), 사회보장지출, 기타 경상지출(주로 경상이전), 자본지출(자본이전, 자본투자)를 포함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연방제도를 가진 9개 OECD 국가에서만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그리고 미국이다.

그림 2.41과 표 2.42, “정부 수준별 정부지출 분포의 변화, 2009-2013(또는 2014)”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 간 이전을 배제한 것으로, 각 수준별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알 수 있는 개략적인 지표가 된다. 그림 2.43, 표 2.44, 표 2.45의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지출 자료는 각기 다른 수준의 정부간 이전을 포함한 것으로, 각 수준의 정부에서 각각의 기능에 대한 지출 규모를 보여준다. 그림 2.43와 표 2.42, 2.44, 2.45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478>; <http://dx.doi.org/10.1787/888933248464>; <http://dx.doi.org/10.1787/888933248482>; <http://dx.doi.org/10.1787/888933248492>).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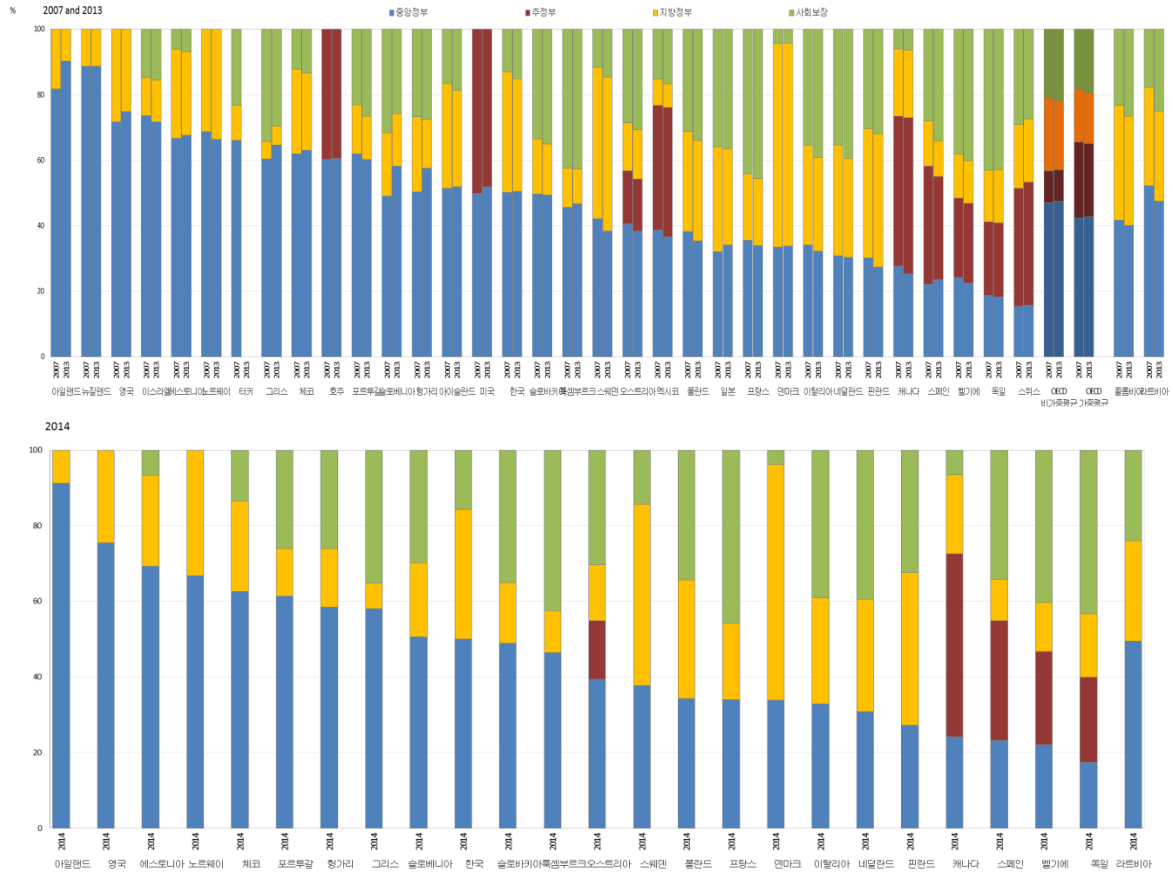
OECD (2013),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그림 설명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014년 비유럽 국가들(캐나다, 한국 제외)의 자료, 아이슬란드, 터키, 스위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수준 간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호주, 한국, 일본, 터키는 제외). 호주와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이 중앙정부에 포함된다. 호주, 콜롬비아 자료는 2003년도 대신 2012년도의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2.41. 일반정부지출의 정부수준별 분포 (2007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456>

정부 투자지출

정부는 경제성장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인프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또한, 경기순환 균형에 기여하고, 경기대응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연구개발을 한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2013년에 총 정부지출의 7.8%를 투자비용으로 사용했다. 한국은 17.2%, 아일랜드는 4% 이하로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2007년과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에서 정부투자 비중은 평균적으로 1.3 p.p. 감소하였다. 경제위기 시작 시점에는 투자가 경기대응정책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했지만, 시작 직후에는 통합정책이 공공투자를 구축했다. 그로 인해 변동성이 증가하고 공공지출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영향을 주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그리스와 슬로베니아의 총 정부지출 대비 정부투자는 크게 증가하여(각각 3.3 p.p., 2.7 p.p.) 거의 2009년 수준(둘 다 -1 p.p.)으로 회복되었다.

2013년 평균적으로 정부투자가 총 투자의 15.9%를 차지했다. 정부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그리스(23.2%)이고, 그 다음은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각각 22.6%, 22.1%)이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긴축정책 시행으로 정부투자를 감소시켰다.

OECD 국가들의 투자 양상은 상당부분 정치 및 행정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이점에 있어서, 2013년 하위정부는 총 정부투자의 평균 60%를 차지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 같은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정부투자의 큰 비중을 수행하였다(70% 이상). 2007년과 2014년 사이 투자 분권화를 향한 공통된 추세는 없다. 아일랜드에서는 중앙정부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38.2 p.p.).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국민계정체계를 이용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국민계정을 위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 기준을 따른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일반정부투자는 총자본형성과 인수 총액에서 현실화되지 않은 비금융 자산 처분액을 뺀 것이다. 총 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은 정부투자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다. 주로 도로 인프라로 구성되지만 오피스 건물, 주택, 학교, 병원과 같은 인프라도 포함된다. 또한, 2008년 국민계정체계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지출은 고정투자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투자는 자본이전과 함께 정부 자본지출을 구성한다. 총 투자는 전체 경제가 지출한 투자를 의미하는데, 일반정부, 비금융회사, 금융회사, 가계, 비영리기관을 포함한다.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연방제도를 가진 9개 OECD 국가에만 적용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 연방국가 취급), 스위스, 미국이다. 그림 2.49,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투자 비율, 2007, 2009, 2013, 2014"와 그림 2.50, "정부 수준별 투자지출 분포 변화, 2007-2013 및 2007-2014"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538>; <http://dx.doi.org/10.1787/888933248548>).

더 읽어볼 것

OECD (2014), *Recommendation on Effective Public Investment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Paris, www.oecd.org/regional/regional-policy/Principles-Public-Investment.pdf.

OECD (2013),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그림 설명

칠레와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콜롬비아, 러시아의 자료는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그림 2.46과 그림 2.47의 사용가능 자료가 다른 것은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 중 자료 표의 차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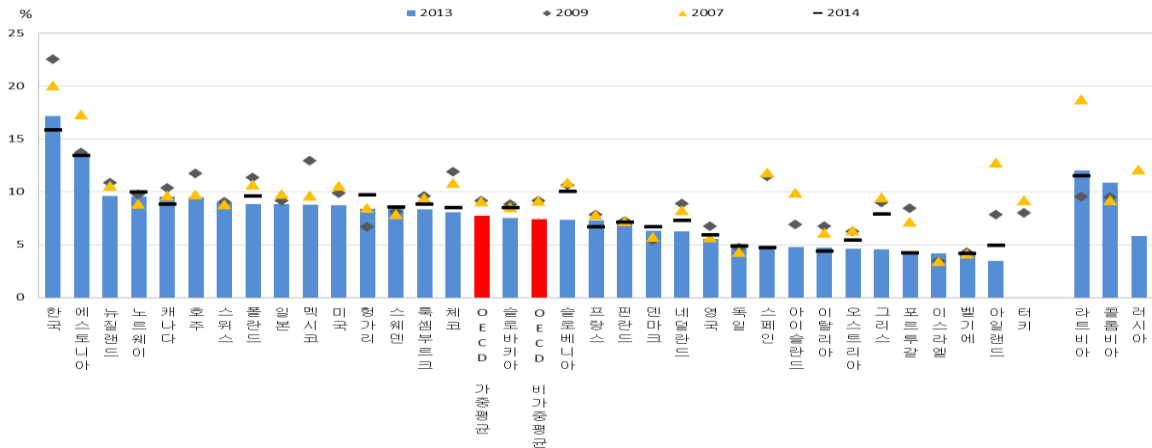
2.46: 칠레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47: 아이슬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한국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 스위스의 자료는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룩셈부르크와 터키의 경우 전체 투자는 총자본형성을 의미한다(즉, 인수금액에서 비금융 비생산 자산 처분을 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48: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에서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이 지방정부에 포함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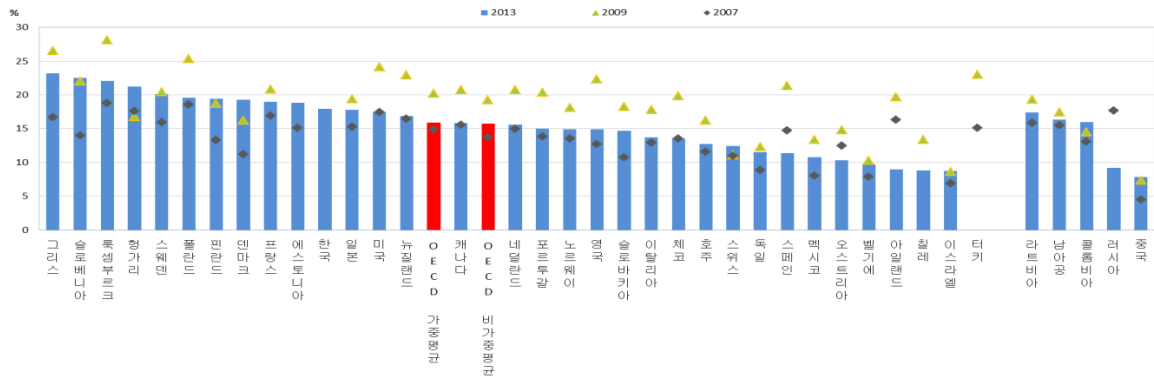
2.46. 총정부지출 중 정부투자의 비중 (2007년, 2009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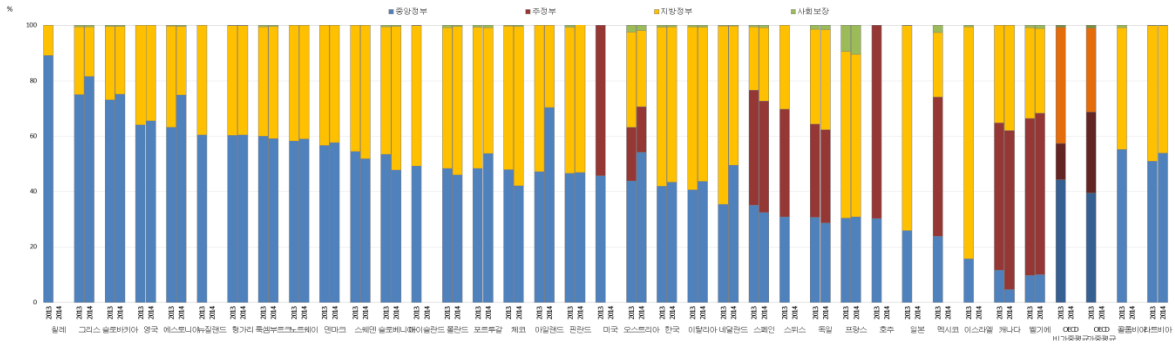
2.47. 총투자 중 정부투자의 비중 (2007년, 2009년, 2013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13>

2.48. 정부수준별 투자지출 분포 (2013년과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21>

일반정부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정부는 자체 인력, 자본, 외부업체를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생산비용은 정부지출 중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사용된 비용으로 산정된다.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하는 정부도 있고, 직접 생산하는 정부도 있다. 아웃소싱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부는 투입으로 사용될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또는 비영리단체나 민간 기관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2013년 재화와 서비스 생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의 21.3%이다. 그러나 OECD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핀란드의 32.2%에서 멕시코의 12.3%까지 이른다.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대비 생산비용은 평균 1.1p.p. 증가했다. 이 증가는 주로 민간 및 비영리 단체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0.7 p.p.). 이 시기에 소수의 국가들에서 생산비용이 감소하였다. 이스라엘(0.7 p.p.)과 그리스(0.1 p.p.)에서 생산비용이 감소한 것은 주로 정부에 의해 사용되고 자금이 지원된 재화와 서비스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이다. 헝가리(0.6 p.p.), 폴란드(0.3 p.p.), 포르투갈(0.1 p.p.)에서는 낮은 정부 인건비의 비중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감소했다. 그리스, 포르투갈, 영국 같은 국가들 역시 2007년에서 2014년 사이에 생산비용의 감소를 겪었다.

2013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일반정부 인건비는 생산비용의 45.2%를 나타냈다. 그 다음은 아웃소싱(41.9%)이며, 나머지 12.9%는 기타 생산비용이다. 생산비용 대비 정부 인건비 비율의 국가별 차이는 멕시코의 74.8%에서 일본의 27.5%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2013년과 2014년 사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아일랜드의 인건비는 감소하였고(1 p.p. 이상), 그리스와 헝가리에서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거의 1 p.p.).

2013년 정부 아웃소싱은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의 8.9%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OECD 국가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는 17.1%, 멕시코는 3.0%이다. OECD 국가들 중 직접적인 제3자 공급을 통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아웃소싱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벨기에, 일본, 독일, 네덜란드이다(60% 이상). 반면, 덴마크, 이스라엘, 스위스는 대부분의 아웃소싱을 중간소비에 사용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생산비용의 개념과 방법론은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있는 정부지출에 대한 분류에 기초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는 개정되었고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2008년에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시행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조).

구체적인 정부의 생산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정부 고용인에 대한 보상(현금과 현물보상, 의무적인 사용자 사회보장기여금, 그리고 종업원

을 위한자발적 기여금 포함).

정부 아웃소싱의 첫 번째 요소로 일반정부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 국민계정체계에 용어로 중간적 소비를 포함한다(회계나 정보기술서비스와 같은 정부의 생산에 필요한 중간 생산물의 조달).

일반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정부 아웃소싱의 두 번째 요소이다. 국민계정체계의 용어로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시장 생산자를 통한 현물이전을 포함한다(처음에 시민이 지불하고 후에 정부에게 환불 받은 것, 예를 들어 공공 사회보장지불을 통해 환불 받은 의료비 등도 포함한다.).

다른 생산비용, 즉, 고정자본 소비(자본의 감가상각)에 관한 나머지 요소와 기타 생산에 관한 세금에서 보조금을 뺀 것.

자료는 정부고용과 정부에 의해 자체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생산된 산출물을 위한 중간소비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생산비용은 국민계정체계에서의 산출가와 동일하지 않다. 표 2.54 "국내총생산 대비 생산비용 비율의 변화, 2009-2013(또는 2014)", 표 2.54 "정부 아웃소싱 지출 구조, 2013, 2014"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58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93>).

더 읽어볼 것

Blöchliger, H. (2008), *Market Mechanisms in Sub-Central Public Service Provision*,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 6, OECD, Paris, www.oecd.org/ctp/federalism/40693328.pdf.

그림 설명

중국, 콜롬비아, 러시아의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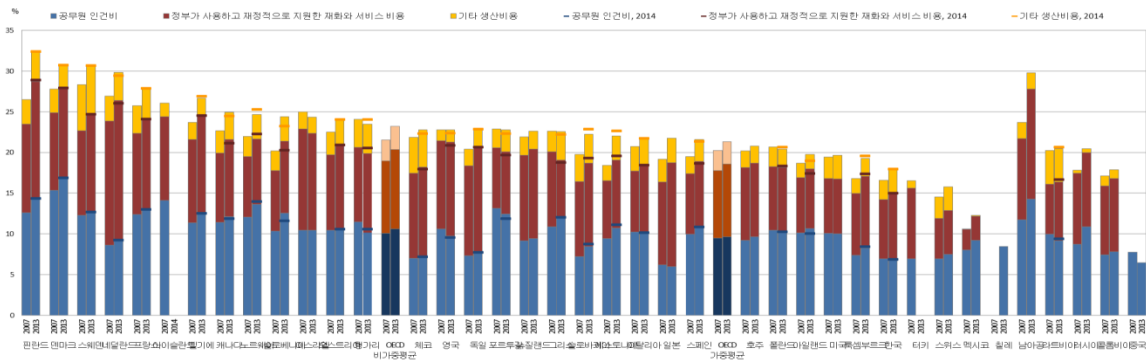
2.52, 2.53: 칠레,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51: 터키 자료는 시계열 자료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칠레와 중국의 자료는 인건비에 관해서만 사용 가능하다(칠레는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칠레의 자료는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2.53: 캐나다, 아이슬란드, 멕시코, 영국, 미국, 그리고 남아공은 일반정부가 자금을 대는 재화와 서비스를 국민계정에서 구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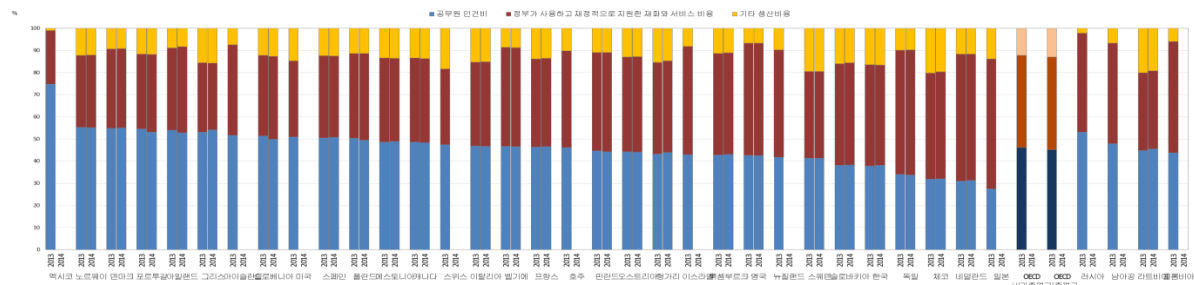
2.51. GDP 대비 생산비용 (2007년, 2013년,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는 호주 통계청이 공개하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National Accounts data에서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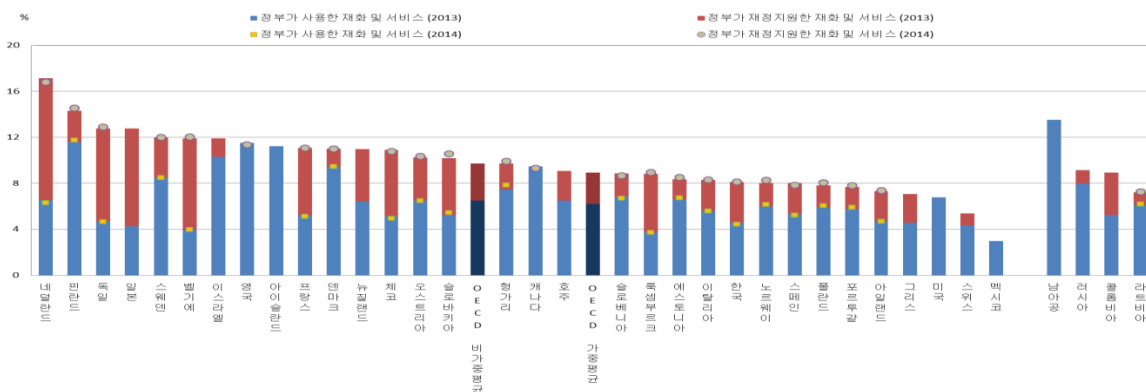
2.52. 생산비용의 구조 (2013년과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는 호주 통계청이 공개하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National Accounts data에서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67>

2.53. GDP 대비 일반정부 아웃소싱 지출 (2013년과 2014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는 호주 통계청이 공개하는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National Accounts data에서 제공받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576>

제3장 공공 고용

공공부문 고용
공공부문 여성고용
여성의 정치참여

공공부문 고용

OECD 국가들의 정부는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전문적이고 숙련된 공공부문 인력에 의해 가능하다. OECD 국가들 간 공공부문 고용규모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정부에 의한 활동이 그만큼 다양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뜻한다.

많은 서비스가 공무원에 의해 제공되거나 민간 또는 비영리 부문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통해서 제공된다. 몇몇 국가들에서는 의료서비스공급자, 교사, 응급요원 등이 정부에 의해 직접 고용된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대안 메커니즘을 통해 비정부 소유 기관, 즉 민간계약자에 의해 고용된다. 아웃소싱의 활용, 자원봉사, 자선 그리고/또는 비영리 부문의 상대적인 크기와 구조, 민간부문 제공자의 이용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이 공공부문 고용의 활용을 결정짓는다.

공공부문 고용규모는 OECD 국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 이상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반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지역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낮다. 일본의 경우 전체 고용의 8% 정도만이 공공부문 고용이고, 칠레와 멕시코의 경우는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이 중앙정부 고용은 다소 감소했다고 보고했지만("2008년 이후 중앙정부의 고용 개혁" 지표 참조),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의 비율은 21.1%에서 21.3%로 약간 상승하였다. 이러한 일반적 경향 속에서도 OECD 국가들 사이에 작은 차이들이 있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벨기에, 폴란드, 영국에서 전체 고용 대비 공공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는 1 p.p.이상 증가하였고, 스위스는 같은 기간 동안 3 p.p.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전체 노동력(실업자 포함)과 비교했을 때, 공공부문 고용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사한 방식을 보인다.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평균이 19%를 약간 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스페인의 지표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노동력의 13.2%에서 12.7%로 약간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이 16.2%에서 17.4%가 된 것과 비교된다. 유사하게 그리스에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전체 노동력 대비 공공부문 고용이 감소하였는데(19.9%에서 17.5%로),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고용에 대한 비율로는 약간 상승하였다(22.2%에서 22.6%로). 그러나 양 국가에서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관점에서 약간 상승한 것은 공공 부문과 비교하여 전체 고용이 가파르게 감소했기 때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인 공공부문 고용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국제노동기구(ILO)와 *ILOSTAT*(database)가 수집했다. 공공부문 고용은 국가계정체계(SNA)의 정의에 근거하여 모든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고용을 포괄한다. 일반정부 부문은 모든 수준의 정부들(중앙, 주, 지방 그리고 사회보장기금)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부처, 청, 국 그리고 정부당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비영리기관들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 또는 소유된다. 공기업은 준 공기업(quasi-corporation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료는 고용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러한 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전체 인원수를 나타낸다. 노동인구 혹은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혹은 실업자 중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인력을 가리킨다. 취업자는 일주일 또는 하루 같은 특정 기간에 유급고용 또는 자영업 범주에 해당되는 모든 취업연령 인구를 말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하여 취업연령 인구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으로 본다. 노동인구는 특정 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 생산을 위하여 노동력을 공급하는 모든 취업연령 인구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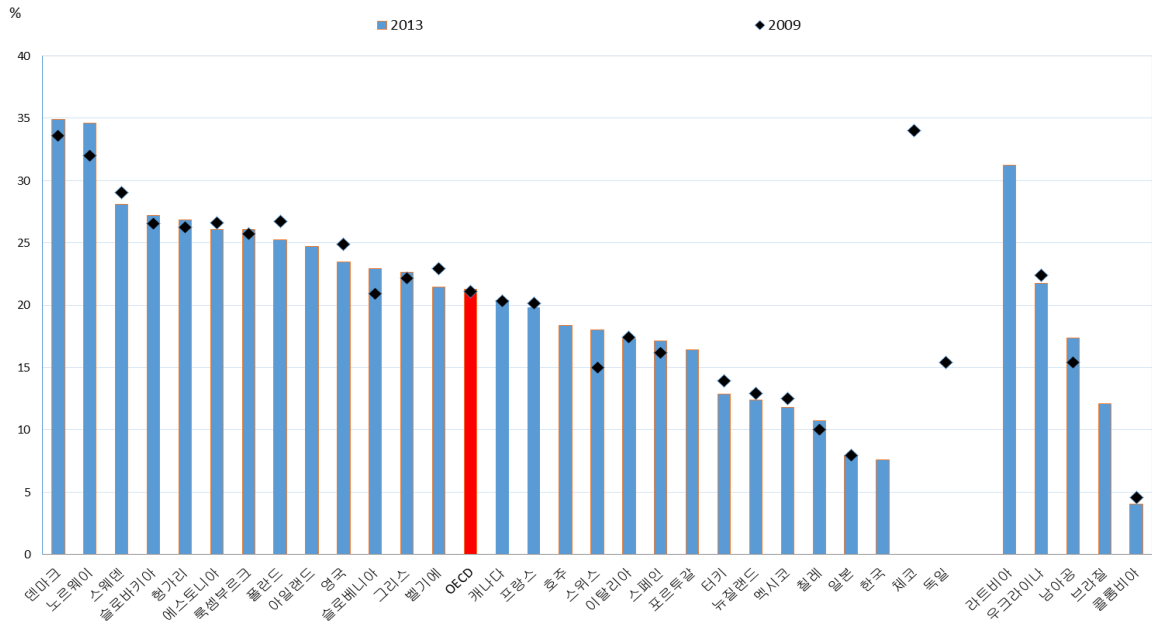
더 읽어볼 것

OECD (2011), *Public Servants as Partners for Growth: Toward a Stronger, Leaner and More Equitable Workforc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66707-en>.

그림 설명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체코,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체코, 뉴질랜드의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FTEs)을 나타낸다. 호주, 그리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2013년 대신 2011년의 것을 사용 했다. 스위스 자료는 2009년 대신 2008년의 것을 사용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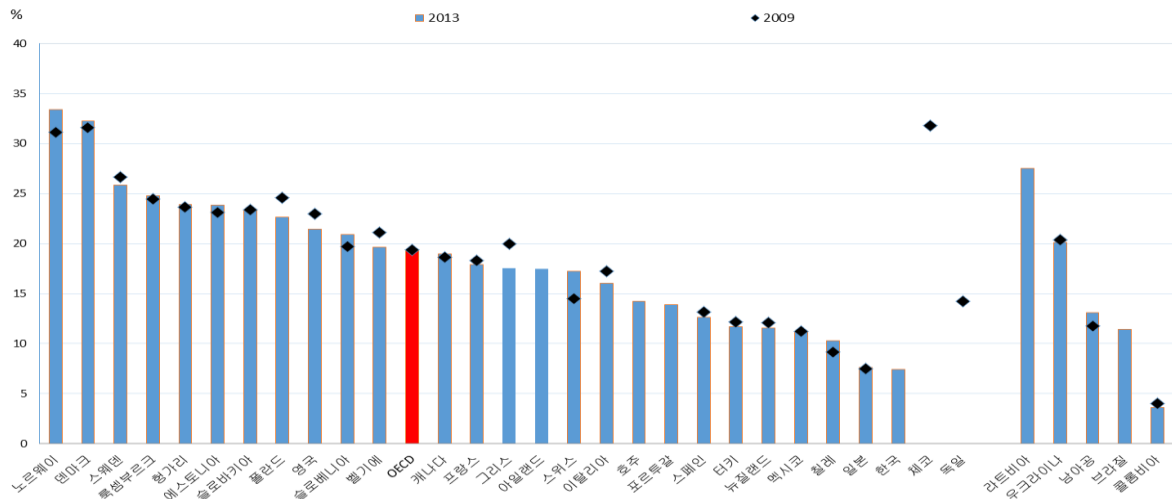
3.1.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2009년, 2013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이탈리아 자료는 해당 국가통계기관과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음. 포르투갈 자료는 해당 국가의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음. 한국 자료는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음

<http://dx.doi.org/10.1787/888933248603>

3.2. 노동인구 대비 공공부문 고용 (2009년, 2013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이탈리아 자료는 해당 국가통계기관과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음. 포르투갈 자료는 해당 국가의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음. 한국 자료는 해당 국가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음

<http://dx.doi.org/10.1787/888933248615>

공공부문 여성고용

공공부문 고용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용되는 것은 공정성, 개방성, 대표성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시민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질을 향상시킨다. 자료가 사용 가능한 OECD 국가들에서 2013년 평균 전체 공공부문 인력의 58%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70%이상이며 일본은 42%이다. 일본은 여성의 비중이 낮은 분야별 영역에 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했다고 보고했다.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공공부문의 여성 비율은 58.2%로, 전체 경제에서 여성 고용이 차지하는 비율인 45.3%보다 더 높다. 단, 자료에 공공부문 내 관리직을 맡고 있는 여성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부문 고용은 고용 조건 때문에 종종 여성에게 더 매력적이다. 여성은 보통 유연한 근무 시간, 다양한 사회경력과 선택권, 상대적인 직업안정성, 많은 보수 및 복리후생제도를 선호한다. 공공서비스 현대화와 그리고 실적중시와 다양성 같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가치 및 원칙을 강화시키는 것이 공공부문 고용에서 여성의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OECD, 2014a).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공공부문의 여성고용은 전체 경제(+0.3 p.p.)에 비해 더 빨리 증가하였는데(+0.6 p.p.), 룩셈부르크, 스위스, 스페인, 멕시코 같은 국가들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콜롬비아에서도 공공부문의 여성 고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역행하여 같은 기간 동안 에스토니아 경제에서 여성 고용은 1.6 p.p. 감소하였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평등(gender equity)은 수적 균형 그 이상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여성은 여전히 관리직 및 고위직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간제와 계약직이 많으며, 급여에서 남성과 큰 차이가 있다(OECD, 2014a). 정부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위한 정책은 다양성 및 고용평등을 위한 법률적 조치, 훈련/후원/리더십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급여평등, 일-가정 균형 등에 관한 인식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들은 국제노동기구(ILO)와 ILOSTAT (database)에 의해서 수집되었다. 공공부문 고용은 국가계정체계(SNA)의 정의에 근거하여 모든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고용을 포괄한다. 일반정부 부문은 모든 수준의 정부들(중앙, 주, 지방 그리고 사회보장기금)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 부처, 청, 국 그리고 정부당국에 의해서 통제되는 비영리기관들을 포함한다. 공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기관으로 정부에 의해 통제 또는 소유된다. 공기업은 준 공기업(quasi-corporations)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료는 고용계약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러한 기관들에 직접 고용된 전체 인원수를 나타낸다. 전체 고용은 일주일 또는 하루 같은 특정 기간에, 유급고용 또는 자영업 범주에 해

당되는 모든 취업연령 인구로 구성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국제비교를 위하여 취업연령 인구는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으로 본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a), *Women, Government an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Fostering Diversity for Inclusive Growth*,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074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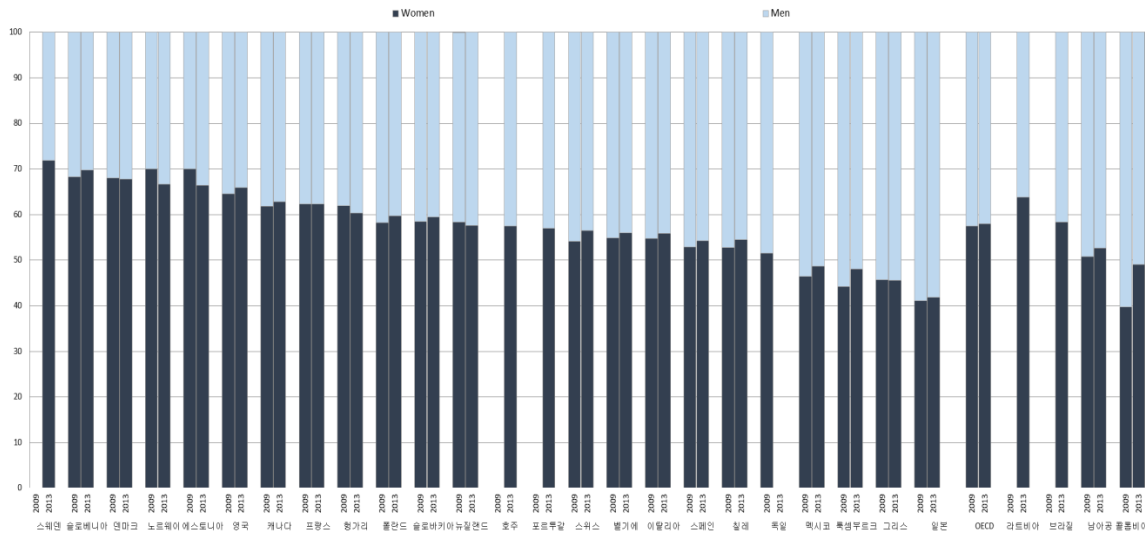
OECD/CAWTAR (2014b), *Women in Public Life: Gender, Law and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4636-en>.

OECD (2012),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79370-en>.

그림 설명

3.3: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네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미국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독일, 스웨덴 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부재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뉴질랜드의 자료는 정규직환산인력(FTEs)을 나타낸다. 호주, 그리스, 헝가리, 슬로베니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 했다. 덴마크,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자료는 2013년 대신 2011년의 것을 사용했다. 스위스 자료는 2009년 대신 2008년의 것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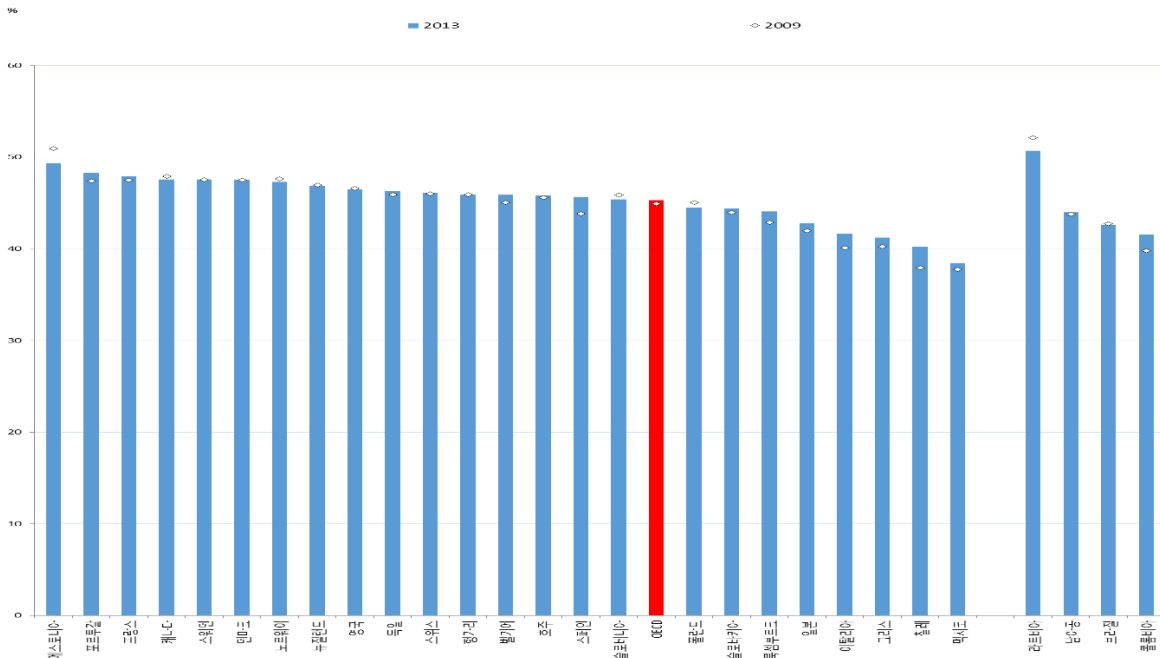
3.3. 공공부문고용에서 남성/여성의 비율 (2009년, 2013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이탈리아 자료는 해당 국가통계기관과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음. 포르투갈 자료는 해당 국가의 재무부로부터 제공받음.

<http://dx.doi.org/10.1787/888933248622>

3.4. 전체 고용에서 여성의 비중 (2009년, 2013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8632>

여성의 정치참여

많은 OECD 국가에서 의회의 여성수와 장관직에 임명되는 여성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다. 정치인들 사이에 성별균형이 높아질수록 공공정책의 질과 대응성이 향상될 수 있다. 급여 평등, 일-가정 균형, 성폭력과 같은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 때문이다. 의회 위원회가 독립적인 감시 및 책임성 제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의회는 성평등과 주류화(mainstreaming strategies)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여성은 여전히 의회 및 내각에서 온전히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는 “유리천장”을 마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과소대표 되고 있다(OECD, 2014).

2015년 평균적으로 여성은 하원 또는 단독의회 의석의 27.9%를 차지하고 있다.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페인은 40% 이상이며, 일본은 10% 이하이다(그림 3.5). 2002년에서 2012년 사이 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약간 상승하였다(+7 p.p.). 2015년에는 16개 OECD 국가들만이 30%라는 의미 있는 수치를 달성하거나 넘어섰다.

여성의 의회참여에 대한 장벽은 여성후보 부족, 자금조달 불균형,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제한된 정치적 장려, 정당 내 성평등 노력 부족, 성 고정관념 등을 포함한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역사적 불균형을 종식시키고 성평등의 역행을 막기 위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그 수단으로써 성별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다(종종 임시적으로). OECD 국가들에서 할당제는 주로 후보자 추천과정(예: 정당 명부에 여성을 포함하거나 선거구에서 추천됨)에서 적용된다. 이러한 할당제는 법으로 규정된 성별 할당제(헌법 또는 선거구법으로 설립되어 여성 후보자를 위한 자리를 할당함) 또는 자발적인 정당 할당제(정당이 선거후보로 특정 비율의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함)가 될 수 있다.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 및 연방정부의 여성장관직 비중 역시 2015년 기준 평균 29.3%로 다소 제한적으로 대표되고 있다. OECD 국가들 사이에 여성장관직 비중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에서는 성평등이 이루어졌지만, 헝가리, 한국, 슬로바키아, 터키의 경우 장관 10명 당 여성은 1명도 안된다.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장관 비중은 증가하였다(+ 8.2 p.p.). 정치적 주기와 의회 재편성에 따라 해마다 이 수치가 변화할 수는 있다. 2012년 선거 이후, 프랑스의 경우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여성장관직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9.2 p.p.).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여성장관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장관직 임명과정(국가별 정치시스템(의회 선거 또는 임명 vs. 의회 승인 또는 승인 없이 대통령이 임명))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여성은 여전히 동등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여성의원에 대한 자료는 하원 혹은 단독의회를 가리키며, Inter-Parliamentary Union's PARLINE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되었다. 자료는 2015년 12월 1일, 2012년 10월 31일, 2002년 10월 25일에 기록된 여성의원 비중을 의미한다. 열은 파란색 국가들은 2013년 1월부로 하원 혹은 단독의회의 입법 후보자 할당량을 의미한다. 입법부 할당제도는 해당 국가의 선거법, 정당법, 혹은 이들과 유사한 법에 명시되어 있다. 정의상 두 형태 모두 법적 규정들을 기반으로 하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치단체들이 동등하게 적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입법된 할당량 불이행 시 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정치단체들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별할당제 자료는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IDEA)의 Global Database on Quotas for Women에서 수집하였다.

여성 장관 관련 자료는 Inter-Parliamentary Union의 "Women in Poli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자료는 2015년 2월 1일, 2012년 1월 1일, 2005년 1월 1일부로 임명된 여성 장관 비중을 나타낸다. 자료는 전체 장관직에서의 비중을 나타내는데, 이는 부총리와 장관직을 포함한다. 총리/정부수반 또한 장관직을 수행할 경우 포함하였다. 부통령과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장은 합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Women, Government and Policy Making in OECD Countries: Fostering Diversity for Inclusive Growth*,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074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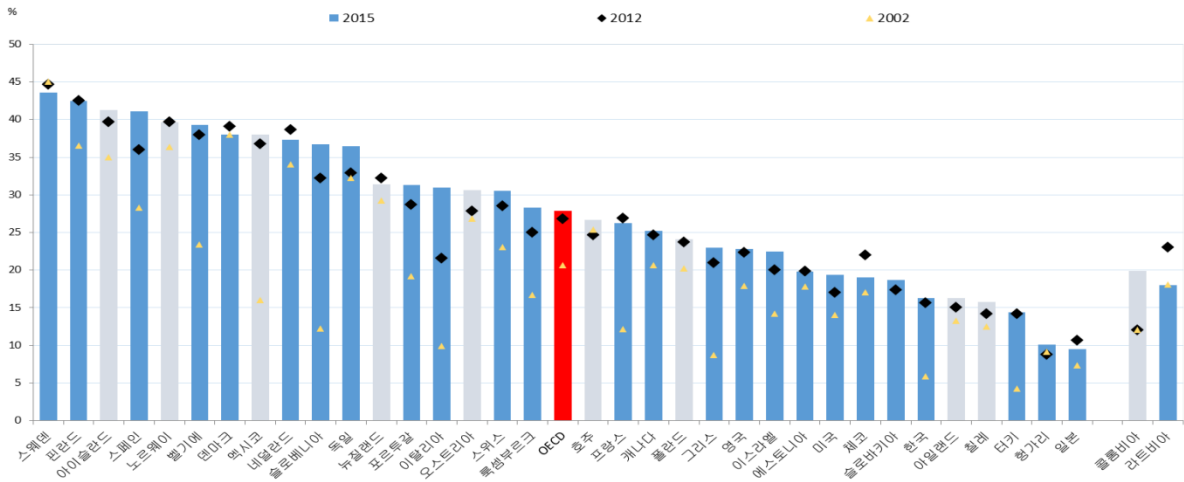
OECD/CAWTAR (2014), *Women in Public Life: Gender, Law and Policy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4636-en>.

그림 설명

3.5: 2002년 슬로바키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3.5. 여성 국회의원 비중과 법적 여성의원 할당율 (2002년, 2012년, 2015년)

하원 혹은 단원제 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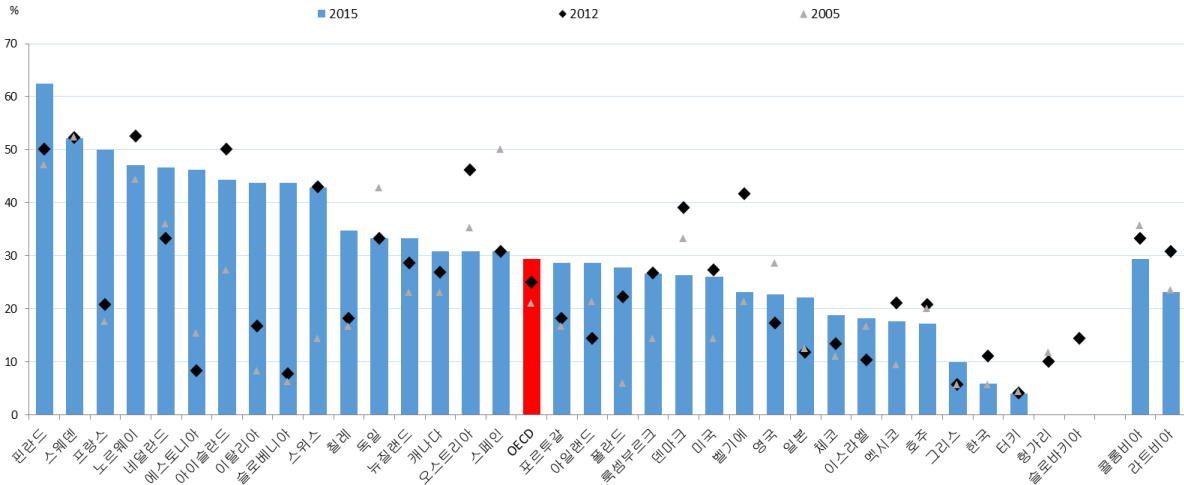


설명: 회색 막대 그래프는 2013년 1월 21일 현재 하원이나 단원제 의회에서 할당제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PARLINE (database), and IDEA Global Database of Quotas for Women.

<http://dx.doi.org/10.1787/888933248642>

3.6. 여성 장관의 비중(2005년, 2012년, 2015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omen in Politics", 2005, 2012 and 2015.

<http://dx.doi.org/10.1787/888933248658>

제4장 정부기관

OECD 국가 정부센터의 주요 제도적 특징

정부센터의 역할

정부센터 영향력의 정도

OECD 국가 정부센터의 주요 제도적 특징

수상실(Chancellery),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대통령비서실(Office of the President), 대통령실(Presidencia), 백악관중역실(White House Executive), 추밀원(Privy Council), 왕궁부속문관(Casa Civil)으로도 알려져 있는 정부센터(the center of government, CoG)는 정부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정부센터의 주요 목적은 정부가 증거에 기초한, 전략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센터의 구조는 한편으로는 건축물의 기초를 제공하는 헌법 및 법률의 요구조건을 반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시점에서 정부 수반의 요구, 우선순위, 개성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정부센터는 변화하는 사건 상황에 효과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규모가 작을 필요가 있다. 규모가 커지면 유연성을 상실하고 통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렇지만 너무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그 능력 또한 약해진다는 것이 최근의 경험으로, 정부센터는 공정하고, 권위 있는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을 위협 받게 된다.

2011년 정부센터 전체 직원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프랑스(2,100), 터키(2,085), 영국(1,896), 칠레(1,665), 이탈리아(1,246) 같은 큰 단일국가를 제외하고는 1,00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9개 OECD 국가들에서는 정부센터에 200명 미만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스위스(192), 벨기에(160), 슬로베니아(153), 스웨덴(148), 에스토니아(103), 네덜란드(80), 노르웨이(70), 이스라엘(45), 아이슬란드(34)이다.

정부센터는 전체 중앙정부 고용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2011년 평균적으로 정부센터는 전체 중앙정부 직원 1,150명 당 1명에 해당하였다. 이 비율이 매우 낮지만, OECD 국가 별로 매우 다양하다. 칠레, 스위스, 영국은 상대적으로 정부센터의 비중이 크지만(각각 10.70%, 5.94%, 3.87%), 노르웨이, 이스라엘은 중앙정부 고용의 0.30% 미만을 나타냈다.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정부센터 기관은 새로운 정책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 적응적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적응은 자원과 조직규모의 증가 및 감소로 나타났다. 가끔은 정부센터의 효과성이 높아지면서도 재정과 조직규모는 감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몇 년 동안 에스토니아와 이탈리아의 정부 사무실은 기능을 이전시키거나 제거시켰다. 또, 새로운 환경은 정부센터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2010년 영국에서 내각사무처에 '효율성 및 개혁팀 (Efficiency and Reform team)'을 설립한 것은 경제적 변화에 따른 정부센터의 중요한 변화의 예이다. 유사하게, 몇몇 구체적인 사건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지진은 정부센터의 역량을 강화시켰고, 예산과 직원 수를 늘리도록 만들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3년 정부센터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OECD 설문조사(33개국, 즉 28개 OECD 국가들과 5개 비회원 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응답하였다)로 수집되었다. 응답자들은 정부수반과 각료이사회 또는 내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하는 고위공무원이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부센터(CoG)는 수반(대통령, 수상, 내각을 집합적으로)을 돕기 위한 행정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센터는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수상실(Chancellery), 대통령 비서실(Office/Ministry of the President), 각료이사회 사무실(Council of Ministers Office) 등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다. 사실상 모든 정부센터에 의해 공유되는 한 부서는 전적으로 정부수반만을 위해 일하는 부서로, 정부센터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것도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수상실(Cabinet of the Prime Minister) 또는 부속실(Private Office) 같은 것들이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 GOV/PGC/MPM(2014)3, OECD, Paris, [http://www2.oecd.org/o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MPm\(2014\)3](http://www2.oecd.org/o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MPm(2014)3).

그림 설명

멕시코 그림은 INEGI (2014) Ingreso y gasto público en México 2014, Edición Sede, Aguascalientes로부터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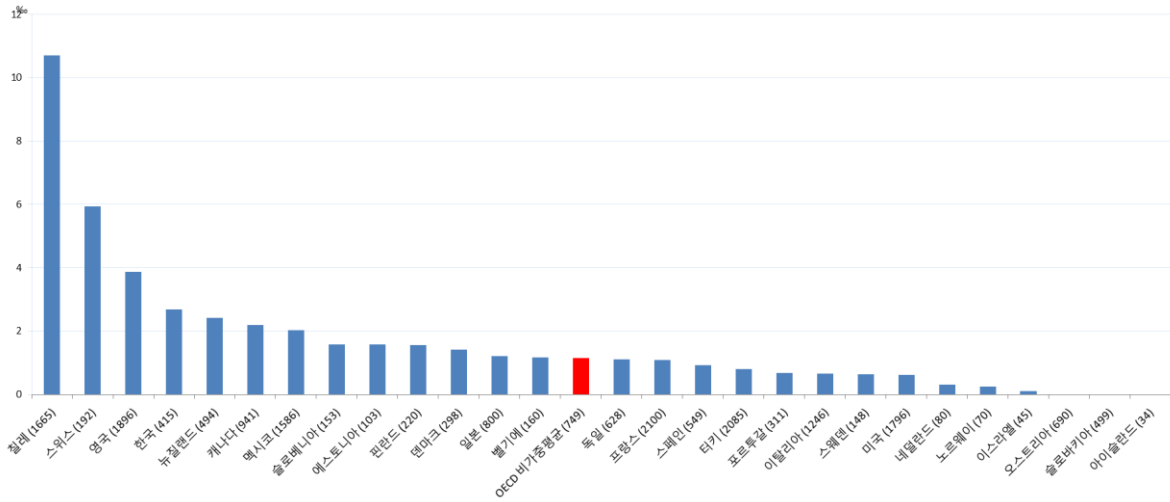
4.1: 호주,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의 정부센터 고용에 관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의 고용 자료는 2011년 것 대신 2010년의 것을 사용했다.

4.2, 4.3: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기타" 범주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고용과 예산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 경우를 말한다.

Information on data for Israel: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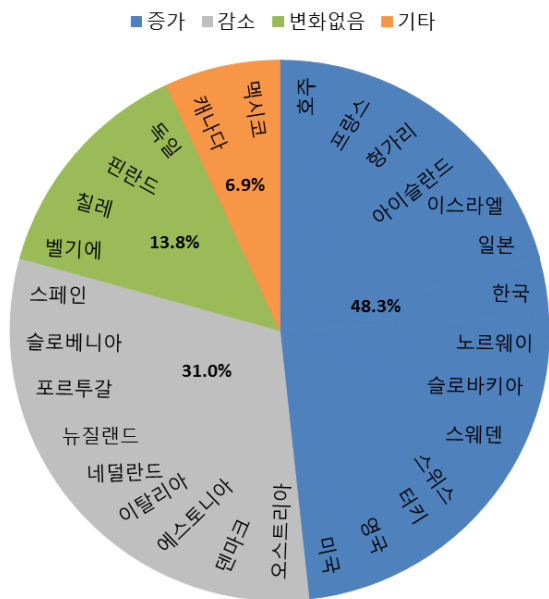
4.1 OECD 국가 정부센터 인력이 중앙정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2011)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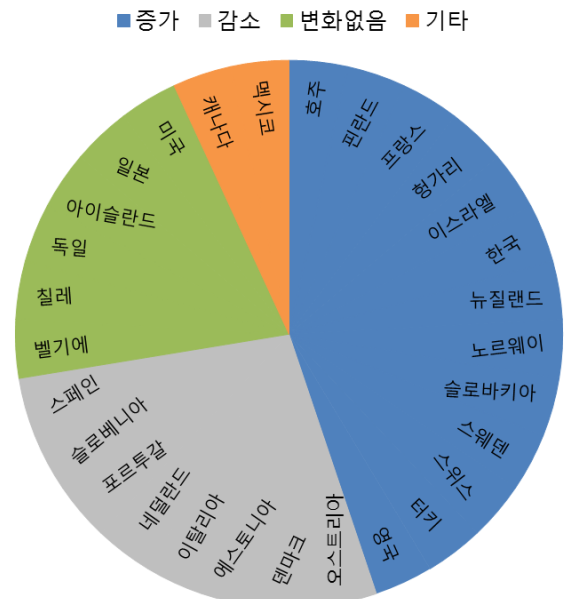
4.2. 중앙정부 정부센터 고용률 변화(2008-12년)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673>

4.3. 정부센터 예산 변화(2008-12년)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688>

정부센터의 역할

각국의 정부센터(CoG)는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의 산물이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관해서는 강한 유사성이 존재한다. 정부센터는 전통적으로 정부수반과 내각을 위해 일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역할에 더하여 정책개발, 조직화, 집행, 모니터링 체계 같은 새로운 기능을 더 적극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정부 부서나 기관들과 더 높은 수준의 통합과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금융 및 재정위기는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핵심 파트너들을 이러한 조치를 지원하도록 동원하는 정부의 능력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OECD 국가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헌법들이 의사결정 방식을 결정한다. 대통령제에서는 핵심 장관 또는 고문단과의 양자회담(bilateral meetings)이 더 자주 있으며, 전체 각료회의는 자주 열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정기 각료회의는 정책논의의 주요 채널로 남아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정부센터의 공통된 역할은 증거의 질을 통제하고, 여러 대안들의 목표 및 포용성을 확인하며, 그리고 과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회의의 효과적인 준비 과정에는 자료검토와 회의 전 갈등조정에 같은 다양한 임무가 포함된다. 자료가 사용 가능한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정부센터의 약 60% 정도는 각료회의이전에 장관위원회(ministerial committees)와 함께 논의할 의제를 조정한다. 정부센터의 40% 정도는 브리핑과 다른 임무도 책임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스페인, 노르웨이, 헝가리의 정부센터는 각료회의 이전에 논제 조정을 맡지 않는다.

2013년에 실행된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센터는 추가적인 업무도 하고 있다. 정부센터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 중, OECD 국가들에서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OECD 국가들 중 89%의 정부센터가 각료회의 준비를 책임지고 있다. 둘째, 68%의 정부센터가 정부 부서들의 정책 조정을 책임지고 있다. 셋째, 분석된 OECD 국가들의 57%에서 정부 프로그램 준비가 주요 우선순위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많은 수(54%)의 정부센터가 정부정책 집행을 모니터링 하는 책임에 대해 언급하였다.

OECD 국가들의 정부센터가 책임지고 있는 기능의 수는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하다. 이탈리아,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의 정부센터는 분석된 15개의 기능 중 10개를 독점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미국과 슬로바키아의 경우는 주로 다른 정부부처 및 기관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15개 기능 중 10개 이상).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3년 정부센터의 조직과 기능(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에 대한 OECD 설문조사(33개국, 28개 OECD 국가들과 5개 비회원 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응답하였다)로 수집되었다. 응답자들은 정부수반과 각료이사회 또는 내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하는 고위공무원이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부센터는 수장(대통령, 수상, 그리고 내각)을 돕기 위한 행정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센터는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수상실(Chancellery), 대통령비서실(Office/Ministry of the President), 각료이사회 사무실(Council of Ministers Office) 등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다. 사실상 모든 정부센터에 의해 공유되는 한 부서는 전적으로 정부수반만을 위해 일하는 부서로, 정부센터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것도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수상사실(Cabinet of the Prime Minister) 또는 부속실(Private Office) 같은 것들이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 GOV/PGC/MPM(2014)3, OECD, Paris,
[http://www2.oecd.org/o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MPm\(2014\)3](http://www2.oecd.org/o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MPm(20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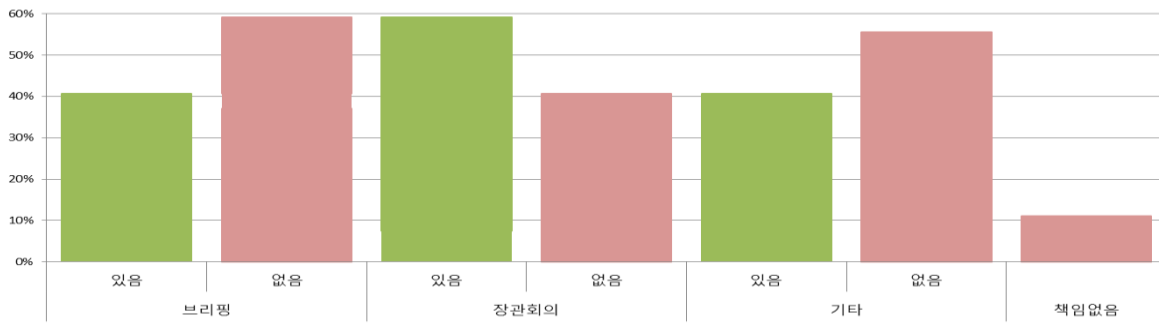
그림 설명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그리고 폴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OECD 국가들만 그림에 포함되었다.

4.4: 스웨덴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4.4. 국무회의의 안건에 대한 정부센터의 사전 국무조정 책임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698>

4.5. 책임 수준에 따라 분류한 정부센터의 주요 역할

국가	국무회의 준비	정부 메시지 의사소통	행정부 인력개발 전략	행정개혁	전략적 기획	위기관리 / 전략적 예	정부시업 준비	정책분석	정책조정	규제의 질 및 일관성	정책 집행 감독	하위 정부와의 관계	입법부와의 관계	국제 개발 및 원조	초국가적 협조/정책
호주	●	○	□	○	●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	○
OECD 합계															
● 중앙정부 책임	25	10	3	6	14	7	16	4	19	7	15	5	14	0	1
○ 중앙정부와 다른 기관 간 공동 책임	1	18	9	13	13	15	10	20	9	14	10	12	14	6	18
□ 다른 정부부문의 책임	2	0	16	9	1	6	2	4	0	7	3	11	0	22	9

● 중앙정부센터 책임

○ 중앙정부센터와 다른 기관 간 공동 책임

□ 다른 정부부문의 책임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705>

정부센터 영향력의 정도

정부센터(CoGs)는 여러 부처의 작업계획을 정부 조치에 맞게 조정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정책주기에 걸쳐 이러한 적극적인 정부센터의 역할은 새로운 조정과 모니터링 수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정부센터는 정책 논의를 조직하기보다는 의제를 설정하고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이는 인력과 재원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센터에 의한 수평적 조정과정은 범위와 참여의 관점에서 더 광범위할 수도 있다. 행정부 내 정책조정이 정부센터의 주요 초점이지만, 현대 정부의 진화로 인해 정부센터는 행정부 외부의 관계자들과 더 많이 관계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효과적인 활동이 점점 국내 수준에서의 좋은 거버넌스에도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활동이 정부센터의 영역 내로 들어오고 있다.

각 부처에 대해 정부센터가 끼치는 영향의 정도는 OECD 국가들 간에 각각 다르다. 2013년에 시행된 정부센터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29.6%만이 정책 조정에 대해서 각 부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그리고 터키가 그러한 국가들이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대부분의 정부센터 공직자들이 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59.3%).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포르투갈에서와 같이 영향력이 낮은 경우는 부처와 부서에 상당한 자율성을 주는 정치적 전통과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

또한 어떻게 정부센터가 핵심 임무를 이행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센터장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정부센터 수장의 역할은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정부수반 및 그의 정치참모들과 가까우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고위공무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임을 얻어야 하며, 더 일반적으로는 행정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 선거로 인한 변화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방향, 새로운 우선순위, 새로운 관점을 불러오며, 이로 인해 정부센터의 조직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

OECD 국가간 정부센터장 임용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된 국가들의 53.57%에서 정부센터장은 정치적으로 임명되어 정권이 바뀔 때 교체된다(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에서처럼 교체되기 전에 정해진 임기를 채우는 것이 허락되는 경우는 제외). 나머지 국가들(46.43%)에서는 정부센터장이 공무원으로 보통 최고위급 공무원이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3년 정부센터의 조직과 기능(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에 대한 OECD 설문조사(33개국, 28개 OECD 국가들과 5개 비회원 국가들, 그리고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응답하였다)로 수집되었다. 응답자들은 정부수반과 각료이사회 또는 내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하는 고위공무원이며,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정부센터는 수장(대통령, 수상, 그리고 내각)을 돕기 위한 행정체계를 의미한다. 정부센터는 국가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무국(General Secretariat),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 수상실(Chancellery), 대통령비서실(Office/Ministry of the President), 각료이사회 사무실(Council of Ministers Office) 등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부서로 구성된다. 사실상 모든 정부센터에 의해 공유되는 한 부서는 전적으로 정부수반만을 위해 일하는 부서로, 정부센터 전체가 동일하지는 않다. 이것도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수상사실(Cabinet of the Prime Minister) 또는 부속실(Private Office) 같은 것들이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 GOV/PGC/MPM(2014)3, OECD, Paris,
[http://www2.oecd.org/o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MPm\(2014\)3](http://www2.oecd.org/oecdinfo/info.aspx?app=OLIScoteEN&Ref=GOV/PGC/MPm(2014)3).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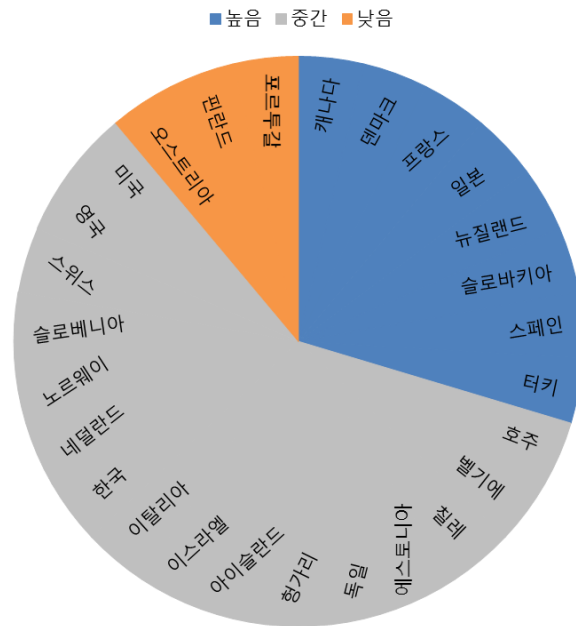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그리고 폴란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OECD 국가들만 그림에 포함되었다.

4.6: 스웨덴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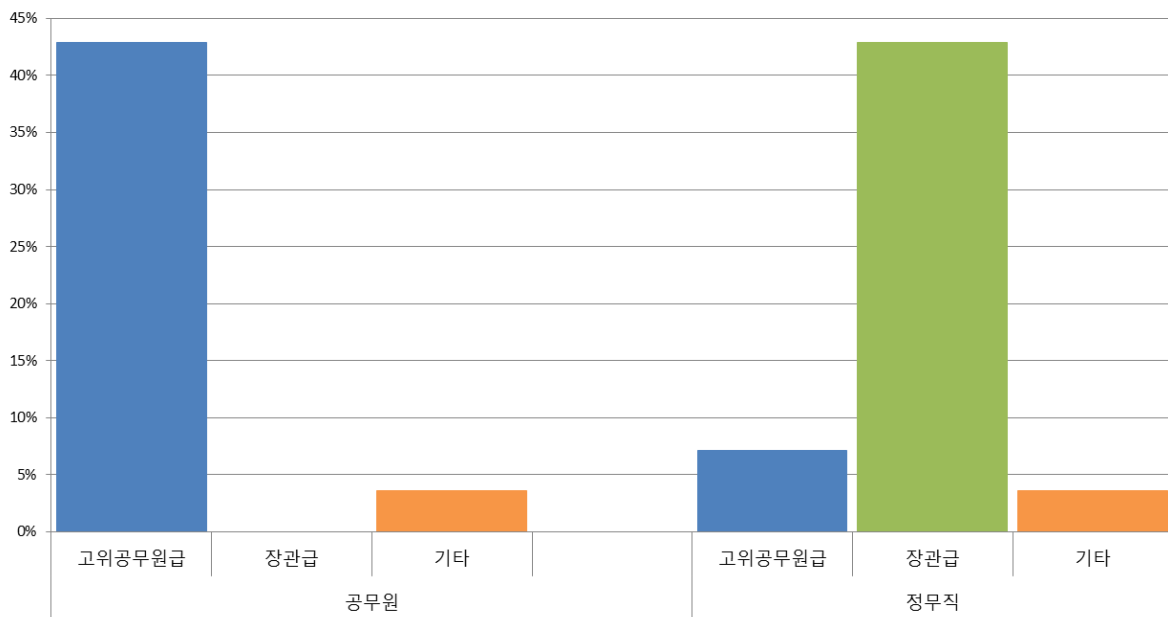
4.6. 계선 부처의 상호 협조 유도에 대한 정부센터의 영향력(2013)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713>

4.7. 정부센터장의 지위(2013)



출처: 2013 OECD Survey on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8726>

제5장 예산 관행과 절차

특집: 의료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성과주의 예산과 최고감사기구

투자 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

특집: 의료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

의료는 정부지출에서 두 번째 큰 분야이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OECD, 2010), 21세기 첫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의료지출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앞질렀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안정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또는 경제 안정성(재정적 공간)을 위협하지 않으면서, 추가 지출을 해야만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국가들이 재정적 목표를 충족시키면서 의료지출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지출이 특히 복잡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에 대한 접근은 시민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되는데, 이 분야의 정부정책은 매우 재정절약적이다. 둘째,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의료서비스 수혜자(시민/환자)와 이를 지원하는 공공자원 사이에 개입한다. 이는 구매자(보건부처, 사회보장기관, 사회보험기금, 또는 하위정부), 다양한 서비스 전달자(의원,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 의약품, 테스트, 장비 제공자(제약회사와 실험실)를 포함한다.

의료지출에 대한 예산배정은 OECD 국가별로 다양한데, 의료시스템 형성의 역사적인 유산과 분권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 영국과 같이 국영 의료시스템을 따르는 국가는 의료가 예산에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독일의 사회보험 모델에 기초하여 공공의료시스템을 개발한 국가에서는 의료시스템이 주로 사회기여금을 통해 운영된다. 그리고 독립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중앙정부 예산의 일부가 아니다. 조사된 대부분(26개국 중 18개국)의 OECD국가들에서, 의료지출은 부분적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종종 전체 의료지출의 매우 작은 일부분을 차지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오스트리아, 또는 프랑스 같은 국가들의 의료분야 예산규모는 전체 공공의료 지출의 5% 미만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정부 의료지출 예산의 한계를 설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초과지출은 흔하게 발생한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7년 중 적어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초과지출이 일어났다. 따라서, 많은 OECD 국가들이 초기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초기 경고 메커니즘”을 설계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정보가 있는 20개 국가 중 7개 국가에서 의료지출이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스위스와 네덜란드는 특정 의료지출을 신고하는데 각각 12개월, 24개월이 소요된다. 네덜란드의 경우, 이는 의무가입의 의료보험시스템 때문일 수 있는데, 정부는 국민이 민간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때 보조하게 되어 있다.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앞에는 여러 도전과제가 놓여 있다. 장래에 정부 의료지출에 대한 지원은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제상황만큼이나 재분배에 대한 시각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다. 사실, 공공의료시스템에는 건강한 사람과 환자뿐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재분배가 수반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대부분의 자료는 2013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수행된 OECD Survey of Budget Officials on Budgeting Practices for Health를 기반으로 한다. 27개국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OECD 비회원 국가인 남아공 포함). 설문조사 결과는 2014년 1월에 개최된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열린 'OECD 의료보장시스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관한 고위 예산-의료 담당 공무원 합동 네트워크'에서도 논의되었다.

초과(미달)소비는 예산지출보다 실제 지출이 높다(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제한 지원혜택(open-ended entitlement)은 제도화된 권리 또는 법률에 기초하여 특정 계층이 특정 의료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정부프로그램이다. 무제한 지원혜택은 수요유발 지출이며, 지출수준의 변경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Fiscal Sustainability of Health Systems, Bridging Health and Finance Perspective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gov/budgeting/sbonetworkonhealthexpenditures.htm.

OECD (2010), *Value for Money in Health Spending,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8818-en>.

그림 설명

5.1: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의료지출이 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의료지출의 매우 작은 부분에 그친다. 전체 의료지출은 주로 하위정부 또는 사회보장기관에서 재원을 댄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분리된 의료/사회보장예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의회의 승인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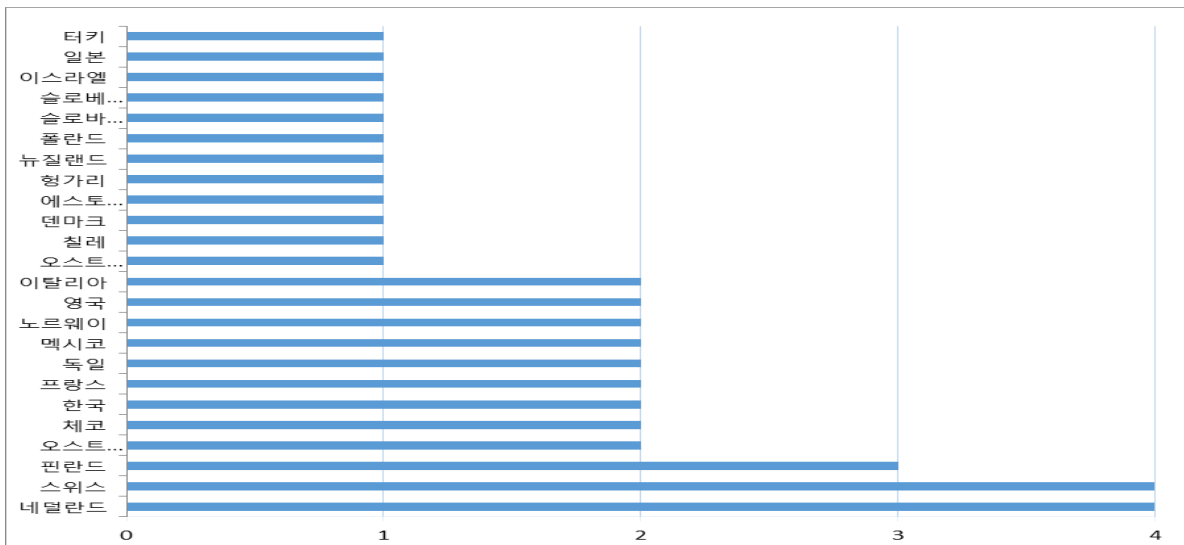
5.1. 정부예산에서 의료지출이 차지하는 정도 (2012년)

국가	
부분적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PRT, 슬로바키아, 스웨덴, 터키
완전	영국, 헝가리, 이스라엘, 뉴질랜드,
없음	핀란드, SLO

출처: OECD (2013), Survey on Budget Officials on Budget Practices for Health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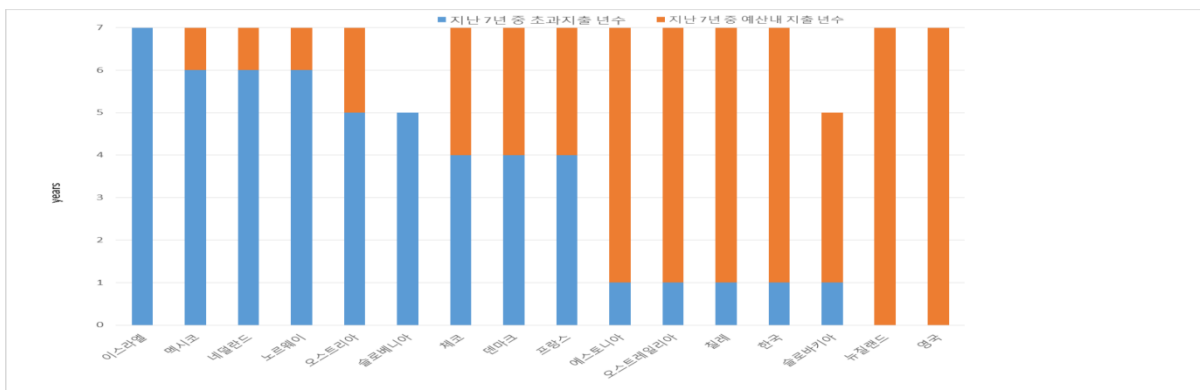
5.2. 의료지출이 중앙정부에 보고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단위: 월, 2012년)



출처: OECD Survey of Budget Officials on Budgeting Practices for Health, 2013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743>

5.3. 의료비 초과지출(2006-2011년)



출처: OECD (2013) Survey of Budget Officials on Budgeting Practices for Health.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756>

성과주의 예산과 최고감사기구

점점 복잡해지는 거버넌스 환경, 제한된 재정 공간, 그리고 증가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에 대항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더 나은 성과와 관리를 보여줘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다. 최고감사기구(SAIs) 또한 전통적으로 중심이 되었던 재정감사에서 성과 또는 금전가치 측면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제로 국제회계감사기구(INTOSAI)는 “성과감사는 공공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최고감사기구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OECD 국가들에서 최고감사기구는 성과주의 예산과 관리시스템의 더 나은 설계와 사용에 기여하고, 공공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과 성과감사 간의 관련성을 강화시키고, 성과감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최고감사기구가 규정준수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감사기술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입법부 및 더 많은 대중과 이 영역의 업무에 대해 소통전략을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현 관행의 연속선상에서, 최고감사기구의 가장 일반적인 업무는 자체적으로 설계한 성과감사 또는 ‘지출비용대비 가치 감사’(value-for-money audits)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매년 시행되고 발간되는 성과 또는 지출비용대비 가치 감사의 빈도수는 다양하다. 최고감사기구와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OECD 설문조사에 응답한 26개 OECD 국가들 사이에서, 절반이 약간 넘는 국가들이 “항상” 성과 또는 지출비용대비 가치 감사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 “종종” 한다고 답한 국가들은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그리고 네덜란드이다. 세 국가들(칠레, 체코, 스페인)은 결코 성과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예산관련 자료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와 대상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최고감사기구가 성과감사에 이러한 목적과 대상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26개 국가 중 5개 국가(핀란드,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만이 이러한 과정이 “항상”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답한 국가는 5개국(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일본, 뉴질랜드, 터키)이었다.

설문에 응한 국가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수가 최고감사기구가 항상 또는 종종 예산에 사용되는 성과정보의 질을 평가하거나 비평한다고 보고했다. 또는 예산상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감사한다고 답했다. 이상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계선부처(line ministries)와 정부센터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관들이 성과정보를 개발하고 개선하며 그들이 성취한 것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목표가 내부관리 및 학습에도 사용되고, 그러한 학습에 기초하여 진화되고 개선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규정준수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감사는 원래 취지를 놓치

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최고감사기구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모델의 질을 평가하거나 성과예산 관련 시스템의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 답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표 5.4의 자료는 2014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Performance and Results Network의 회원 설문조사의 일부분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재무부 고위공무원이다. 이 공무원들은 설문조사를 준비하면서 국가 최고감사기구와 논의할 수 있었고, 몇몇이 그렇게 했다고 보고하였다. 자료는 성과감사의 질에 대한 정보 또는 최고감사기구가 감사를 마친 기간에 관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25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여기에 있는 자료는 성과관련 예산시스템에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기초한 것이다. 응답 단계는 5개 범주로 항상, 종종, 때로, 거의 아님, 절대 아님/해당없음이다.

“성과관련 예산편성(Performance-related budgeting)”은 자원 할당(배분)과 비금융정보 즉, “성과” 정보(예컨데, 산출물, 결과, 결과물, 영향) 간 명확한 연관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자원의 할당과 사용에 있어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질을 개선하고 시민과 사회를 위해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TOSAI Performance Auditing Committee에 따르면, 성과감사는 정부 사업, 서비스, 활동에 대한경제,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하게 해 준다.

더 읽어볼 것

INTOSAI (2010), “ISSAI 3100 – Performance Auditing Guidelines: Key Principles”, approved at XXth Congress of INTOSAI, Johannesburg.

OECD (2014), “Background Note: Mini-Survey on Supreme Audit Institutions and Performance-Related Budgeting”, prepared for the 10th Annual Meeting of the OECD Senior Budget Officials Performance and Results Network, OECD, Paris.

그림 설명

5.1: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성과감사에 관한 장기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관련 정보에 대한 중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5.4. 성과주의 예산시스템에서 최고감사기구의 역할

	공공기관의 재정 정보 감사	성과 감사와 적격성감사	성과 목표 달성에 대한 감사	성과 정보의 질 평가	사용된 프로그램 논리 모델의 질 평가	성과주의예산 시스템 평가와 개혁 권의
오스트레일리아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체코	◆	■	■	■	■	■
핀란드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
한국	●	◆	●	●	●	◆
멕시코	●	●	●	●	●	◆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네덜란드	●	◆	◆	◆	▲	▲
터키	●	▲	◆	◆	■	▲
미국	◆	▲	▲	▲	▲	▲
영국	●	●	●	●	▲	●
OECD total						
● 항상	20	6	5	3	4	2
▲ 때때로	2	7	5	3	6	8
◆ 종종	4	9	5	11	4	4
▲ 드물게	0	1	4	2	3	4
■ 결코없음	0	3	7	7	9	8

출처: OECD (2014) Mini-Survey on Supreme Audit Institutions and Performance-related Budgeting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766>

투자 프로젝트의 비용편익분석

정부는 예산제약에 직면해 있기에 비용대비 가장 큰 편익을 가져다 줄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방치되어 비효율적인 결과(예: 독점)를 낳는 시장실패의 경우 보통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정부사업이 전통적인 방식대로 공적으로 제공되든 공공-민간 파트너십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수행되든지,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정부의 책임으로 남는다. 비용편익분석(CBA)은 오래된 지적이고 실용적인 역사를 가진 방법으로,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지 여부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되었다.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은 기회비용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편익을 평가하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왜곡될 수 있는 시장가격보다는 이러한 회계상의 가격(잠재가격)을 더 적합한 신호로써 사용한다. 그 다음 성과지표가 계산된다. 보통 사전에 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기 위해서는 비용 대비 편익이 플러스 수치여야 한다.

2014년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OECD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전국적인 법적 요건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사한 국가의 55%). 그러나 주/지방 정부 수준에서 관련 법안이 존재하거나(40%의 국가들), 중앙정부가 비용편익분석을 권장하거나 촉진하고 있다(15%의 국가들). 캐나다, 영국, 칠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든 실행가능성 검토 단계 또는 의사결정 초기 단계에서 비용편익분석은 프로젝트 선택과 결정 수단으로 확고히 규정된다. 추가적으로 독일, 네덜란드, 멕시코, 노르웨이, 그리고 프랑스를 포함한 20개국 중 10개국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와 정책분야를 포함하는 비용편익분석의 활용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다.

법안, 규제 또는 공식문서에 근거해,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목적에 대해 답하라 했을 때, (19개국 중 16개 국가에서) 실행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선택/결정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투명성을 위한 도구로 여겨지고(19개 중 11개 국가), 중앙정부 수준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수단(19개 중 10개 국가), 그리고 실행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프로젝트 설계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평가수단(19개 중 10개 국가)으로 여겨진다. 최근의 사용 가능한 정보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은 5분의 2 이상의 국가들에서 프로젝트 감시에 사용된다.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는 정책 학습의 도구로 사용한다.

비용편익분석은 조사된 국가들의 3분의 2 이상에서 중앙정부 수준의 공공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상 요건으로 나타났다. 단,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종류의 평가분석과 보완적으로 사용된다.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멕시코, 칠레에서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당국에 재원을 할당할 때 비용편익분석이 핵심 의사결정 도구로 나타났다. 계선조달 당국과 부서가 지배적인 다른 국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여러 의사결정 도구들 중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비용편익분석의 집행은 해당 부서의 초점에 따라 특정 부서에 위임된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분석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같은 대규모 인프라 사이에 더 흔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문화와 레저, 과학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독일, 아일랜드, 터키에서는 모든 종류의 프로젝트에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4년 OECD는 Rajaram et al. (2010)의 공공투자 관리 체계를 따라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문조사(Survey on Cost Benefi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20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비용편익분석의 범위와 목적, 그 역할과 책임, 내용과 방법론, 그리고 관련된 공공 책임성과 학습을 다룬다. 어떻게 국가가 비용편익분석을 집행하는지, 그리고 관련 특징과 적용된 방법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모든 OECD 국가들에게로 설문조사가 확장되었다. 설문조사는 재무부 또는 중앙 예산 또는 공공 투자역할을 하는 동등한 부서의 대표자(계선부서와의 연락책과 기타 정부 핵심 이해관계자)에게 제출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중요한 측면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서면질문과 함께 전화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정책문서, 지침, 규제기준 서류로 정보기반을 보완하였고 가능한 경우 분석이 진행되었다.

더 읽어볼 것

Florio, M., S. Gastaldo and I. Loudiyi (forthcoming), *OECD Journal on Budgeting*, OECD, Paris.

그림 설명

5.5: 영국에서 비용편익분석은 구체적인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에 요구되는 가이드인 '녹서'에는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이 아닐지라도 필수요건이다. 네덜란드에서 비용편익분석은 인프라, 교통, 공간계획에 관한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법으로 요구된다.

5.5. 입법, 규제, 그리고 공식문서에 근거한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목표

	비용편익분석의 범위/기반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인 목표						비용편익분석의 주요 역할				
		투자 우선순위 확인 수	사업 선정의 자금조달 정당화	책임성/투명성 증	사업 설계 지원 평가	사업 모니터링 수	정책 학습 수단	기관별 재정 할당 결정	행위자별 로 달림	의사결정수단 중 위	의사결정에서 주요한 역할	중요성이 중
오스트레일리아	●	✓						✓				
오스트리아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체코	■			✓	✓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멕시코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	✓	✓
OECD 총합		10	16	11	10	8	3	6	13	14	2	10

●예, 비용편익분석은 일정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루어지도록 국가차원에서 법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예, 비용편익분석은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특정 사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국가 차원의 구매/규제에 따라 법이 다릅니다.

◇국가차원의 법은 아니지만, 주정부/지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요구합니다.

○아니오

◆비용편익분석이 법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 의해서 권고되고 이용됩니다.

x 해당 없음

출처: OECD (2014), Survey on Cost Benefit Analysis.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774>

5.6. 비용편익분석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 (2014년)

분야	국가
도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철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공항, 항구, 수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도시교통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상하수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터키
폐기물 관리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터키
기타 환경 사업	캐나다, 스위스, 체코,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에너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체코, 독일,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교육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체코,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건강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터키
정보통신기술	캐나다, 스위스, 칠레,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터키
문화 레저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키,
과학적 연구	캐나다, 스위스,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슬로베니아, 터키,
기술 개발 및 혁신	체코,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터키
기타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출처: OECD (2014), Survey on Cost Benefit Analysis.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8785>

제6장 인적자원관리

특집: 2008년 이후 보수 개혁

특집: 2008년 이후 중앙정부 고용 개혁

특집: 2008년 이후 보수 개혁

보수개혁(compensation reforms)은 공공부문 인력에 대한 임금과 복리후생제도의 크기 및 구조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운영을 위한 총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2008년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게 이중적인 도전을 가져왔다. 국민의 요구가 증가하는 시기에 서비스 품질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재정 지속가능성을 복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OECD 국가들에서 인건비가 생산비용의 45.6%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수개혁을 통해 이러한 도전을 타개해왔다. 보수에 대한 중요한 개혁은 착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노사협상은 물론 법적, 정치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 삭감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2008년과 2013년 사이,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중앙정부에 보수개혁을 도입하였다. 모두 15개 OECD 국가에서 보수를 동결하였고(때로 특정 범주의 직원들에게), 7개국에서 모든 범주의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였다.

포르투갈은 감봉을 집행하였고, 성과 상여금을 유예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삭감하였다. 스페인은 급여 삭감을 단행하였고, 추후 25%가 환급되기는 했으나 2012년엔 12월 보너스를 지불하지 않았다. 폴란드에서는 2009년 이래, 공무원 임금이 동결되었다. 임금 등급이 변화되었고, 특별 상여금이 폐지되었다. 헝가리는 13번째 월급을 폐지했다. 에스토니아는 재임기간, 외국어, 학위에 따른 추가보수 같은 경력기반 급여를 폐지했다. 벨기에에서는 개혁을 통해 직원의 승진 속도를 늦추었다. 독일에서는 중간 및 최고경영진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연공서열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체코에서는 고위관리직의 평균 월급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보수 예산은 10%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일반직의 월급은 감소하고, 몇몇 관리직의 월급이 증가하였다. 이탈리아는 고위관리직의 임금에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특히 최고위직의 보수는 감축시켰다. 아일랜드는 공공서비스 급료를 20% 삭감시켰다.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임금 삭감, 임금 동결,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금 상한제, 신입직원 비율 축소, 성과급과 특정 상여금 폐지, 시간외근무와 기타 비 핵심 임금 축소 등을 통해서 삭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극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독일,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미국은 보수 수준을 축소시키지 않았다.

성과급은 최근 OECD 국가들에서 흔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예산제약의 결과로 감소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9개의 OECD 국가들은 성과급, 상여금, 성과관련 임금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는 2014년에 성과관련 임금을 도입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Budgetary Constraints: Implications for HRM and Employment in Central Public Administration'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대부분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 부서의 고위공무원이고, 자료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시행된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의 실재를 나타낸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설문에 응했다. 이 설문조사에서 중앙정부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집행부(Central Executive)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중앙정부의 크기와 범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기에 비교 시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6.1에서 '보통'과 '빈번한'의 차이는 수량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더 읽어볼 것

Said, T., J. Le Louarn and M. Tremblay (2007), "The Performance Effects of Major Workforce Reduc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18, No. 12, pp. 2075-94.

Vaughan-Whitehead, D. (ed.) (2013), Public Sector Shock: The Impact of Policy Retrenchment in Europe, Edward Elgar Publishing Ltd, Cheltenham.

그림 설명

"기타" 범주에 포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은 statlink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8795>.

호주: 개혁이 원가관리와 임금상승 억제에 기여하였다. **오스트리아:**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물가상승율 보다 낮은 임금 상승에 의해 보수가 영향을 받았다. **일본:** '국가 공공서비스 법(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은 국가 공무원의 보수가 언제든지 사회의 일반적 상황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공공부문 임금 상승 속도가 늦춰졌고, 2010년 이래 민간부문보다 뒤처지고 있다. **슬로베니아:** 승진에 제한이 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법제에 따르면, 공공부문 근로자의 월급 삭감은 불가능하다.

6.1. 2008년 이후 시행된 보수 개혁 수단

	2008년 이후 중앙부처에서 시행된 보수개혁	시행된 보수 개혁 유형:					
		고위층 보수 감축	전체 공무원의 보수 감축	수당 감축 또는 폐지 (예, 크리스마스 수당, 13번째 달 월급)	성과급/상여금 감축	임금 동결	기타
호주	●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
캐나다	●			✓			
칠레	○						
체코	●					✓	✓
에스토니아	●			✓	✓	✓	✓
핀란드	○						
프랑스	●					✓	
독일	●						✓
그리스	●	✓	✓	✓		✓	
헝가리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한국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스위스	○						
영국	●				✓	✓	
미국	○						
OECD 합계		5	5	9	8	15	9
●시행	22						
○시행 안함	7						
브라질	●	✓					
콜롬비아	●						✓
라트비아	●		✓	✓	✓		

출처: Source: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Budgetary Constraints: Implications for HRM and Employment in Central Public Administra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795>

특집: 2008년 이후 중앙정부 고용개혁

고용개혁은 전략적인 목적과 재정 지속가능성에 맞추기 위해서 공공부문 인력의 크기와 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OECD 국가들이 재정의 많은 부분을 직원에게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개혁은 전반적인 정부비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많은 OECD 국가들이 많은 고용 개혁에 착수하였다. 이는 종종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이며, 서비스 제공 수준을 유지하고 증가하는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을 복구하려는 시도이다. 대규모 고용 개혁은 착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큰 수준의 인력감축과 관련이 있을 때 그러하다. 반대로, 공공서비스의 크기를 통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국가들은 공공고용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단계로 커지는 위험을 안고 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고용에서 중요한 인력감축 경향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OECD EU 국가들에서 중앙정부 고용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과정이 진행 중이다. 이들 중 스웨덴만 중앙정부 직원의 수를 증가시켰다. 독일과 체코는 직원수를 안정화시켰다(독일의 경우, 중앙정부 고용이 수년간 감소를 겪고 난 후 안정화되었다). 소수의 국가에서 중앙정부 고용이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늘어났는데, 노르웨이만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대부분의 주요 인력감축은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들에서 일어났다. 그렇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축소가 일어났다는 사실은 중앙정부 고용수준이 단지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 상황과 관련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인구문제, 구조조정, 정부개혁, 공공고용의 분권화, 또는 업무방식 변화라는 맥락에서 공공고용이 개혁된다.

다운사이징(인력감축)은 복합적인 정책이며, 다양한(자발적이고 의무적인) 방법과 조치를 포함한다. 이것과 관련하여, OECD 국가들은 방법의 선택과 조치의 중요성과 관련해 중요한 차이점을 보고했다. 대체로 중앙정부 고용을 감소시키기로 결정한 OECD 국가들은 같은 폭넓은 전략을 사용한다. 채용 중단, 일률적인 감축, 아웃소싱, 강제퇴직, 자연감소, 그리고 자발적 퇴직 등이다. 공무원의 해고에 초점을 맞추는 국가는 거의 없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고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채용 중단 같은 다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고용 개혁은 해고, 채용 동결, 민영화 같은 수단을 통해서 인력 크기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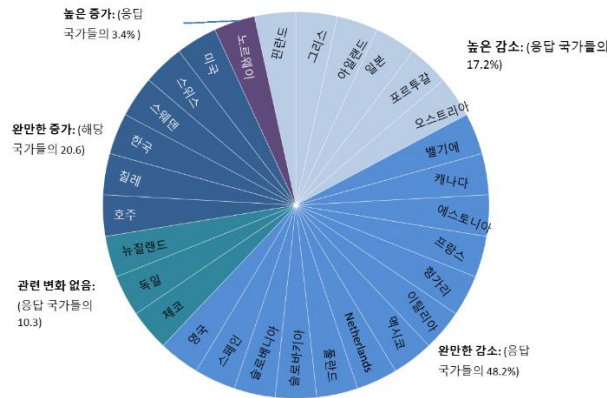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Budgetary Constraints: Implications for HRM and Employment in Central Public Administration'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대부분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 부서의 고위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자료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관행을 나타낸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설문조사를 위해서 중앙정부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정치권력에 종속되고, 집정부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된다. 중앙 행정부의 크기와 범위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고 비교 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6.2의 자료는 앞서 언급된 설문조사의 질문 1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적으로, 중앙행정부 고용의 전반적인 경향은 무엇인가?"이다. 응답자는 높은 감소, 완만한 감소, 관련 변화 없음, 완만한 증가, 높은 증가의 5개 중에서 답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범주는 수량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고, 응답자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택되었다. 표 6.3에서 "해고"는 통보 여부 상관없이 고용의 종료를 뜻한다. "채용 동결"은 조직에 새로운 직원을 구하지 않는 전반적인 관행 그리고/또는 정책이다(대부분 특정 기간 동안). "아웃소싱"은 재화와 서비스를 외부 공급자와의 계약으로부터 얻는 것이다. '보통'과 '빈번한'의 차이는 수량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그림 설명

6.2: **체코**: "관련 있는 변화 없음"은 2013년을 의미한다 가장 큰 변화는 2011년에 발생했다. 정부가 주정부 근로자 임금 예산을 10% 감축시킨 때이다. 그러나, 2013년에 공공 고용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향은 '관련 있는 변화 없음'이다. **프랑스**: 정부 각 부처(그리고 기관은 아닌)에서 일하는 공공근로자(공무원뿐 아니라) 수에 완만한 감소가 있었다. **슬로바키아**: 사용빈도는 결정될 수 없다. 정보는 행정부 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중앙행정부, territorial self-administration, 사회/의료보험기금). **스위스**: 정보가 2005년에서 2013년에 관한 것이다. **영국**: 중앙정부는 각 부처와 집행기관(즉, 공무원 조직)을 의미한다.

6.2. 특정 OECD 국가의 중앙부처 고용 개혁



출처: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Budgetary Constraints: Implications for HRM and Employment in Central Public Administra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09>

6.3. OECD 국가의 중앙부처가 사용한 고용 개혁 수단

	해고	채용 중단	아웃소싱	연간 생산성 목표	퇴직 인력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하거나 하지 않음	민영화	하위 정부기관으로의 고용 분권화
호주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체코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한국	○	○	○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영국	○	○	○	○	○	○	○
미국	○	○	○	○	○	○	○
OECD 합계							
●빈번한 사용	3	11	3	7	15	0	1
●보통 수준으로	14	15	17	11	10	9	7
○사용하지 않음	12	3	7	11	4	18	19
브라질	○	○	○	○	○	○	○
콜롬비아	○	○	○	○	○	○	○
라트비아	○	○	○	○	○	○	○

출처: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Budgetary Constraints: Implications for HRM and Employment in Central Public Administra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11>

제7장 공공부문 진실성

이익 충돌의 관리: 공직임용 이전과 퇴직 이후

재산공개

로비의 투명성과 진실성

내부고발자 보호

이익충돌 관리: 공직임용 이전과 퇴직 이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이동성, 즉 “회전문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과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영입하여 공익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 또한 국민과 정부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익충돌 상황을 적합하고 충분하게 밝히고 관리하여 건전하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보장해야 한다. 과도하게 엄격한 접근은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 또한 잠재력 있는 숙련되고 유능한 인력이 공공부문에 고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공직 퇴직 이후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22개 OECD 국가는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설문대상 OECD 국가들 중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공직자가 공공부문에서 퇴직한 후 기밀 또는 “내부”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게다가 21개 국가(66%)는 “재취업제한 기간(cooling-off period)”을 요구한다. 공직자가 공공부문을 떠나서 로비 또는 공무상 거래와 관련된 업무를 하거나, 공공부문에서의 이전 하급자 또는 동료와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재취업 제한기간의 길이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오스트리아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은 1년 이하이다. 독일에서는 재취업 제한기간이 최대 5년인데, 공직자의 이전 업무와 연관된 재취업은 공개되어야 하고, 공익이 영향을 받는다면 금지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취업 제한기간은 근무연수와 직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다.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이 이런 경우이다. 재취업 제한기간 동안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몇몇 범주의 공직자만 보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공직자가 기본급의 80%를 보수로 받는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재취업이 금지된 특정 직책의 경우에만 보수가 주어지고, 공직자가 은퇴할 당시와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 퇴직 이후 고용규칙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공직임용 이전과 관련된 제약은 매우 적다.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이렇게 7개 OECD 국가에서만 민간부문 직원 또는 로비스트, 그리고 조달사업자거나 회사를 대표해 공공부문 계약을 협상하는 이들에 대해 공공부문의 직책을 맡기는 데 제한을 둔다. 대부분의 제한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지원자의 이전 고용과 잠재적 이익충돌이 발생할지를 평가한다. 일단 채용되면, 영향을 받는 의사결정 과정을 피하거나, 또는 특정 정보에 대해 제한을 둬으로써 이익충돌을 관리하는 것이 기대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32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였고, 브라질, 콜롬비아, 라트비아, 러시아도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청렴성 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자들이다.

이익충돌은 공직자의 공적인 의무와 사적인 이익 사이의 충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가 그들의 공식적인 임무 및 책임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통해 얻는 이익을 말한다.

"공직자"는 한 국가의 행정 부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명 또는 선출, 영구적 또는 임시적, 유급 또는 무급일 수 있으며, 그리고 근무연수도 다양하다.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에 포함하여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이들, 또는 국내법에 정의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도 포함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0), *Post-Public Employment: Good Practices for Preventing Conflict of Interest*, OECD, Paris.

OECD (200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OECD (199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그림 설명

7.1: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칠레에서는 감찰기능을 수행했던 공직자가 공공서비스에서 떠나면, 그 기관에 의한 감찰 대상인 민간부문과 6개월 동안 일을 시작할 수 없다. 핀란드에서는 규제는 없지만 공직퇴직 이후 관한 훈령(instructions)이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 고문/피임명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경우만 보수를 받는다. 영국에서는 고위공무원과 공무원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수를 받는데, 대기기간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7.2: 덴마크,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여기서 정부 공급자는 정부에 대한 공급자 또는 회사를 대신해서 공공부문 계약을 협상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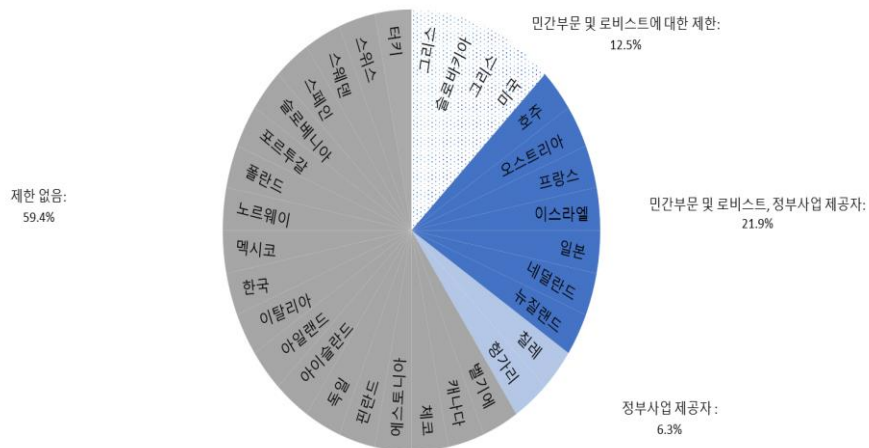
7.1. 공공부문 퇴직 후: 재취업 제한 기간('Cooling off'-period) 중 보상 (2014년)

	대통령	수상/총리	장관	정무직	고위직 공무원	일반공무원
호주	x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x	□	□	□	□	□
캐나다	x	○	○	○	○	○
칠레	□	x	□	□	□	□
체코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x	□	□	□	○	○
한국	○	○	○	○	○	□
멕시코	○	x	○	○	○	○
네덜란드	x	□	□	□	□	□
뉴질랜드	x	□	□	□	□	□
노르웨이	x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x	●	●	□	○	○
스웨덴	x	□	□	□	□	□
스위스	x	□	□	□	○	○
터키	□	□	□	○	○	○
그리스	x	○	○	○	○	○
미국	□	x	○	□	○	○
OECD 총계						
● 네	2	3	3	2	2	2
○ 아니오	4	9	11	10	17	15
□ 재취업 금지기간 없음	15	17	18	20	13	15
브라질	□	x	●	●	●	□
콜롬비아	○	x	○	○	○	○
라트비아	○	○	○	○	○	○
러시아	○	○	○	○	○	○

출처: OECD (2014),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21>

7.2. 공공부문 고용 시 채용제한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37>

재산공개

공직자들이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공평성이 요구된다.

공직자의 이익충돌은 공적 신뢰에 위협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핵심이다.

공직자의 사익을 공개하는 것이 이익충돌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익충돌 상황을 관리할 책임이 주로 공직자에게 있지만, 사익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하고 잠재적인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게다가, 공개된 정보의 공공이용성은 일반 대중들이 공직자의 결정을 더 신뢰하도록 해준다.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된다. 그러나, 정보 공개 및 해당 정보의 공공이용성은 공직자의 사생활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익 공개 수준과 공공이용성은 정부의 주요 3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 입법부가 설문조사를 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개와 공적 사용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다. 세무공무원, 세관원, 조달요원, 재정당국을 포함한 “위험이 있는” 영역은 정부의 3부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공개가 요구된다

행정부 내 공직자들 사이에 재산공개와 공공이용성 수준에 차이가 있다. OECD 국가에서 대체로 공개수준은 근무연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고결정권자는 사익 공개와 관련하여 의무사항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고위공무원과 정치적 고문 또는 피임명자들이 그 뒤를 잇는다. 고위급 의사결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의 사익에 대한 공개의무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개발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수상, 장관을 포함한 행정부의 최고결정권자들에 대해서 그러하다. 실제로, 2014년 조사된 OECD 국가들의 최고결정권자 중 73%에 대해서 선물이 금지되거나 또는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2009년에 68%였던 것과 비교된다.

칠레, 그리스, 헝가리, 한국, 네덜란드, 스웨덴, 터키, 그리고 미국 같은 몇몇 OECD 국가의 공직자들은 자신의 사익뿐 아니라 일부 가족구성원의 사익도 밝혀야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사익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며, 이익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직자의 재량에 맡긴다. 캐나다와 네덜란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공직자의 투명성과 사생활의 균형을 위해서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을 통해서 수집되었다. 32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였고, 브라질, 콜롬비아, 라트비아, 러시아도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청렴성 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자들이다.

"행정부"는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정부의 주요 세 부서 중 하나로, 다른 두 개는 사법부와 입법부이다. 수상, 그리고/또는 대통령, 장관 또는 국무위원,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기관/부서가 행정부에 포함된다. "입법부"는 상원과 하원 의원을 포함한다. "사법부"는 법관과 검사를 포함한다. "위험이 있는" 영역은 세무공무원, 세관원, 조달요원, 재정당국을 포함한다.

그림 7.4에서 최고결정자의 수준은 행정부 수반과 장관 사이의 평균이다. 행정부 수반은 각국의 정치 시스템에 따라 대통령 또는 수상을 가리킨다. 행정부 권력이 대통령과 수상 간에 공유되는 곳에서는 둘의 평균이 사용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3248855>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국가기반 자료의 총액을 계산할 때, 모든 사익과 모든 지위의 중요도는 동등하게 여겨지고, 같은 비중이 부여된다. 사익은 자산, 부채, 수입원과 그 액수, 유급 및 무급 외부 직책, 선물, 그리고 이전 고용을 포함한다. 부록 D에 사익 공개와 공공이용성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계산 방법론에 관한 정보가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07),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Report on Implementation*, OECD, Paris.

OECD (2003),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OECD (199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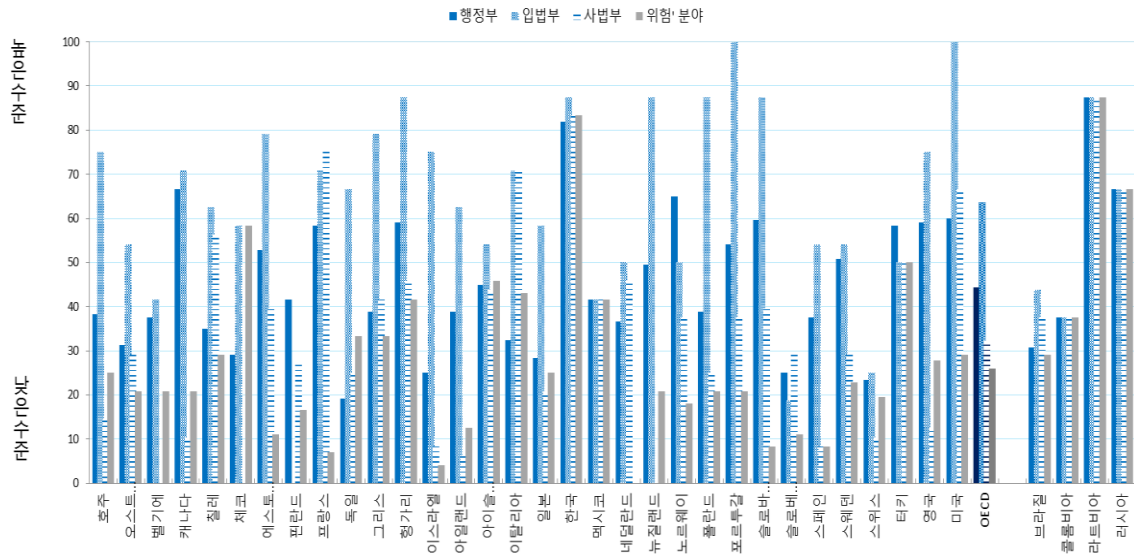
그림 설명

7.3: 덴마크와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멕시코의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자료는 2012년 것이다.

7.4: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더 자세한 정보는 부록 D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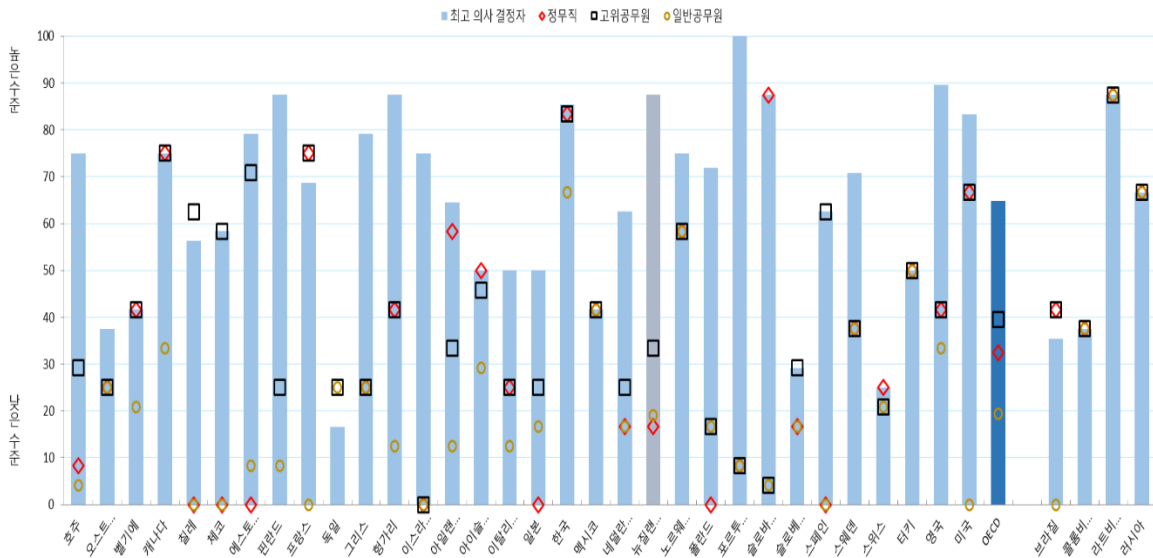
7.3. 기관별 공무원 재산공개 및 공공이용성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48>

7.4. 행정부 공무원 직위별 재산공개 수준 및 공공이용성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55>

로비의 투명성과 진실성

모든 국가에서 로비는 공적 생활의 한 면이다. 로비는 민주적인 참여를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들에게 통찰력을 줄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가 공공정책 개발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만, 로비는 종종 청렴성이 의심되는 불투명한 행위로, 특정 이익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불공정한 경쟁, 그리고 규제 포획을 초래해 공명정대하고 효과적인 정책결정이 희생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투명성 요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4년까지 15개 OECD 국가만이 이러한 취지로 로비 규제를 도입하였고, 지난 10년 동안 11개 국가가 그렇게 하면서 이러한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로비스트가 업무를 기록하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비스트 등록을 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통해서 로비활동의 핵심 측면에 대한 적절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적합한 조사가 가능해야 한다. 명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국가들에서 보통 로비스트는 이름, 연락처, 고용주 이름, 그리고 고객 이름을 기록해야 한다.

로비는 일방적으로 이루지는 것이 아니다. 공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거부하는 궁극적인 책임은 로비를 받는 쪽, 즉 공직자에게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직자의 행동에 대한 원칙, 규칙, 기준 또는 절차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캐나다와 슬로베니아의 규제는 로비스트를 대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은 더 일반적인 규제 또는 행동강령에 의존하고 있다.

로비와 관련하여 공공부문과 로비부문 간 직원이동을 의미하는 “회전문” 관행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이익충돌에 대한 노출과 내부정보, 지위, 관계의 악용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회전문 현상에 대한 우려로 국가들은 공직임용 이전과 이후 상황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전현직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위해서이다. ‘2013년 OECD 국가의 로비규정과 지침 설문조사’(2013 OECD Survey on Lobbying Rules and Guidelines)에 응답한 24개국 중 절반(12개국)만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정부를 떠난 후 로비에 개입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다. 10개국에서만 일반공직자에 제한을 둔다.

또 다른 염려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사익에 의한 자문단체의 포획이다. 예를 들어, 기업 중역 또는 로비스트가 자문단체 자격으로 정부에 조언을 할 때, 이들은 외부 로비스트가 아닌, 의사결정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정책결정과정 참여자로 활동하게 된다. 종종 자문집단 내에서 이익에 대한 균형 있는 대표성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 스위스, 그리고 미국은 예외이다. 정책결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들은 최소한 구성원 정보를 알릴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OECD 2013 Survey on Lobbying Rules and Guidelines'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설문 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 청렴도 정책 그리고/또는 로비 규칙, 그리고 집행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 자들이다. 브라질을 포함한 24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를 완성하였다. 추가로, 덴마크, 일본, 영국은 선별적으로 질문에 답하였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14224-en>.

OECD (2012),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2: Promoting Integrity through Self-regulation,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084940-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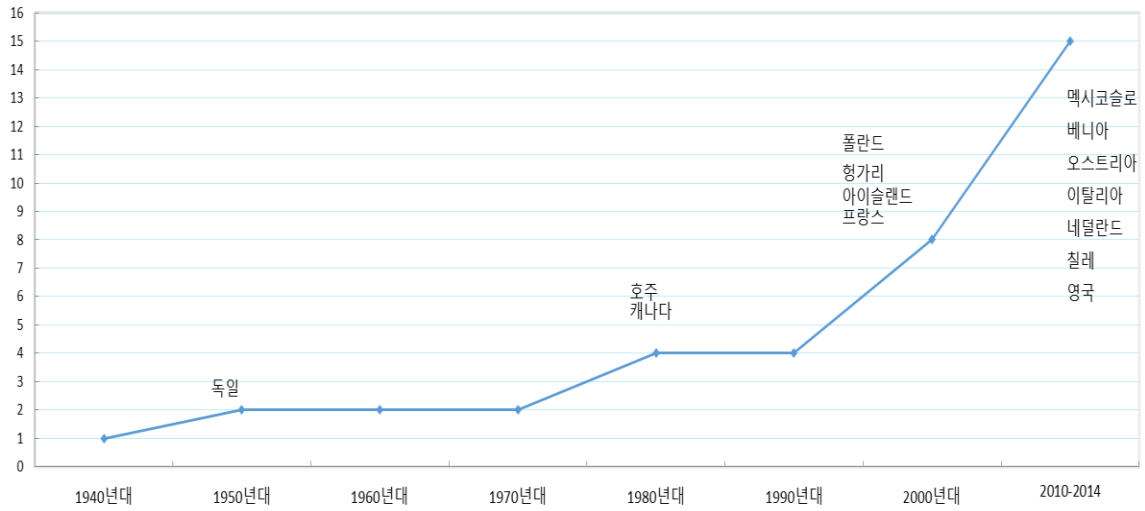
OECD (2010),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Paris, www.oecd.org/corruption/ethics/oecdprinciplesfortransparencyandintegrityinlobbying.htm.

그림 설명

7.5: 자료는 각 국가에서 첫 번째 규제를 도입한 해를 가리킨다. 아일랜드는 2015년 3월에 '로비 행위에 대한 규제(Regulation of Lobbying Act)'를 제정하였다.

7.6: 호주, 체코,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슬로바키아, 그리고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7.5. 로비행위에 대한 규제 (1940 년-2014 년)



출처: OECD (2014),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64>

7.6. 자문집단이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대표할 수 있게 하는 규칙 (2013 년)

	자문/전문가 집단의 구성을 균형 있게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가?	로비스트들이 개인자격으로 자문/전문가 집단에 배석할 수 있는가?	기업의 이사가 자문/전문가 집단에 개인 자격으로 배석할 수 있는가?
오스트리아	X	O	O
벨기에	O	X	O
캐나다	X	O	O
칠레	X	O	O
에스토니아	O	O	O
핀란드	X	O	O
프랑스	X	O	O
독일	X	O	O
헝가리	X	X	O
아일랜드	X	O	O
이탈리아	X	O	O
한국	O	X	O
룩셈부르크	X	O	O
멕시코	X	O	O
네덜란드	X	O	O
뉴질랜드	X	X	X
노르웨이	X	O	O
폴란드	X	O	O
포르투갈	X	O	O
슬로베니아	X	O	O
스페인	X	X	X
스웨덴	X	O	O
스위스	O	O	O
그리스	X	O	O
미국	O	O	O
OECD 총계			
O 네	5	20	23
X 아니오	20	5	2
브라질	X	O	O

출처: OECD (2013), *Survey on Lobbying Rules and Guidelines*.

<http://dx.doi.org/10.1787/888933248872>

내부고발자 보호

직장 내 범법행위를 공개하는 직원(내부고발자)을 보호하는 것은 조직의 진실성 체계의 핵심이다. 정부에서, 범법행위 고발은 공익을 보호하는 핵심요소이며, 공적 책임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많은 국가들에서 위법행위, 사기, 부패를 신고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2009년 이후 OECD 국가들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관련 법률 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스위스가 이러한 국가들이다. 종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OECD 국가들 중 88%에 내부고발자 보호를 요구하는 내부고발자 보호법 또는 법적 조항이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다양한 법 조항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반부패법, 독점규제법, 회사법, 공무원법, 노동법, 그리고 형법 같은 법률 중 하나 이상에 있는 조항들을 통해 내부고발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종류의 방식을 적용하지만, 이러한 법률 조항 내에서 제공되는 보호의 정도가 특별법보다 덜 포괄적인 경우가 많다. 특별법은 명료하고, 범법행위 공개와 관련된 과정과 메커니즘을 간소화시킨다.

범위의 관점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몇몇 OECD 국가는 여전히 공공부문 직원에게만 보호를 제공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OECD 국가 중 69%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근로자들을 보호한다고 답했으며 보호수준은 다양하다. 에스토니아, 한국, 아일랜드가 이런 경우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법과 법률조항은 효과적인 인식확대, 소통, 교육, 평가노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얻고 있다. 설문조사에 답하고 보호를 제공한다고 보고한 OECD 국가들의 3분의 1은 내부고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 벨기에, 한국, 미국이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장려책에는 신속한 과정과 후속 메커니즘, 재정적 보상이 포함된다. 한국의 경우, 내부고발자는 2백만 USD까지 보상을 받는다. 부패 신고로 수입이 회복 또는 증가되거나 공공기관의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설문조사한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이 시스템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부당하게 혐의를 보고하는 이들을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영국은 조사된 OECD 국가들 중 이러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 곳들이다. 그렇지만, 부당하게 고발한 게 드러나면, 아일랜드와 영국에서는 보통의 징계과정에 의해 다루어진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Executive Branch and Whistleblower Protection'을 통해 수집되었다. 32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였고, 브라질, 콜롬비아, 라트비아, 러시아도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청렴성 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대표자들이다. 그림 7.8에서 민간부문 포함 정도는 특정 종류의 법률 또는 적용하는 법에 따라 다양하다(예: 독점규제법, 회사법, 노동법 등).

더 읽어볼 것

OECD (forthcoming), "Revisiting Whistleblower Protection in OECD Countries: From Commitments to Effective Protection", OECD, Paris.

OECD (2012), "Study on G20 Whistleblower Protection Frameworks, Compendium of Best Practices and Guiding Principles for Legislation", OECD, Paris.

OECD (1998),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 Paris.

그림 설명

7.7: 덴마크,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슬로바키아에서는 관련법이 2014년 10월에 승인되었고, 2015년 1월에 발효되었다. 보호가 다른 법 조항 내에서 제공될 때, 보호의 범위는 국가별로 다양하다.

7.8: 덴마크,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내부고발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OECD 국가들은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내부고발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생략되었다. 그리스의 경우는 관련 검사가 누가 내부고발자 지위를 부여 받을지 결정하고, 포르투갈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가 형사소송 중인 이들에게 제한된다. 캐나다에서는 고용주에 의한 범죄행위를 보고한 이들에 대해 민간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스위스에서는 민간부문의 보호가 분명한 법적 조항의 결과가 아니다. 대신 의무법규(Code of Obligations) 및 관련 판례법에 기인한다. 게다가, 허락되는 보호의 정도는 공공서비스에서보다 낮다. 내부고발 이전과 같은 동등한 지위로 복구 또는 재지정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제8장 규제 거버넌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세계적 동향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규제사후평가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의 세계적 동향

규제정책은 규제를 입안, 집행, 검토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도입되는 일련의 규칙, 절차, 제도를 뜻한다(기본규제 및 하위규제 양자 모두). OECD 회원국들은 규제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규제의 질을 높이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금융경제위기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규제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규제체계는 올바른 장려정책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위한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명확한 규제체계는 사회 안에서 환경적·사회적 도전과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좋은 규제관행과 제도는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고, 더 일관성 있고 널리 공유된 규칙을 통해서 세계화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2년 OECD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사항(The 2012 OECD 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은 OECD 회원국들에게 “규제의 품질을 위해 최고위 정치지도자가 명시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매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4년의 최근 ‘규제지표 설문조사(Regulatory Indicators Survey)’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명시적인 범정부적 규제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94%)은 기본법과 하위규제를 입안하기 위한 표준 절차를 가동 중이다. 유사하게, 3분의 2 이상(80%)의 국가들이 장관 또는 고위 공직자를 규제개혁에 관한 범정부적 진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책임자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명시적 규제정책을 입안하고 공표하였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노력은 OECD 국가들이 범정부적 규제정책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명시적 규제 정책이 없는 OECD 국가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34개 중 24개).

2012년 권고사항은 “규제정책 절차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규제정책을 지지하고 집행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규제의 질을 높이는 메커니즘과 제도를 확립하라”고 주장한다. 32개 OECD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기관을 채택했다. 폭넓은 감독기관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맥락과 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OECD 국가 간에 규제시스템의 성숙도에도 차이가 크다. 많은 국가들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감독기관이 있다고 보고했다. 감독기관은 국무총리실 또는 재무부와 같은 정부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정부 외부에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하여 기관 간 책임분배 문제와 조정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킨다. 전문화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세분화는 2012년 권고사항에 의한 범정부적 접근을 약화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책임과 관련해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감독기관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조언을 제공하고 규제수단을 조정하는 것에서부터 공식적인 “문지기(gate-keepers)”역할까지 할 수 있다. 문지기는 규제가 특정 기준을 충족시킬 때까지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표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위한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에 대한 국가별 답변에서 온 것이다. 설문조사 답변은 OECD 규제정책 위원회의 대표자와 중앙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것만 해당된다. 기본법에 관한 모든 질문은 미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는 기본법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국회 또는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규제이다. 하위규제는 정부수반, 각각의 장관 또는 내각, 즉 국회/의회 이외의 권한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고려 중인 정책을 위해서 규제 또는 비규제를 선택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비용편익을 확인하고 수량화하는 체계적 과정이다. 장관은 부처 내 최고의 정치적 역할을 가리킨다. 고위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높은 직위의 공직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사무차관, 부처차관, 정무차관, 사무총장이다.

더 읽어볼 것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aris.

OECD (2014), OECD Work on Regulatory Policy,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2012-recommendation.htm.

표 및 그림 설명

"행정부가 기본법을 입안하는 표준절차가 있는가"라는 질문은 미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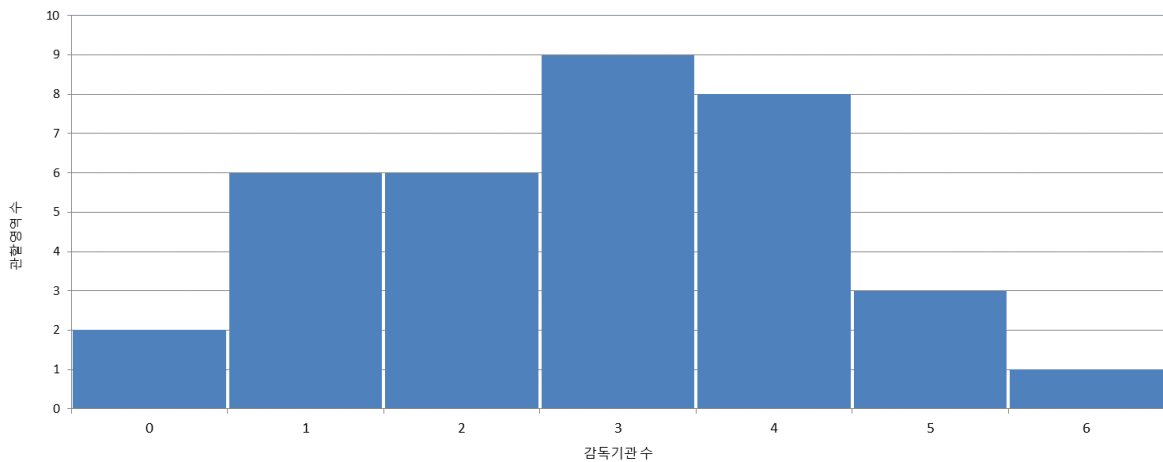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1. 규제의 질을 위해 채택한 명시적인 범정부적 정책 (2014년)

	명시적으로 발표된 규제정책 존재	표준운영절차의 채택을 통해 행정부가 만든 것		규제개혁 촉진에 책임을 맡은 장관/고위 공직자	규제정책 촉진 및 규제 질 보고 담당 기관	규제감시기관의 책임영역				
		기본법	하위 규제			규제영향평가	행정 간소화 또는 행정부담 완화	이해관계자 참여	사후분석	법령의 질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x	●	●	●	●	●	●	●	○
유럽연합	●	●	●	●	●	●	●	●	●	●
OECD 합계										
● 채택	32	32	33	28	32	26	29	28	26	25
○ 채택안함	2	1	1	6	2	8	5	6	8	9
x 해당없음	0	1	0	0	0	0	0	0	0	0

출처: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03>

8.2. 국가/관할영역당 감독기관 수 (2014)



출처: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15>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정책의 핵심 목적은 규제가 공익을 위해 설계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즉, 시민, 기업, 시민사회, 공공부문 조직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2012년 OECD 규제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권고사항(The 2012 OECD Recommendation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은 정부가 "규제 제정 및 설계 과정에 모든 이해관계자는 ... 제공받는 정보의 질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협의과정에 ...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OECD, 근간). OECD 회원국들은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규제입안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은 보통 개방정부(open government) 정책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기본 및 하위규제를 입안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평이한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새롭게 입안되는 규제에 직원들과 사용자의 견해를 반영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활용한다. 한편, 규제와 규제시스템의 성과 평가에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해관계자는 규제 거버넌스 순환주기의 모든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규제를 입안하거나 수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을 개입시킨다. 규제결정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협의를 거친다. 그러나, 전형적인 참여는 입법 초안이 정부에 제출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인터넷을 통한 대중 협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용 가능한 규제에 대한 검토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개입시키려는 시도는 존재한다. 덴마크 같은 몇몇 국가들은 현재 행정부 간소화 같은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고 있다. 규제 거버넌스 순환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집행 및 모니터링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여전히 거의 개입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국의 더 나은 규제전달국(Better Regulation Delivery Office)은 규제 공급과 감시의 발전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규제기관이 정책해석 입안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국가들은 이 단계에서 규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불필요한 부담을 제한하고, 시행방식을 더 잘 겨냥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규제기관과 규제 대상 간의 접촉은 규제순응을 향상시키고, 규제회피의 이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자통신기술(ICTs)의 사용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규제정책 참여가 널리 퍼지고 있다. 각 부서의 웹사이트와 관련 포탈에 규제초안을 공표하는 것이 표준 관행이 되어가고 있다. 소셜미디어, 클라우드소싱, 위키기반 수단 등과 같은 혁신적인 수단을 실험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ICTs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 수준을 높이거나 또는 그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여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과정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로 디지털 시대 이전과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양적, 질적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한 ICTs 사용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OECD, 근간).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표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위한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에 대한 국가별 답변에서 온 것이다. 설문조사 답변은 OECD 규제정책 위원회의 대표자와 중앙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자료는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기본법과 하위규제만 해당된다. 기본법에 관한 모든 질문은 미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는 기본법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규제이다. 하위규제는 정부수반, 각각의 장관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초기 단계 협의는 공직자에게 문제의 성격을 알리고 가능한 해법에 관한 논의를 알리는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가리킨다. 후기 단계 협의는 선호되는 해법이 확인되고 그리고/또는 규제초안이 발표될 때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aris.

OECD (2014), "Evaluating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Policy Findings and Workshop Proceedings, 6th Expert Meeting on Measuring Regulatory Performance, OECD, Paris.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2012-recommendation.htm.

표 설명

8.4: 인터넷을 통한 대중 협의는 일반대중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협의를 의미한다. 어떻게 견해가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견해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또는 웹사이트에 명확히 표시된 이메일 주소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의견 제시 없이 인터넷에 단순히 규제 제안을 공고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3. 이해관계자 협력의 요건 및 유형 (2014)

	이해관계자 참여 시행을 위한 요건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공무원에게 알리기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규정/규제안에 대한 자문	
	기본법	하위 규제	기본법	하위 규제	기본법	하위 규제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	■	▲	■	■	■
칠레	▲	▲	▲	▲	▲	▲
체코	▲	▲	▲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
한국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	▲	▲
영국	■	■	▲	▲	■	■
미국	x	■	x	▲	x	■
EU	▲	▲	▲	▲	●	■
OECD 합계						
■ 모든 규제	21	18	1	2	23	18
▲ 주요 규제	4	7	5	3	2	6
▲ 일부 규제	6	5	22	21	6	8
● 해당없음	2	4	5	8	2	2
x 적용불가	1	0	1	0	1	0

출처: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28>

8.4 규제 입안의 여러 단계 자문에서 ICT의 사용(2014년)

정부는 쌍방향적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들과 다음 내용에 대해 논의함:	해당 국가	국가 수
초청을 통한 인터넷 상에서의 공공 회의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유럽 위원회	31
규제 계획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미국, 유럽 위원회	19
규제 초안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	24
기존 규제 수정 계획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미국, 유럽 위원회	23
최종 규제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미국	15

출처: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36>

규제영향분석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은 입안 중인 정책에 규제 또는 비규제 선택을 할 경우 발생할 높은 비용과 편익을 확인하고 수량화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국가들은 규제영향분석 과정의 일부로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다중기준분석이 여기에 포함된다. 규제영향분석은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새로운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수단이다. 제대로 작동하는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규제안에 내재하는 상충관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규제영향분석은 정책결정에 있어 객관적 증거의 사용을 증진시키는데, 이렇지 않았을 때 규제로부터 발생될 규제 실패의 가능성은 물론 규제가 명백히 필요한데도 규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낮아진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결정 시스템의 진실성과 신뢰를 조성하는데, 이는 규제입안과정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서이다.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정책의 일부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적용되는 수단이지만, 많은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알 수 있는 예는 규제영향분석 수행에 대한 법적 의무와 실제 관행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규제가 사회에 순 편익을 보장하도록 하는 국가의 수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표 8.5).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법률문서 또는 공식문서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을 확립했고, 또한 실제로 규제영향분석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문서 또는 공식문서로 규제영향분석을 요구하는 것과 실제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격차가 있다(표 8.5). 이러한 격차는 하위규제의 경우 더 잘 드러난다. 규제영향분석이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에 초석이 되며,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OECD에 의한 가장 많이 촉진된 규제정책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균등한 집행은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

높은 질의 규제는 사회 전체에 혜택을 가져온다. 동시에 집행과 준수비용, 행정적 부담, 그리고 다른 시장들에서의 잠재적 왜곡 비용을 초래한다. 규제영향분석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국가들이 비용효율이 높은 규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순 혜택이 증가하고, 사회 전체의 부가 증가된다. OECD 국가들은 보통 규제영향분석 과정의 일부로 규제 초안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그러나, 영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일부 OECD 국가들(34%)에서만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것을 확인한다(표 8.5). 많은 경우, 이러한 결과는 비용편익분석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인력 및 주요자원의 부족에 기인한다. 게다가, 이러한 결과는 규제영향분석이 주로 어느 규제안에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지 결정하는 수단임을 보여준다. 어쨌든, 체계적으로 편익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의 활용이 향상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을 위한 OECD의 핵심 권고사항은 계선 부처와 규제기관이 준비한 규제영향분석의 질을 검토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감찰기관이 설립되어 있다(표 8.6).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감찰기관은 규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문지기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감찰기관이 규제원칙에 부적절하거나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길 때, 규제영향분석을 해당 초안 규제와 함께 계선부처와 규제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종합하건대,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를 집행하는 규제영향분석 시스템의 효과성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표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위한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에 대한 국가별 답변에서 온 것이다. 설문조사 답변은 OECD 규제정책 위원회의 대표자와 중앙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기본법 및 하위규제에만 해당된다. 기본법에 관한 모든 질문은 미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는 기본법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국회 또는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규제이다. 하위규제는 정부수반, 각각의 장관 또는 내각, 즉 국회/의회 이외의 권한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aris.

OECD (2014), "OECD Work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ria.htm.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2012-recommendation.htm.

표 설명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5. 규제영향평가 - 공식 요건, 관행, 비용편익 평가 (2014년)

	아래의 입안 시 정보 제공을 위해 규제영향평가를 필수요건화		아래의 입안 시 정보 제공을 위해 관례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		규제자는 새 규제의 비용을 밝혀야 함		규제자는 새 규제의 편익을 밝혀야 함		규제자가 새 규제의 비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편익의 입증을 필수요건화	
	기본법	하위 규제	기본법	하위 규제	기본법	하위 규제	기본법	하위 규제	기본법	하위 규제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EU	▲	▲	▲	▲	▲	▲	▲	▲	▲	▲
OECD 합계										
■ 모든 규제 해당	30	22	26	16	30	24	24	17	6	6
▲ 주요 규제만 해당	2	6	3	8	0	5	3	8	1	2
▲ 일부 규제 해당	0	4	1	7	3	3	3	3	2	1
● 해당없음	1	2	3	3	0	2	3	6	24	25
×	1	0	1	0	1	0	1	0	1	0

출처: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40>

8.6 규제영향평가의 감독(2014년)

규제영향평가의 질을 평가하는 정부기관이 규제를 지원하는 부처 밖에 존재	규제영향평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기관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음	
	기본법	하위규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미국, 유럽연합
26	18	17

출처: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55>

규제 사후평가

사후영향분석을 통해서 현재 사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평가하는 것은 이것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체계적인 검토과정이 없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준수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민들의 일상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기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사후평가는 규제정책 순환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 규제가 설계된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사후평가는 시행 중인 정책 또는 규제의 영향력, 단점, 장점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새로운 규제의 설계를 위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OECD 회원국들에서 사후평가 관행은 침체되어 있다(그림 8.7). 2014년 여전히 20개 국가만 사후평가가 의무적인 요건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자동적인 평가요건 관행이 2008/2009년 이래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멸시효(발효되고 특정 햇수 이후 규제의 자동적인 폐지)는 잘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후평가를 체계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OECD 회원국들은 거의 없다. 체코같은 국가는 사후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지난 3년 간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몇 국가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간 사후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OECD 회원국들에서 현재 사후평가 요건의 범위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표 8.8). 주기적인 사후평가를 위한 요건, 소멸시효의 이용, 그리고 자동적인 평가요건은 몇몇 기본법에만 적용된다. 즉, 체계적인 사후평가 과정이 관련되어 있는 전체 규제 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후평가를 실시할 때, OECD 회원국들의 절반만이 규제의 목적달성 평가를 포함한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실제와 예상 규제영향을 비교한다고 보고했다(표 8.8). 이는 OECD 회원국들에서 일반적인 사후평가에 대한 이해가 낮음을 보여준다. 사후평가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최초의 정책 목적과 관련된 규제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 12년 간 사후평가를 실시해 온 많은 OECD 회원국들은 평가가 행정적 부담과 준수비용 계산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고했다(예: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따라서 초점은 여전히 규제부담의 불완전한 사후평가에 놓여 있다.

법적 일관성 평가가 사후평가의 일부인 OECD 회원국들은 더 적다. 17개 국가가 규제의 일관성을 고려하기 위해 사후평가를 요구하고, 중복, 복제, 불일치 영역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OECD 국가 중 3분의 1만이 국제 기준과 규칙에 맞는 규제평가를 요구한다. 가능성 있는 혁신적인 형태의 사후평가로 규제체계의 국가간 비교가 상정될 수 있다. 국내 규제 환경의 성과를 평가하는 이러한 방법은 국가 전체, 지역, 관할구역에서 규제, 규제과정, 그리고 그 결과의 국가간, 지역간, 그리고 관할구역간 비교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는 2009년 식품안전을 위한 기업규제의 관할구역별 성과를 비교하는 벤치마킹을 실시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표는 모든 OECD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위한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에 대한 국가별 답변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전 연도의 지표는 2005년과 2008년에 30개 OECD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를 위해 실시한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dicators Survey'에서 가져온 것이다. 2009년 것은 2010년에 OECD에 가입한 4개국(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을 위한 것이다. 모든 연도의 답변은 OECD 규제정책 위원회의 대표자와 중앙정부 공직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기본법은 입법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규제이다. 하위규제는 정부수반, 각각의 장관에 의해 승인될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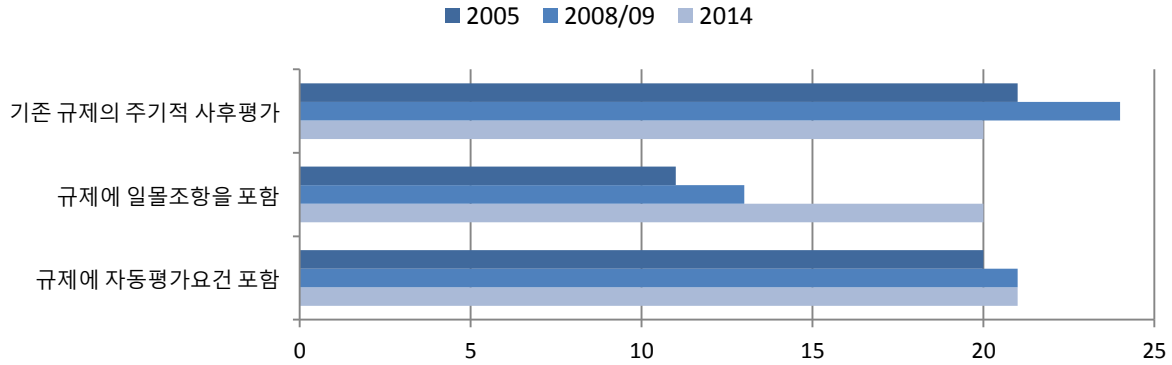
OECD (2012), "International Practices on ex post Evaluation", in Evaluating Laws and Regulations: The Case of the Chilean Chamber of Deputies, OECD, Paris, pp. 9-26,
<http://dx.doi.org/10.1787/9789264176263-en>.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2012-recommendation.htm.

그림 및 표 설명

8.5: "규제가 자동적인 평가 요건을 포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자료는 2005년에만 해당하는 기본법을 가리키는데, 2008/2009년 것은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에만 해당된다.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의 2005년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림에서 2005년 자료는 30개 OECD 국가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2009/2009년, 2014년 것은 34개 OECD 국가들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7. 규제 의 사후평가 요건(2005년, 2008/09년, 2014년)



출처: OECD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Indicators Survey 2005 and 2008/09,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measuring-regulatoryperformance.htm; OECD (forthcoming),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63>

8.8. 사후평가의 내용 및 요건(2014년)

	기본법에 대한 주			기본법 사후평가					
	현 기본법에 대한 주 기적 사후평가 필수	기본법에 일몰조항 포함	기본법에 자동평 가요건 포함	목표달성 평가 포함	실제 vs 예상 영향 비교	의도치 않은 결과 규 명	규제 일관성에 대한 고려 요구	국제 기준 및 규정 과의 일관성 평가 요구	
호주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	▲	▲	▲	▲	
체코	●	●	●	●	▲	▲	●	●	
덴마크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그리스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일본	■	●	●	■	■	●	●	●	
한국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멕시코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스페인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EU	■	▲	▲	▲	▲	■	■	▲	
OECD 합계									
■ 모든 기본법 해당	6	0	3						
▲ 주요 기본법 해당	2	1	3						
● 일부 기본법 해당	9	16	11						
● 해당없음	17	17	17						
■ 모든 사후평가				9	5	9	7	2	
▲ 주요 기본법에 관한 사후평가				2	3	1	2	2	
● 일부 사후평가				9	10	11	8	10	
● 해당없음				14	16	13	17	20	

출처: OECD (forthcoming),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based on the 2014 OECD Regulatory Indicators Survey result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72>

규제기관의 거버넌스

규제기관은 법에 의해 권한이 주어진 단체이다. 규제기관은 식품안전, 공공보건, 소비자에 대한 전기 또는 물 공급 같은 정책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규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과 규제 제공을 통해서 여러 업종, 서비스, 산업의 전반적 거버넌스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 환경, 경제를 위한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고 있다. 올바른 거버넌스 구조, 좋은 규제 관행, 그리고 제도적 체계는 규제기관의 성과를 위해서 중요하다. 또한 이를 통해 공공기관, 더 일반적으로는 법치에 대한 신뢰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것은 규제기관의 법적 목적, 권력, 책임성 요건, 그리고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의 규제기관의 독립성을 포함한다.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관리 관행에 관한 자료는 2013년 업데이트된 OECD의 제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그리고 물 규제에 관한 설문조사의 일부로부터 수집되었다(OECD, 2015). PMR 데이터베이스는 OECD 국가들의 규제 구조와 정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PMR 데이터에 근거하여,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기관을 위한 법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독립성, 책임성, 그리고 행동의 범위)는 OECD 회원국들의 전기, 가스, 통신, 철도, 항공, 항만 분야에 따라 다양하다. OECD 회원국들에서 대체로 이탈리아, 독일, 영국은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는, 통신, 가스, 전기 부문의 거버넌스 구조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약한 부문은 항만이다. 한 부문에 상대적으로 강력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진 국가들이 다른 부문의 거버넌스도 우수한 경향이 있다.

정부부처와 분리되어, 심판관 역할을 하면서 규제를 결정하고 시행하는 독립 규제기관은 OECD 회원국들 모두에서 전기, 가스, 통신 부문에 더 흔하다. 그러나 유럽연합 소속이 아닌 OECD 회원국들(표 8.9)에서 이러한 산업부문의 규제기관은 정부 부처 내에 더 많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주로 유럽연합법이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기관을 시장의 “심판”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의 조치와 권한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뉴질랜드의 전력(Electricity Authority) 위원회와 이탈리아의 통신위원회(Autorita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에서 보듯이, 중재(모든 규제기관의 84%)와 시장 관계자 간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모든 규제기관의 85%)이다. 또한 규제기관의 가장 보기 드문 조치와 권한은 제재와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모든 규제기관의 67%). 그리고, 산업 기준과 규제 책무를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모든 규제기관의 58%). 이러한 권력이 있는 규제기관은 네덜란드의 소비자보호원(Authority for Consumers and Markets), 프랑스의 에너지규제위원회(Commission de régulation de l'énergie)가 있다.

네트워크 부문 규제기관은 대부분 정부 또는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들의 조치, 규제결정, 해법 및 동의안에 대한 보고서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대중 협의를 통해서 투명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 규제는 어떠한

규제 결정 이전에 피 규제기관 및 대중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이들의 규제결정은 보통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의해 뒷받침 된다(표 8.10).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전기, 가스, 통신, 철도, 항공, 그리고 항만에 관한 네트워크 부문 규제기관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자료는 2013년 업데이트된 'OECD's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데이터베이스의 일부로 수집되었다. 데이터베이스는 약 1,400 개의 질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약 300개는 네트워크 부문의 규제 관리 관행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 공식 조정관들이다. 응답율은 90%이고, 많은 국가들에서는 100%이다. 응답율이 낮은 곳은 일본(35%), 룩셈부르크(46%), 캐나다(58%)인데, 7개 부문의 질문이 답변되지 않았다. 답변의 확인은 2014년 4월에 지정된 공직자들, 즉 'Regulatory Policy Committee and 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의 대표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물 규제기관에 관한 자료는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수행된 설문조사의 일부로 수집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Network of Economic Regulators)의 물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에 이루어 졌다. 이는 PMR을 통해 수집된 다른 부문의 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국제기관 거버넌스 우수사례원칙(Best Practice Principles for the Governance of Regulators)의 첫 부분 적용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OECD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에서 34개의 규제기관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였다.

그림 8.11 "물 규제기관의 거버넌스에 관한 OECD 설문조사 참여자"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9004>.

더 읽어볼 것

OECD (2014),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9015-en>.

OECD (2015), The Governance of Water Regulators, OECD Studies on Water,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31092-en>.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aris, www.oecd.org/gov/regulatorypolicy/2012-recommendation.htm.

표 설명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8.9. 네트워크 부문에서 규제기관의 지위가 어떠한가?(2013년)

업 파 면 역 별		판결, 규칙제정 또는 집행 권력이 있는 독립기구	부처 혹은 기관	순수 자문역할을 하는 독립기구
	전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남아공,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인도, 남아공,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일본, 한국, 러시아	이스라엘
	가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칠레, 헝가리, 일본, 한국, 노르웨이, 브라질, 러시아	
	전기통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공,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루마니아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철도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라트비아, 루마니아	캐나다, 체코,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슬로베니아, 터키, 브라질, 러시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스위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항공 운수	호주,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몰타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슬로베니아, 스위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불가리아	스페인
	항구시설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남아공,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브라질, 러시아, 불가리아, 몰타	인도, 크로아티아

출처: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dataset.

<http://dx.doi.org/10.1787/888933248986>

8.10. 규제의 질 제고를 위해 물 규제기관이 사용하는 수단 (2014년)

국가	규제 결정 전 피규제자와의 협의 필요			규제 결정 전 공청회 실시 필요			규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용편익의 경제적 평가 필요			현행 규제의 사후평가 실시 의무		
	체계적으로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없음	항상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없음	체계적으로	일부 경우	없음	모든 규제 대상	특정 규제 대상	필요 없음
호주												
수도권	•			•					•			•
뉴사우스웨일스	•			•					•			•
빅토리아	•			•				•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			•				•				•
벨기에												
플랑드르		•			•				•			•
칠레		•				•			•			•
에스토니아		•				•			•		•	
헝가리		•				•			•			•
아일랜드	•			•					•			•
이탈리아	•				•				•			•
포르투갈	•				•				•			•
영국												
잉글랜드 웨일스		•		•					•			•
북아일랜드	•			•					•			•
스코틀랜드	•			•					•			•
미국												
하와이			•		•				•			•
메인	•			•					•			•
오하이오		•			•				•			•
펜실베이니아		•			•				•			•
테네시		•		•					•			•
웨스트버지니아			•		•				•			•
콜롬비아	•				•				•			•
라트비아		•			•				•			•

출처: OECD (2014), Survey on the Governance of Water regulators.

<http://dx.doi.org/10.1787/888933248997>

제9장 공공조달

공공조달 규모

전략적 공공조달

전자조달

중앙 조달기관

공공조달 규모

공공조달은 정부와 공기업이 재화, 서비스, 그리고 노동을 구매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2013년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부는 전체 일반정부 지출의 29%를 공공조달에 사용하였다. 2009년 평균은 30%였다. 공공조달은 납세자가 내는 돈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는 효율적인 집행을 하도록 기대되고, 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수행기준이 기대된다.

공공조달의 규모는 OECD 국가별로 다양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일반정부 지출의 20% 미만이고, 에스토니아, 한국, 일본에서는 35% 이상이다. 국내총생산의 관점에서 2013년 OECD 국가들이 평균 12.1%를 공공조달에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스위스 같은 몇몇 국가들은 국내총생산의 10% 미만을 사용했다. 반면,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은 국내총생산의 15% 이상을 공공조달에 소비했다. 정부지출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재정적 여유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결과로 재정저축 또는 자원 재할당이 가능하게 된다.

OECD 국가들에서 주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의 공공조달은 평균적으로 전체 공공조달 비용의 63%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연방국가는 하위정부가 공공조달에 높은 수준의 소비를 한다고 보고했다. 캐나다(87%)와 벨기에(84%)가 그 증거이다. 그렇지만, 단일국가 역시 하위정부 수준에서 공공조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탈리아(78%), 핀란드(70%), 일본(68%) 같은 국가들에서 하위정부가 공공조달에 높은 수준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 정부조달 지출의 크기는 국가계정체계(SNA)를 기반으로 한 OECD 국민계정통계(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사용하여 추산하였다. 일반정부 조달의 정의는 중간소비(자체 사용을 위한 정부의 재화와 용역 구매, 예를 들어 회계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총 고정자본형성(매출과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본 취득,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 건설), 그리고 시장 생산자를 통한 현물 형태의 사회적 이전(일반정부에 의해 구입되고 시장 공급자가 생산하여 가구에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의 총합이다.

여기서 정부조달은 중앙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조달 가치를 포함한다. 하위정부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킨다.

사회보장기금은, 별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그러나 그림 9.3 "전체 정부 지출 대비 정부조달, 2007, 2009, 2013"과 그림 9.4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정부수준별 정부조달, 2013"은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각각 <http://dx.doi.org/10.1787/888933249035>와 <http://dx.doi.org/10.1787/888933249047>. 주정부는 9개의 OECD 연방국가에만 해당된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연방국가로 간주), 스위스, 미국이다. 공기업 또

한 조달지출 추산에서 제외되었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OECD (2014), *Going Green: Best Practices for Green Procurement*, OECD, Paris.

OECD (201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since 2008",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8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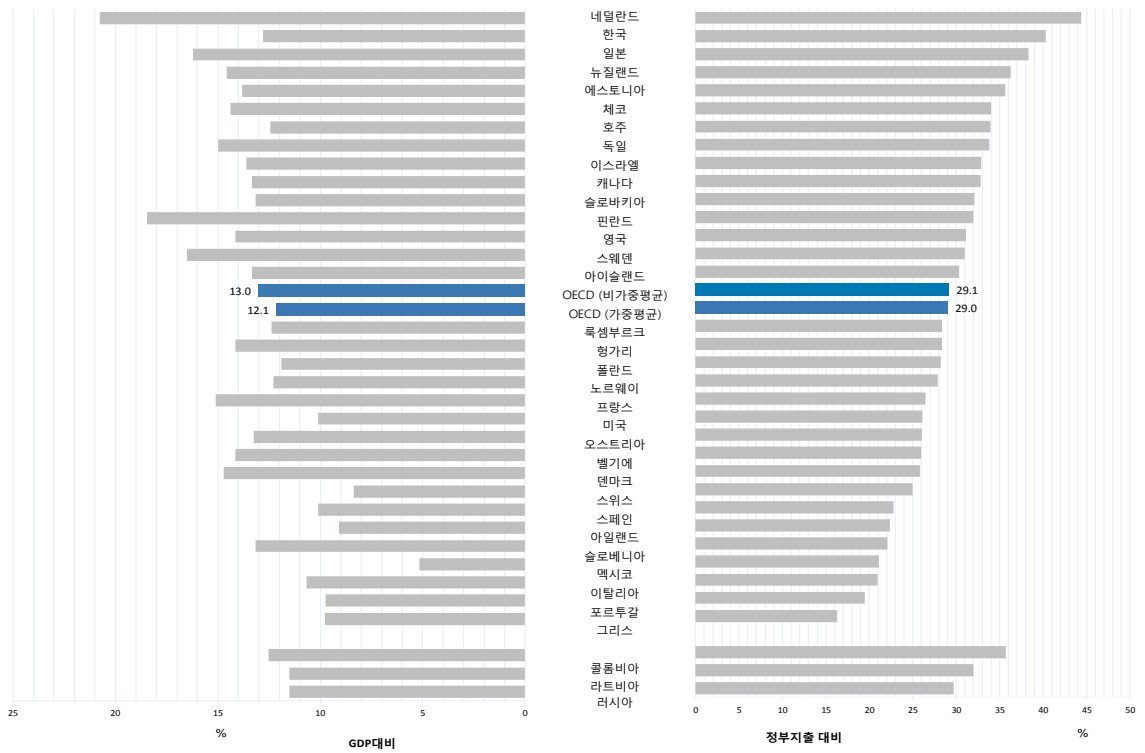
그림 설명

9.1: 칠레,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콜롬비아, 러시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했다.

9.2: 호주, 칠레,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포함되었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중앙정부에 포함되어 있다. 콜롬비아 자료는 2013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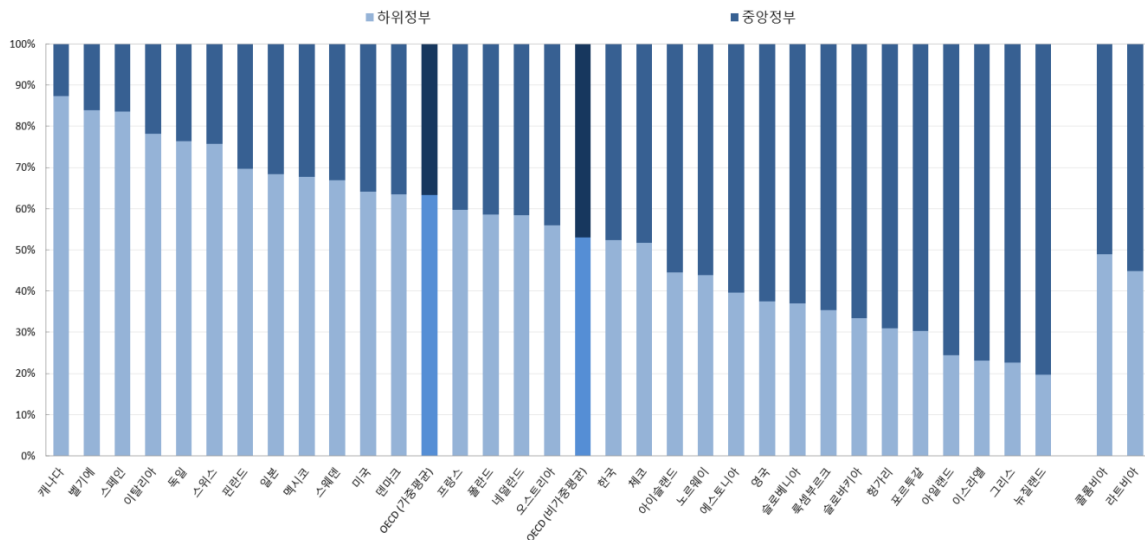
9.1 일반정부 조달이 GDP 및 정부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2013)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Data for 호주 are based on a combination o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d National Accounts data provided by the 호주 Bureau of Statistics.

<http://dx.doi.org/10.1787/888933249013>

9.2 정부수준별 조달비율, 2013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020>

전략적 공공조달

효율성과 비용효과성이 공공조달의 주요 목표이다. 그런데 정부는 공공조달을 추가적인 이차적 정책목표를 위해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차적인 정책 목표는 조달 정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성장, 중소기업 육성, 혁신,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대한 기준 또는 폭넓은 산업 정책 목표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조달을 이차적 정책 목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또는 전략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칠레, 독일, 일본을 포함한 30개(94%) 국가들이 친환경 공공조달, 중소기업지원 그리고/또는 혁신적인 재화 및 서비스를 지지하는 전략 또는 정책을 개발하였다. 에스토니아와 슬로바키아, 두 국가에서만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차적 정책 목표를 위한 공공조달 전략 또는 정책을 개발한 적이 없다.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환경적 또는 사회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 또는 정책의 결과를 측정했다고 보고한 OECD 국가의 수는 상당히 적다. 그리고 정책목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설문조사대상 OECD 국가들 중 중앙정부 또는 조달기관(계선부처)에서 전략 또는 정책을 개발한 곳은 20개국이다(69%). 벨기에, 포르투갈, 스웨덴, 그리고 미국은 친환경 공공조달을 지지하기 위한 전략 또는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 18개 OECD 국가들(62%), 특히 호주,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전략 또는 정책의 결과를 평가한다. 캐나다, 한국, 영국을 포함한 11개 OECD 국가들(39%)만이 혁신적 재화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 또는 전략의 영향력을 측정한다.

전략의 결과를 측정하지 않는 국가들(특히 그리스와 독일)이 직면하는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자료부족이다. 칠레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친환경 공공조달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적합한 방법론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장려책이 부족하고, 재정 자원의 부족이 제약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적 요건의 부재 역시 친환경 조달의 측정과 혁신적 재화와 서비스 정책을 방해하는 요소임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와 노르웨이는 이러한 측정 추구를 제약하는 요소로 법적 요건의 부재를 인정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를 통해 수집되었다. 32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변하였다. 승인절차 중인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도 답변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 수준의 조달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 대표자들과 중앙 구매 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이차적 정책 목표는 공공조달의 활용을 통한 친환경성장, 중소기업 육성, 책임 있는 기업행동을 위한 혁신 또는 표준 같은 다양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목표를 가리킨다. 정부는 시기적절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적 목표에 더하여,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조달의 사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친환경 공공조달의 개념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친환경적으로 조달되지 않을 경우에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 노동력과 비교할 때, 생애주기별 환경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재화, 서비스, 노동력을 조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혁신적인 재화/서비스는 새로운 또는 매우 개선된 제품 또는 과정을 말한다. 혁신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집행, 즉 시장에 출시되어야 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OECD (201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since 2008”,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85-en>.

OECD (2014), “Procurement – Green Procurement”, www.oecd.org/corruption/ethics/procurement-greenprocurement.htm.

그림 설명

9.5: 체코,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014년 11월, 노르웨이 국회는 친환경 공공조달이 또다시 공공관리와 전자정부청(Agency for Public Management and eGovernment, Difi)의 책임 하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9.6: 체코,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슬로바키아는 친환경 공공조달 지원에 관한 그림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략적 공공조달을 위한 정책 또는 전략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는 중소기업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그리고 슬로바키아는 혁신적인 재화와 서비스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9.5. 정책목표에 따른 전략적 공공조달 발전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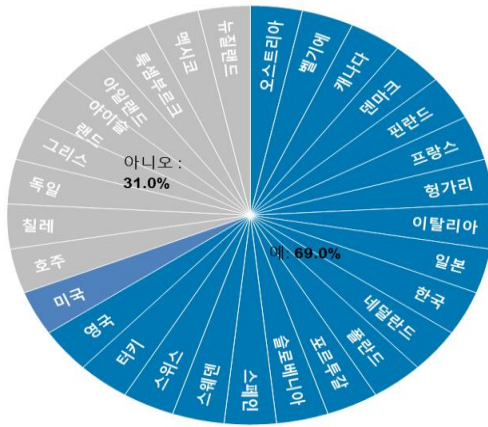
	친환경 공공 조달	중소기업 지 원	혁신적 재화와 서 비스 지원
호주	●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캐나다	◆●	●	●
칠레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프랑스	◆●	◆●	◆●
독일	●	●	●
그리스	◆●	●	○
헝가리	◆	●	●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
일본	●	●	●
한국	●	●	●
룩셈부르크	◆●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터키	●	●	●
영국	●	●	●
미국	●	●	◆●
OECD 총계			
◆ 전략/정책이 몇몇 조달기관에서 개발됨	13	11	10
● 전략/정책이 중앙 수준에서 개발됨	27	25	23
■ 전략/정책이 폐지됨	1	0	0
○ 전략/정책이 개발된 적 없음	2	3	4
브라질	◆●	◆●	●
콜롬비아	◆	●	●
러시아	○	●	○

출처: OECD (2014)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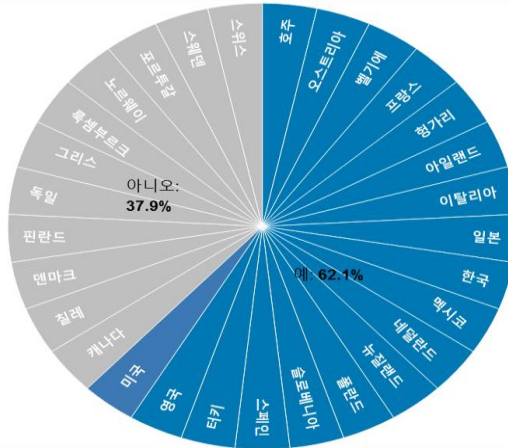
<http://dx.doi.org/10.1787/888933249055>

9.6.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 및 전략의 결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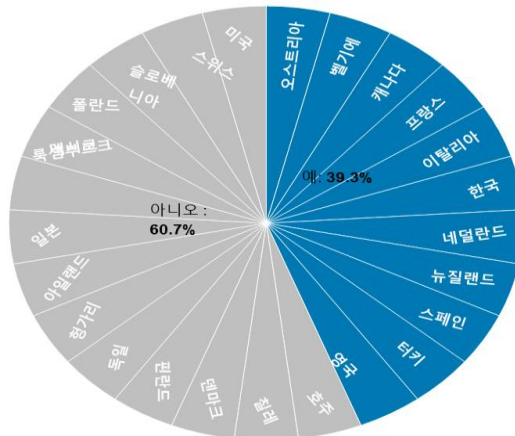
친환경적 조달 지원여부



중소기업 지원여부



혁신상품 지원 여부



출처: OECD (2014)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9069>

전자조달

공공 부문에서 디지털기술 사용은 효율성의 동력이고, 정부를 더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혁신적이며, 참여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조달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자조달의 사용은 경쟁입찰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 경쟁은 증가시키고 행정부의 부담은 줄일 뿐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설문조사에 답한 모든 OECD 국가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기회를 공시하고 입찰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94%의 국가들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조달기회를 공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78%의 국가들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입찰서류를 제공한다. 벨기에, 멕시코, 포르투갈이 그 예이다.

조달주기 시작단계에서의 기능들, 특히 조달계획 공표(84%), 온라인 입찰(84%), 전자입찰(84%)은 설문조사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제공되고 있다. 반면, 조달주기의 마지막 기능(낙찰 통지 제외, 94%)은 소수의 OECD 국가들에서 제공된다. 예를 들어, 소수의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 덴마크, 뉴질랜드에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경매(온라인 입찰에서)(63%), 주문(66%), 청구서 온라인제출(56%), 사후 계약관리(41%)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청구서의 온라인 제출은 예외이다.

조달기관 및 잠재적인 응찰자와 공급자가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는 ICT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낮다는 것이다(44%). 설문조사에 답한 여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중 헝가리, 폴란드, 미국이 이렇게 답변했다. 전자조달 시스템에 의해 형성되는 혁신적 조직문화에 둔감하고(41%), 경제적 기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도(34%) 그리스, 스페인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조달기관의 도전과제임이 밝혀졌다. 잠재적 응찰자와 공급자와 관련해서, 캐나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를 포함한 13개 OECD 국가들은 전자조달 절차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기능을 활용하는 것 또한 도전과제임이 밝혀졌다(41%).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 설문조사는 전략적 공공조달, 전자조달, 중앙구매기관, 그리고 지역 수준의 공공조달에 관해 초점을 맞춘 것이다. 32개 OECD 국가들 중 일부가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도 답변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조달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 대표와 중앙구매기관의 고위공직자이다.

전자조달은 조달 주기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합시키고, 서면 절차를 대체하고 재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조달 주기는 일련의 관련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요구평가, 경쟁 및 낙찰, 지급과 계약관리, 그리고 차후의 모니터링 또는 감사를 포함한다.

전자조달 시스템 기능에 대한 더 많은 자료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표 9.7).
<http://dx.doi.org/10.1787/888933249077>.

더 읽어볼 것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OECD (201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since 2008",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85-en>.

그림 설명

9.7: 체코,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더 많은 기능에 대한 정보는 Statlink를 참고하기 바란다.

9.8: 체코,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절차를 이해하거나 적용하고 기능을 사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잠재적 응찰자/공급자만 직면한 문제이다.

9.7. 온라인 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2014)

	의무적으로 지원	의무는 아니나 지원함	지원하지 않음
입찰 공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아이슬란드, 일본	
전자 응찰 (이메일 제외)	벨기에,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멕시코, 포르투갈,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스위스
온라인 입찰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멕시코,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호주,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폴란드
낙찰자 공시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전자 송장 (이메일 제외)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슬로베니아, 스웨덴, 스위스, 미국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터키
사후적 계약관리	스위스, 터키, 미국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영국

출처: OECD (2014)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9077>

9.8. 온라인 조달시스템 사용에 직면한 주요 문제들 (2014)

	지식(ICT기술) 부족	온라인 조달 시스템 사용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해 부족	혁신에 둔감한 조직 문화	시스템의 이해 및 적용의 어려움	시스템 기능 사용의 어려움	모르겠음
호주	○	○	○	○	○	x
오스트리아	x	x	x	x	x	◆◆
벨기에	○	○	◆◆	○	○	x
캐나다	◆◆	●	●	●	●	x
칠레	○	○	○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	○	x
핀란드	x	x	x	x	x	◆◆
프랑스	x	x	x	x	x	◆◆
독일	◆	◆◆	◆	○	●	x
그리스	●	◆◆	◆◆	○	○	x
헝가리	◆◆	○	◆	●	●	x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	x
일본	◆◆	◆◆	○	●	●	x
한국	◆◆	○	◆◆	○	○	x
룩셈부르크	x	x	x	x	x	◆◆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	◆◆	○	●	●	x
뉴질랜드	◆◆	◆◆	○	○	○	x
노르웨이	○	◆◆	●	●	○	x
폴란드	◆◆	○	◆	●	○	x
포르투갈	◆◆	○	○	●	○	x
슬로바키아	●	◆	○	○	●	x
슬로베니아	◆◆	◆◆	◆◆	●	●	x
스페인	●	◆◆	◆◆	○	○	x
스웨덴	x	x	x	x	x	◆◆
스위스	x	x	x	x	x	◆◆
터키	○	○	◆◆	○	○	x
영국	◆	●	◆	○	●	x
미국	◆◆	○	◆◆	●	●	x
OECD 총계						
◆ 조달 기관	14	11	13	x	x	10
● 잠재적 입찰/조달자	14	12	10	13	13	8
○ 심각한 문제 없음	8	11	10	12	12	x
브라질	◆◆	◆◆	◆	●	●	x
콜롬비아	◆◆	◆◆	◆◆	○	○	x
러시아	○	○	○	●	○	x

출처: OECD (2014)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9082>

중앙 조달기관

중앙 조달기관은 계약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i) 한 개 이상의 계약기관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취득한다. ii) 한 개 이상의 계약기관을 위해 노동,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공 계약을 맺는다. iii) 한 개 이상의 계약기관을 위한 노동력,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기본협정을 맺는다. 대규모 조달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더 나아가, 중복을 막고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며 확실성, 단순성, 균일성은 증가시켜 정책 목표달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OECD 국가들에서 중앙조달기관(Central Purchasing Bodies, CPBs)의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칠레,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에서 중앙조달기관이 설립되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답한 OECD 국가들 중 호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중앙조달기관을 설립하였다.

중앙조달기관은 각국의 행정부 내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정 구조를 반영한다. 중앙조달기관이 있다고 답변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중앙조달기관이 중앙정부에 있고 절반은 지방정부에도 있다. 중앙조달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15.6%의 OECD 국가들이 공기업으로서 기능하는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핀란드, 이탈리아, 터키가 그 예이다. 그러나, OECD 국가들에서 대부분의 중앙조달기관은 계선부처 내에서 작동하거나(28.1%), 또는 정부기관으로서 기능한다(43.8%). 아일랜드 같은 몇몇 국가들에서는 중앙조달기관의 독립성 정도에 관해 기초 토론이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한 OECD 국가들에서, 공공조달기관의 78%는 수요와 구매를 종합하는 계약기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기본협정 또는 기타 제휴방식을 허용하는 시스템 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소수의 국가들에서 중앙조달기관은 공공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훈련을 조율한다(36%). 그리고 계약기관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29%). 그리스, 아일랜드,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중앙조달기관은 위에 언급된 모든 기능을 실행하고 있다. 반면, 9개의 OECD 국가들(32%)의 중앙조달기관은 한 가지 역할만 하고 있다. 이 국가들에는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가 포함된다.

OECD 국가들은 중앙조달기관을 설립하는 동기에 대해 재화와 서비스의 더 좋은 가격(100%), 낮은 거래비용(96%), 수용력과 전문성의 향상(81%), 법적, 기술적, 경제적, 계약상의 확실성 증가(81%), 그리고 단순함 및 편리함 증대(78%)이라고 보고하였다. 추가적으로 중앙조달기관은 점점 이차적 정책목표 집행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설문조사한 OECD 국가 중 54%에서 중앙조달기관은 절반 이상의 경우에 낙찰기준으로 환경적 고려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적은 수(25%)의 중앙조달기관은 절반 이상의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을 낙찰 기준에 포함시켰다. 36%는 거

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2014 OECD Survey on Public Procurement'를 통해서 수집되었다. 32개 OECD 국가들이 설문조사에 답하였다.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도 답변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조달정책을 맡고 있는 국가 대표와 중앙구매기관의 고위공직자이다.

기본협정의 성격은 국가별로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특정 조건들을 확립하고 미래 계약 낙찰을 촉진하는 조달기관과 공급자 간의 협정이다..

기본협정은 두 단계로 실행된다. 첫 단계는 조달기관과 기본협정을 맺는 당사자(또는 당사자들)가 되는 공급자(또는 공급자들) 또는 계약자(또는 계약자들)를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협정에 따라 공급자 또는 계약 당사자에게 조달계약이 낙찰된다.

조달계약의 낙찰이 조달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로 인해 체결이 이루어지고, 조달단체와 선택된 공급자(들) 간에 조달이 발효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OECD (201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Integrity in Public Procurement: Progress since 2008",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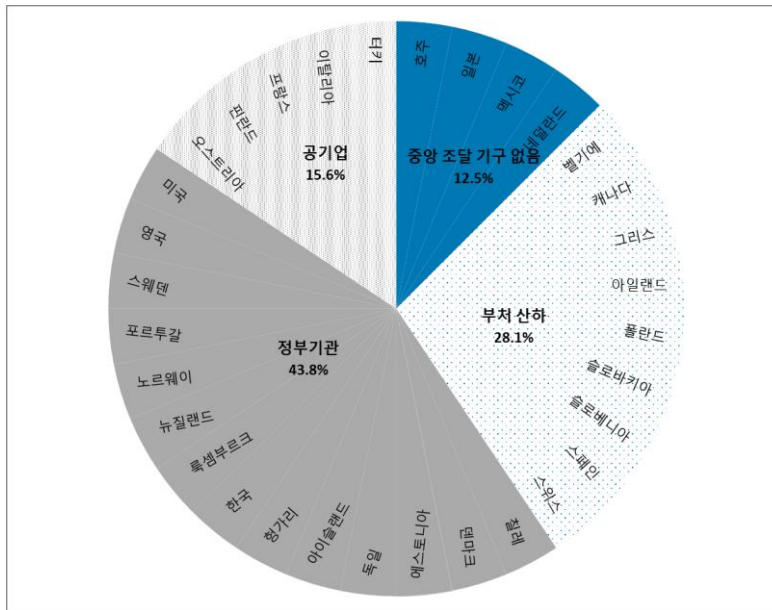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385-en>.

그림 설명

9.9: 그림은 다수의 중앙조달기관이 존재하는 중앙정부 수준의 중앙조달기관을 가리킨다. 체코,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독일 같은 몇몇 국가들은 중앙정부 수준에 여러 중앙조달기관이 있다. 호주연방은 중앙조달기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재무부에서 많은 범정부적 협정을 수립하고 있다. 호주의 몇몇 주와 자치령에 중앙조달기관이 있다. 멕시코에서는 행정부가 중앙조달기관으로써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이 있다.

9.10: 체코,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그리고 러시아는 중앙조달기관이 없다.

9.9. 중앙 조달 기구의 법적 지위 (2014)



출처: OECD (2014)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9096>

9.10. 중앙 조달 기구의 역할 (2014)

	수요 및 구매량 집계 하는 계약 기관	기본협정과 기타 연결 방식을 제공하는 국가시스템의 관리자	공공 조달 담당 공무원의 훈련	조달 기관을 위한 정책 수립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캐나다	●	●	○	○
칠레	○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아이슬랜드	○	●	●	○
아일랜드	●	●	●	●
이탈리아	●	●	○	○
한국	●	●	●	○
룩셈부르크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	●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	●
OECD 총계				
예 ●	22	22	10	8
아니오 ○	6	6	18	20
브라질	●		●	●
콜롬비아		●	●	●

출처: OECD (2014) Survey on Public Procurement

<http://dx.doi.org/10.1787/888933249104>

제10장 디지털 정부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디지털 정부 성과

정부자료 공개

개인과 기업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정부의 소셜미디어 활용

대부분의 정부에서 소셜미디어의 존재와 활동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인구가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 공식적, 비공식적 이익집단 모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34개 OECD 국가 중 28개국의 집정부(국가 원수, 정부수반, 또는 정부 전체)에서 트위터 계정을 가동하고 있고, 21개국이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많은 부처, 기관, 또는 프로그램 별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많은 지역정부 및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영국(@Number10gov)과 칠레(@GobiernodeChile)의 행정수반실은 트위터를 구축하였는데, 팔로워가 자국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리트윗, 댓글, '좋아요' 등에 대한 자료를 보면, 최소한 정부의 몇몇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정부에 의한 소셜미디어 사용 목적 및 그에 대한 결과가 항상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 가동되는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전략적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이에 대응하여, OECD 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정부가 전략 또는 포괄적 계획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전통적인 의사소통 메시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다. 몇몇 정부만이 공공정책과정 개방 또는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의 변경 같은 더 발전된 목적을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 스페인 국립경찰(@Policia)의 성공은 법 집행에 있어 소셜미디어의 세계적 참고 자료가 되고 있다. 몇몇 정부들은 내부적인 목적을 위해 실험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Blueprint 2020'에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주로 공공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순수 내부 플랫폼인 GCpedia와 GConnex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정책과정을 더 포용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모두에게 맞는 접근은 없다. 맥락과 수요 요소가 고려되어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는 소셜미디어 사용이 국가 별로 다양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교육수준에 따라 다양한데,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영국에서는 고등 교육 여부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대한 격차가 매우 크다. 어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선택하느냐가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개인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은 국가별로, 인구통계학 집단 별로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측정 및 벤치마킹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소수의 정부만이 그들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기관의 존재감 및 인기를 측정하는 데 정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침투, 인식, 목적 지향성 평가를 위해서는 좀더 정성적 정보가 필요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다음 그림은 국가수반, 정부수반, 그리고 정부 전체의 소셜미디어 인기도를 비교해서 보여준다. 한 국가가 많은 중앙정부 계정을 보유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체제가 다르고, 다른 여러 언어로 소통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가장 많은 팔로워가 있는 계정만 표시되었다. 그림은 2014년 1월의 Burson-Marsteller's Twiplomacy 데이터에 기초한 것이다. OECD 국가들과 선별된 파트너 국가들만 제시되었다. 비교를 위해서, 각 계정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국내 인구의 크기로 나누었다. 팔로워의 수가 외국인과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측정이 계정의 확산도를 알려주는 기준치를 제공한다.

정부의 소셜미디어의 사용에 관한 OECD 설문조사가 2013년에 수행되었다. 26개 회원국들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콜롬비아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이탈리아와 멕시코는 2015년에 답변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Mickoleit, A. (2014)에 있다.

“개인별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유로스타트(Eurostat)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소셜미디어의 비율을 구분하였다. 국제표준교육분류(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ISCED)에 기초하여 교육수준에 대해서는 다른 범주를 사용하였다. “고등 정규 교육”은 ISCED 기준 5 또는 6을 가리킨다. “낮은 또는 비정규 교육”은 ISCED 기준 0, 1, 2,를 가리킨다. 이 두 수치 간 차이의 크기 별로 국가들을 정렬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http://ec.europa.eu/eurostat/cache/metadata/EN/isoc_bde15c_esms.htm를 참고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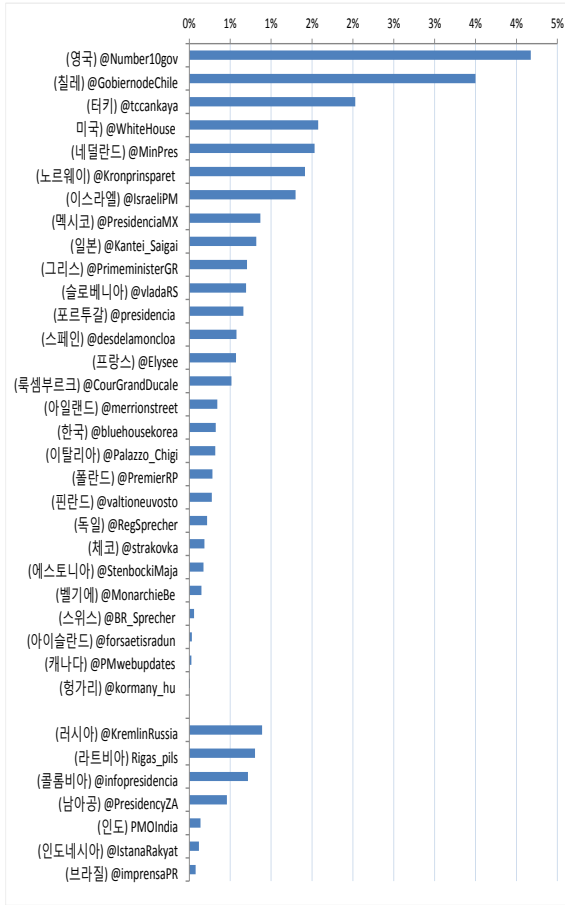
더 읽어볼 것

Androsoff, R. and Mickoleit, A. (2015), “Measuring government impact in a social media world”, OECD Insights blog, 18 February, <http://bit.ly/17giios>.

Burson-Marsteller (2014), “Twiplomacy Study 2014”, <http://twiplomacy.com>.

Mickoleit, A. (2014), “Social Media Use by Governments: A Policy Primer to Discuss Trends, Identify Policy Opportunities and Guide Decision Maker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26, OECD, <http://dx.doi.org/10.1787/5jxrcmghmk0s-en>.

10.1. 중앙정부 트위터 팔로워



출처: Burson-Marsteller's Twiplomacy database (2014); and OECD calculations based on World Bank population data for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115>

10.2. 중앙정부 소셜미디어 전략, 내부 활용, 측정 (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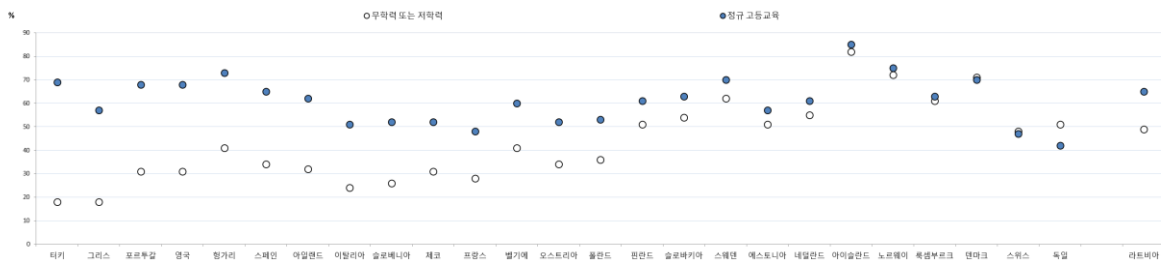
	전략 혹은 목표가 있나?	소셜미디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나?	메트릭스나 지표를 사용하나?
호주	+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0	0
캐나다	+	+	+
칠레	+	-	+
체코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	-
핀란드	+	+	-
프랑스	+	0	+
아이슬란드	-	-	-
아일랜드	+	-	-
이탈리아	+	+	0
일본	-	-	-
한국	+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	0
뉴질랜드	-	+	0
노르웨이	-	-	-
폴란드	-	+	0
포르투갈	-	0	-
슬로베니아	-	+	-
스페인	-	-	-
스웨덴	-	-	-
스위스	-	-	-
터키	+	-	-
OECD	13 (50%)	12 (46%)	5 (19%)
콜롬비아	+	+	+

주석: "+" 는 "예", "-"는 "아니오", "0"는 "모름", 이탈리아와 멕시코의 경우 2015년 자료

출처: Mickoleit, A. (2014), "Social Media Use by Governments: A PolicyPrimer to Discuss Trends, Identify Policy Opportunities and GuideDecision Maker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26,OECD, <http://dx.doi.org/10.1787/5jxrcmghmk0s-en>.

<http://dx.doi.org/10.1787/888933249126>

10.3 교육수준에 따른 소셜미디어 사용자 비율(2014년)



출처: Author's calculations based on Eurostat survey "ICT usage by individuals" (2014).

<http://dx.doi.org/10.1787/888933249139>

디지털 정부 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은 점점 모든 정부활동의 기저를 이루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정부는 예산의 2%까지 정보기술에 사용하고 있다(OECD, 2013). 이 비율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예산규모가 크며 따라서 위험이 따르는 많은 프로젝트 포함한 수치이다.

‘디지털 정부 성과에 관한 2014년 OECD 설문조사(2014 OECD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Performance)’는 23개 국가만 표본으로 사용했는데, 예산 1000만 USD 이상의 579개의 정부 ICT 프로젝트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579개 프로젝트 중 대략 44%)의 국가들은 프로젝트 기간이 평균 3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큰 규모의 복잡한 ICT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실패의 위험이 크고, 규모가 작은 정부 프로젝트에 비해 예산을 초과하는 경향도 크다.

기술적, 조직적 문제 등의 이유로 실패한 ICT 프로젝트의 긴 역사는 비용대비 높은 가치를 생산하는 정부의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 한편, ICT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때도, OECD 회원국의 정부들은 여전히 재정적, 비재정적 총 편익을 모두 측정하고 정확히 보고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ICT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현된 직접적인 재정적 편익의 25% 미만을 보고하고 설명할 수 있다. 덴마크, 한국, 영국만이 ICT 프로젝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재정적 이익의 대부분을 보고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ICT 시스템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공공기관에 더 자유롭게 참여하며, 정부 활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측정할 수 있는 편익의 부재(높은 비용과 위험 부담에 더하여)는 장래 투자를 위한 사업성공사례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지원과 자금조달, 그리고 제공 옵션 간 투명하고 증거에 기반한 결정도 어렵게 만든다.

국가들은 이 도전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룬다. 절반 정도의 OECD 국가는 중앙정부에 ICT 투자를 위한 표준화된 경영사례모델(standardized business case model)을 운용하고 있다. 22%의 국가들에서 경영사례모델의 사용이 의무화 되어있고, 다른 37%의 국가에서는 지출 문턱(expenditure thresholds) 같은 특정 기준에 해당되면 경영사례모델의 사용이 의무이다. 정부는 경영사례의 활용을 고위험 ICT프로젝트에 대한 고강도 검토와 감독에 종종 연계시킨다. 예를 들어, 덴마크 ICT 프로젝트 위원회는 1,000만 DKK(약 2백만 EUR)를 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마다 고강도 프로젝트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다. ‘디지털 정부 전략에 관한 2014년 OECD 권고사항(The 2014 OECD Recommendation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은 이러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디지털 정부 개혁을 위해, 위험을 완화시키고 ICT 프로젝트 성과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화된 접근을 옹호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3개 그림의 자료는 '디지털 정부 성과에 관한 2014 OECD 설문조사(2014 OECD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Performance)'에서 온 것이다. 설문조사는 26개 OECD 국가들의 답변과 라트비아, 콜롬비아의 답변으로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최고 정보통신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s) 또는 같은 직책의 책임자였다.

국가들은 전체 비용이 1,000만 USD 이상인 중앙정부 ICT 프로젝트의 수를 보고하도록 질문 받았다. 국가들은 이러한 큰 규모의 ICT 프로젝트의 평균 계획 기간을 제공하도록 질문 받았다. 계획된 프로젝트 기간의 평균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은 그림 10.5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그림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답변에 기초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진행 중인 ICT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직접적 재정 총편익(금전 가치)을 계측한 것의 몇 퍼센트가 실제로 중앙에서 측정되고 후속관리 되고 있는가?"

더 읽어볼 것

Jones-Parry, R. and A. Robertson (eds.) (2013), "Overspend? Late? Failure? What the Data Says about IT Project Risk in the Public Sector", in Commonwealth Governance Handbook: Democracy,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onwealth Secretariat, London, pp. 14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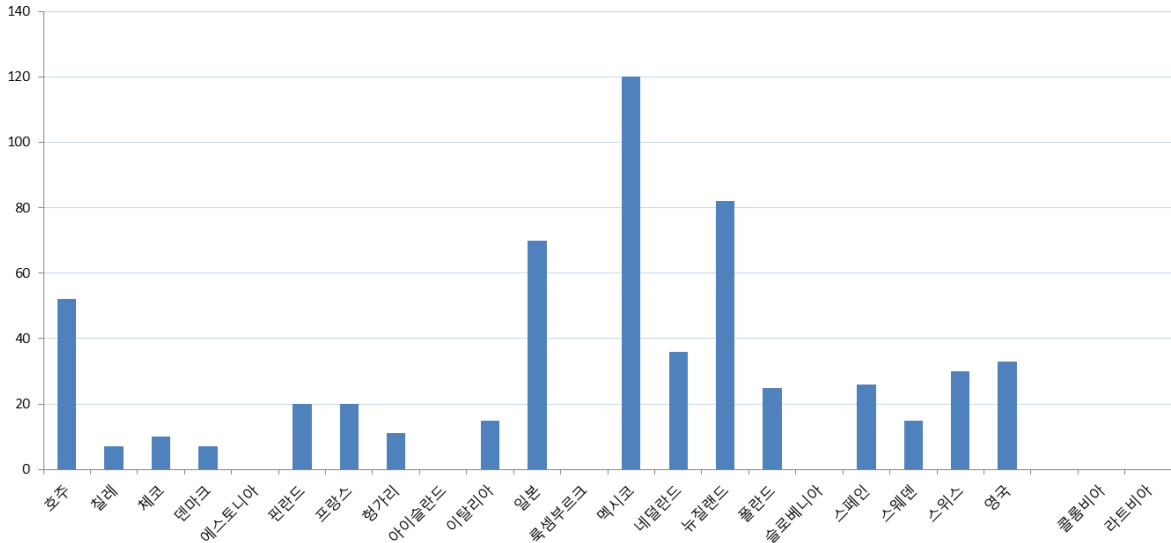
OECD (2014), "Recommendation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OECD, Paris, www.oecd.org/gov/public-innovation/recommendation-on-digital-government-strategies.htm.

OECD (2013), Government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3-en.

그림 설명

10.4: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콜롬비아, 그리고 라트비아는 1,000만 USD 이상 되는 중앙정부 ICT 프로젝트가 없다고 보고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한국,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터키, 그리고 미국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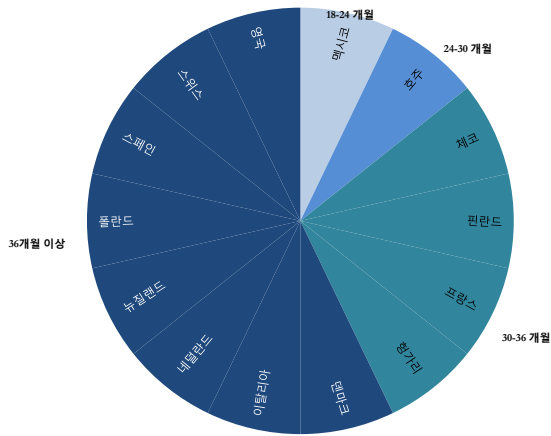
10.4. 총액이 천 만 달러 이상인 중앙정부 ICT 프로젝트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Performance.

<http://dx.doi.org/10.1787/888933249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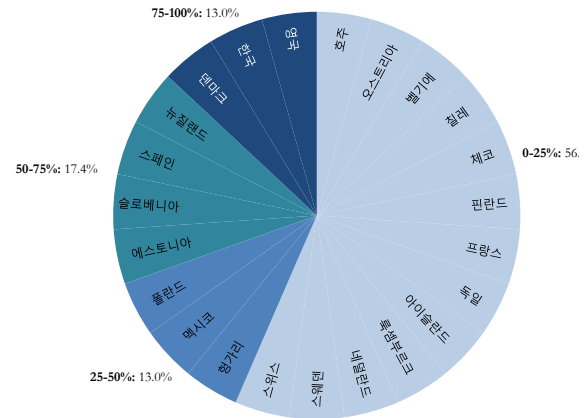
10.5 총 금액 천 만 달러 이상인 중앙정부 ICT 프로젝트의 평균 기간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Performance.

<http://dx.doi.org/10.1787/888933249154>

10.6 OECD 정부 보고에 따른 ICT 투자 대비 총재정수익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Performance.

<http://dx.doi.org/10.1787/888933249166>

정부자료 공개

공공부문은 일상 활동에서 많은 자료를 생산하고 수집한다. 데이터를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고, 시민과 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정부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며, 시민 참여와 자체 의사결정을 더 잘 알릴 수 있다.

적극적인 정부자료공개(OGD)는 중앙정부와 하위정부 수준에서 의료, 교육, 교통, 안보 및 환경(오염, 폐기물 관리) 관련 공공서비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공간정보를 사용하는 휴대폰앱의 확산은 공공데이터에 접근성을 높이고 이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가 시민과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2013년에 G8 국가들은 OGD 전략의 집행을 위한 국제적 수단을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G8 오픈 데이터 헌장(The G8 Open Data Charter)'은 5개 원칙을 규정하였는데, 1)데이터 자동공개, 2)다량의 질 좋은 데이터, 3)누구나 사용 가능, 4)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개, 5)혁신을 위한 데이터 공개와 이러한 원칙의 시행을 지도할 3개의 공동조치 등이다.

OECD는 위 5개 원칙의 시행과 그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기본체계와 관련 지표의 개발을 통해 정부들이 OGD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을 돕기 시작했다. OGD에 관한 2014 OECD 설문조사에 답변한 30개 OECD 국가들 중 25개국은 중앙정부/연방정부 수준에서 OGD에 관한 포괄적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29)의 국가들이 국가 자료공개 포털을 개발하였다. 터키만이 예외이다.

전략의 적용과 포털 개발을 넘어서, OECD는 자체 지표를 만들었다. 이 지표는 'G8 오픈 데이터 헌장'의 방법론과 체계에 기초한 것이다. OECD 시험 지수(pilot index)는 'G8 오픈 데이터 헌장'의 집행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것은 정부자료공개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자료 공개를 집행하는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1. 국가 포털에서 자료 사용 가능성(원칙 1과 공동조치 2에 기초함) 2. 국가 포털에서 정보 접근성(원칙 3에 기초함) 3. 혁신적인 재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원칙 5). 올해의 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유일한 원칙은 원칙 4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개 (예: 투명성)"이다. 이는 기존 측정 노력이 주로 사회경제적 가치 창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OECD는 이들 지표를 더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자료공개에의 모든 잠재적인 편익, 즉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 측면의 편익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지표들도 개발할 것이다.

종합지수에 세가지 관점을 함께 도입하면서, 2014년 가장 많은 정부자료공개 노력을 한 곳은 한국,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그리고 스페인이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폴란드이다. 스위스,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 같은 몇몇 국가들은 현재 OGD 중앙/연방 포털의 중요한 변경을 진행 중으로, 2014년 지수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수가 높은 국가들은 OGD 국가 포털에서 재사용 및 앱 개발 수치가 높다고 보

고했다. 예를 들어 한국, 프랑스, 영국, 캐나다는 공공데이터의 재사용을 통해 각각 407, 73, 363, 207개의 새롭게 시도된 정책(앱 전화, APIs 등)을 보고했다(OECD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2014). 각 국가의 컴퓨터과학자들의 수와 자질 같은 공공자료의 높은 재사용율과 국가 포털에서 공공자료의 재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의 증가 경향 그리고 좀 더 성숙한 OGD 환경의 존재에는 많은 이유가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정부자료공개(Open Government Data)에 관한 2014년 OECD 설문조사에서 온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대부분 OECD 국가들과 두 후보 국가(콜롬비아, 라트비아)의 최고 정보통신 책임자(chief information officers)이다. 답변은 국가들의 정부자료공개에 대한 현재의 관행과 절차에 관한 자체 평가를 나타낸다. 자료는 중앙정부/연방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주정부/지방정부 수준의 정부자료공개 관행은 제외하였다.

종합지수는 'G8 오픈 데이터 헌장'의 원칙과 OECD 저작물에 서술된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다(Ubaldi, 2013). 정부자료공개에 관한 OECD 시험 지수는 19개의 변수를 포함한다. 이 변수는 3개의 관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i)국가 포털에서 자료의 사용 가능성 ii)국가 포털에서 자료의 접근성 iii)혁신적인 공공자료의 재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 지수로 각국의 정부자료공개 접근/전략의 전반적인 품질을 측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부록 E에 이 지수를 구성하면서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 있다.

더 읽어볼 것

G8 (2013), "Open Data Charter", Lough Erne, UK, 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pen-data-charter/g8-open-datacharter-and-technical-annex.

Ubaldi, B. (2013), "Open Government Data: Towards Empirical Analysis of Open Government Data Initiativ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22,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5k46bj4f03s7-en>.

그림 설명

10.7: 체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10.8: Data for the Czech Republic, Hungary, Iceland, Israel and Luxembourg are not available.

10.8: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룩셈부르크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올해의 지수는 "시험" 버전으로(전체 방법론에 관해서는 부록 E 참고)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 자료포털에서 자료의 접근성과 사용가능성, 그리고 자료 재사용에 대한 정부지원.

10.7.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중앙/연방 정부의 지원 (2014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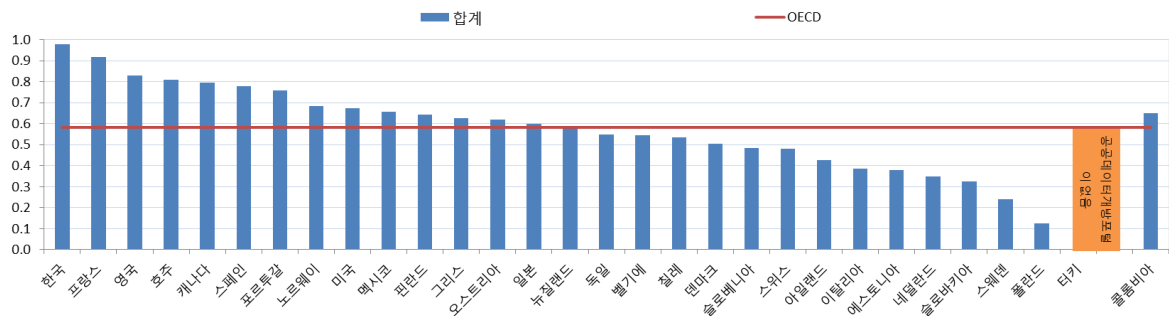
	전략/인프라		자문 데이터 개방에 대한 이용자의 필요성 관련 정기적인 설문	데이터 재사용 지원 및 촉진		국가 포털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접근성			
	단일 중앙/연방 OGD 전략	국가 OGD 포털 사이트 존재		코크리에이션 유형 의 조직 (예: 해커톤)	공무원들의 데이터 분석 및 재사용 능력 증진을 위한 훈련	CSV 포맷으로 공개된 데이터 (기계 관독 가능)	메타데이터의 체계적 제공	사용자 피드백 부문	데이터셋 추가 가능 지를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	●	◆	■	■	●	○	○
칠레	○	●	○	◆	◆	■	●	●	○
덴마크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	○
그리스	●	●	●	■	◆	◆	○	●	○
헝가리	○	●	●	□	◆
아일랜드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일본	●	●	●	◆	◆	■	●	●	●
한국	●	●	●	◆	■	■	●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스페인	●	●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	○
터키	○	○	○	◆	□	x	x	x	x
영국	●	●	●	◆	■	■	●	●	○
미국	●	●	●	■	○	●	○
OECD 합계	25	29	24				20	22	11
콜롬비아	●	●	●	■	◆	■	●	●	○
라트비아	○	○	●	◆	□	x	x	x	x
	●	있음		■	중중/일반적으로		..	결측치	
	○	없음		◆	가끔		X	적용불가	
				□	없음				

- 예.
- 아니오..
- 중중/일반적으로
- ◆ 때때로
- 절대 없음.
- .. 자료 없음.
- X 적용되지 않음..

출처: OECD (2014),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http://dx.doi.org/10.1787/888933249175>

10.8. 공공데이터개방지수: 개방적이고 유용하며 재사용 가능한 정부 데이터 (2014년)



출처: OECD (2014),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http://dx.doi.org/10.1787/888933249180>

개인과 기업의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

온라인으로 행정서식을 기입하고 제출(예: 세금 신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포털은 다양한 범위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로 인해 개인 및 기업이 정부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상당히 바뀌었다.

2014년 OECD 국가에서 국민의 49%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33%가 온라인으로 행정서식을 제출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국민들이 전자정부 서비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반면, 칠레, 이탈리아, 폴란드에서는 활용도가 낮았다.

기업은 개인보다 전자정부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한다. 이는 많은 국가들에서 기업이 온라인 경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했기 때문일 것이다. 2013년 OECD 평균 83%의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서식을 얻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78%가 온라인으로 서식을 기입했다고 보고했다. 북유럽 국가들과 프랑스, 아일랜드 같은 국가가 높은 수준의 활용을 보고하였고, 반면 캐나다(기입된 서식의 발신에 대한 자료는 세금 신고 관련만 보고), 스위스, 독일, 멕시코에서는 활용도가 낮다.

유럽의 OECD 국가에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조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공공조달은 공공입찰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경쟁을 증가시킨다. 또한 공공조달은 정부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는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 조달 계약주기를 단축시키며, 준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2013년 유럽의 OECD 국가들에서, 기업의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 비율은 서류접근 항목에서 핀란드와 슬로베니아의 35% 이상으로부터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의 약 18%에 까지 이른다. 전자입찰 시스템의 활용은 아일랜드(30%), 에스토니아(24%), 폴란드(24%)에서 특히 높다.

전자정부 서비스와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더 나은 품질의 전자정부 인프라를 의미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인터넷이 연결된 가정의 비율,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하는 국민의 일반적인 경향, 그리고 기타 요인들이 전자정부 활용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유로스타트(Eurostat), 정보 사회(Information Society) 데이터베이스, OECD ICT 데이터베이스에서 온 것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와 행정활동(예: 세금, 관세, 기업 등록 및 사회보장)을 의미한다. 자료는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 수준을 포함한다.

3가지 온라인 상호작용이 보고되었다. 1)정보 입수 2)서식(기업에만 해당) 입수 및 다운로드 3) 기입된 서식 전송. 이메일을 통한 상호작용은 제외되었다. "기입된 서식 전송"은 유럽통계시스템(European Statistical System)에 들어있는 국가에서 "지난 12개월 안에 사적인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기입한 서식을 공공기관이나 공공서비스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 국가에서는 "지난 12개월 안에 정부기관 웹사이트로 내려 받은 서식을 기입/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0.9에는 16

세에서 74세 사이의 국민이 포함되었다. 그림 10.10에서 단순한 상호작용은 정보 입수와 서식 다운로드를 포함한다. 두 가지 자료가 사용 가능할 때는 높은 수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10.10과 그림 10.11에서 부문별 적용율은 제조업 및 비금융 시장 서비스의 모든 활동으로 구성된다. 오직 10인 이상 사업장만이 고려되었다. 그림 10.11에서 전자입찰은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Measuring the Digital Economy: A New Perspectiv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21796-en>.

그림 설명

일본, 미국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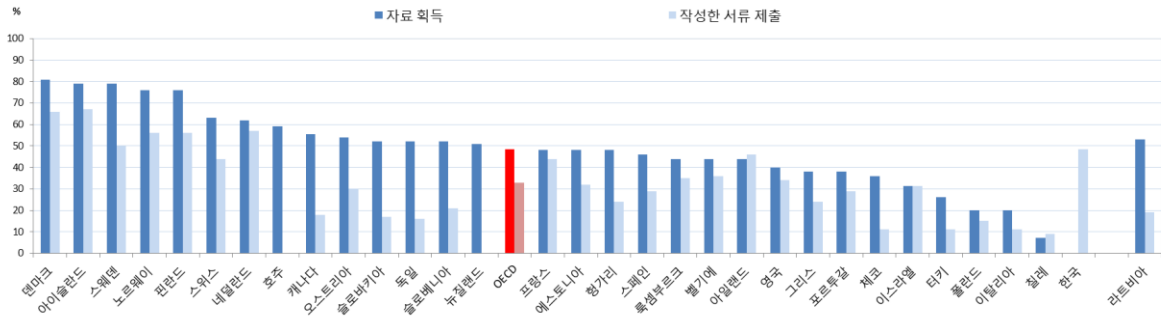
10.9: 멕시코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호주 자료는 2012/13에 해당하는 것이고(회계연도가 2013년 6월까지임), 그리고 15세 이상의 국민에 해당한다. 캐나다 자료는 정보 입수는 2012년 것이고, 기입된 서식 전송에 관한 것은 2009년 것이다. 뉴질랜드 자료는 상호작용, 기입된 서식 전송 둘 다 2012년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는 2009년 것이다. 그리고 공식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기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20세 이상 국민에 해당한다.

10.10: 칠레, 이스라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캐나다,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그리고 스위스에서 정보/서식 입수에 관한 자료는 정보/다운로드 서식 입수를 위한 정부 조직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기업의 비율을 가리킨다. 호주,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의 경우, 기입된 서식 전송에 관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서식을 기입/제출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정부조직과 소통하는 기업의 백분율을 가리킨다. 캐나다에서, 기입된 서식의 회답은 세금 서식을 온라인으로 기입하고 제출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슬로베니아는 회계 회사를 통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의 아웃소싱이 포함되었다. 호주의 자료는 회계연도가 2012년 6월 30일에 끝나는 것이고, 총합은 농업, 삼림, 어업을 포함한다. 멕시코 자료는 2008년 것이며, 2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해당한다. 스위스의 자료는 2011년 것이다. 그리고 5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해당한다. 터키 자료는 2012년 것이다.

10.11: 비유럽 OECD 국가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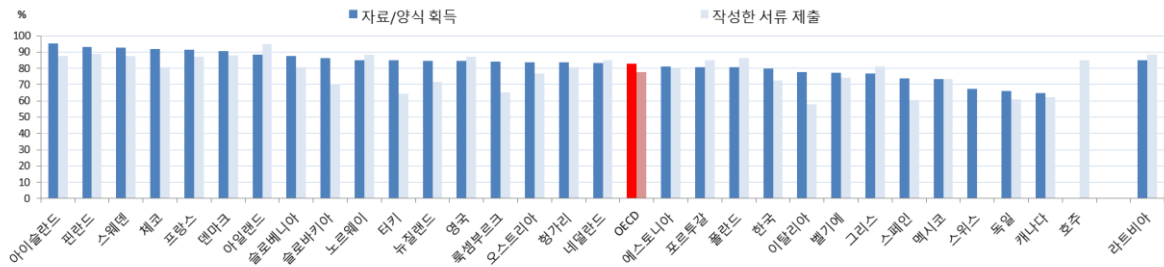
10.9.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하는 활동 유형(지난 12개월 간) (2014년)



출처: OECD, *ICT Database*; and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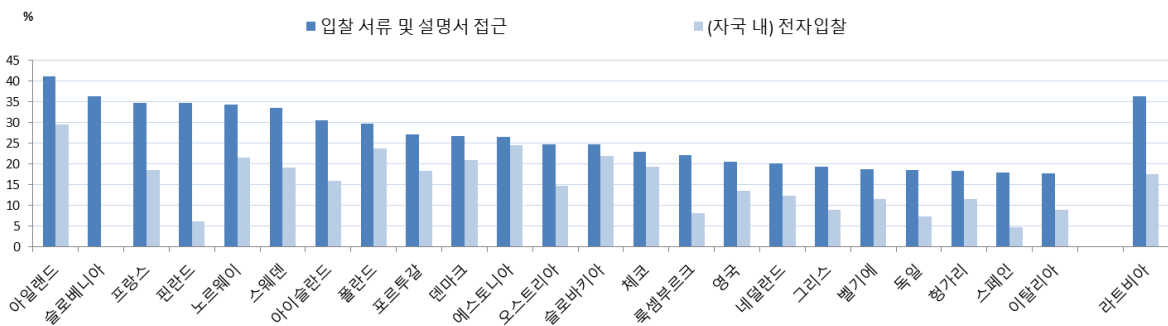
10.10.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기관과 상호작용하는 활동 유형(지난 12개월 간) (2013년)



출처: OECD, *ICT Database*; and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202>

10.11.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 (2013년)



출처: Eurostat, *Information Society*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211>

제11장 핵심 정부 성과

정부신뢰

소득 재분배

법치

공공부문 효율성

공공부문 비용효과성

정부신뢰

신뢰란 개인 또는 조직의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널리 이해된다. 신뢰는 실제 경험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대부분 주관적인 현상이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정부신뢰는 정부의 활동이 옳고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시민과 기업의 확신을 나타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당성이 시민들의 신뢰 위에 구축된다는 점이다. 신뢰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 간 원활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신뢰는 인식조사에 기초해 측정된다. 여기서는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2005년 이후 OECD 국가 및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의 연간 자료를 수집하는 유일한 설문조사이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의 결점은 자신의 정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지 아닌지를 묻는 하나의 항목만 질문한다는 것이다. 이 조사는 정치인들과 관료를 구분 짓지 않는다. 또한 시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하는 정부활동이 무엇인지,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문화적 요인이 국가별 신뢰수준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준을 비교하기 보다는 시간에 따른 국가별 신뢰수준의 변화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선정된 연도는 2007년과 2014년이다(2007년은 2008년 금융 및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해이다).

2007년에서 2014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정부 신뢰도는 45.2%에서 41.8%로 3.3 p.p.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 곳은 슬로베니아(30 p.p.), 핀란드(29 p.p.), 스페인(27 p.p.), 포르투갈(22 p.p.)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신뢰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독일(25 p.p.), 이스라엘(22 p.p.), 아이슬란드(22 p.p.)가 그러하다. 신뢰도 변화는 많은 요인들, 즉 경제적 전망, 정치적 변화(예: 선거), 또는 재해 또는 큰 스캔들(예: 부패 사건)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정부의 대응보다 시민들의 기대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새로운 요구에 반응하는 능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도전이 가해지고 있다.

예비적 증거(preliminary evidence)를 통해서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주로 국가 지도자의 지지율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부의 부패 수준은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 대표들의 공공자원의 악용 또는 부적절한 행동은 전반적인 정부 신뢰도에 관한 국민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 국가의 기반 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정부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신뢰 회복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신뢰의 다차원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뢰 유발 요인과 다면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는 게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민들의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정부활동을 제안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에 의해 수집되었다. 월드 폴은 비례층화 확률표집 (proportional stratified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한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시민 1,000명의 표본을 사용하였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gallup.com/services/170945/world-poll.aspx에서 볼 수 있다.

그림 설명

11.1: 자료는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백분율을 가리킨다.

칠레, 헝가리, 아이슬란드 자료는 2014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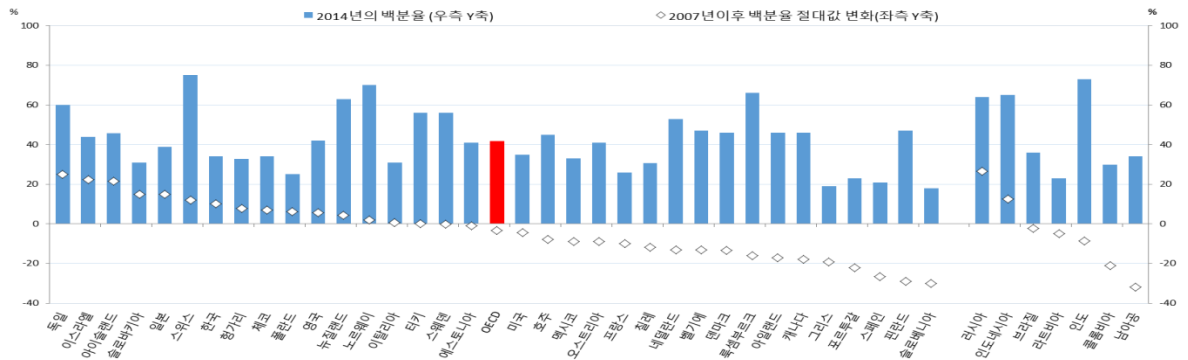
11.2: 국가 지도자 지지에 관한 자료는 다음 질문에 "지지"라고 답한 백분율을 나타낸다. "당신은 이 국가에서 정치지도자의 업무 성과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가?".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그리고 멕시코 자료는 2014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11.3: 정부 부패 인식에 대한 자료는 "정부에 부패가 만연한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답한 백분율을 가리킨다. 호주, 캐나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그리고 멕시코 자료는 2014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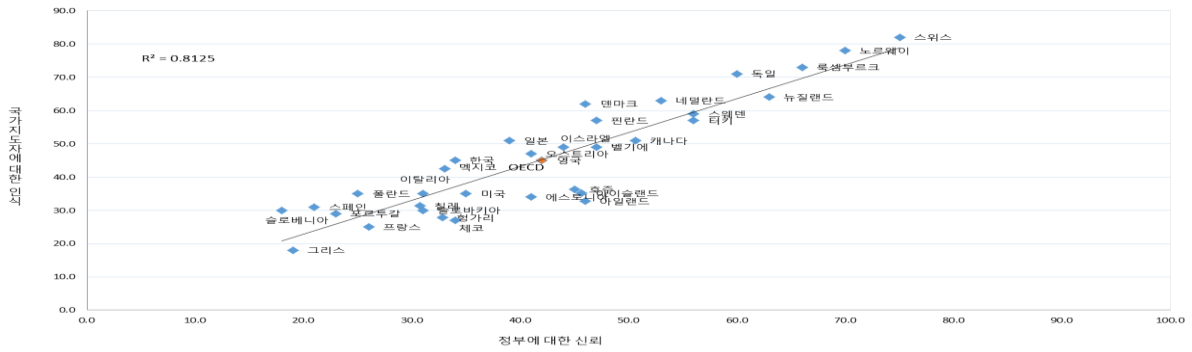
11.1. 2014년 정부에 대한 신뢰와 2007년 이후의 변화



출처: Gallup World Poll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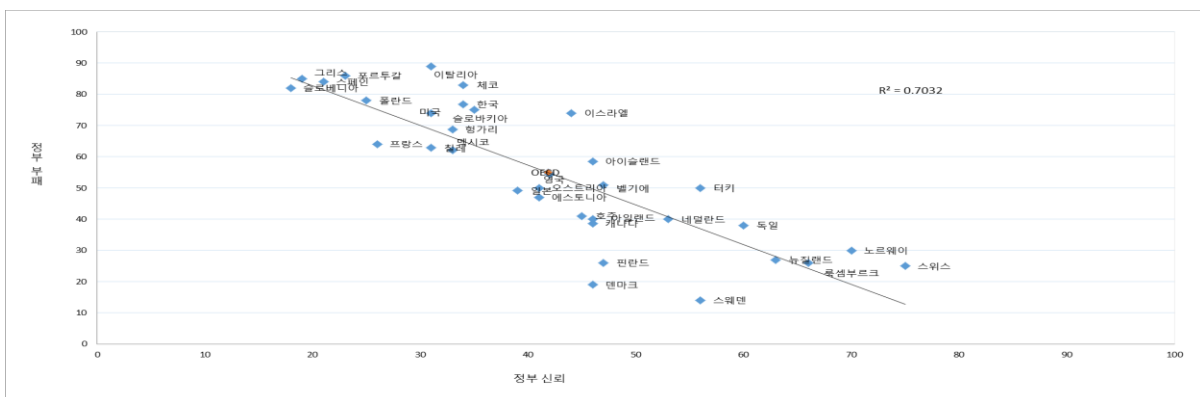
11.2. 정부에 대한 신뢰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2014년)



출처: World Gallup Poll.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37>

11.3.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부 부패에 대한 인식 간의 상관관계 (2014년)



출처: World Gallup Poll.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44>

소득 재분배

정부의 주요임무 중 하나는 기회의 평등과 시민들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최저생계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정부는 조세와 이전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OECD 회원국들에서 빈부격차는 지난 30년 이래 최고조에 달했다(OECD, 2014c). 또한, 최근의 증거는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4a). 가용 자원이 부족한 빈곤계층은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사회적 이동과 능력개발이 저해된다(OECD, 2014c).

지니계수가 불평등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지니계수는 한 국가 내 인구의 소득분배를 보여준다. 지니계수의 범위는 모든 사람의 수입이 같을 때를 뜻하는 0에서 소득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될 때를 뜻하는 1까지이다.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의 효과는 조세와 정부이전지출 전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OECD 국가들의 세전 소득 불평등은 평균적으로 0.46에서 0.47로 1 p.p. 증가하였다. 정부의 개입 이후, 조세와 이전 이후 지니계수는 2011년에는 0.31, 2007년에는 0.30으로 두 해 다 약 16 p.p.로 안정적으로 감소했다. 2011년 조세와 이전을 통한 정부개입으로 지니계수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한 곳은 아일랜드(26 p.p.)와 그리스(22 p.p.)이다. 두 국가 다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곳이다. 칠레(2.9 p.p.)와 한국(3.1 p.p.)은 정부개입을 통한 소득 재분배로부터 가장 적은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불평등은 이미 낮은 수준이었다 (조세와 이전 전에 0.34).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공적 이전은 4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하였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는 감소하였고, 스웨덴에서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했다(OECD 2014b). 평균적으로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가처분 소득은 연평균 0.53% 감소하였다. 그러나, 상위 10% 소득 집단에서 연간 감소비율은 0.78%였지만, 하위 10% 소득 집단에서 연간 감소비율은 1.61%로 두 배 이상이었다. 스페인(11.4 p.p.)과 그리스(3.7 p.p.)는 금융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경험한 국가들로 상위 10%와 하위 10%의 감소율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덴마크, 그리고 독일에서 하위 10%의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상위 10%에서는 증가하였다. 평균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고통 받고, 회복으로부터의 혜택은 덜 받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재분배는 시장 소득(즉, 공적현금이전과 가구 세금으로 조정되지 않은 총소득)과 가처분 시장 소득(즉, 이전과 세금의 순계)의 지니계수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된다. 가구 가처분 소득은 모든 가구 구성원이 받은 전체 시장 소득의 합을 말한다. 즉, 총소득, 자영업 소득, 자본 소득에 경상 이

전 수입을 더하고, 이들이 지불하는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뺀 것이다. 가구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를 동등한 규모로 조정하기 위해서 가구 크기의 제곱근으로 가구 소득을 나누었다. 현물 이전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료는 'OECD 소득분배 데이터베이스(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IDD)'에서 온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 정보원(가구 설문조사 및 행정 기록)과 일반적인 정의, 분류, 자료 처리에 기초한 것이다. OECD IDD를 위해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은 국제 비교 및 자료의 시간적 일관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교 가능한 추정치를 끌어내기 위한 일반적인 규약과 통계적 규약에 의해 얻어진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a), "Focus on Inequality and Growth – December 2014", OECD, Paris.

OECD (2014b),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 Income Inequality Update – June 2014", OECD, Paris.

OECD (2014c), "Focus on Top Incomes and Taxation in OECD Countries: Was the Crisis a Game Changer?", OECD, Paris.

그림 설명

칠레, 일본의 자료는 2007년 대신 2006년의 것을 사용했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자료는 2007년 대신 2008년의 것을 사용했다. 벨기에의 자료는 2011년 대신 2010년의 것을 사용했다. 호주, 네덜란드의 자료는 2011년 대신 2012년의 것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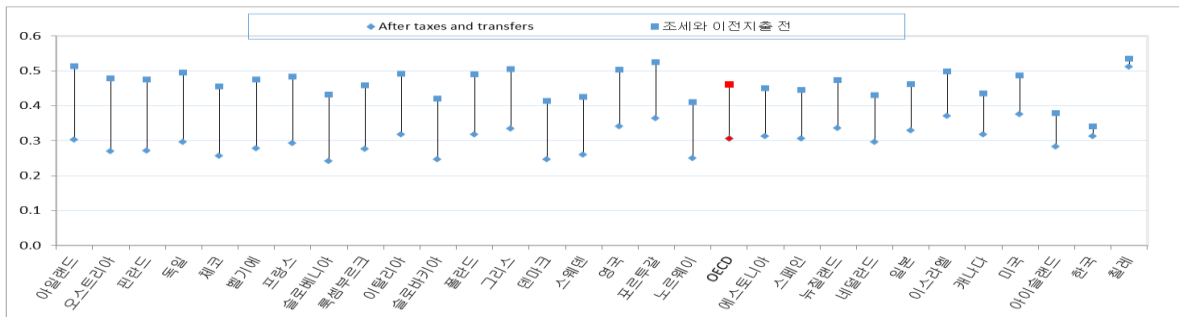
11.4: 헝가리, 멕시코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2007년 스위스, 터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11.5: 호주, 뉴질랜드 자료는 2008년 대신 2007년 것을 사용했다. 일본 자료는 2011년 대신 2009년 것을 사용했다. 오스트리아 자료는 2010년 대신 2011년 것을 사용했다. 핀란드, 헝가리, 한국,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자료는 2011년 대신 2012년 것을 사용했다. 2011년 영국 자료는 공백이 있고, 결과를 엄격하게 비교할 수 없다. 아일랜드, 영국의 2011년 자료는 임시적인 것이다. 스위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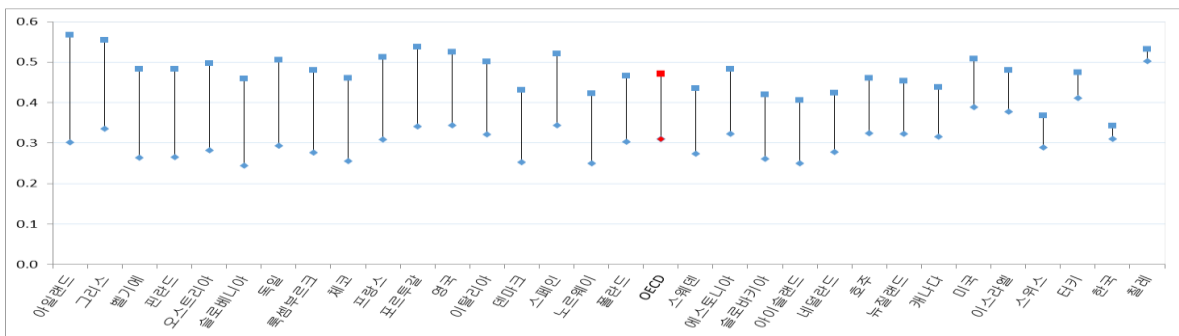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11.4. 소득불평등의 조세와 정부이전지출 전후 비교 (2007년과 2011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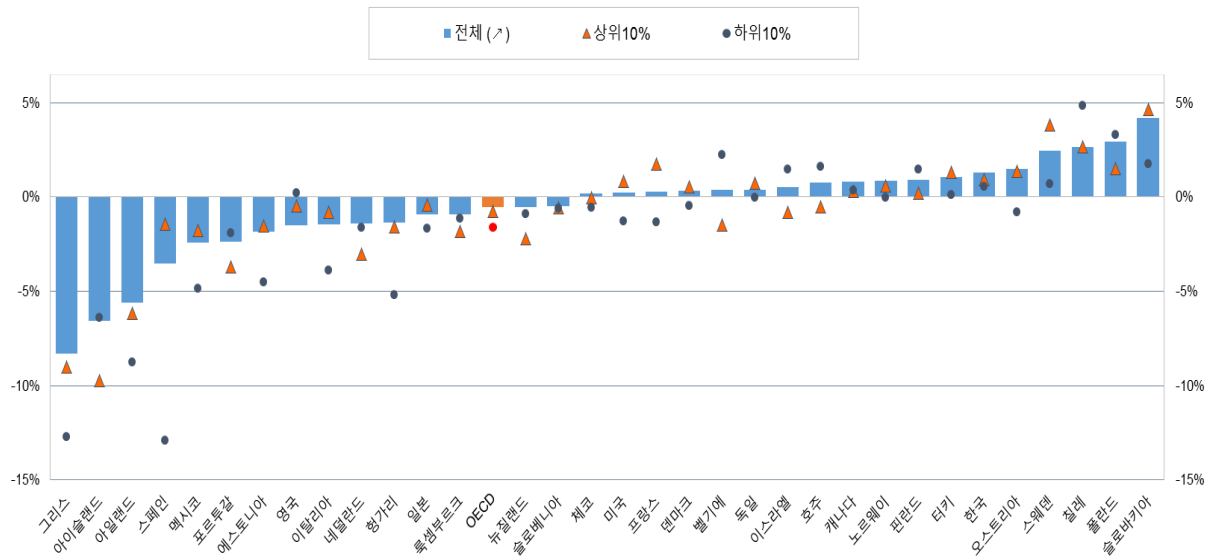
2011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58>

11.5. 소득구간별 가처분 가구소득의 연평균 변화 (2007년과 2011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69>

법치

법치 원칙은 한 사회 안에서 법의 권위와 영향력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법이 지배해야 하며, 정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법치는 성문화되거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서 집행된다. 그리고 접근성, 평등, 예측가능성, 신뢰도, 책임성을 보장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법치는 훌륭한 거버넌스의 핵심 척도로 여겨진다.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와 개발을 조성하기 위해서 결정적이다.

법치에 대해서 여러 해석이 있다. 우리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가 개발한 법치 지표(rule of law index)를 사용한다. 이 지표는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다. 따라서, 법치는 다음 4가지 보편적 원칙을 담고 있다. "a)공무원 및 정부기관들은 법률에 의해 책임을 진다. b)법은 명확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안정적이면서 공정해야 한다. 법은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 및 사유재산의 안전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c)법의 제정, 관리, 그리고 집행과정은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d)재판은 충분한 수로 구성되고, 적절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을 반영하는 자격을 갖춘 윤리적이고 독립적인 대표들과 중립적인 인사에 의해 시의적절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는 9개의 핵심 요소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법치 지표의 기준이 형성되었다. 우리는 이 중 법치의 기본 구성요소를 다루는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정부권력의 제한, 그리고 기본권 보호이다.

정부권력의 제한은 견제와 균형의 효과적인 시스템에 의해 보장된다. 더 구체적으로, 이 견제 시스템의 요소는 헌법에 규정된 권력을 말하는데,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독립적인 감사기관에 의한 정부권력의 효과적인 제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관과 검사의 제재, 비정부기구에 의한 견제 그리고 법치를 받는 권력 이양 등이 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요소에 대한 OECD 국가들의 평균 점수는 0.76으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 그러나, OECD 국가들 내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위 3개국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인데,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가 사회 내에서 가장 균형 있는 권한의 분배를 보여준다. 멕시코, 터키는 정부권력의 제한이 가장 약하다. 다른 주요 국가들 중 러시아, 중국은 OECD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인다.

두 번째 요소는 기본권의 보호이다. 기본권은 국제법에 확립되어 있다. 차별 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개인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보장, 피의자의 권리와 적법 절차, 사상과 표현의 자유, 신앙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자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기본적 노동권의 보호가 있다. OECD 회원국들의 평균점은 0.78점이다. 정부권력의 제한과 유사하게, 북유럽 국가들이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있고, 터키, 멕시코의 점수는 가장 낮았다. 종합해보면,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 보호 간에는 강한 긍정적 상관 관계가 있다. OECD 국가들은 법치의 이러한 측면들을 실제로 적용하는데 높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방법론 및 정의

데이터는 법치 지표의 개념적 틀에 기초한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에 의한 설문지로부터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일반인들과 법률전문가를 대표하는 표본집단에게 배포되었다. 일반인의 경우, 가장 큰 3개의 도시에서 1,000명의 확률표본 응답자를 선별하였다. 법률전문가의 경우, 국가 별로 평균 24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인들의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지역 여론조사 회사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8개 OECD 국가들에 대한 자료가 사용 가능하고, 또한 8개의 주요 경제대국의 정보도 사용 가능하다. 각각의 복합지표들을 점수화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변수들은 코드화 되었고, 0과 1 사이 점수로 정규화(normalized) 된다. 여기서 1은 가장 높은 점수이고, 0은 가장 낮은 점수이다.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 관련 요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각각 찾아볼 수 있다. <http://worldjusticeproject.org/factors/constraints-government-powers>, <http://worldjusticeproject.org/factors/fundamental-rights>.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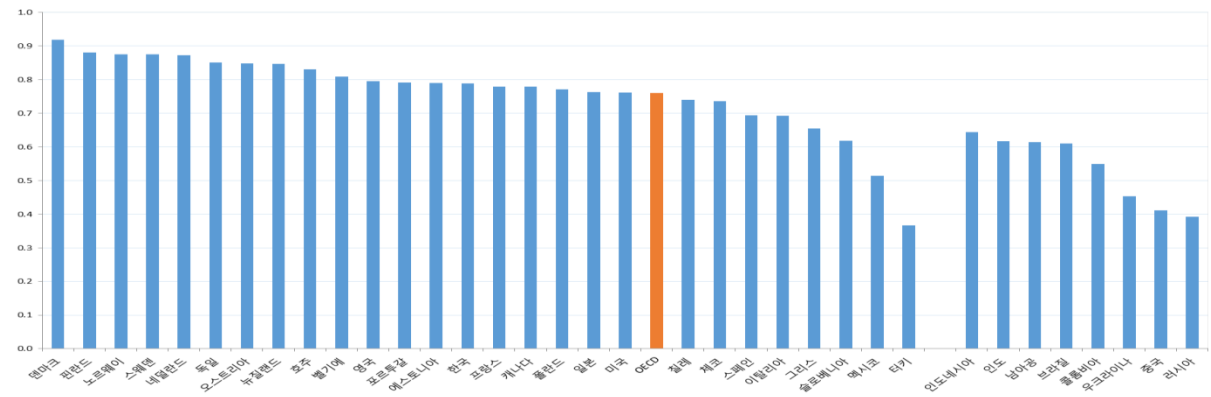
World Justice Project (2014), *Rule of Law Index 2014*. WJP, Washington.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http://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wjp_rule_of_law_index_2014_report.pdf.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위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헝가리 자료는 표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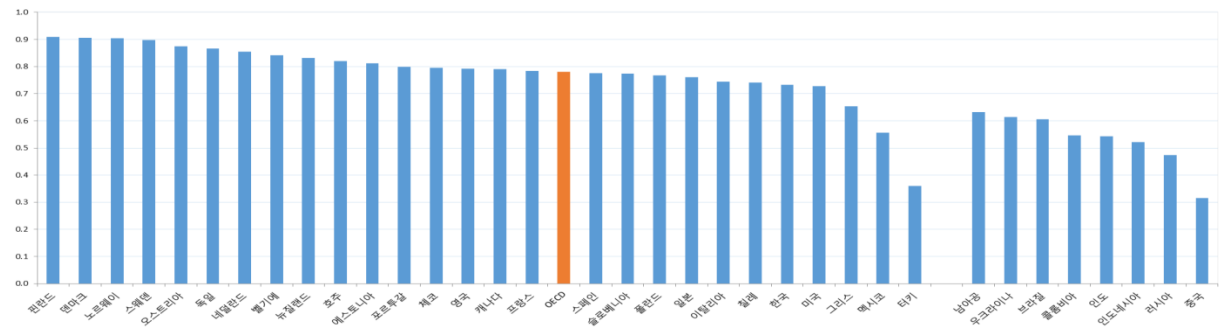
11.6. 제한된 정부 권력 지수 (2015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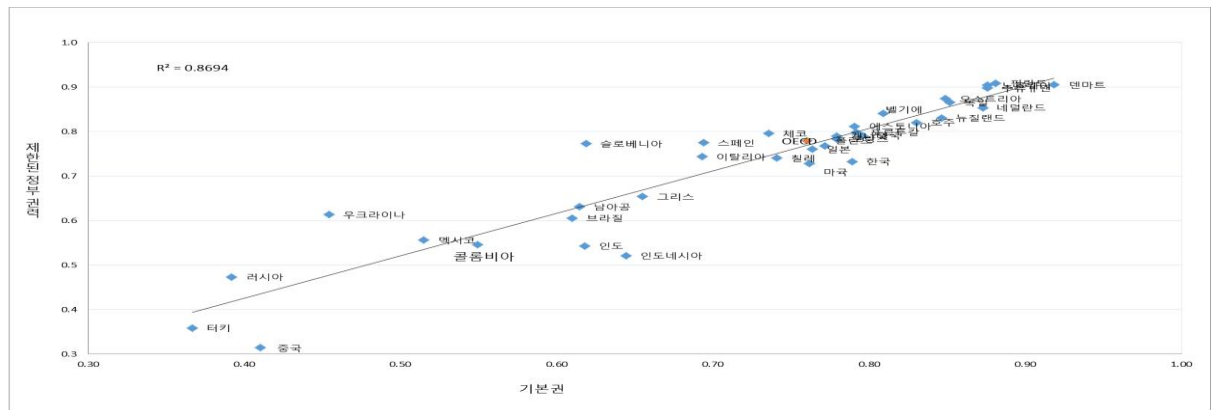
11.7. 기본권 (2015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87>

11.8. 제한된 정부 권력 vs 기본권 (2015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294>

공공부문 효율성

최근의 경제위기는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효율성"은 한 개 이상의 투입(또는 생산 요소)과 한 개 이상의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병원 평균재원일수(ALOS)는 병원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관한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병원 재원일수가 짧으면 자원필요량이 감소되고 환자당 병원비가 줄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투입에 비해 많은 수의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평균재원일수가 짧으면 의료서비스의 강도가 더 높아지고, 하루당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재원일수가 지나치게 단축되는 경우에는 건강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거나 환자의 안정과 회복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012년 갖가지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한 병원 평균재원일수의 OECD 평균은 7일을 약간 넘었다. 재원일수가 가장 짧은 멕시코와 터키는 재원일수가 평균 4일에 지나지 않았다. 일본의 재원기간이 가장 길었는데, 거의 18일에 이르렀다. 그 다음은 한국이다(16일 이상). 일본과 한국은 사회적 입원(social admissions) 현상이 있다. 즉, 상당수의 병원 침상이 장기요양환자들 차지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난 10년 간 평균재원일수가 감소하였다. 2002년 8일을 약간 넘었던 것이 2012년에는 7일을 약간 넘었다. 국가들은 치료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 병원 평균재원일수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왔다. 이러한 전략에는 빠른 퇴원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병상 수 감축이 포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고 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과적 수술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에 포함된다(OECD, 2013).

조세행정의 효율성

세금징수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종종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용되는데, 전체 세수와 연간 행정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얻어진다. 이 비율의 감소는 행정비용(분자)의 감소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또는 과세에 대한 높은 순응을 통한 조세수입의 증가로 해석될 수 있다(경제성장 또는 세율 변화 같은 비용/수익 관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없다고 가정할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07년과 2010년 사이, 조세 징수 행정비용의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세 수입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하락하였다. 조세수입 기반이 회복되고 그리고/또는 정부지출 감소 노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조세행정의 효율성 비교는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요인이 조세행정 효율성 지표 비율 계산에 투입되는 한 개 또는 여러 요소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직접적인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 일반적으로, 세율, 징수되는 세금의 범위와 구조, 조세수입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조건의 차이, 그리고 조세징수에 대한 제도적 배열의 차이(예: 이탈리아처럼 조세행정에 복수의 기관이 관여하는 경우), 그리고/또는 세외(non-tax) 기능(예: 사회보험료)이 행정비용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평균 병원재원일수(ALOS)는 환자가 병원에서 지내는 평균 일수를 가리킨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모든 입원환자들이 병원에 머문 총 일수를 퇴원(이유불문)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한나절 입원(day cases)은 제외된다.

조세행정에 관한 자료는 수입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받거나 또는 각국의 공식적인 보고서로부터 발췌하였다. 조세행정의 지출은 3가지 범주를 포함하며, 행정비용, 직원 월급, IT비용이 그것이다. IT지출은 모든 행정적 운영(조세 및 비-조세와 관련된)을 위한 IT지원 제공에 대한 전체 비용으로 정의된다. 비교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들과 조세비용 및 비조세관련 기능을 분리해서 밝히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근본적인 자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OECD Tax Administration 2015'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OECD (2015, forthcoming), Tax Administration 2015, OECD,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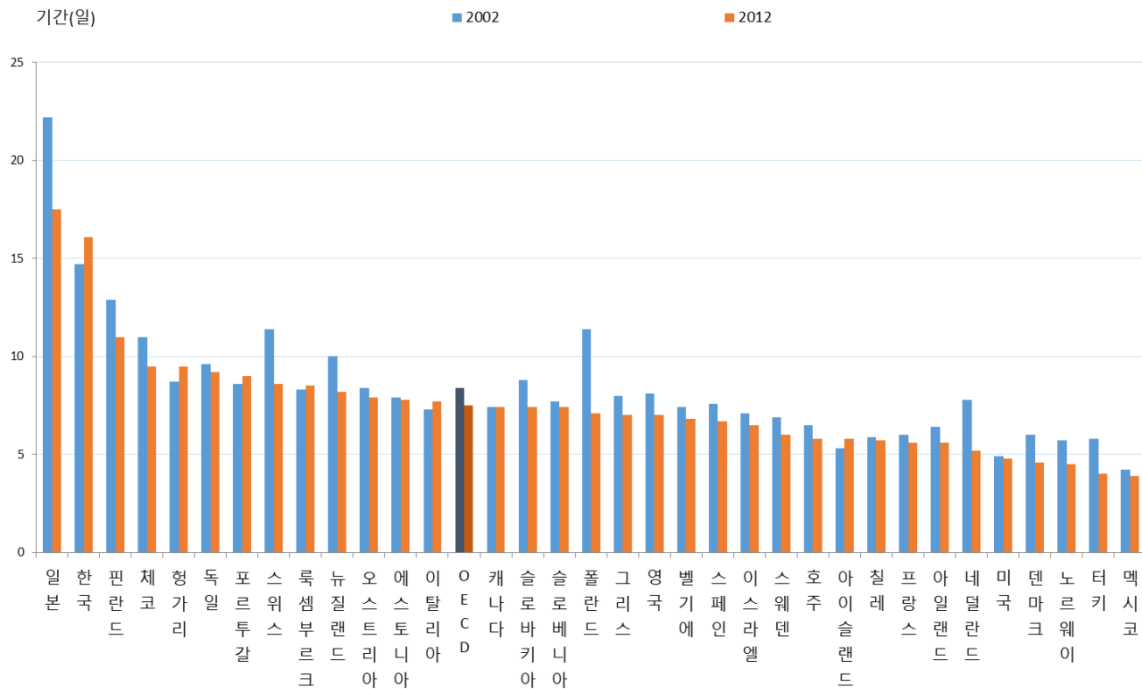
그림 설명

11.9: 일본 자료는 급성환자 치료를 위한 평균재원일수를 가리킨다(병원의 장기요양 침상 제외). 슬로베니아 자료는 2002년 대신 2004년 것을 사용했다. 그리스 자료는 2012년 대신 2007년 것을 사용했다. 아이슬란드 자료는 2012년 대신 2009년 것을 사용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자료는 2012년 대신 2010년 것을 사용했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그리고 영국 자료는 2012년 대신 2011년 것을 사용했다. 한국 자료는 2012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11.10: 에스토니아: 2007년에 대한 2005년 비율은 관세 운영을 포함한다. 그러나 그 다음 연도는 아니다. 이탈리아: 이 기간에 계산된 비율은 실제 비율보다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다른 기관

들에 의해 수행된 조세관련 업무(예: Guardia di Finanza의 탈세 업무, Equitalia spa의 강제 부채 징수)로 발생한 지출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나타난 비율은 IRS에서 공표한 비율과 다르다. 분모에 "총"세금징수가 아닌 "순"세금징수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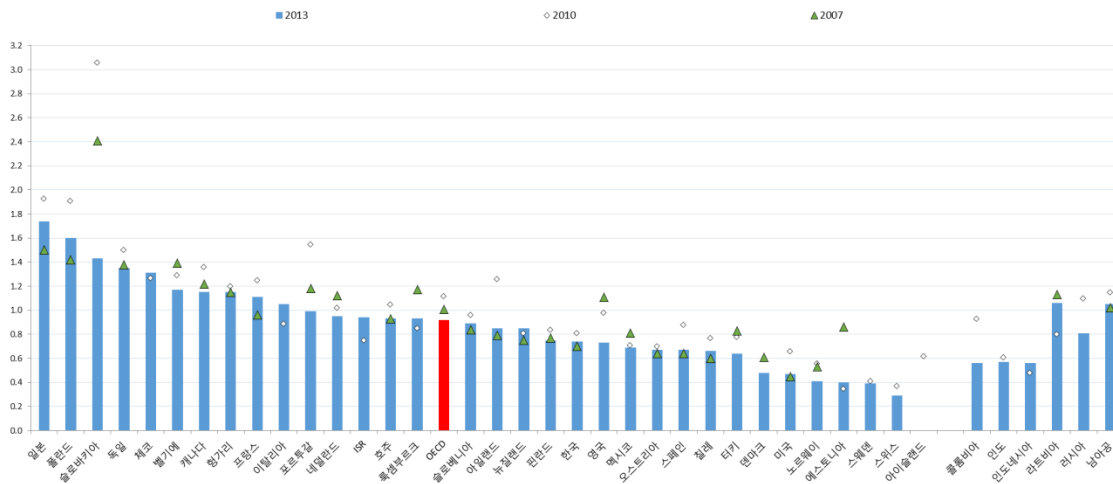
11.9. 평균 재원일수 (질환불문, 2002년과 2012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4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301>

11.10. 세입 대비 조세행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2007년, 2010년, 2013년)



출처: OECD (2015), Tax Administration 2015, OECD, Paris.

설명: 비용징수의 비율을 국제 비교함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됨. 직접 비교 가능성을 방해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 OECD Tax Administration 2015년판 참조.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318>

공공부문 비용효과성

공공부문 비용효과성은 각 부문의 투입과 광범위한 결과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과물은 복지 증진, 보건 증진, 교육/학습 증진 등의 관점에서 공공 프로그램과 대시민 서비스의 효과를 말한다. 이러한 결과물은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질에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인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개인의 행동방식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의 결과물과 지출을 측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환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만, 의료지출이 공공지출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이러한 지출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의료서비스 결과를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수명만 측정하고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약점은 있다. 또한 기대수명은 의료서비스 활동과 지출 이외의 다른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예: 사람들의 생활 및 업무 환경, 물리적 환경, 흡연 알코올 소비, 영양 등과 같은 행동방식 요인).

1인당 의료비 총액과 기대수명은 긍정적 관계가 있다. 의료서비스 지출이 클수록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의료서비스 지출이 증가할수록 이 관계는 약해진다. 일본,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은 지출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다. 반면에, 헝가리, 멕시코, 슬로바키아, 미국은 의료서비스 지출 수준에 비해 낮은 기대수명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해 민간지출을 포함하는 총 지출이 아니라, 공공지출만 고려했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멕시코와 미국이 OECD 평균에 비하여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정도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지출만 고려한다면 감소된다. 이것은 이 두 국가에서 사적 지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전체 지출의 절반 정도).

교육

3년 마다 수행되는 'OECD국제학업성취도평가' (the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읽기, 수학, 과학의 세 영역에 대해 15세 학생들의 성취도를 평가한다. PISA 점수에 근거한 학생의 학습 결과물과 2세에서 15세 사이 학생 당 누적 교육비 지출 간의 비교를 통해 교육 시스템의 비용효과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대체로 읽기와 수학의 PISA 점수는 지출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관계는 학생 당 누적 지출이 낮은 수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하지만, 특정 지출 수준 (80,000 USD PPP) 이상이 되면, 학생 성취도는 교사의 자질,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의 운영방식 등과 같은 다른 요

인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학생 당 OECD 평균보다 덜 소비하지만, 더 좋은 성과를 낸다. 반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룩셈부르크는 학생 당 지출이 높지만 읽기와 수학 시험 점수는 평균보다 낮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기대수명은 주어진 연령대에 특정 사망률에 근거 해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의료서비스에 관한 총 지출은 의료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즉, 경상지출)에 의료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자본투자를 더한 것으로 측정한다. 이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 의한 의료서비스와 재화, 공공보건, 예방프로그램, 행정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학생 당 지출에 관한 자료는 2011년 회계연도에 해당된다. 학생 당 비용은 교육기관(공립 및 사립)의 총지출을 풀타임 등록자수로 나눈 것이며, 핵심서비스와 보조서비스를 모두 다 포함한다. 국가별로 교육과정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 당 연간 소비는 학생 당 전체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성취도 점수는 15세의 읽기와 수학 2012 PISA 평가에 근거한 것이다.

그림 11.13 “출생 시 기대수명과 인구 당 의료서비스에 대한 총 공공지출, 2012”는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http://dx.doi.org/10.1787/888933249340>.

더 읽어볼 것

OECD (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OECD (2014), *PISA 2012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Volume I)*,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780-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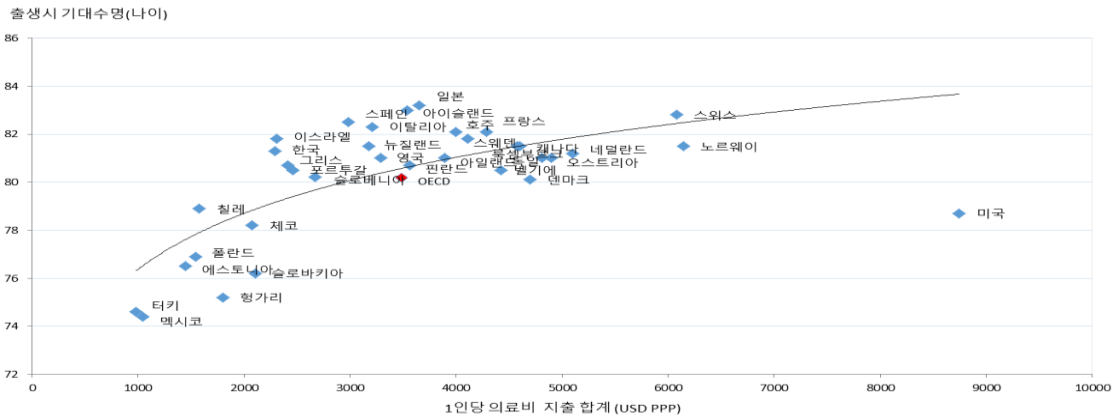
그림 설명

11.11: 벨기에, 네덜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의 의료지출 자료는 투자를 제외하였다(경상지출만). 호주, 뉴질랜드 자료는 2012년 대신 2011년 것을 사용했다. 칠레, 핀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한국,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자료는 2012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기대수명 자료는 2012년 대신 2011년 것을 사용했다. 멕시코 자료는 2012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11.12: 그리스의 누적 지출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11.11. 기대수명과 1인당 의료비 지출 (2012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4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324>

11.12. 2012년 PISA점수와 6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당 누적 교육비 지출



출처: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Paris; *PISA 2012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Volume I), OECD, Paris.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332>

제12장 대시민서비스

OECD의 대시민서비스 체계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의료에 대한 금전적/지역적 접근성
교육 접근성
사법제도와 법령정보 접근성
의료체계의 환자욕구 대응성
학교의 학생욕구 대응성
사법제도의 시민 욕구 대응성
의료서비스와 질과 환자 안전
학업 성취도와 형평성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OECD의 대시민서비스 체계

정부는 광범위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접근성, 대응성, 신뢰성/품질의 관점에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교육, 교통, 사법, 고용, 조세행정 및 기타 서비스 같은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겪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경험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또한 더 넓게는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다. 시민들이 어떤 기본적인 필수서비스를 구매할 형편이 되지 않을 때, 서비스와 정보에 대해 지리적 또는 전자통신적 문제로 접근이 어려울 때, 제공되는 서비스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질이 낮을 때,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서비스와 행정기관 및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할 것이다.

다른 OECD 부서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개발된 이 장은 공공서비스의 세 가지 핵심 영역, 즉 의료, 교육, 사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13』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체계에 기초하여, 이 장의 첫 부분에는 이 세 영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들의 만족도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다음은 행정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대응성, 신뢰성/품질 수준에 관한 더 구체적인 정보에 관한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의료와 교육 서비스는 공공 또는 민간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다. 병원은 민간, 학교는 공공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의 접근도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에 학교 또는 병원의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성취도 비교의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앞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자료이고 연구 주제이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서비스 체계의 각각의 차원을 제시하는 지표들이 이전 판에 비해서는 더 포괄적이고, OECD 국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세가지 핵심 서비스 영역에서 접근도, 대응성, 신뢰성/품질 수준에 대한 더 폭넓은 그림을 제공한다.

12.1. 대시민 공공서비스 측정 체계

의료, 교육, 사업 등 핵심 지표를 포함

접근성	대응성	신뢰성/질
구매가능성	시민중심 접근 (시민을 존중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효과적인 서비스 및 결과물 제공
소득수준에 따른 재정적 이유로 미충족된 의료 욕구 (의료)	외래진료를 경험한 환자 (의료)	암생존율 (의료)
최종 가계소비에서 의료비 직접 부담금의 비율 (의료)	의료문제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주치의/치료사와 접촉한 적이 있는 환자 (의료)	심혈관질병(심장마비)의 치사율 (의료)
교육기간에 대한 민간 지출 비율 (교육)	교장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호 작용하는 시간 (교육)	PISA 평균점수의 발전 (교육)
고등교육 진학률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높은 협력 관계를 보고한 교장 (교육)	민사 사법의 효과적인 집행
법률지원을 받은 1심재판 수치 (사법)	법정에서 사건 관리와 시민 및 단체와 소통하기 위한 ICT의 사용 (사법)	
지리적 인접성	특별 욕구에 대한 서비스 대응	서비스 제공 및 결과물의 일관성
도시 지역과 지방의 의사 밀도 (의료)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 욕구 (교육)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PISA 수학점수 변화 (교육)
	취약계층(소수민족, 아동, 장애인)을 위한 법정의 특별 조치 메커니즘 (사법)	사법 정의는 부당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정보의 접근성	적시성	보안 (안전)
시민을 위한 법정 절차에 대한 법률 정보의 접근성 (사법)	전문의 예약을 위한 대기 시간 (의료)	항생제의 적합한 사용 (의료)
	의사와 간호사 예약을 위한 대기 시간 (의료)	사람들이 개인적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폭력에 의지하지 않는다. (사법)
	민사소송과 상업 1심재판을 위한 양도 일수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된다 (사법)

공공서비스 시민만족도

'갤럽 세계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집된 자료로 시민들의 만족도 비교 분석이 가능하였는데, 특히 OECD 국가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의료, 교육, 사법 영역에서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2014년 국민 71%가 의료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국가 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에서는 10명 중 9명이 그들의 의료서비스 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칠레와 그리스에서는 훨씬 낮은 10명 중 4명이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이 두 국가에서는 2007년 이후 의료서비스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그리스에서는 만족도가 의료 공공지출의 극심한 삭감과 맞물려있는데, 경제위기와 공공 적자 및 부채를 줄이기 위한 긴축조치의 파장에 따른 것이다(OECD, 2014). 다른 주요 국가들, 특히, 우크라이나, 브라질, 러시아에서 의료서비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OECD 국가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67%의 국민이 2014년 교육시스템과 학교에 대해 만족한다고 보고했다. 벨기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 국민이 교육시스템과 학교에 대해 80% 이상의 가장 큰 만족도를 보고했다. 반면, 그리스에서는 교육시스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인구가 절반 미만이였다. 다른 주요 국가들에서 교육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 시스템보다는 높았다. 그렇지만 브라질, 콜롬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는 상당히 낮았고, 브라질, 콜롬비아의 경우에는 떨어지고 있다.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의료 및 교육 시스템의 만족도보다 낮았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절반보다 약간 높은 비율(54%)의 국민이 국가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고 보고하였다. OECD 국가들 간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의 국민 중 80% 이상이 그들의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고 보고했다. 반면, 칠레 인구의 20% 미만이 이러한 신뢰를 표현하였다. 2007년 이후 터키, 이탈리아에서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는 하락하였다. 다른 주요 국가들 중 2014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특히 낮은 곳은 우크라이나였고, 콜롬비아, 라트비아도 낮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자료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Gallup World Poll)'에 의해 수집되었다. 일반적으로 각 국가에서 1,000명의 대표표본에 근거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gallup.com/home.aspx에서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자료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성에 대해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백분율이다.

교육에 관한 자료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교육시스템 또는 학교에 대해 만족하는가, 만족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백분율이다.

사법에 관한 자료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각에 대해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 사법제도와 법원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으로 "예"라고 답한 백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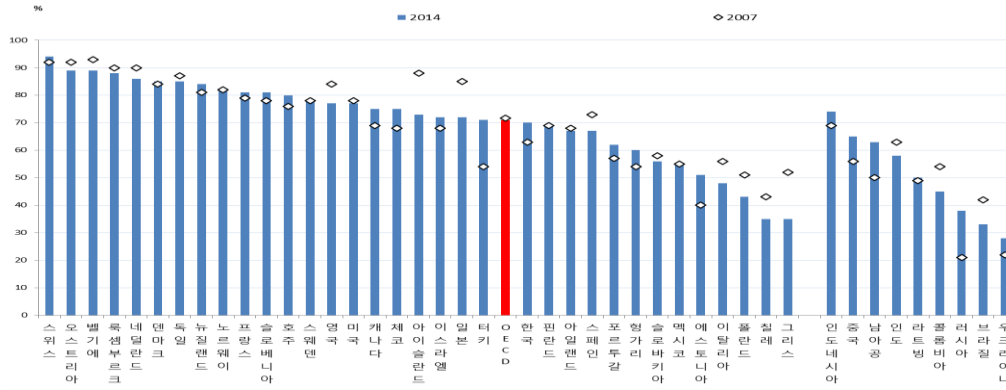
그림 설명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스위스 자료는 2007년 대신 2006년 것을 사용했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자료는 2007년 대신 2008년 것을 사용했다. 호주, 캐나다, 칠레, 헝가리, 아이슬란드, 일본, 그리고 한국 자료는 2014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중국, 라트비아, 남아공 자료는 2014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12.4: 중국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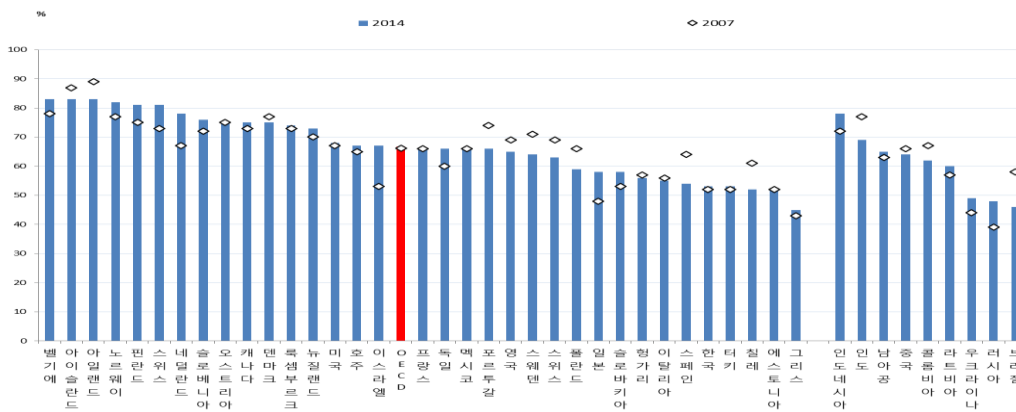
12.2 의료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2007년, 2014년)



출처: Gallup World Poll

<http://dx.doi.org/10.1787/888933249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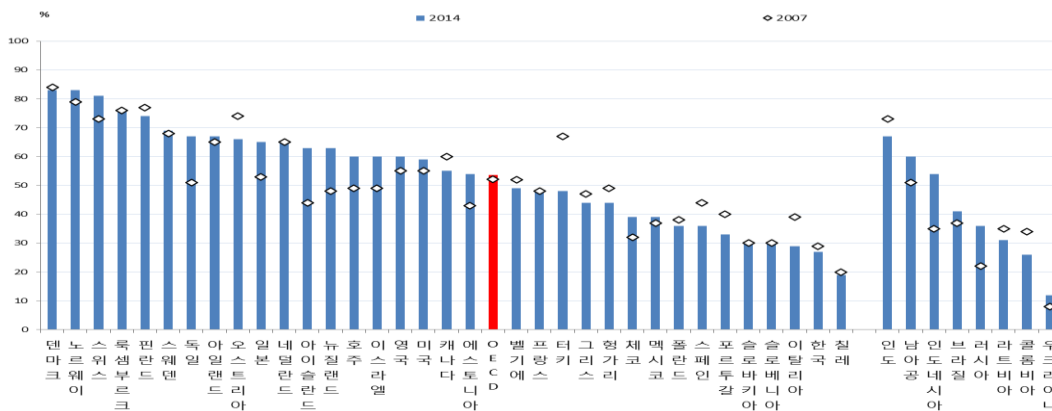
12.3 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2007년, 2014년)



출처: Gallup World Poll

<http://dx.doi.org/10.1787/888933249368>

12.4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2007년, 2014년)



출처: Gallup World Poll

<http://dx.doi.org/10.1787/888933249375>

의료에 대한 금전적/지역적 접근성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충족된 의료서비스 필요는 특정 인구집단의 접근성 문제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다. 매년 실시되는 '소득과 생활환경에 관한 유럽공동체 조사'(European-wide survey, EU-SILC)는 금전적, 지리적, 또는 다른 이유로 건강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설문조사에 포함된 모든 유럽 국가에서 2013년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의료필요 미충족을 보고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에서 특히 격차가 컸다. 저소득층이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비용인 반면, 고소득층은 시간부족과 건강이상 스스로 나아질지 지켜 보고자 하기 때문이었다.

필요에 근거해 제공되는 정부지원 의료서비스와 대조적으로, 가게에서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사람들의 지불능력에 달려있다. 의료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면 이론상으로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된다. 즉, 고소득가정 보다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가정으로 부담이 옮겨가게 된다.

2012년 OECD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총 가계소비의 3%가 의료비로 사용되었다. 경제위기로 심한 타격을 받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특정 의료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정부보조가 감소하였고,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였다(헝가리, 아일랜드).

OECD 국가들이 의료서비스와 재화를 보장하는 정도는 다양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병원 방문과 의사진료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가 높고, 약국, 치과, 안과(안경)에 대해서는 직접부담이 높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자에 대한 서비스와 재화가 불충분하다고 보고하였다.

충분한 수의 의료진이 지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어야 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증가되고 의료필요 미충족이 커진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의사들의 밀도는 도시 지역에서 더 높다. 수술과 같은 특화된 서비스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사들이 도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2011년 도시와 지방 간에 의사들의 밀도 차이가 슬로바키아, 체코, 그리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의사들이 수도권에 강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지역적으로 더 균등하게 분포했다.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해 오고 있다. 병원 운영을 위한 일회성 보조금 그리고 소득보장, 보너스지급과 같은 반복적인 급여 등의 금전적 인센티브들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에서는 법정 의료보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래의사의 개업 허가 수가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할당제에 기초해 각 지역별로 통제

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새로운 종합의료시설이 설립되어 의사와 기타 의료인들이 자영업 형식으로 같은 장소에서 일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의료필요 미충족에 대한 자료는 '소득과 생활환경에 관한 유럽공동체 조사'(European-wide survey, EU-SILC)로부터 온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받은 질문은 지난 12개월 동안 검진이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받지 못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 다음 질문은 왜 의료필요가 미충족 되었는가이다.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이유를 불문한 모든 의료요구 미충족을 포함한다.

본인부담금은 공공보험이나 민간보험이 의료 재화나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환자가 직접 내는 돈이다. 본인부담금에는 비용분담과 개별가구에 의해 직접 지불되는 기타 비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몇몇 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비공식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의 추정치도 포함된다. 여기서는 의료소비를 위한 지출(즉, 경상의료비에서 장기요양 비용을 뺀 것)만 제시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개업의사 수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수를 나타낸다. 도시와 지방 사이의 의사 밀도 차이에 따라 국가들의 순위가 매겨졌다. OECD는 지역을 두 가지 수준으로 분류한다. 상위 수준(지역 수준 2)은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지역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넓은 지역은 도시지역, 중간지역, 지방이 섞여있다. 하위 수준(지역 수준 3)은 더 작은 지역으로 대부분 도시지역, 중간지역, 또는 대부분 지방으로 분류된다(OECD, 2013).

더 읽어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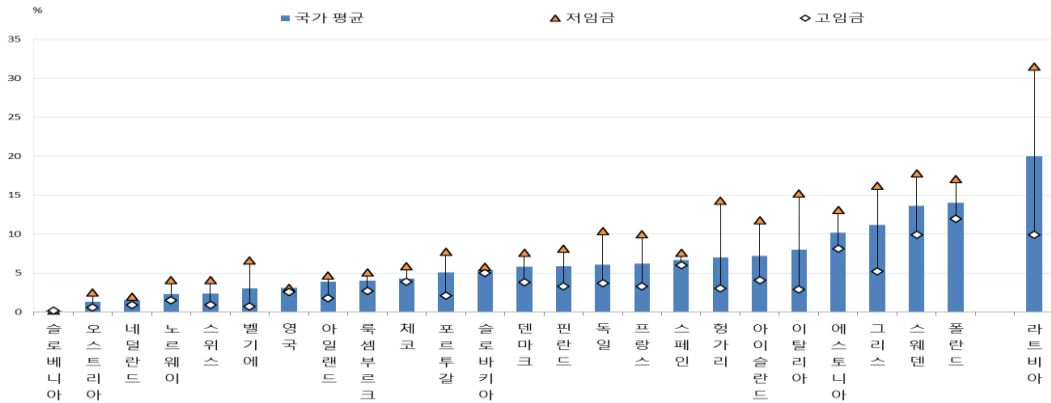
OECD (2013), *Regions at a Glanc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reg_glance-2013-en.

그림 설명

12.6: 그리스, 스페인, 터키 자료는 2007년 대신 2009년 것을 사용했다.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그리고 스위스 자료는 2012년 대신 2011년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는 2012년 대신 2010년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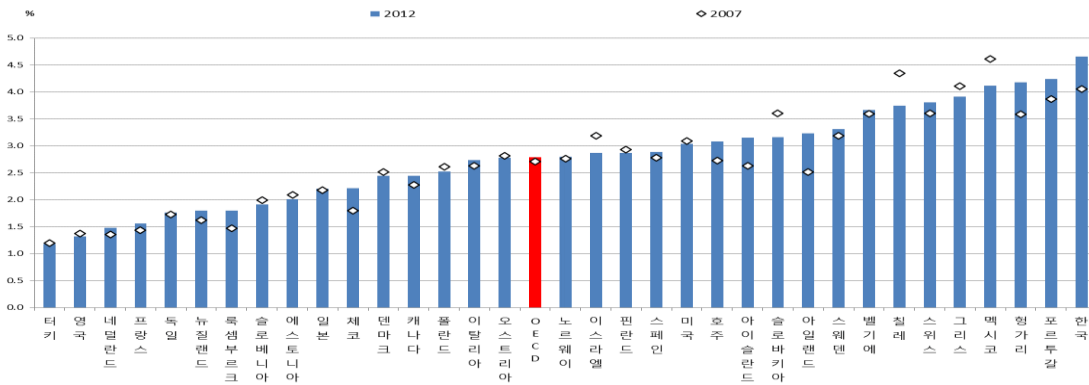
12.5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진단 미충족 정도 (2013년)



출처: EU Survey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 (EU-SILC),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3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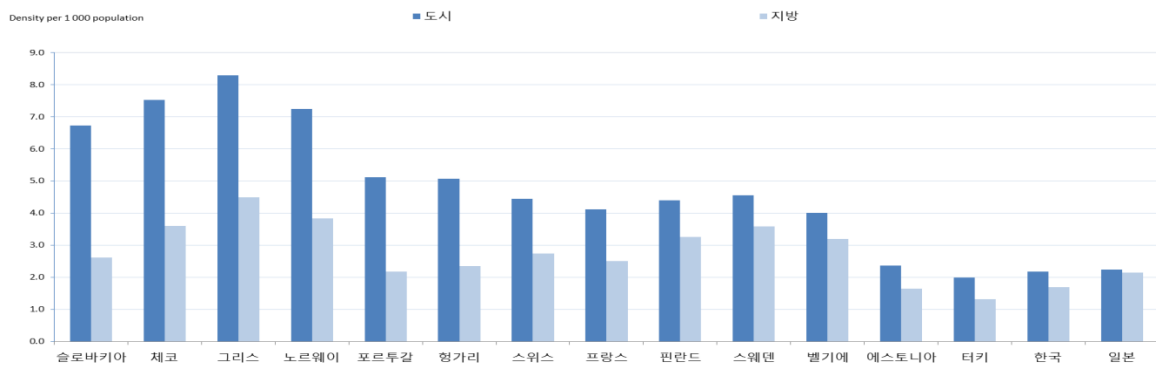
12.6 최종 가구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 (2007년, 2012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2014

<http://dx.doi.org/10.1787/888933249395>

12.7 도시 및 지방의 의사 밀도 (2011년)



출처: OECD Regions at a Glance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403>

교육 접근성

어떤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립 학교에 보내기도 하지만, OECD 국가의 일반적인 교육 시스템은 5-14세 어린이들에게 초등 및 중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제공한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은 중등 교육의 성공,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한 공적 및 사적 비용, 그리고 기타 이유들에 달려있다.

모든 OECD 국가에서는 기초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등 및 중등 교육비의 대부분을 공공부문이 부담한다. 2011년 평균적으로 초등, 중등, 중등 이후의 비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의 91%가 공공자금에서 비롯되었다. 나머지 9%만 개인자금에서 비롯되었다(주로 직접적인 가계지출로).

여전히 국가 간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칠레(22%), 한국(19%), 멕시코(17%)의 초등, 중등, 중등 이후(비고등) 교육에 대한 개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핀란드, 에스토니아의 이러한 교육 수준에 사용되는 총 비용은 1% 이하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앵글로색슨 국가의 가계(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교육에 대한 지출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에 더 많이 보내기 때문이다(평균 10%).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매우 적은 수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가기 때문에 지출이 적은 경향이 있다.

고등교육기관 교육비의 경우 개인부담 비율이 크고, 그보다는 적지만 미취학아동 교육기관의 비율도 높다. 각각 31%와 19%이다. 고등교육을 통해 얻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개인(또는 그들의 가족)이 교육에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보장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만 이것이 정당화 될 수 있다. 칠레,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을 포함한 몇몇 OECD 국가에서는 고등교육비의 50%이상이 가계 또는 다른 민간자원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북유럽 국가들의 사적 비용지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국가들에서는 고등교육비가 낮거나 거의 없다.

A타입 고등교육을 받는 청년들의 비율이 몇몇 북유럽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높다(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이 낮은 폴란드, 슬로베니아에서도 그 비율이 높다. 그러나 개별 가구가 고등교육비에서 큰 부분을 떠안고 있는 호주, 뉴질랜드 같은 다른 국가들에서도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높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외국 학생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서보다 훨씬 높다. 외국 학생들을 빼면 A타입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비율이 호주는 102%에서 76%로, 뉴질랜드는 78%에서 61%로 감소한다(OECD, 2014).

2000년에서 2012년 사이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A타입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10 p.p 증가했다(2012년에는 58%). 헝가리, 뉴질랜드(많은 외국 학생들의 수로 인해서 해마다 진학률이 극적으로 변동함),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진학률이 이미 매우 높아서 더 늘어날 여지가 매우 적음)를 제외하고, 경향자료가 사용 가능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진학률이 증가했다. 체코, 독일, 터키

에서 특별히 더 많이 증가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아래 두 개의 그림과 관련된 자료는 Unesco-OECDEurostat (UOE) 교육통계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민간 지출은 부분적으로 공공 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지와 상관없이 교육기관에 대한 모든 직접적인 지출을 포함한다. 국가들은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 비중의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edu/eag.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진학률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연령집단에서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치는 2012년 신입생 수와 이 집단의 연령분포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진학률은 종합적인 집단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현재의 진학 패턴으로 지금의 청년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해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진학률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도입 또는 외국 학생 수의 변화 같은 교육시스템의 변화에 민감하다. 진학률은 매우 높을 수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입학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100% 이상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종합적인 집단 가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edu/eag.html을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Education at a Glance 2014.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eag-201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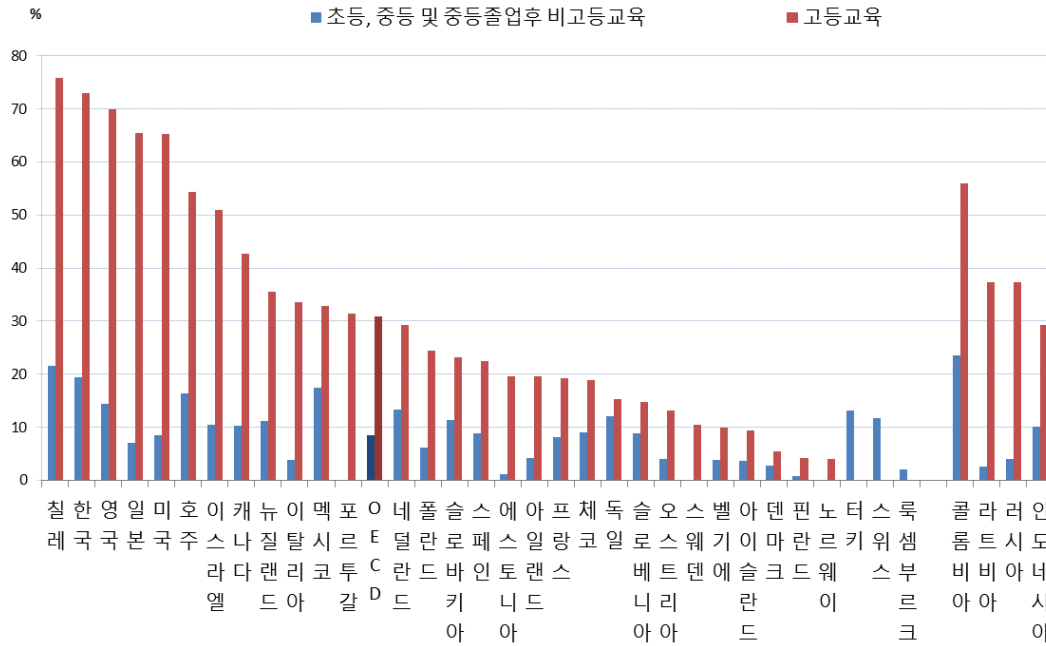
그림 설명

12.8: 일본, 캐나다, 슬로바키아, 덴마크에는 다른 것들과 함께 몇몇 교육 수준이 포함되었다.

12.9: 미국의 고등교육 유형 A의 진학률에는 유형 B도 포함되어 있다. 독일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부분적 방학 프로그램의 실현으로 공백이 있다. 벨기에 자료는 2000년 대신 2001년 것을 사용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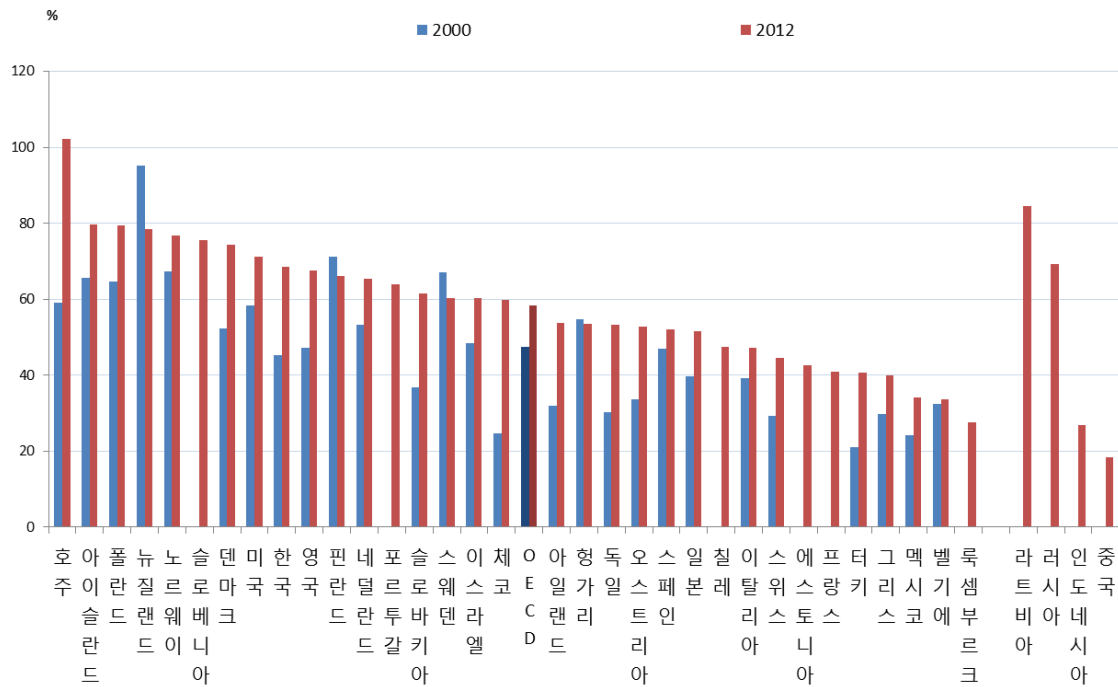
12.8 교육비 개인부담 비중 (2011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Indicator B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9415>

12.9 A 타입 고등교육(대학교) 진학률 (2000년, 2012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4, Indicator C3,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9424>

사법제도와 법률정보 접근성

사법에 대한 평등한 접근은 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모든 시민이 법적 절차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OECD 국가의 사법 제도에 대한 접근도를 평가하는 두 가지 핵심 측면이다.

법적 절차 비용의 적합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특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과 사법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법률서비스의 범위와 보장 범위의 차이 때문에 OECD 국가들의 법률지원 제공 정도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사법제도의 기능과 자금조달방식 차이도 여러 국가에서 법률지원 제공의 필요성에 영향을 끼친다.

사법효율성을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수행한 '2014 Evaluation of Judicial Systems'에 따르면, 이러한 자료를 보고한 유럽 OECD 국가에서 모든 1심 재판 중 9%에 법률지원이 제공되었다. 법률지원은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에서 더 자주 제공된다. 반면 덴마크(자료는 모든 재판이 아닌 비형사 사건만 해당됨), 슬로바키아(자료는 모든 재판이 아닌 비형사 사건만 해당됨), 슬로베니아,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1심 재판의 경우 매우 적은 비율로 법률지원이 제공된다.

그렇다고 해서, 후자 그룹 국가들의 법률시스템에 금전적 장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더 포괄적인 사법개혁노력이 특히 법률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민간 법률비용보험의 사용 가능성 증가 또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줄 것이다(CEPEJ, 2014).

법과 법적 절차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

비전문가인 국민이 법적 정보와 절차에 접근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누리게 하는데 중요하다. 2013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에 따르면, OECD 회원국과 EU 회원국 국민 중 5분의 1(22%)만이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꼈다. 슬로베니아, 핀란드, 이탈리아는 30%, 프랑스는 15%, 헝가리, 스페인, 에스토니아는 16%로 그 범위가 다양하다. 설문조사한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에 관한 정보는 잘 알고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다른 측면(법정에 갈 필요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법적 절차와 법률지원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고학력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학력자에 비해 정보를 더 잘 알고 있다고 느꼈다. 이와 유사하게, 자영업자들은 법적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반면, 육체노동자들은 거의 아는 게 없다고 느꼈다(European Commission, 2013).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법조

항, 고등법원의 재판법, 기타 법률서류를 볼 수 있는 인터넷포탈을 개발하였지만, 재판 대신 조정 같은 대안이나 소송절차 관련 활발한 의사소통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법률지원에 관한 자료는 '사법효율성을 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서 온 것이다. 법률지원이란 국가가 법정에서 스스로를 옹호하거나 또는 소송 절차를 시작할 충분한 금전적 수단이 없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자료는 법적지원이 제공된 모든 1심 재판의 비율을 나타낸다. 자료는 유럽 국가들에만 해당된다.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www.coe.int/t/dghl/cooperation/cepej/evaluation/default_en.asp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는 'European Commission's 2013 Eurobarometer No. 385 on Justice in the EU'에서 온 것이다. The survey was carried in the 28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between 30 September and 2 October 2013. 설문조사는 EU의 28개 국가에서 2013년 9월 30일에서 10월 2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법무부(Directorate-General for Justice) 명의로 사회적, 인구통계학적으로 다양한 집단의 26,581명을 전화로 인터뷰 했다. 사용된 방법론은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설문조사이다. 자료는 유로바로미터 정보 지표를 나타낸다. 이것은 법률지원 권리에 대한 정보를 자가보고한 수준, 법정에 대한 대안(예: 조정), 법원에 가야 할 때 무엇을 할 것인지, 변호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리고 소송비용에 관한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료의 방법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public_opinion/flash/fl_385_en.pdf를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읽어볼 것

CEPEJ. (2014), *Evaluation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5th Re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European Commission (2013), *Justice in the EU*, Flash Eurobarometer 385, European Commission Publishing, Bruss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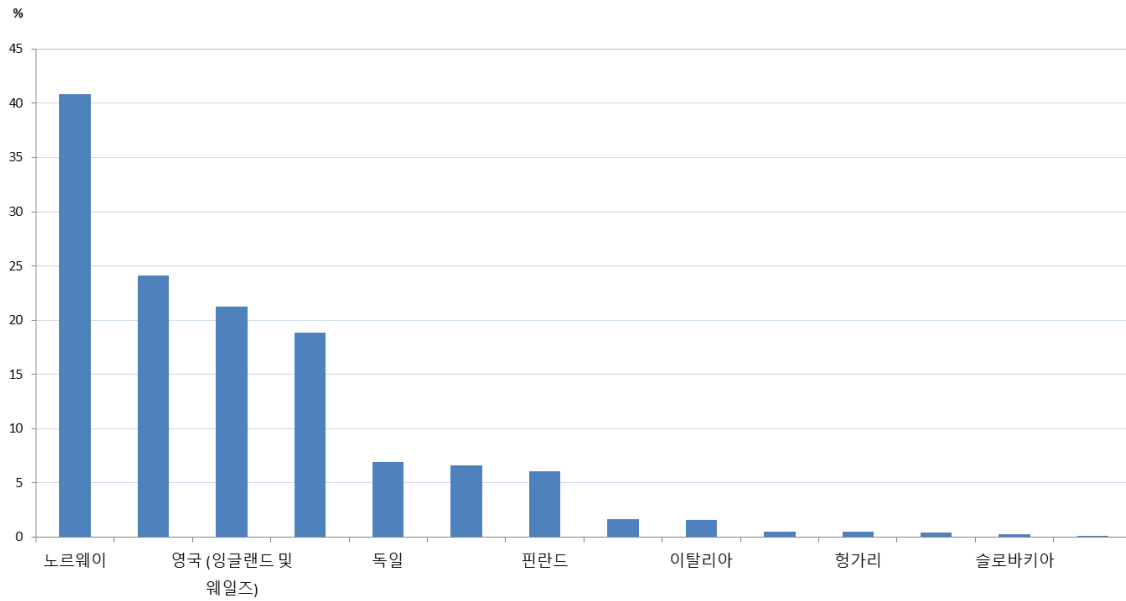
그림 설명

12.10: 덴마크, 슬로바키아 정보는 비형사 사건만 해당된다. 비유럽 OECD 국가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영국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에만 해당된다.

12.11: 비유럽 OECD 국가들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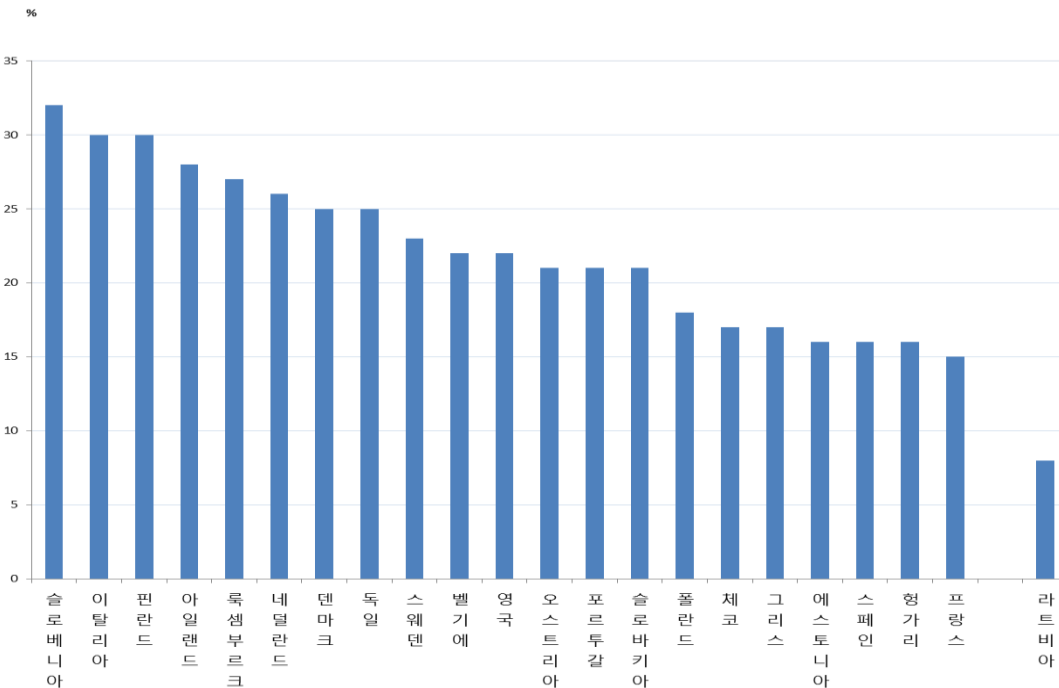
12.10 법률지원이 제공된 1심 재판 비율 (2012년)



출처: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2014), European judicial systems (database); and OECD calculations*

<http://dx.doi.org/10.1787/888933249431>

12.11 법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 (2013년)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3), Justice in the EU, Flash Eurobarometer 385, European Commission Publishing, Brussels*

<http://dx.doi.org/10.1787/888933249447>

의료체계의 환자필요 대응성

대응성이 높은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은 합리적인 대기 시간 내에, 환자를 존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 간호사 또는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긴 대기시간은 중요한 정책이슈이다. 긴 대기시간은 환자의 불만을 유발할 수 있고, 필요한 치료가 지연되면서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전반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의 의사 또는 간호사 부족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업무 조직이 부실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Siciliani et al., 2013).

미국 연방재단의 2013년 국제 의료정책 서베이 (2013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 참여한 OECD 국가에서 독일과 뉴질랜드 국민의 4분의 3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의사나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비율은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캐나다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의사나 간호사 진료를 예약하기 위해 6일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고했고, 미국에서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이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긴 대기시간은 많은 사람들을 응급실로 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Commonwealth Fund, 2013). 이는 해당 국가들이 병원 밖에서 일하는 일반의 및 간호사 수와 그들의 지리적 분포도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또는 계약조건에 1차 의료는 근무시간 후에도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조율이 되어 함을 보여준다.

전문의 예약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2013년 스위스와 영국 인구의 80%는 1달 이내에 전문의 예약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캐나다, 노르웨이에서는 50% 미만의 인구가 이런 경우였다. 캐나다, 노르웨이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이 이상이 전문의 예약을 위해서 2개월 이상을 기다렸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정확한 진단과 필요한 치료를 지연시키게 된다.

환자의 외래진료 경험

많은 OECD 국가의 주요 경향은 의사와 환자 간 더 많은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건강문제 관리에 더 관여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치료법을 선택함에 있어 관여의 폭이 커진다.

'2013 Commonwealth Fund Survey'에 참여한 OECD 국가들에서,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의사와 의 의사소통과 의사의 설명에 대해 그리고 치료에 대한 개입과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했다.

다양한 의료시스템 특성과 정책이 환자에 대한 의사의 행동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의료서비스 전달의 조직화, 지불방식, 시스템 모니터링 및 환자경험 보고, 그리고 환자의 이익보호 관련 법의학 정책에도 영향을 준다.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이 공공서비스 제공자들과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꾸었고, 이론적으로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강화시키도록 의료서비스에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을 위한 이러한 온라인 수단은 법적 문제 및 다른 이유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2013 Commonwealth Fund Survey'에 참여한 OECD 국가들에서, 최근 2년 간 한 번 이상 주치의/치료사와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문제를 논의한 환자는 8%에 불과했다.

주치의/치료사가 이메일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더 잘 알려주는 네덜란드와 스위스 같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더 높다. 네덜란드에서 일반의는 이메일 상담에 대한 금전적 동기가 있다. 대부분의 일반의들이 등록된 각 환자 당 고정된 수입을 얻기 때문이다(대면 상담, 전화상담, 이메일 상담에 무관하게). 다른 이들이 이메일 상담의 경우 대면상담의 비용의 절반 정도만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4개 그림의 자료는 1998년 이래 3년 마다 환자 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미국 연방재단의 2013년 국제 의료정책 설문조사(2013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서 얻은 것이다. 그림 12.15에서 정기적인 진료는 의사집단, 의료센터, 병원을 포함하고, 병원 응급실은 제외되었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commonwealthfund.org에서 볼 수 있다.

더 읽어볼 것

Commonwealth Fund (2013), "2013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in Eleven Countries", Novem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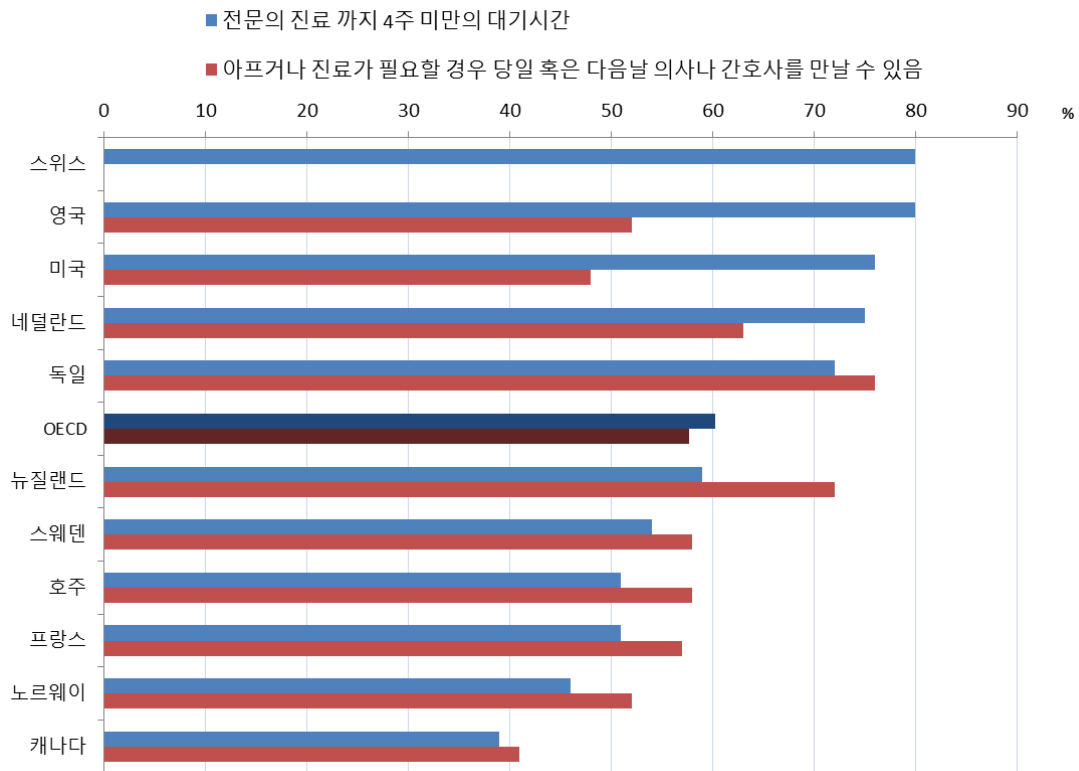
OECD (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Siciliani, L., M. Borowitz and V. Moran (2013), *Waiting Time Policies in the Health Sector: What Works?*,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aris.

그림 설명

12.12: 의사 또는 간호사 예약을 위한 대기시간에 대해서 스위스에서는 다르게 질문되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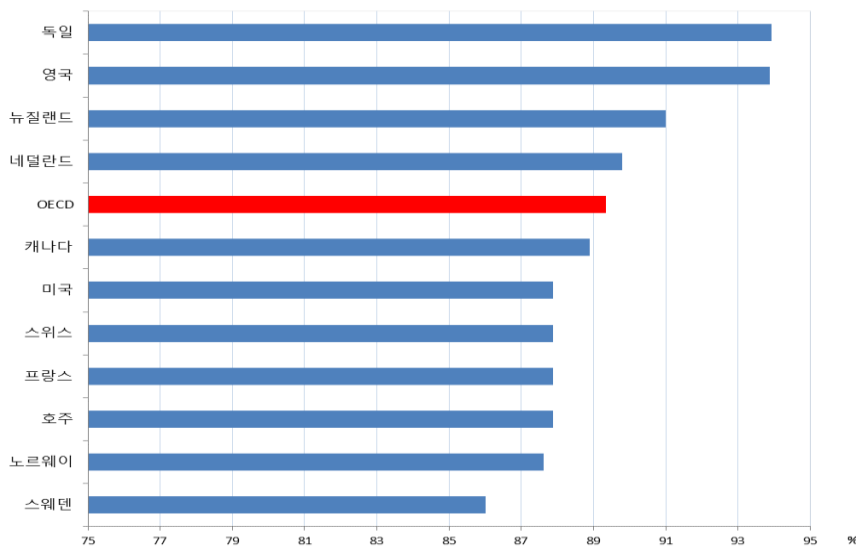
12.12 의사 혹은 간호사 및 전문의 진료 대기시간 (2013년)



출처: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4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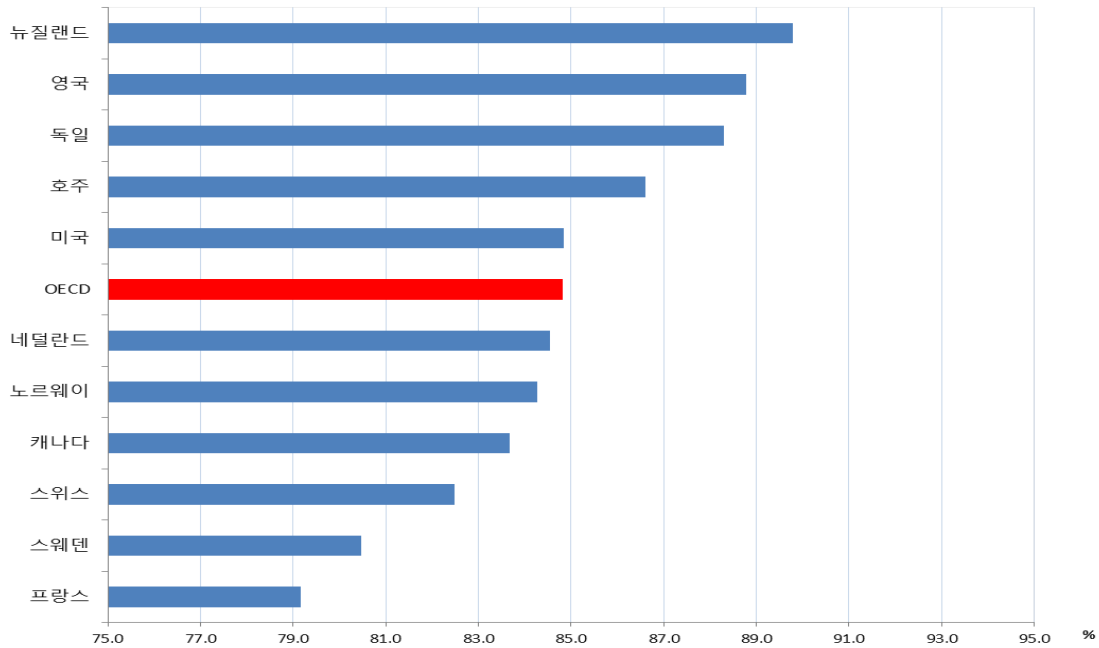
12.13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는 주치의 (2013년)



출처: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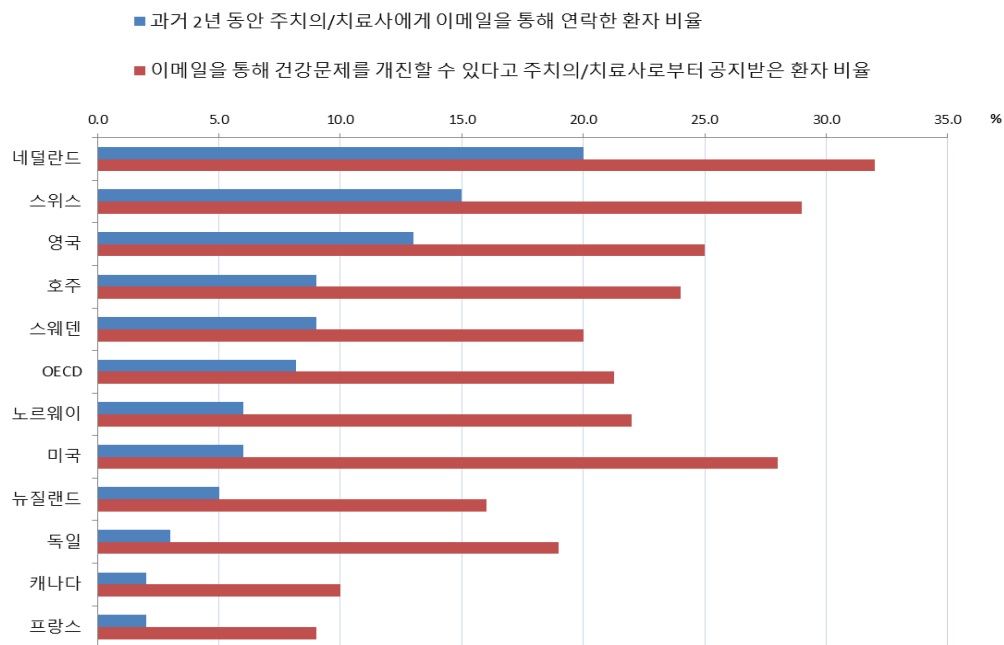
12.14 치료 관련 결정에 환자를 참여시키는 주치의 (2013 년)



출처: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472>

12.15 주치의/치료사와 건강문제를 이메일을 통해 소통 (2013 년)



출처: 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2013.

<http://dx.doi.org/10.1787/888933249481>

학생필요 대응성

교육에서의 대응성은 다양한 학생들의 필요에 맞게 지도 방식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아동들을 위한 기초교육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게 부모(또는 아동의 보호자)와 의사소통을 잘 하고 지역의 시민단체와도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것도 포함한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지도

대응성이 높은 학생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학급을 관리하기 위한 교육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특수한 필요를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구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수 교육에 대해서 교사들 스스로가 더 많은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2013년 '강의와 학습에 대한 국제 서베이' (TALIS survey)의 설문에 참여한 국가들에서 평균 5분의 1의 중등교사들이 위와 같은 도전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10분의 1의 교사들만이 일반적으로 학급을 관리하는 데에도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과 비교된다. 멕시코(47%), 일본(41%)의 교사들은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플랑드르(벨기에) (5%), 잉글랜드(영국) (6%)에서 이 비율은 더 낮았다.

이러한 자료는 주의 깊게 해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높은 수치는 일반 학급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함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교육의 질과 특화된 교육의 관점에서 교사들의 기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일 수도 있다.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정의가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다.

학교와 학부모(또는 보호자) 간의 상호작용

학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에 부모의 지속적이고 강한 지원이 더해져야 한다. 교장이 학교, 학생, 부모(또는 보호자) 사이의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에 TALIS 참여한 OECD 국가에서 교장들은 평균적으로 11%의 시간을 학생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와 소통하는데 썼다고 보고했다.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에서 교장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14%)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사용했다고 보고한 반면, 체코 네덜란드, 에스토니아에서는 10% 이하의 시간을 썼다고 보고했다.

평균적으로, TALIS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교장 중 3분의 2(66%)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준다고 보고했다. 교장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소통을 많이 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부모와 소통할 책임이 교사 또는 다른 학교 대표자들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

학교와 지역사회 간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은 학업중단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에도 도움을 준다. 2013 TALIS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교장이 학교와 지역사회(지역 산업, NGO, 기타 협회) 간의 협력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비율은 평균 71%였다. 이 비율은 한국(91%)같은 몇몇 국가들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50% 미만), 그리고 네덜란드(21%)에서는 낮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세 개의 지표에 관한 자료는 2013년 '강의와 학습에 대한 국제 설문조사' (OECD 2013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TALIS)에서 수집되었다. TALIS는 국제적이며 규모가 큰 설문조사로 교사들의 근무환경과 학교의 학습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4개의 지방단체가 2013년 TALIS에 참여하였다. 앨버타(캐나다), 플랑드르(벨기에), 잉글랜드(영국), 그리고 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이다.

자료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중등학교 교사 비율을 보여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발달장애로 인해 공식적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종종,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인적, 물질적 또는 금전적)이 이들에게 제공된다. 영재학생들은 이러한 정의 하에서는 특수교육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자료는 중학교 교장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상호작용에 사용했다고 보고한 평균시간의 비율을 보여준다(공식적, 비공식적 상호작용 둘 다).

자료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에 대해 "동의한다"와 "강하게 동의한다"라고 보고한 것을 나타낸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TALIS 2013 Result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Teaching and Learning*,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196261-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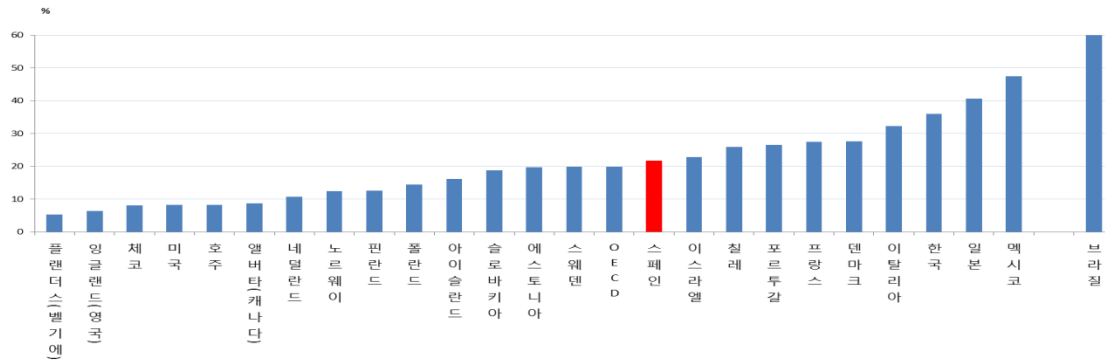
그림 설명

세 그림 모두에서 미국은 OECD 평균에서 제외되었다. 참가율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17: 번역 문제로 노르웨이 자료는 제외되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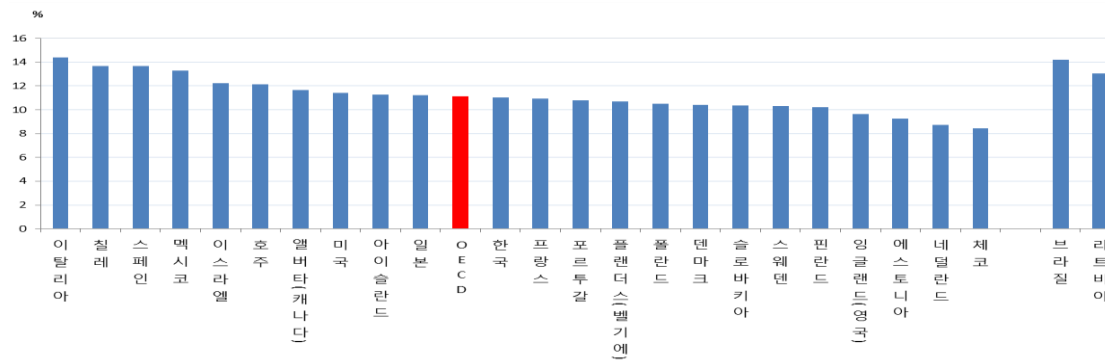
12.16 특수학생 교육을 위한 중등교육 교사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2013 년)



출처: OECD (2013), TALIS Databas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9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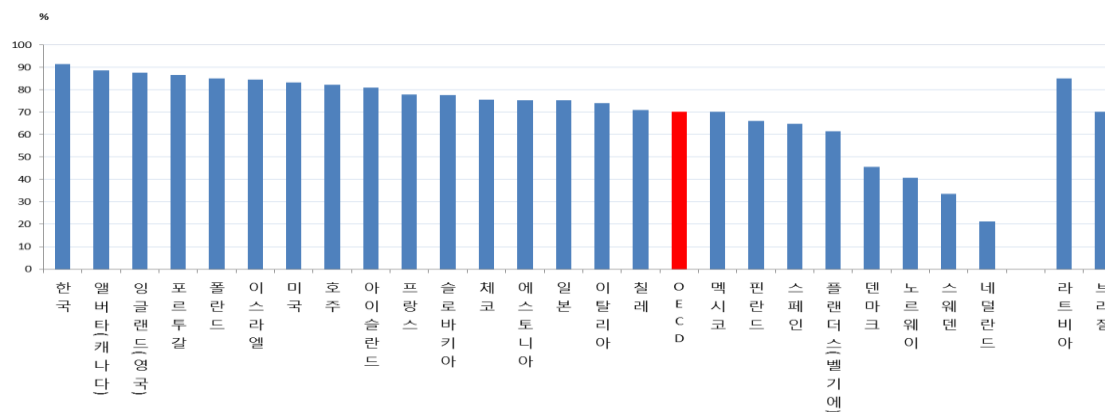
12.17 중학교 교장이 부모 혹은 보호자와 소통하는 데 평균적으로 쓰는 시간 비율 (2013 년)



출처: OECD (2013), TALIS Databas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9507>

12.18 학교와 지역사회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한다고 교장이 보고하는 중학교의 교사 비율 (2013 년)



출처: OECD (2013), TALIS Database,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888933249517>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욕구 대응성

시민들은 사법절차가 불합리한 지연 없이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OECD 경제부서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저자는 재판기간이 10%증가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2%감소한다고 추정했다(Palumbo et al., 2013).

재판과정의 적시성

재판기일(DT)은 보통 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기간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한 국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법원의 능력이라는 관점(1년 동안 해결된 사건의 수로 측정됨)에서, 재판기일은 주어진 관할권 내 법정에 의해 재판 중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대일수를 예측한다. 재판기일을 통해 재판과정의 예상기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자료가 사용 가능한 유럽 OECD 국가의 2013년 민사 및 상사 소송 제1심 사건에 대한 평균 재판기일은 이탈리아 590일에서 룩셈부르크 90일로 그 범위가 다양하다. 프랑스(311), 핀란드(325), 포르투갈(369), 슬로베니아(405), 슬로바키아(437), 그리스(469), 이탈리아(590) 같은 국가들은 재판기일이 300일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재판기일은 각 사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므로, 결론은 주의 깊게 도출되어야 한다. 완전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용적인 ICT 시스템으로부터의 판례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법률시스템의 절차 차이(담당 건수 포함)와 사법제도의 조직체계(소송 직원과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포함한)가 재판기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우 빠른 진행이 항상 좋은 재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절차를 급히 서두르게 되면(속도가 우선 순위인 곳에서) 재판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사건처리 지연을 감소시키고 당사자 및 시민과 더 잘 소통하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은 기술 기반 사법제도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유럽 OECD국가들 거의 대부분은 법정에서 전자 사건 및 법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에서는 소송의 전자제출, 온라인 소송 후속조치, 그리고 소액사건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허가하는 법정의 비율이 높다고 보고했다. 법정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은 특히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고 스웨덴에서 발전하였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조치 메커니즘

2012년 모든 유럽 OECD 국가들은 취약계층 범주에 최소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이들을 위해 사법절차 중 특별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취약 계층은 CEPEJ의 방법론에 의한 것으로 강간피해자, 테러리즘 피해자, 아동 목격자/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수민족, 장애인, 청소년 범

죄자를 포함한다. 몇몇 국가들은 7가지 범주 전체에 대해서 취약계층별로 특별 조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이러한 특별 조치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사법절차 동안 취약계층에게 직통 전화, 인터넷 포탈, 안내문 등을 통해 특정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또는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특정 심리 양식(예를 들어 법정에서 화상회의시스템 사용)을 적용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3개 그림의 자료는 '2014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의 사법제도 평가에서 온 것이다.

재판기일 일수는 법정에서 계류 중인 민사 및 상사 소송이 해결되는데 필요한 최대 추정일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법정이 365일에 50개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연말에 남은 건수(즉, 계류 중인 사건)가 10개라면 재판기일은 365일의 20%[(10/50)X100]이다. 또는 더 간단히 계류 중인 사건을 해결하는 평균 기간을 넣으면 0에서 73일 사이로 추정될 수 있다. 사용된 정확한 공식은 (주기의 마지막에 미해결된 사건의 수/주기 안에 해결된 사건의 수)X365 이다.

"모든 법정"은 100%의 법정에 컴퓨터 시설이 있다고 답한 국가들을 말한다. "일부 법정"은 50% 이상 그리고 50% 미만(그러나 10% 이상)이라고 답한 국가들을 말한다. "소수 법정"은 10% 미만이라고 답한 국가를 말한다. 해당 없음은 0%라고 답한 국가를 말한다.

"특별 조치" 범주는 특정 계층의 사법절차 단계별 별도의 정보 메커니즘과 법정 심리에서 특별 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소수민족"에는 사법절차에 연루된 외국인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은 경찰조사 단계에 관한 것은 아니며, 범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에 관한 것도 아니다.

더 읽어볼 것

CEPEJ (2014), *Evaluation of European Judicial Systems*, 5th Report,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Strasbo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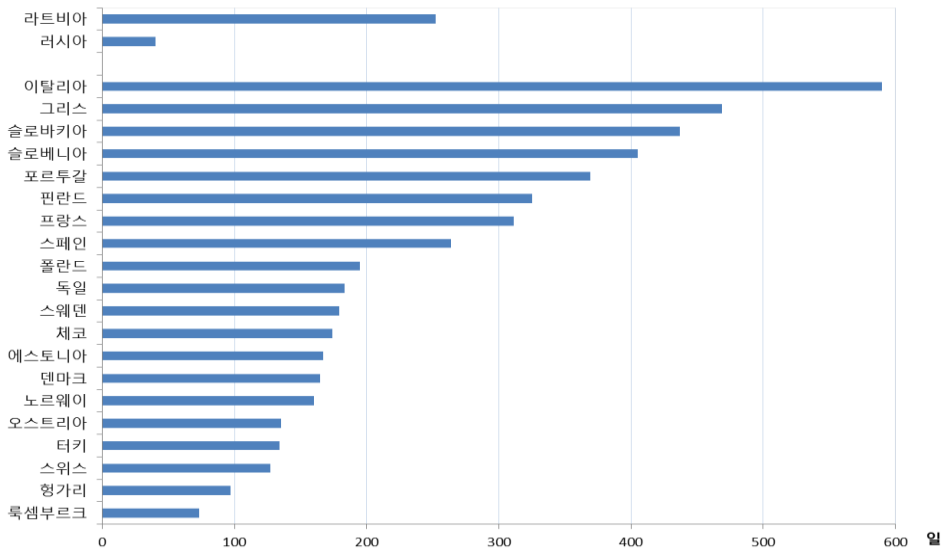
Palumbo, G., et al. (2013), "Judicial Performance and Its Determinants: A Cross-country Perspective", *OECD Economic Policy Paper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5k44x00md5g8-en>.

그림 설명

3개 그림에서 비유럽 OECD의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12.19 민사 및 상사 소송 제1심 사건에 대한 재판기일 (2012년)



출처: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2014), European judicial systems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522>

12.20 당사자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컴퓨터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법정의 비율 (2012년)

	모든 법정	일부 법정	소수 법정 (10% 미만)	해당 없음
청구권 전자 제출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헝가리,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독일, 영국(북아일랜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폴란드,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스코틀랜드)
온라인으로 사건 후속처리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라트비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터키, 영국(북아일랜드), 영국(스코틀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그리스,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소액 소송의 전자 처리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즈), 영국(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터키, 영국(스코틀랜드)

출처: *Adapted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2014), European judicial systems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531>

12.21. 사법절차 중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조치 (2012년)

	강간 피해자	테러 피해자	아이/목격자/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소수자	장애인	청소년범죄자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체코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네덜란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터키	●	○	●	○	○	○	●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	○	●	○	○	○	●
영국 (북아일랜드)	●	○	●	○	○	○	●
영국 (스코틀랜드)	●	○	●	○	○	○	○
라트비아	●	○	●	○	○	○	●
러시아	●	○	●	○	○	○	●
		있음	○				
		없음	●				

출처: *Th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2014), European judicial systems (database).*
<http://dx.doi.org/10.1787/888933249549>

의료서비스와 질과 환자 안전

높은 의료의 질과 안전한 보살핌에 대한 커져가는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여, 의료의 질을 측정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OECD국가에서 병원과 1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다. 의료의 질은 일반적으로 “과정”측정(다양한 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위해 적합한 개입 방법의 사용), 그리고 “결과물”측정(의료 개입이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범위)을 통해서 측정된다.

심혈관 질병과 암으로부터의 생존

OECD 국가에서 심혈관 질환과 암은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 두 질환의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심근경색증(심장마비)으로 입원한 사람들의 치사율이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자료가 사용 가능한 OECD 국가그룹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덴마크, 슬로바키아, 폴란드, 캐나다에서 감소율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치사율이 30% 이상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의료서비스 과정이 발전하고 신뢰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OECD, 2013).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종류의 암에 대한 생존율 역시 높아졌는데, 이것은 조기진단(종종 체계적인 검사 프로그램)과 더 효과적인 치료 때문이다. 그림 12.23은 여성 사망률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의 5년 생존율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국가 간에 눈에 띄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최근 자궁경부암 생존율은 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에서 70% 이상이며 폴란드, 아일랜드에서는 60% 미만이다.

1차의료 처방의 질(적합성)

최근 항생제 남용이 세계 공중보건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항생제 처방의 양과 저항력 있는 세균 변종의 유행 간에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OECD, 2013). 저항성균에 의한 감염은 종종 기존의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병이 장기화되고, 사망위험이 커지며, 높은 치료비가 초래된다. 최적의 처방 수준을 확립하기는 어렵지만, 항생제 처방량의 차이는 처방의 질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된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항생제 처방이 약간 증가하였다. (그리스에서 2007년 이후에는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벨기에, 이탈리아에서 특히 항생제 소비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2012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됐다. 그에 반해서, 칠레, 네덜란드의 항생제 소비는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국가의 절반 미만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프랑스(과거에는 항생제 소비 수준이 높았음),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헝가리에서 항생제 처방

률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세 그림에 대한 자료는 OECD건강통계 (OECD Health Statistics)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록에 근거하여 국가별 담당자에게 제공받은 것이다.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치사율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30일 내에 사망한 45세 이상의 환자수를 말하는 것이다. 비율은 2010년에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한 45세 이상의 OECD 인구에 대해 나이-성별로 표준화되었다.

기간분석을 통해 계산된 암 생존율은 5년 간의 추적 기간의 생존 정보를 사용하는 코호트분석(동세대 분석)에 비해 더 최근의 사건과 추적 기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최신의 측정치를 제공한다. 영국에서는 2001-06년 자료를 위해 코호트분석이 사용되었고, 2006-11년 자료는 기간분석을 통해 계산되었다. 기준 기간은 국가 별로 약간씩 다르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생존예측은 국제 암 생존 표준(International Cancer Survival Standard, ICSS) 인구를 이용하여 연령별로 표준화된 것이다.

의약품 일일사용량(DDD)은 성인들이 주요 증상을 위해 하루에 사용하는 의약품 추정량의 평균치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www.whocc.no/atcddd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는 일반적으로 외래환자 소비를 의미하는 것이다. 칠레, 캐나다, 그리스, 한국, 이스라엘, 아이슬란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병원 내 소비도 포함한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3),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Indicators*,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health_glance-2013-en.

그림 설명

12.22: 중요한 국가별 설명을 위해서는 StatLink를 참고하기 바란다. 95% 신뢰구간은 |·|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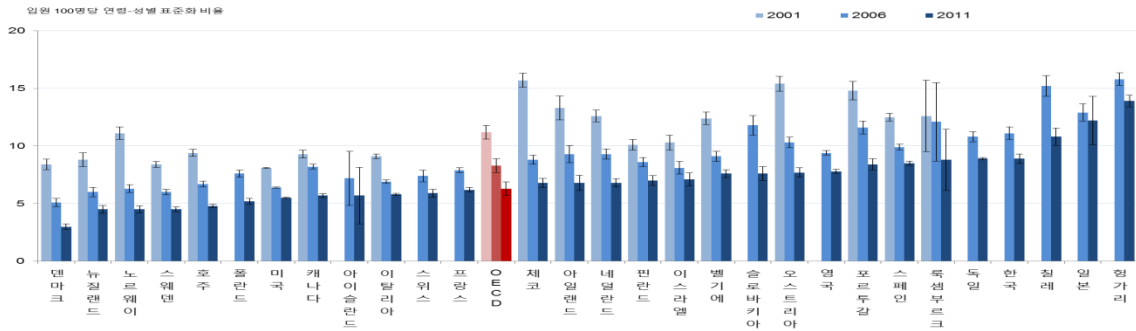
12.23: 95% 신뢰구간은 |·|로 표시되었다. 아일랜드, 영국,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벨기에,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의 자료는 기간분석을 나타낸다. 폴란드, 포르투갈, 미국, 체코,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일본의 자료는 코호트분석을 나타낸다. 아이슬란드 자료는 세 기간의 평균에 해당한다.

12.24: 칠레,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폴란드 자료는 2012년 대신 2011년 것을 사용했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웨

덴 자료는 2012년 대신 2013년 것을 사용했다. OECD 평균에서 칠레,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리고 한국은 제외되었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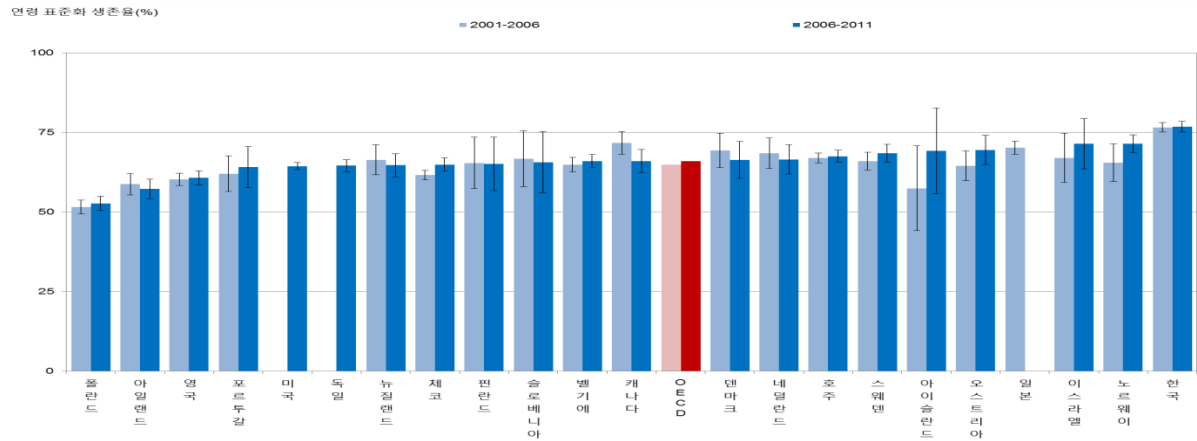
12.22. 급성심근경색 입원 후 45 세 이상 성인의 30 일 이내 치사율 감소 (2001-11 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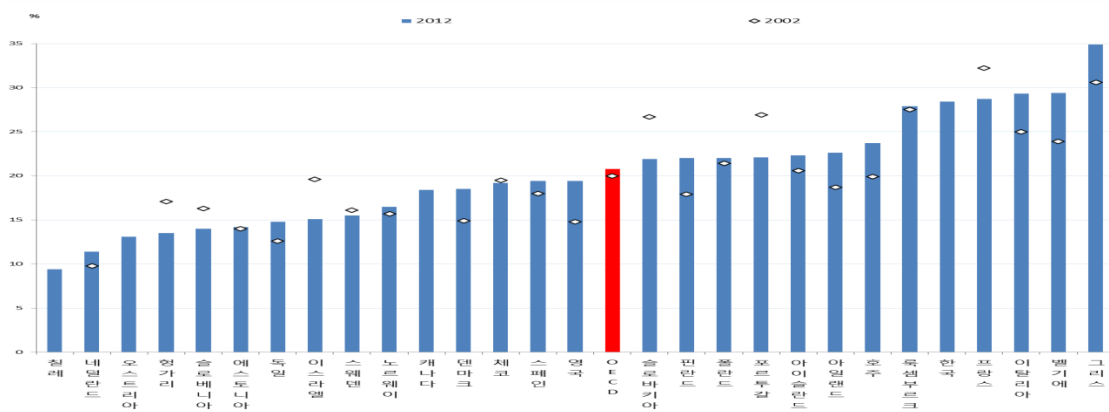
12.23. 자궁경부암 5 년 생존율 (2001-2006 년, 2006-2011 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565>

12.24 처방된 항생제의 일반적 양 (2002 년, 2012 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573>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형평성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능력이 교육의 질과 학교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다. 국제학업성취도(PISA)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조사로 국가별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국가 내 학생 및 학교 별 결과의 형평성을 비교할 수 있다(PISA, 2012). 2012년 PISA는 특히 수학 성취도평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2012년 OECD 국가에서, 15세 학생들의 PISA 수학 성취도는 한국, 일본, 스위스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멕시코, 칠레, 터키는 다소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PISA, 2012).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OECD 국가에서 PISA 수학 점수 평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3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던 국가에서 주목할만한 발전이 있었다(예: 이스라엘, 터키, 멕시코). 이 국가들은 다른 OECD 국가와의 격차를 어느 정도 줄이고 있다. 독일 같이 OECD 평균에 해당되는 점수를 보였던 국가들에서도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향상되었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같이 OECD 평균 이하였던 국가들에서도 수학 성취도가 향상되었다. 반면, 2003년에는 높은 점수를 보였던 몇몇 국가에서 수학 성취도가 하락하였다(예: 스웨덴, 핀란드). 체코, 뉴질랜드, 호주에서도 학생들의 수학 학업성취도가 하락하였다.

PISA는 참여국들이 얼마나 공평하게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결과물을 달성하는지도 보여준다.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에서 약 15%의 변량은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수학 성취도의 변량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가 더 큰 국가는 슬로바키아, 칠레, 헝가리, 그리고 프랑스이다. 반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그리고 캐나다에서는 훨씬 적은 영향을 받는다.

수학 및 다른 과목에서의 학생들 성취도는 그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학교 간 성취도에는 큰 차이가 있고, 학교 내 학생들 간에 차이가 적을 때는 학교 안에 비슷한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학교 간 차이가 OECD 평균의 10분의 1 정도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학교 선택에 관해서 덜 염려할 필요가 적다. 반면,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터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독일에서는 학교 간 차이가 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두 그림의 자료는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 프로그램(PISA)'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65개 국가에서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수학에 초점이 있음). 기초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volume-i.htm을 참고하기 바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에 대한 PISA 지표(ESCS)는 부모의 가장 높은 직업 지위, 부모의 가장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의 3개 항목을 통해 추출되었다. 기초 자료와 방법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volume-II.pdf를 참고하기 바란다.

더 읽어볼 것

OECD (2014), *PISA 2012 Results: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 Student Performance in Mathematics, Reading and Science, Volume I*,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8780-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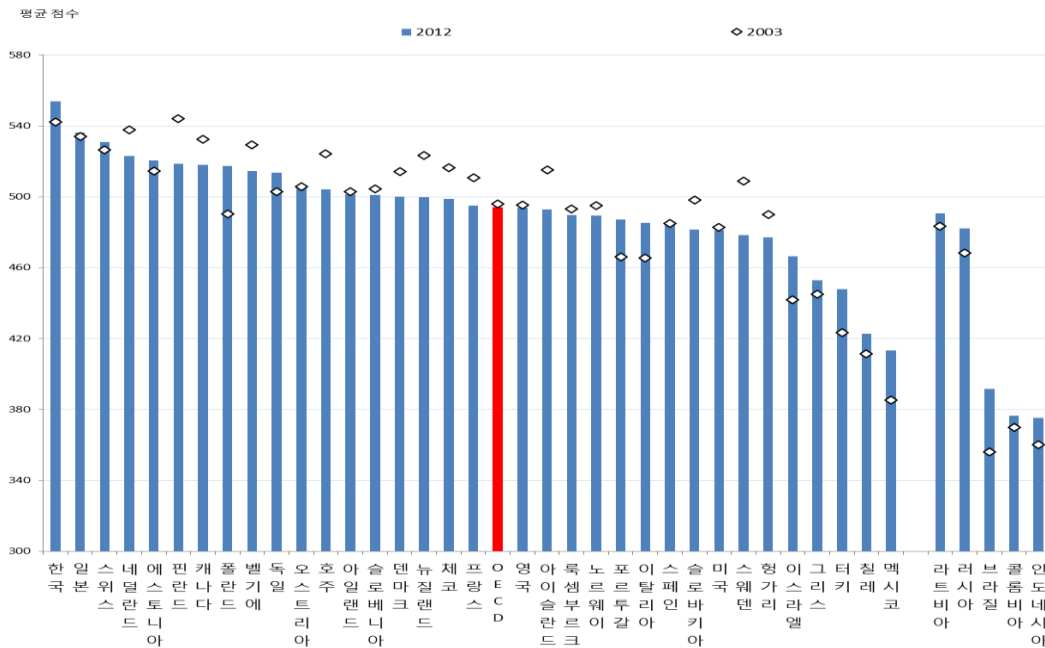
OECD (2013),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Giving Every Student the Chance to Succeed*, Volume II, OECD,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01132-en>.

그림 설명

12.25: 칠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영국의 자료는 PISA 2003 대신 PISA 2006에 기초한 것이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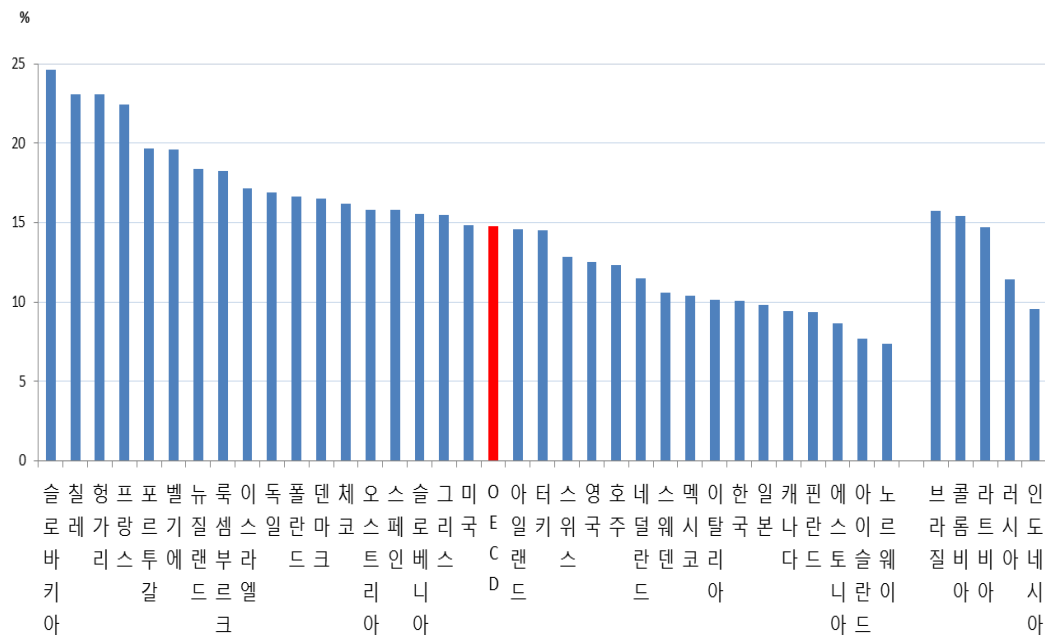
12.25 수학의 PISA 평균점수 변화 (2003 년, 2012 년)



출처: OECD, PISA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revised edition), 2014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588>

12.26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PISA 수학 점수의 변화 비율 (2012 년)



출처: OECD, PISA 2012 results: Excellence through equity, 2013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591>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공정성

시민들은 법원의 결정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사 사법제도는 힘있는 단체 및 정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의 법 위반에 대항하여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법치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법이 존중되고 위반 시에는 적절한 제재가 분명하게 가해지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제도에 기초한다. 그러나, 보안문제 및 범죄통제에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는 사법제도의 영향력을 경찰 및 교정당국과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과 구분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법제도와 보안문제 및 범죄통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민사 사법 결정 집행의 효과성과 독립성

민사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는 편견 없이 중립적인 방식으로 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상세한 규칙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 세계정의리포트(World Justice Report)의 자료에 따르면, 예상대로, 민사 사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사법제도가 부당한 정부의 영향력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핀란드, 그리고 호주의 국민과 사법 전문가들은 사법제도가 일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효과적이며, 또한 민사 사법제도에 정부가 적게 개입한다고 보고했다.

형사 사법제도의 효과성과 범죄로부터의 시민보호

효과적인 형사 사법제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비차별적으로 형사범죄를 조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찰, 변호사, 검사, 판사, 교도관을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고려해야 한다(Botero and Ponce, 2012).

2014년 세계정의프로젝트(WJP)의 자료에 따르면, 범죄 판결제도(명령, 판결, 결정을 하는 법원의 행위)가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즉, 범죄 가해자가 효과적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음)이라고 인식되는 국가에서는 개인적인 불만을 시정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는 성향이 낮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개인적인 협박 그리고/또는 정부에 대한 폭동). WJP의 법치지수를 보면, 이러한 2개의 하위 차원 간의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R^2 = 0.9$)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형사 사법제도가 국가의 보안 및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는 기본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4년 OECD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반적으로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멕시코는 예외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제시된 다른 지표들에 관해서는, 각 국가별 3대 도시의 자료가 적용되었다. 이 자료들은 인식에 기반한 것이며 자료수집 당시 일어난 구체적인 사건에 민감할 수 있다. 다음 판에서는 OECD 및 다른 국가들의 효과적인 사법제도와 공정성, 보안, 질서에

끼치는 영향력 사이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위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3개 그림의 자료는 'World Justice Project'의 법치 지표에서 온 것이다. 이 지수는 지역 설문 조사 회사에 의한 일반 대중 설문조사의 답변에 기초한 것이다. 이 설문조사는 각국 3대도시에서 1,000명의 대표표본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조사는 민사법에 관한 전문가 및 학자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기초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를 참고하기 바란다.

민사 사법 하위지표는 민사 사법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그리고 부당한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지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형사 판결제도(Criminal adjudication system)"는 범죄 가해자가 기소되고 처벌받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형사판사와 다른 법관이 능숙한지, 그리고 사전심리 구금의 남용 없이 신속한 결정을 하는지를 측정한다. "사람들이 개인적 불만해소를 위해 폭력에 의존하지 않음"은 시민들 사이의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협박 또는 폭력에 의존하거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추구하는 정도, 그리고 사람들이 군중/폭동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측정한다.

"범죄가 효율적으로 통제된다"는 살인, 납치, 강도 및 절도, 무장강도, 갈취를 포함한 일반범죄의 발생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사람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도 측정한다.

더 읽어볼 것

Botero, J. and A. Ponce (2012), *Measuring the Rule of Law, WJP Working Paper No. 2*,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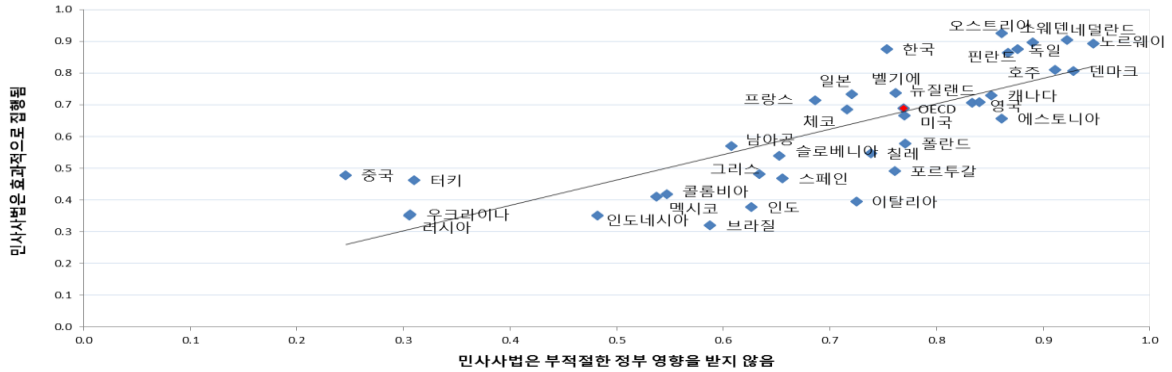
World Justice Project (2014), *The Rule of Law Index 2014*,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그리고 스위스 자료는 사용 가능하지 않다. 헝가리 자료는 표시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료에 대한 정보는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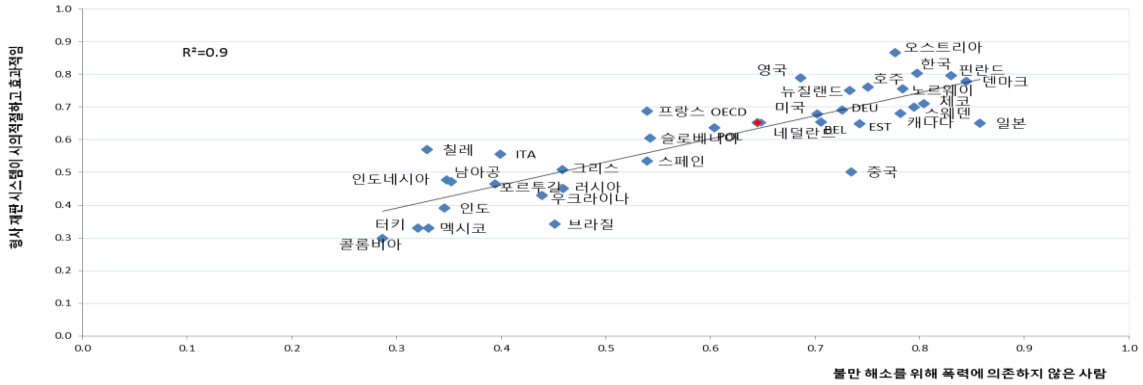
12.27 민사사법의 효과적 집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력으로부터의 자유 (2015 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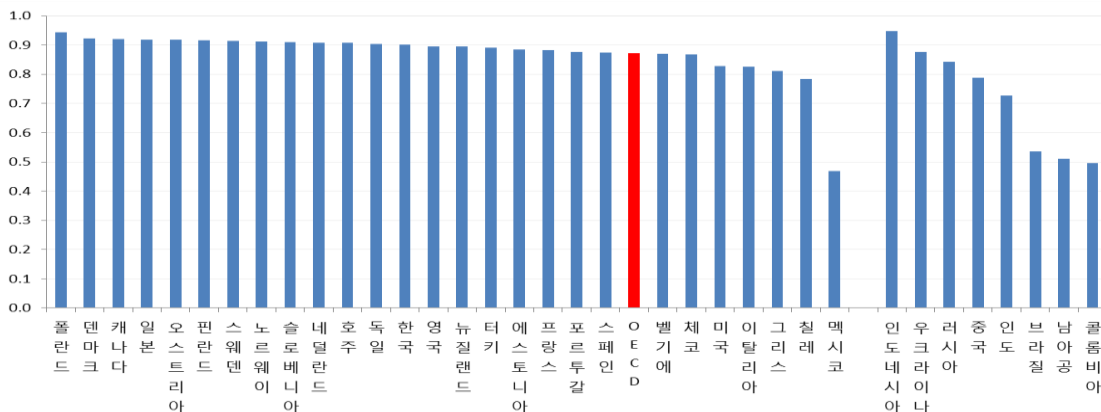
12.28 형사 재판 제도의 효과성/적시성과 불만 해소를 위해 개인적 폭력을 행사하는 정도 (2015 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613>

12.29 범죄가 효과적으로 통제됨 (2015 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15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625>

2008년 국민계정체계의 집행

국민계정체계(SNA)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 그리고 회계기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거시경제 계정, 재정수지 및 표의 논리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통합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는 유엔, 국제통화기금,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 OECD, 그리고 세계은행이 함께 책임지고 만들었다(OECD Glossary of Statistical Terms). 2009년에 1993년 국민계정체계를 2008년 국민계정체계로 개정하기로 결정되었다. 2008년의 국민계정체계는 이전 판의 기본적인 이론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의 지시에 따라, 2008년 국민계정체계는 경제에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측면들을 다루었고, 점점 분석적 관심의 초점이 되는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며,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하였다.

2008년 국민계정체계는 경제적 환경의 발전 및 방법론 연구와 사용자의 욕구 증진에 발맞추어 변화하였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1995년 유럽계정체계(European System of Accounts)는 정의, 회계기법, 분류에 있어 대략적으로 1993년 국민계정체계와 일치한다. 최신 판은 2010년 유럽계정체계로 최근 마무리되었는데, 2008 국민계정체계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해 권고사항과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2008년 국민계정체계와 2010년 유럽계정체계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2014년 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개정된 국제 기준을 적용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전 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출판물에 선택적으로 제시된 지표에 영향을 주었다.

표 A.1은 국가별로 2008년 국민계정체계 또는 2010년 유럽계정체계의 시행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표 A.1. 국가별 보고시스템

	비 재정 정부계정	재정적 정부 계정
OECD 가입 국가		
호주	SNA2008	SNA2008
오스트리아	ESA2010	ESA2010
벨기에	ESA2010	ESA2010
캐나다	SNA2008	SNA2008
칠레	SNA1993	SNA1993
체코	ESA2010	ESA2010*
덴마크	ESA2010	ESA2010*
에스토니아	ESA2010	ESA2010*
핀란드	ESA2010	ESA2010*
프랑스	ESA2010	ESA2010*
독일	ESA2010	ESA2010*
그리스	ESA2010	ESA2010*
헝가리	ESA2010	ESA2010
아이슬란드	SNA1993	SNA2008
아일랜드	ESA2010	ESA2010*
이스라엘	SNA2008	SNA2008
이탈리아	ESA2010	ESA2010*
일본	SNA1993	SNA1993
한국	SNA2008	SNA1993
룩셈부르크	ESA2010	ESA2010*
멕시코	SNA2008	SNA1993
네덜란드	ESA2010	ESA2010*
뉴질랜드	SNA2008	
노르웨이	SNA2008	SNA2008
폴란드	ESA2010	ESA2010*
포르투갈	ESA2010	ESA2010
슬로바키아	ESA2010	ESA2010*
슬로베니아	ESA2010	ESA2010*
스페인	ESA2010	ESA2010*
스웨덴	ESA2010	ESA2010
스위스	SNA2008	SNA2008
터키	SNA1993	SNA1993
영국	ESA2010	ESA2010
미국	SNA2008	SNA2008
OECD 가맹국		
콜롬비아	SNA1993	SNA1993*
라트비아	ESA2010	ESA2010
러시아	SNA1993	SNA1993

*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의 자료를 사용함

부록 B

정부수입 총계 방식

다음 표는 조세, 사회적 기여금, 보조금 그리고 제2장 "공공 재정과 경제"에 제시된 기타 수입들에 대한 총계를 OECD 국민계정자료로부터 어떻게 구성하였는가를 알려주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B.1. 정부수입 총계

본 보고서의 용어	국가계정체계의 용어	OECD 국가계정자료의 코드 (일반정부의 주요 총계)
조세		
간접세	생산과 수입(import)에 대한 세금	GD2R
직접세	소득과 부에 대한 세금	GD5R
자본세	자본세	GD91R
순수 사회적 기여금	순수 사회적 기여금	GD61R
보조금 및 기타정부수입		
현금과 자본 보조금	기타 현금 이전	GD7R
	기타 자본이전과 투자 보조금	GD92R_D99R
판매 및 수수료	시장산출과 최종사용을 위한 산출	GP11_P12R
	기타 비-시장산출을 위한 지불	GP131R
재산 소득	재산소득	GD4R
보조금	생산에 대한 기타보조금	GD39R
총정부수입	총 정부수입	GTR

부록 C

COFOG 함수를 활용한 정부 기능분류

OECD 가 개발한 정부기능분류(COFOG)는 자금이 사용된 목적에 따라 국가계정체계에(SNA) 나타난 정부지출자료들을 분류한다. 표 C.1.에서와 같이, 일차적 정부기능은 지출자료를 10개의 기능적 집단 즉, 지출의 하위영역(경제분야, 교육, 사회보장 등)으로 나누고, 2차적 정부기능은 각각의 1차적 정부기능을 9개의 하위집단으로 나눈다. 일차적 정부기능자료는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32개에 대한 것이고(시계열 사용 가능성에 따라), 이차적 정부기능자료는 21개의 유럽연합회원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표 C.1. 1차적 수준과 2차적 수준의 정부기능분류(COFOG)

1차적 수준	2차적 수준
일반정부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과 입법, 재정과 재무, 외교부문 ● 해외경제지원 ● 일반서비스 ● 기초연구 ● 일반공공서비스의 연구 개발 ● 일반공공서비스 기타 ● 공공부채의 거래 ● 정부간 이전 업무
국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방위 ● 시민방위 ● 해외군사원조 ● 국방연구개발 ● 국방 기타
공공질서와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서비스 ● 소방 서비스 ● 법원 ● 교도소 ● 공공질서 및 안전 연구개발 ●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 칠레와 멕시코에 대한 1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는 이용할 수 없었다. 최근까지 2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는 일부 국가의 국내통계 부서에서는 사용되고 있지만, 국제기구수준에서 수집되지는 못하였다. 더구나, 2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는 국가계정체계(SNA)/UN 가이드, 국제통화기금의 정부재정통계 매뉴얼에서 정부기능분류의 관점을 적용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2005년 Eurostat는 유럽국가들을 위한 2차적 정부기능분류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토론을 했으며, 국가 계정지출자료에 정부기능분류를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기 위한 전담반을 설립하였다. 2차적 정부기능 분류자료는 터키와 모든 OECD의 비-유럽국가들: 호주, 캐나다, 칠레, 이스라엘,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과 유럽국가에서 이용할 수 없었다(일본은 제외). 또한 EU의 몇몇 회원국에서는 특정 정부기능분류영역에서만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다. OECD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대한 이들 국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C.1. 1차적 수준과 2차적 수준의 정부기능분류(COFOG), 계속

1차적 수준	2차적 수준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 경제, 상업과 노동 ● 농업, 산림, 어업과 수렵 ● 연료 및 에너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 운송 ● 통신 ● 기타산업 ● 경제연구개발 ● 경제기타
환경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관리 ● 오수관리 ● 공해저감 ● 생물 종 다양성 및 경관보호 ● 환경보호연구개발 ● 환경보호 기타
주거와 공동체의 쾌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개발 ● 공동체개발 ● 상수도공급 ● 가로조명 ● 주거와 공동체의 쾌적성 연구개발 ● 주거와 공동체의 쾌적성 기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의 생산, 적용, 설비 ● 외래환자서비스 ● 병원서비스 ● 공공보건서비스 ● 건강연구개발 ● 건강기타
레크리에이션, 문화, 종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서비스 ● 문화서비스 ● 방송 및 언론 서비스 ●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 레크리에이션, 문화와 종교 연구개발 ● 레크리에이션, 문화와 종교 기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전 기본교육 ● 2차적 교육 ● 2차적 이후의 제 3차적이 아닌 교육 ● 3차적 교육 ● 수준이 정의되지 않는 교육 ● 교육에 대한 보조금 ● 교육연구개발 ● 교육기타
사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과 장애 ● 노령 ● 유족 ● 가족과 아동 ● 실업 ● 주택개발 ● 기타 사회적 소외계층 ● 사회보장연구개발 ● 사회보장 기타

부록 D

이해충돌 공개에 관한 상세 자료

이 부록에서는 이해관계의 공개에 관한 투명성의 수준은 물론 중앙정부 의사결정자들에게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종류에 관한 각 관련국 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개요에 관한 것들은 그림 7.3, 7.4에 제시하였다.

행정, 입법, 사법부의 3부에서 사익의 공개와 공적 사용 가능성에 대해 제공된 국가 별 자료의 합을 계산할 때, 모든 사익과 모든 지위는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여겨졌으며 따라서 같은 가중치가 적용되었다. 국가의 응답을 점수 체계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금지된” 및 “정보가 공개되고 온라인 또는 출판물로 볼 수 있다”라는 항목에는 최고점인 100점이 부여되었다.

“정보가 공개되고, 요구 시 공적으로 사용 가능하다”의 경우는 두 번째 점수인 67점이 주어졌다. 그리고 “정보가 공개되고 공적으로 사용 가능하지 않다”는 세 번째 점수인 33점이 주어졌다.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다”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조사된 모든 사익에는 균등한 가중치가 주어졌다.

표 D.1에 대한 설명

호주의 경우, 세무공무원 및 세관원에 관한 자료는 세무공무원을 의미한다. 재정 당국에 관한 자료는 호주금융감독원(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직원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이사를 가리킨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치 고문의 사익 공개 요건은 그들의 이전 고용에 달려있다. 표에 나타난 정보는 정치 고문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공무원이었던 이들을 반영한다. 정치 고문이 되기 전에 민간부문에서 일했던 이들에 대해서는, 공개요건이 개별 계약에 달려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일반 공무원, 세무공무원, 검사, 조달직원은 일반적으로 사익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만약 기관의 수장이 의무적 공개가 필요하다 고 여기는 경우에는 예외적이다(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경우이거나 부패를 방지할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 등). 앞서 언급된 직책이 사익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요건이 고위공무원과 같다. **핀란드**의 경우, 판사에 관한 자료에 배석판사는 제외되었다. 정치고문/정치적임용자, 세무 및 관세공무원은 공무원/고위공무원과 요건이 같다. **프랑스**의 경우, 공직자의 지위와 신고된 정보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공적 이용 가능성에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공적 삶에서 투명성에 관한 법 n. 2013-97에 자세한 규칙이 명시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정치적 임명자에 관한 규칙은 그들의 법적 신분에 달려있다. 특정 금액 이상의 선물은 승인되거나 또는 금지되는데, 공무원의 지

위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조세공무원은 취임 전에 이전 고용관계, 자산 및 부채(건전한 재정적 환경의 공표)를 공개해야 한다. **헝가리**의 경우, 초안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높은 지위를 맡은 공무원의 자산공개 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경우, 정치 고문은 주요 자산 및 부채, 외부 직책 및 직업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이해관계 충돌 서식을 기입한다.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일 있을 때,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며 이러한 동의서는 요구 시 공개될 수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에 관한 **멕시코** 자료는 2012 Survey on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에서 온 것이다. **뉴질랜드**와 **미국**에서는 검사가 사법부 소속이 아니다. 판사에 관한 **노르웨이** 자료에는 배석판사와 화해조정판사는 제외되었다. **슬로베니아**의 경우, 조달 절차에 참여하는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높은 공개 요건을 가진다. **영국**의 경우, 장관과 고위공무원은 관련성이 있는 이전 직장은 신고되고, 현직과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개방적이며, 유용하고, 재사용 가능한 정부 데이터

이 부록은 정부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정부공개자료의 재사용을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국가별 데이터를 제공한다. 데이터는 그림 10.8에 제시된 자료 요약의 기초가 된다.

종합지수 구축을 위해 사용된 데이터는 2014년 OECD '정부자료공개에 관한 설문조사(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에서 기인한 것이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최고 자료담당관(Chief Data Officers, CIO)이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좁은 의미로 정의된 종합지수는 정부자료공개에 대한 핵심 측면에 관한 개별적이며 정량적인 정보를 요약하는 최선의 방식을 제시한다. “종합지수는 분리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로부터 공통 경향을 찾는 것보다 훨씬 해석하기가 쉽다” (Nardo et al., 2004).

그러나, 종합지수의 개발과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수개발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이로 인해 지수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밝혀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종종 쉽사리 종합지수를 잘못 해석한다.

OECD는 종합지수와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거나 다루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출판물에 제시된 종합지수는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Nardo et al., 2008)에 나오는 단계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종합지수 또는 합성지수의 의미 있는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각각의 종합지수는 이것이 포함되는 영역에서 협의된 개념을 나타내는 이론체계에 기초한다. 이 지수의 경우, 유일하게 사용가능한 국제협약인 G8 오픈 데이터 헌장과 사무국에 의해 생산되고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의 국가 대표자에 의해 승인된 논문들(Working Papers)이 주요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되었다.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개념과의 관련성에 기초하여 OECD 내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선별되었다. 국가 대표자들 및 관련 작업반과 더 깊은 협의는 지표의 관련성을 더 확장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각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가 상호 연관되어 있고 동일한 기초 개념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요인분석 같은 다양한 통계학적 수단이 활용되었다.

결측치(missing values)를 귀속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탐구되었다.

모든 하위 지표와 변수는 비교를 위해 정규화되었다.

종합지수 구축을 위해서 모든 하위지표는 널리 쓰이는 방법론에 따라 선형방법을 사용하여 통합되었다.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민감도 분석이 다양한 가중치 옵션에 대한 지표의 견고성을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지수가 시험단계라는 것을 고려해서 각 변수에 균등한 가중치가 부여되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종합지수는 서술적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제목을 달았다.

지표를 만들기 위해 질문된 설문조사는 비교를 위해서 국가 별로 동일하다.

공공데이터개방지수(OGD index)가 각 국가의 정부자료개방에 대한 결과의 전반적인 질을 측정한다고 여겨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용 가능성, 접근성, 재사용 지원의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협의된 원칙을 집행하려는 정부 수준의 노력을 측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향력 측면은 이 지수를 통해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종합지수는 회원국의 협력 하에 최적의 관행 그리고/또는 이론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들과 가중치는 논의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점차 발전할 것이다.

종합지수는 다음 방법론에 따라 구축되었다. G8 오픈데이터헌장과 정부자료공개에 관한 'OECD Working Paper'(baldi, 2013)으로부터 좋은 데이터 공개 관행의 세 가지 핵심 측면이 확인되었다.

1. 데이터 이용 가능성: 공개된 형식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함.
2. 데이터 접근성: 메타데이터와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예: CSV)의 제공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함.
3. 혁신적인 데이터 재사용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영역을 좁히기 위해서 첫 2개 항목(이용 가능성, 접근성)은 중앙정부/연방정부의 오픈 데이터 포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세가지 차원과 기초 변수에 동등한 가중치가 주어졌다. 기초 변수(설문 질문)가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주성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초 개념을 가장 많이 대표하는 변수를 선별하였다.

어떤 변수들은 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미국, 그리고 그리스의 결측치에는 추정치가 사용되었다. 모든 하위 차원은 1/3의 가중치가 적용되었다(33.3%).

하위 차원을 구성하는 모든 변수들은 비중이 동등하다. 출처: 2014 Survey on Open Government Data. Cronbach Alpha 테스트가 각 차원의 변수들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Overall Cronbach Alpha = 0.81).

표 E. 1. 국가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이용가능 여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콜롬비아
전국단위 선거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앙정부 공공 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정부 공공 지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장 최근의 국가적 합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 자료 재사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자료 없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643>

표 E.2. 국가 포털에서 공공데이터 접근성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콜롬비아
CSV 포맷사용 여부, 전역아님(O), 드물게 사용 (H), 보편적으로 사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 자료의 체계적인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기능 가능: 공간정보관련 수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 이용횟수별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문자를 투표 버튼	●	○	○	○	○	○	○	○	○	○	○	○	○	○	○	○	○	○	○	○	○	○	○	○	○	○	○		
데이터가 추가시 개별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
- 아니오
- .. 자료 없음

1 2 <http://dx.doi.org/10.1787/888933249656>

표.E.3. 공공데이터 재사용과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자료 공개 유형 관련 정기적 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개발경연 (연, 위젯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민과 기업들 위한 정보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공개와 OGD정책의 시행이 기업의 성과 지표로 고려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공정보 유형의 행사 포지티브 (해커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문인 상대 자료 홍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정부내 자료 분석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무원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주
- ▮ 때때로
- 전혀 없음
- .. 자료 없음

부록 F

표 F. 운영위원회 구성

	이름	직위	부처
호주	Mr Michael Kallinger	Director General	Federal Chancellery, Public Service and Innovative Administrative Development
벨기에	Mr Jacques Duart	Head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Federal Chancellery,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Organization
캐나다	Ms Patricia Mosher	Senior Advisor Priorities and Planning	Treasury Board of Canada, Secretariat
칠레	Ms Consuelo Herrera	Legal Counsellor	Permanent Delegation of Chile to the OECD
핀란드	Ms Katju Holkeri	Head of Government Policy Unit	Ministry of Finance
프랑스	Mr Daniel Aunay	Senior Advisor for European and International Affairs	Secretariat-General for Government Modernization/Office of the Prime Minister
헝가리	Mr László Jobbágy	Head of Department/ Depart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Prime Minister's Office
이탈리아	Mr Stefano Pizzicannella	Dir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Depart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일본	Mr Irie Akifumi	First Secretary	Permanent Delegation of Japan to the OECD
한국	Mr Yong Bum Choi	Minister-Counsellor	Delegation of Korea to the OECD
멕시코	Mr Adrian Franco Barrios	General Director/ Governance and Public Security Statistics	Governance and Public Security Statistics/National Statistics Office
네덜란드	Mr Dick Hagoort	Head of the Department on Analysis/Labour Market and Macro Economic Counseling	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노르웨이	Ms Tone Smith-Meyer	Advisor	Norwegia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슬로베니아	Ms Kludja Korazja	Under-Secretary /Europea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ffice	Ministry of the Interior
스웨덴	Ms Susanne Johansson	Advisor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영국	Ms Liz McKeown	Deputy Director, Analysis and Insight	Cabinet Office

용어해설

용어

한눈에 보는 정부에서의 의미

예산 지출, 수입, 결손이나 잉여와 부채 등이 포함된 정부의 재정계획에 관한 포괄적 내역서. 예산은 공공목표달성을 위해 정부가 공공 자원을 어떻게 쓸 것 인지를 설명하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문서이다.

현금 이전 특정재화나 서비스의 구입에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유자격자에게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 예를 들면, 연금, 실업급여, 개발보조 등.

중앙예산당국(CBA) 중앙예산당국(CBA)은 단일 공공 독립체이거나 중앙/국가/연방 수준의 각 정부에 위치 하는 기관들의 협력체이며, 국가/연방예산의 관리와 보관의 책임이 있다. 많은 나라들 에서, 종종 중앙예산당국은 재무부에 속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예산당국은 예산제안서를 만들고, 예산협상을 수행하고, 기금을 분배 또는 재분배하고, 예산법률의 준수를 확보하고, 효율성 점검과 수행평가를 담당한다. 중앙예산당국은 예산집행을 통제하지만, 특정목적의 공공기금의 국고기능을 반드시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예산당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계적/국가적 재정원칙을 유지하고 점검하며, 예산 지출의 효과성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센터(CoG) 정부센터는 수장(대통령, 수상, 내각을 집합적으로)을 위해 일하는 행정구조를 가리킨다. 정부센터는 국가 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무국, 국무조정실, 수상관청, 대통령사무실, 각료이사회 사무실 등이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정부센터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한 개 이상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센터의 역할은 행정부 자체의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정치적 비전을 반영하고 시민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법적, 규제적, 심지어는 군사적) 자원을 배당하는 것이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 예산관련 시민들을 위한 지침에 대하여 여기서는 입법부에 제출된 연간예산의 중요 요소들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요약서로 정의한다. 이것은 연간예산 제안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며, 이것들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독립적인 문서이다. 더 상세한

문서에 대한 참조나 연관들을 담고 있어서,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이 추가로 다른 참조 사항을 더 보거나, 연관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공무원 영구적, 또는 장기계약된 국가의 직원으로 정부가 교체되어도 국가직원으로 남아 있다. 또한 공무원은 특정 공공 법률 체계 또는 다른 특정 규정이 적용되는 직원이다.

집합적 재화와 서비스 공동체 전체에 혜택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 예로는, 국방, 공공 안전과 질서에 관한 정부지출을 포함한다.

종합지표 개별지표를 합쳐 모델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나의 지표를 만든 것. (Nardo et al., 2005)

자료군(Dataset) 단일주제 (예를 들면, 규제 질)에 관한 지표나 변수들의 집합

효율성 주어진 자원으로 활동한 결과 이루어낸 최대한의 산출 (OECD 통계용어)

효과성 목표를 달성한 정도(OECD 통계용어)

유럽계정체계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양립 가능한 계정체계로 전체 경제(지역, 국가, 회원국 집단 등)와 OECD 통계용어 등 다른 경제체계와의 구성과 관계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기술이 되어 있음. 국가계정체계(SNA)와 완전히 일치한다.

연방국가 하나의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지방정부 혹은 주정부 사이에서 정치적 권한의 분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재정규칙 이 보고서의 목적에 따라, OECD는 유럽연합의 정의와 유사하게 사용함. 수치상의 재정규칙은, 예를 들면, 연도내의 원칙이 배제되는 것과 같이, 재정정책의 총계에 관한 영구적 제약을 말한다.

정규직환산인력(FTE) 정규직환산인력의 수는, 정규적으로 일하는 연간노동시간의 평균으로 총 노동시간을 나눈 것이다(OECD 통계용어).

성(Gender) 남성이나 여성에 연관되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기대. 모든 문화는 여자와 남자가 어떤 권리와 힘과 자원을 소유하며, 각 성별로 적절한 행동이나 활동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사회적 기대들의 집합으로 남자와 여자간의 생물학적 차이점을 해석하면서 상세히 설명한다. 인종, 민족성, 계급과 같이 성(gender)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기회와 가능성의 상당부분을 규정하는 사회적 범주이다. 이는 사회와 경제에 그 사람의 참여를 모양 짓는다.

공공부문에서 일반고용의 기본 틀 이것은 대부분의 정부직원들의 고용조건과 관련되며, 대부분의 법정 피고용인들에게는 확실하게 관련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임시 피고용인은 정부 직원들을 위한 일반고용의 기본 틀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 아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단기로 고용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고용인들은 몇 가지 예외(이런 경우는 있더라도 아주 극소수의 임시 피고용인인 경우임)를 제외하고 일반 고용의 기본 틀에서 고용된 것이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일반정부 일반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주 기관으로 구성된다. a)중앙과 지방정부의 모든 기관, b)정부에 의해 재정통제를 받는 모든 비영리기관, c)분리된 기관 단위 또는 중앙, 주, 지방 정부에 전부 속하거나 한 개 정부에 속하는 사회보장기금. 공기업과 준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한 것이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유한 비기업체로 준공기업이 아닌 것은 일반정부에 포함해야한다(2008 국가계정체계).

거버넌스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위의 실행

국내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에 대한 표준화된 측정치. 특히 이것은 생산에 참여한 모든 국내 구성요소들의 총 부가가치의 합계(산출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합치고, 보조금을 제외함)와 같다. 구매력 평가로 측정된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사용의 합(중간소비를 제외함)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보다 작고 국내 생산자들에 의해 배분된 주된 소득의 합이다(OECD 통계용어).

독립재정기관(IFI)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며, 재정정책과 수행에 관한 비 정파적 감독, 분석, 때로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정부 혹은 입법부의 법정 기구로 되어있는 독립적 기관. 독립재정기관(IFI)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전진단의 기능을 수행한다(과거지향의 임무를 수행하는 공공 회계감사기관은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나, 정 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표 "주어진 분야에 상대적 위치를 보여줄 수 있는 일련의 측정치에 대한 양적, 혹은 질적 측정. 주기적 평가를 통해 지표는 측정대상간 혹은 시간 별 차이나 경향을 보여줄 수 있다." (Nardo et al., 2005)

개별적 재화와 서비스 주로 각 개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재화와 서비스. 예로는 교육, 건강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투입 노동, 자본의 투입.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 "예를 들면, 건강 서비스의 투입에 대한 정의는 의료와 비 의료인력의 시간, 의약품, 전력사용, 그 외의 구입된 물품과 장비나 건물 등의 사용에 관한 자본비용 등이다." (Lequiller, 2005)

노동력 주어진 기간 동안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노동력 혹은 현재 활동인구(OECD 통계용어).

정부자료공개중앙포탈 중앙정부/연방정부의 공개자료중앙포탈(원스톱샵 포탈)은 정부 자료에 접근하는 통일된 창구이다. 자료에 대한 접근은 포탈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거나 간접적(자료가 위치한 곳으로 다시 보내짐)으로 제공될 수 있다.

결과물 활동을 통한 궁극적인 성과. 결과물은 정부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것 일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외적 요인에 의한 것도 포함한다(OECD 통계용어).

산출 정부의 성과평가에서 산출은 정부기관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로 정의된다(예, 수업시간, 산정되었거나 지불된 사회복지 혜택). (OECD 통계용어)

성과정보 성과정보는 정부와 비정부 조직 모두에서 생성되며, 질적이거나 양적인 것 일수 있다. 성과정보는 정부의 정책, 과업, 조직의 투입·과정·산출·결과물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지표, 계량수치들이며, 궁극적으로는 효과성, 비용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과정보는 통계학; 정부조직의 재정적·운영적 계정; 정부 조직에 의해 생성된 성과보고서; 정책, 과업 혹은 조직의 평가; 혹은 지출 보고서 등에서 발견된다.

생산성 생산성은 투입량에 대비하여 산출된 양의 비율을 의미한다(OECD 통계용어). 경제학자들은 총 생산성(총 투입에 의해 변화된 총 산출)과 한계생산성(투입단위당 변화된 산출

정도)을 구분한다(Coeil et al., 1999).

공공부문 공공부문은 일반정부 분야와 공기업을 포함한다. 정부에 의해 소유된 준공기업은 비금융 또는 금융부문에 속한 기업에 속하므로 공공부문의 일부이다(2008 국가계정체계).

공공부문의 과정 공공부문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구조, 절차, 관리

공공 서비스 공공이나 공공기관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서비스. 공공서비스는 시민들 위해 정부에 의하여 공공부문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사기업 부문이 제공한 공공서비스에 공적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이 용어는 소득과 상관없이 특정 서비스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결부되어 있다. 비록 공공부문이 직접 제공하지도 않으며 이에 대한 재정보조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이유로 공공서비스는 보통은 대부분의 경제적 부문에 적용되는 것 이상의 제한을 받는다.

국민계정체계 (SNA) 국민계정체계(SNA)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념, 정의, 분류, 그리고 회계기법에 기초해 만들어진 거시경제 계정, 재정수지 및 표의 논리정연하고 일관성 있는 통합된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유엔 통계위원회(Statistical Commission)는 국민계정의 개정판에 대한 국제적 기준 개정을 승인하였다. 1993년 국민계정체계가 2008년 국민계정체제로 대체되었다. 최근 국민계정체계의 개정과 국가들에 의한 집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A를 참고하기 바란다.

신뢰 신뢰란 개인 또는 조직의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폭넓게 이해된다. 신뢰는 특정 상황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다른 이들이 행동할 것으로 믿게 해 준다. 신뢰는 실제 경험에 기초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보는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는 주관적인 현상이다.

단일 국가 하나의 중앙정부와 여러 개의 지역 혹은 주의 자치정부 사이에 정치적 권한의 분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국가, 그러나 단일국가도 행정적으로는 지방수준의 정부를 가질 수 있다.

변수 수치적 측정이나 할당된 분류(예를 들면, 소득, 나이, 무게 등, 그리고, "직업", "산업", "질병" 등)의 범주에 대한 하나 이상의 가치집합을 담당할 수 있는 계측단위의 특성(OECD 통계용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세계화에 따른 경제·사회·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함께 모여 노력하는 포럼이다. OECD는 기업 지배구조, 정보, 경제, 고령화와 같은 새로운 변화와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를 이해하고, 돕는데 앞장서고 있다. OECD는 각국 정부가 각자의 정책경험을 비교하고, 공통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모범 관행을 확인하고 국내외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과 미국이며, 유럽연합도 OECD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OECD의 출판물은 회원국이 동의한 협약, 지침, 기준뿐만 아니라 경제·사회·환경적 논제에 관하여 수집된 통계자료와 결과물들을 널리 전파한다.

한눈에 보는 정부 2015

『한눈에 보는 정부 2015』는 OECD 국가의 공공행정에 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한다.

가능한 경우에는,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러시아, 남아공,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 자료도 보고하고 있다. 이번 판은 공공부문 진실성, 규제 거버넌스, 정부센터의 역할, 디지털 정부, 예산 관행 및 절차, 정부자료개방에 관한 새로운 지표를 포함한다. 그리고 시민에 대한 접근도, 대응성, 서비스의 질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인 자료들이 담겨있다.

이번 판에는 2009년 이후 예산제약이 정부고용과 보수 개혁에 미친 영향에 대한 특집도 포함되었다.

출판물의 각 지표는 사용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제시되었다. 국가별, 시기별 변화를 보여주는 도표 그리고 /또는 차트,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요 결과에 대한 간단한 분석, 그리고 지표의 정의에 관한 방법론과 자료 비교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처음으로 정부의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자료가 발표되는 대로, 1년에 두 번씩 갱신될 것이다. 국가별 자료문서와 기타 온라인상의 보충자료들은 www.oecd.org/gov/govtaglance.h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더 강한 포용사회를 위한 포용정부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제3장. 공공 고용

제4장. 정부기관

제5장. 예산 관행과 절차

제6장. 인적자원관리

제7장. 공공부문 통합성

제8장. 규제 거버넌스

제9장. 공공 조달

제10장. 디지털 정부

제11장. 핵심 정부 성과

제12장. 대시민서비스

이 보고서 영문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dx.doi.org/10.1787/gov_glance-2015-en

이 보고서는 OECD의 모든 책, 정기간행물, 통계자료들을 수집하는 OECD iLibrary로도 발간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oecd-ilibrary.org 주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